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박사학위논문

제국일본 속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이 경 미

제국일본 속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

지도교수 장 인 성

이 논문을 외교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이 경 미

이경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위 원 장	신 욱 희	(인)
부 위 원 장	홍 종 욱	(인)
위 원	조 관 자	(인)
위 원	松田 利彦	(인)
위 원	장 인 성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민족담론을 제국일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했다. 이는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침략과 저항을 절대화시키는 기존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담긴 관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큰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주권국가적’ 관점을 뛰어넘기 위해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주체성’ 담론으로 이해하고, 그 전개 양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비주권적 주체성’은 ‘민족=주체성’ 담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실제 역사적 맥락에서 전개를 살필 수 있는 ‘분석대상’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이 양 측면을 연계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라는 관점이다. 사회적 관점은 ‘비주권적 맥락’을 배태하는데, 그러한 속성은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담론에서도 확인된다. II장에서는 사회담론이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밝혀냈다. 조선의 사회담론이 식민지상황에서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면, 일본의 사회담론은 식민 통치담론과 연계되면서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낳았다. 전자의 맥락이 표출된 것이 3.1운동이었다면, 후자의 맥락이 반영된 것이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였다. II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조선의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초래했는지, 특히 ‘주권국가적 의미로부터 분리되는 측면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후속 장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II, IV, V장에서는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비주권성’은 ‘합법성’으로서 기능했다. 따라서 III장과 IV장에서는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된 ‘주체화의 양상’을 담론과 운동의 차원에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III장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들을 특히 통치와 민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다.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통치자의 의도는 흔히 ‘분열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정한 입장—민족주의 좌파—을 대변하는 관점으로 보고 지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총독 사이트의 브레인이었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인심수렴론’(人心收攬論)을 통해 통치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양자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했다. 양자의 논의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합법적=비주권적 공간’에 위치짓는다는 점에서 일치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주체화’는 어떻게 모색되었을까. 조선의 민족운동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치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것이 ‘독립’과 연루된 기존의 의미로부터 탈각된 ‘생(生)의 정치담론’이었다. 그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안에 스스로 포섭되는 담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민족운동을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시키는 담론이기도 했다. 이처럼 III장에서는 ‘생의 정치담론’을 통해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밝혔다.

다음 IV장에서는 민족운동의 정치화를 향한 움직임에 통치자와 사회주의자까지 합세하면서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가 형성된 과정을 살폈다. 이는 III장에서 밝힌 ‘생의 정치담론’이 운동으로서 실천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신간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동전선’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정한 세력—민족주의 좌파와 일부 사회주의—에 점유된 관점으로 보고 지양하고자 했다.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란 이를 담아낸 개념인데, 신간회를 조선의 정치운동에 대한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각의 의도가 복잡하게 얽힌 운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신간회 역시 ‘합법성=비주권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했다. 그렇다면 거기서 ‘주체화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IV장에서는 이를 두 가지 유형의 협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나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에서 이루어진 협동으로, 스스로를 ‘생존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자기결정’의 영역을 견지했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간에서 이루어진 협동으로, 스스로를 ‘생활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치와 반제’를 공존시키려고 했다. 양쪽 모두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스스로 포섭되는 운동이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제국이 의도한 바를 미끄러뜨리는 측면—자기결정 및 반제—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 V장은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학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비주권성’이 III, IV장에서 ‘합법성’으로 기능했다면, V장에서는 ‘학술성’이 그것을 받아주는 개념으로 기능했다.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서 ‘조선의 주

체성'은 인정 혹은 관용의 대상으로 탈바꿈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역사'를 다루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주체성을 '비주권적 것'으로 틀지은 것이 '학술성'이었다. V장에서는 이를 '역사편찬사업'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역사편찬사업은 3.1운동 이후 동화를 목적으로 한 반도사 사업에서 학술성을 내세우는 조선사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즉 '동화로부터 학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에서는 '단군' 문제를 통해 양 사업에서 '조선의 주체성'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전자가 단군을 역사에서 배제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자는 단군을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매길 것인지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학술성'이라는 틀 속에서 '단군=조선의 주체성'에 부여된 주어진 자리는 역사의 '주변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남선의 발언에 주목했다. 단군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최남선의 발언은 학술성 속에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와 별도로 단군을 존립시키는 의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남선의 발언은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민족담론은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을 갈망하면서도 '비주권적' 맥락에 들어와야지만 전개될 수 있는 아이러니컬한 연구주제이다.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제국일본이 설정한 테두리 속에서 전개된 '주체화'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기존의 관점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본고의 이러한 관점은 민족담론을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재구성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저항'에 대한 기존의 의미에도 변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은 '내셔널한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生)을 통해 저항의 의미를 생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민족담론, 주체성/주체화, 비주권성, 생(生)의 정치, 이광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신간회, 조선사, 최남선

학 번: 2007-30668

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시각과 기존연구 검토	6
(1)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 주체화의 복합성	6
(2) 교섭(bargaining)이라는 문제: 저항과 협력의 공존성	13
(3) 식민지 공공성: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	17
(4) 식민지 근대성과 역사편찬: 주체성의 의의	22
3. 연구시각과 방법론	30
(1) 내셔널리즘의 극복과 비민족주의적 주체성	30
(2) 사회적 관점과 비주권적 주체성	33
(3) 주체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37
4. 논문의 구성	38
 II. 제국-식민지에서 사회의 출현과 비주권성	 49
1. 조선에서 사회의 탄생: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51
(1) 국가와 구분된 영역으로서의 사회	52
(2) 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사회	56
(3) 국가의 이중적 상실과 사회	59
2. 일본에서 사회의 발견: 사회-주체 관계를 중심으로	65
(1) 사회의 발견과 주체	66
(2) 발견된 사회-주체와 식민정책학	70
(3) 제국개조론과 주체의 비주권성, 그리고 정치적인 것	77
3.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와 문화정치	81
(1)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 문화, 생활	82
(2)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	90
1) 자치주의: 독립된 주체와 협동의 논리	91
2) 내지연장주의: 동화의 다의성과 관용의 논리	98

III. 정치담론과 주체성 106

1. 민족개조론과 인심수람론(人心收攬論)의 접속	107
(1) 이광수와 아베의 만남	108
(2) 인심수람론의 함의	110
1) 인심수람과 친일육성의 흑백론	110
2) 인심수람과 민족육성의 회색론	114
(3) 민족개조론의 함의	119
1) 동화와 문명화 사이에서	119
2) 단체의 사회성과 비정치성	123
2. 연정회와 민족적 경륜	126
(1)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와 연정회 조직계획	126
(2) 민족적 경륜의 함의: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	131
(3) 중심세력담론의 주체: 민우회와 연정회	133
3. 생(生)으로서의 정치담론	136
(1) 생활과의 연결과 혁명으로부터의 탈각	136
(2) 연정회와 자기결정	142
(3) 생존권과 양립의 사상	148

IV. 정치운동과 주체성 156

1. 정치와 자치의 접속	157
(1) 통치 층의 정치화와 우경적 단체	158
(2) 아베·최린 대담과 소에지마 사설의 함의	164
(3) 식민지 정치성의 역설적인 아포리아	168
2. 정치의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172
(1) 정우회선언의 함의: 사회주의관 정치화	172
(2) 협동과 자치의 경합	177
(3)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181
3. 신간회와 주체성의 전개 양상	189
(1) 신간회와 생존의 자기결정	189
1) 정기대회를 둘러싼 갈등: 생존운동이라는 제안	189

2) 자치를 둘러싼 갈등: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196
(2) 자치와 반제의 공존, 그리고 생활	202
1) 자치운동의 개시와 사회주의와의 협동	202
2) 반제운동의 전개와 생활운동	210

V. 조선학과 주체성 218

1. 반도사와 조선사: 동화에서 학술로	220
(1) 반도사와 동화	220
(2) 조선사와 학술성	223
2. 동화와 학술: 배제에서 포섭으로	226
(1) 반도사와 배제의 서술방식	226
1) 역사의 주체와 남북의 구분	226
2) 단군전설의 행방	233
(2) 조선사와 포섭의 편찬방식	240
1) 조선사의 논의과정과 단군문제	240
2) 조선사의 편찬방식	251
3. 조선사와 주체성의 전개 양상	259
(1) 사상으로서의 단군	260
(2) 역사와 신화의 인식구도	270
(3) 근대역사학과 조선학 사이에서	275

VI. 결론 286

VII. 참고문헌 292

1. 1차자료	292
(1) 한국자료	292
(2) 외국자료	292
2. 2차자료	294
(1) 한국자료	294
(2) 외국자료	297

I. 서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크게는 식민지 시기의 ‘민족담론’을 파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지 상황’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란 근대 주권국가 체제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간주되는 민족국가 형성(nation-building)이 결정적으로 저지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민족≠국가’라는 비정상적인 구도가 오히려 상태(常態)가 되어버린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전개된 ‘민족담론’ 또한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민족담론’의 의미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한다는 과제의 의식에 의해 규정받아왔다. 아마 지금도 ‘민족담론’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은 식민지 상황의 극복, 즉 ‘독립’이라는 민족국가 형성과 연루된 의식이 클 것이다. 물론 그것이 식민지인의 심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측면인 것에 틀림없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전개된 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 ‘민족담론’이 아니라 앞에 ‘식민지’를 붙여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이라는 어구를 썼던 이유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 앞에 붙인 ‘제국일본 속’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담론을 ‘독립’이라는 과제의식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제국일본’과의 관계는 ‘대립적으로’ 이해된다. 즉 거기서는 ‘속’이라는 문제의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그저 ‘대’(對)적인 의미에서만 파악되는 것이다. 예컨대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라는 관계설정이 그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는 침략과 저항을 전제로 한 대립관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일방적이지도 일면적이지도 않는다. 본고에서 쓴 ‘속’자는 그러한 양자의 ‘상관관계’를, 즉 그 ‘복합적인 역학’을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낸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을 제국일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제로 단 ‘비(非)주권적 주체성’이란 본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민족담론의 특징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식민지상황에서 전개된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민지의 민족담론을 ‘독립’이라는 과제 의식 속에서 파악하며 제국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란 다름이 아닌 ‘주권국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민족주의적 관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주권국가적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난 십여 년간의 연구동향과 함께 ‘민족주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듯하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한일 양쪽에서 제기되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식민지 근대론’, 후자에 대해서는 ‘제국사 연구’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식의 대립구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침략과 저항’에 치우친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배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나아가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극복이 과제로 제시되었다.¹

한편 이러한 논의와 함께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각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지식연관’이라는 관점인데, 여기에서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를 아우르는 담론공간의 존재가 중시된다. 그 공간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곳[空間]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자장(磁場)으로서, 그 속에서 양자의 관계는 얼마나 ‘억압적 혹은 저항적’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즉 ‘상관적인 관점’에 의해 이해된다. 지식연관이란 그러한 상호작용을 지적 측면에서 밝히는 관점이라면, 그것을 정치사 또는 사회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교섭’(bargaining)이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²

1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받아들여졌는데,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논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並木真人, 『植民地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解放後史との関連にお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1993); 김재용, 『협력과 저항-일제 말 사회와 문학』(소명출판, 2004);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역락, 2006); 윤해동,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6);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경인문화사, 2006).

2 지식연관의 관점에서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착목한 연구로는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岩波書店, 2001); 趙寛子, 『植民地朝鮮/帝國日本の文化連鎖-ナショナ

이처럼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저항/독립’을 강조하는 ‘주권국가적 관점’은 이미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연구동향과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식민지시기 정치사상사 연구에 눈을 돌릴 때 거기에는 여전히 매워지지 않는 간격이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기왕의 대립구도로 쓰인 정책사/운동사에서는 영웅적인 인물에 주목하거나 정통적인 사상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강동진의 연구가 제국주의 비판에 초점을 맞춘 정책사연구를 대표한다면,³ 박찬승의 연구는 그와 인식틀을 공유하면서 민족주의운동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⁴ 한편 이지원의 연구는 박찬승의 연구를 보충하는 형태로 민족주의의 문화적 측면을 분석했다면,⁵ 정윤재의 연구는 안재홍을 대상으로 그 사상의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확인했다.⁶ 각각은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이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박찬승의 언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자강운동 진영 내에는 다양한 입장과 지향을 갖는 세력들이 혼재해 있었으며, 그들 간에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성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자강운동의 참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강운동 각 계열을 그들의 운동노선에 따라 구분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

リズムと反復する植民地主義(有志社, 2007); 김인수,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교섭’의 관점에 관한 대표적 논저는 並木眞人,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 『東アジアの公論形成』(東京大學出版會, 2004); 김동명(2006).

3 姜東鎮,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學出版會, 1978).

4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역사비평사, 1992)].

5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2007).

6 정윤재, 『다사리국가론-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백산서당, 1999); 정윤재, 『민족에서 세계로-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봉명, 2002); 정윤재, 『민세 안재홍 심층연구』(황금알, 2005). 박찬승 또한 안재홍의 사상을 중시하고 있다.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경인문화사, 2007).

7 박찬승(1992), p. 19.

여기서 자강운동이란 1920년대에 나타난 실력양성운동의 기원적 의미를 갖는다. 박찬승은 그 운동론 내부에도 다양한 분화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각 계열로 구분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물론 그러한 문제의식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말하는 ‘구분’이 결론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좌우’로 갈라내고 전자에 최상의 ‘저항성’을 부여하는 서술로 나아간다는 점에 있다. 즉 ‘민족주의 좌파’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 ‘민족주의 좌파’가 이끈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신간회’가 자리하게 된다.

이처럼 식민지시기 정치사상사 연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주권국가적 관점’이 강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민족담론’ 역시 ‘독립’이라는 가치와 연루된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표출된 ‘주체성’ 또한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식민지란 ‘민족≠국가’적인 상황이 일상화된 시공간을 의미한다면, 거기서 전개된 ‘민족담론’을 ‘주권국가적 주체성’의 표출로, 다시 말해 ‘민족담론=주권국가적 주체성’이라는 구도로 파악하는 관점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그것이 ‘식민지상황’에 충실한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연구사적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색되어야 할 것은 ‘민족담론’에 대해 ‘주권국가적 관점’을 뛰어넘는 접근이다. 식민지시기 민족담론의 전개를 ‘비주권적 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본고의 시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민족담론을 ‘독립’이라는 예정된 가치에 종속된 논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주권국가적 주체성’의 표출이 철저히 저지된 상황에서 전개된 논의였다. 이것이 식민지 상황을 구성한 조건이었다면, 거기서 전개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은 ‘제국 속’에서, 다시 말해 그것과 ‘상호 복합적인 역학’이 작동하는 자장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 이때 표출된 ‘주체성’이란 주권국가적 의미의 표출이 저지된 이상 ‘비주권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점, 그렇다면 그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인식 또한 ‘비주권적=비민족주의적 관점’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제국일본 속 식민지조선에서 전개된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접근은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가.

첫째, 식민지의 민족담론, 혹은 주체성에 대한 방법으로서 ‘다차원적인 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권국가적 관점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분석은 항상 예정된 가치, 즉 독립에 대한 지향성으로 수렴된다. 예컨대 여러 영역을 분석할 경우에도 서술은 항상 그 가치에 대한 거리감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은 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언제나 일방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물게 한다. 주권국가적 관점에서는 분석차원이 다원화 되더라도 늘 독립의 스토리로 일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의 관점에서 분석의 다원화는 비로소 ‘다차원적인 의의’를 발휘하게 된다. 그것은 예정된 가치가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복합적인 역학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 다시 말해 개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특정한 상황에 의거하여 주체성의 전개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차원에서 전개된 양상이 갖는 공통성을 추려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써 주체성은 다면적이면서도 총화를 이룬 모습으로 도출될 것이다.

둘째,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랜 문제제기에 대해 일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최근의 연구동향은 식민지에서 ‘정치’의 존재방식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주권국가적’ 관점에 점유되었던 ‘정치’의 영역을 그 밖으로 해방시키는 시도를 수반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애초에 비판 의식을 촉발했던 정치의 내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를 남기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정치사상사의 현황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민족담론’ 자체를 ‘비주권적 주체성’의 맥락에서 살피는 본고의 접근은 기존의 관점에 전유되었던 영역을 ‘내부로부터’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에서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완결시키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로 ‘저항’에 대한 해석에도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유지되는 한 ‘저항’ 또한 ‘주권국가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저항’은 어디까지나 ‘독립’과의 거리감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주체성’을 ‘비주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본고의 접근에서 ‘저항’은 더 이상 예정된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국과의 역학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 그것에 대응해나가는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 속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권국가로부터 해방된 ‘저항’을 어떠한 논의로 이어갈 것인지, 이것이 본고가 도출할 수 있는 함의이자 앞으로의 식민지연구에 제시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2. 연구시각과 기존연구 검토

(1)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 주체화의 복합성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은 출생지는 다르지만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국사연구에 대해 논할 경우 그 경향은 두드러진데, 제국사연구의 대표적 개설논문이라 할 수 있는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의 글에서도 ‘식민지 근대론’은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언급된다.⁸ 양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각각의 연구사적 문맥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특히 그것이 ‘주체성’ 논의에 제공한 새로운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고의 시각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국사연구부터 보면, 그 윤곽을 처음 제시한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의 글은 다음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첫째,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복수의 식민지와의 구조적 연관을 파악한다. 둘째, 본국과 식민지의 영향관계를 상호규정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본국에 대한 영향관계를 해명한다. 셋째, 경제사 중심을 넘어 정치사나 문화사 영역도 중시한다. 넷째, 일본적인 것(민족, 언어, 문화)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규명한다.⁹ 고마고메는 이를 통해 종래의 ‘제국주의 연구’를 뛰어넘는 관점으로서 ‘식민지제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¹⁰

8 戸邊秀明,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帝國史研究」, 『日本植民地研究の現狀と課題』(アテネ社, 2008) [서정완 외 편,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소화, 2011)].

9 駒込武, 「『帝國史』研究の射程」, 『日本史研究』 452(2000).

10 ‘식민지 제국’은 1996년에 출판된 저서의 제목에 쓰인 표현으로, 고마고메는 본국과 식민지(조선, 대만)의 연관을 문화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

고마고메의 문제의식은 식민지의 역사를 본국에 부속시켜온 일국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양자의 관계를 ‘상호연관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여기서 도출된 것이다.¹¹ 그에게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제국사연구의 함정”이었다.

제국사라는 문제설정에는 ‘일본인에게 식민지 지배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일본사 연구에 식민지 연구는 어떤 의의를 갖는지’ 등의 질문이 어쩔 수 없이 포함된다. 이는 필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한 일종의 자기중심성을 면할 수 없다. ‘조선인이나 대만인에게 식민지 지배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질문에 대한 집요함을 상실할 때 제국사 연구는 너무 쉽게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조선사’와 ‘대만사’ 연구에 회수되고 말 것이다.¹²

요컨대 그는 제국사연구가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식민지의 경험’에 충실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글에서도 거듭 강조된다. 그는 “통치자의 언설뿐만 아니라” “피식민자의 경험에 입각해서 식민주의를 부각시킬 수 없는지”, 이를 “식민지 연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민지의 경험’에 입각해서 ‘식민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식민지의 “정치적 지위”를 “나선상을 그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던 림보성(林茂生)의 말을 빌어 “나선의 상승로”를 피식민자의 경험에서 “식민지성”을 나타내는 은유로 이해했다.¹³

‘나선의 상승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식민지생활의 모든 영역에 존재했는데, 그 역할은 치밀하게 ‘식민지적’이었다. 예컨대 대만인은 상공회의소의 의원이 될 수 있었지만, 요직은 모두 일본인이 장악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선’이란 지배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마고메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위상승’을 모색한 식민지인의 욕구와 좌절의 경험을 포착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통치자의 언설뿐만 아니라 식민지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식민주의를 이해하는 접근임은 틀림없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의 연구에서 시도된

店, 1996).

¹¹ 駒込武(1996), p. 3.

¹² 駒込武(2000), p. 224.

¹³ 駒込武, 『植民地主義』,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

바 있다. 지원병 제도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본 미야타는 그것이 내선일체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농촌의 현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식민지배의 본질을 드러냈는데, 그런 한편으로 주목한 것이 내선일체에 공명했던 조선인의 심성이었다. 미야타는 그것을 ‘차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¹⁴

식민지성을 ‘나선의 상승로’로 파악하는 고마고메의 관점이나 내선일체의 심성을 ‘차별로부터의 탈출’로 파악하는 미야타의 관점이나 둘 다 식민지인의 경험, 즉 ‘그들의 시선’에 입각해서 식민주의를 파악하려는 노력인 점은 공통된다. 고마고메의 표현을 빌리면 ‘식민지인에게 식민지배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았던 연구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주의=제국사연구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일종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식민지에서 지위상승이나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모색한 사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인의 주체화 문제를 ‘제국의 시선’에서 파악하는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고마고메도 미야타도 ‘제국체제 안’에 진입했던 인물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¹⁵ 그런 점에서 ‘대일협력’ 연구를 견인하는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眞人)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제국사연구는 식민지 근대론과 연계되는데,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식민지의 주체화 문제를 기존의 ‘저항하는 주체’와는 다른 맥락, 예컨대 제국체제에 ‘통합되는 주체’나 ‘협력하는 주체’, 혹은 ‘근대를 수용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 점에 있다.¹⁶

주지하다시피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1997)은 미셸 푸코의 규율권력론에 의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주체’가 형성된 과정에 주목했

14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이영낙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일조각, 1997)].

15 림보성은 동경제대를 졸업한 최초의 대만인으로, 처음으로 고등관이 되어 관립 타이난 상업전문학교에 취직했던 체제 내적인 인물이다. 駒込武(2018), pp. 6~7.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眞希子)는 체제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체제 안으로 진입한 케이스를 다루는 연구들에 대한 비판점으로서 그 과정이 차별로부터의 해방과는 달리 오히려 차별을 증폭했던 측면을 지적한다. 岡本眞希子, 「植民地期の政治史を描く視角について」, 『思想』 1029号(2010.1).

16 加藤圭木, 「被支配者の主体性」,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

다.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근대적 주체화 과정은 식민권력이 민중의 일상에 폭력적으로 개입한 과정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식민 지성’을 발견하는 시각을 제공했다.¹⁷ 이는 ‘대일협력’을 ‘근대와 접촉하는 장’으로 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민중상=주체상’을 제시한 나미키의 시각과도 연동된다. 여기서 민중이란 ‘협력을 통해 근대를 수용한 주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¹⁸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조정달의 논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식민지 근대론을 “근대적 제도와 규범의 침투성에 착목하여 근대적 주체와 식민권력과의 협력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해명하려고 하는 논의”로 이해한다. 그것은 “오로지 조선사회에 대한 식민권력의 포섭성”을 중시하는 논의로, “근대성도 황민성도 쉽게 내면화하지 못하고 고민에 시달린 조선민중의 정신세계”를 경시하는 점을 비판했다. 조정달은 “식민지배의 본질이란 근대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탈, 차별, 억압과 그것을 보장하는 폭력의 체계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식민지 연구는 “근대에 고유한 규율훈련화의 침투과정이나 그 주체형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그 고민, 저항의 양상을 복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조정달에게 ‘근대성’의 문제는 ‘침투성’의 문제로 파악되며 식민지 근대론은 식민권력의 ‘포섭성’을 증명한 논의로 평가된다. 식민지배의 본질은 ‘폭력성’에 있기 때문에 ‘주체성’의 문제 또한 근대성의 침투와 주체형성의 문제로서 볼 것이 아니라, ‘근대성=식민권력’에 포섭되지 않았던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폭력성’이 구현되고 있었는지, 그것에 어떠한 ‘저항’이 있었는지를 해명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민중=저항의 세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도베도 지적하듯이 “식민지 근대론의 핵심은 근대성의 침투 여

17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18 이러한 민중상을 나미키는 기존의 ‘저항하는 변혁주체’와 같이 특정한 실체를 갖는 존재라기보다는 무정형으로 유동하는 ‘생활자’로 묘사하기도 한다. 並木眞人, 「植民地期朝鮮政治・社會史研究に關する試論」, 『朝鮮文化研究』 6(1999).

19 趙景達, 「十五年戰爭下の朝鮮民衆-植民地近代論批判試論」, 『學術論文集』 25(2005).

하를 측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대성의 불균등한 전개로 사회의 갈등과 격차가 극대화되고 그러한 불균등성 자체가 식민지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다.²⁰ 환언하면 ‘근대의 침투성’이나 ‘식민권력의 포섭성’의 증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대칭적인 구조’로 생성되는 ‘근대의 폭력성=식민지성’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 근대론이 근대에 ‘비판적’인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론과 조경달은 보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둘 다 식민지배의 본질로 그 ‘폭력성’을 문제 삼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자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저항과 협력’의 그 끈질긴 이분법적 생명력이다.

조경달이 근대성의 ‘외부’에 민중의 일상세계를 위치시키면서 강조한 것은 ‘저항’의 양상을 포착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론이 식민권력과 그것에 포섭된 근대적 주체 사이의 ‘협력’만을 문제 삼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론은 협력의 측면에만 특화된 논의인가. 그것 또한 틀린 해석인데, 윤해동의 말을 빌리면 ‘식민지근대성’이란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¹ 나미키 역시 ‘대일협력’을 분석하면서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심리를 ‘저항’의 맥락에서 이해한다.²² 이처럼 양자는 민중의 일상세계에서 ‘저항’의 모습을 포착하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론이 그것을 ‘협력’의 영역에서 상호 교차하는 양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조경달은 그것을 어디까지나 ‘협력=근대성’의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항을 어디까지나 협력의 외부에 두는 조경달의 접근은 ‘이분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대성을 ‘내면화’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에서 ‘주체화’하지 못했던 민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주체성’이 반드시 거기에만 있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이분법적 인식은 굉장히 철저하다. 출판·검열을 분석한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가 “권력이 쓰게 하고 싶은 바를 쓰지 않는” “저항의 자세”를 부각시킨 점을 “근대성=지배에 대한 동의를 부정”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그에게 협력과 저항은 어디까지나 ‘상극적인 가치’로 인

²⁰ 戸邊秀明(2008), p. 69.

²¹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당대비평』 13호(2000.12).

²² 並木眞人(1993), p. 45; 並木眞人(1999).

식되어 있는 것이다.²³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조정달이 저항을 협력의 외부에 배치한 것보다도 ‘협력=근대성’의 내부에서 ‘저항’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느낀 것 자체에 있다. 그것은 마냥 근거가 없는 비판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고마고메나 미야타의 접근은 체제 내적인 인물의 심성을 통해 식민지성을, 즉 그 비대칭적이고 폭력적인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서 저항의 맥락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접근이 식민지의 경험에 입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위화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제국체제에 ‘내화’되는 심성을 근대성의 ‘내면화’, 나아가 근대적 ‘주체화’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심성의 포착은 그것만으로 ‘저항’과의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때의 ‘주체화’는 어디까지나 제국체제에 응하는 심성을 밝힌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의 주체성을 ‘제국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심성 안에서 벌어진 저항과 협력의 갈등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분법의 극복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의 연구는 ‘주체화의 복합적인 긴장감’을 유지한 케이스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일본사 안에 간힌 담론공간을 개방하고 양자의 응답관계를 밝히는 그의 관점은 고마고메가 지적한 제국사의 특징을 이어간다. 그는 특히 동아협동체론과 그에 응답한 조선지식인들의 논리를 밝히는데, 그것은 “저항과 협력 사이에서 비판적인 언론을 형성해 나간 갈등에 가득 찬 시도”였다고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동아협동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민족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조선사회의 발전과 평등화를 이룩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국일본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식민지근대’ 안에 스스로 편입됨으로써 그 속에서 주체형성을 이룩하는 위태로운 시도”이기도 했다. 즉 여기서의 ‘주체화’는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묘사된다.²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이 주체성 논의에 제공한 함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²³ 趙景達, 『日本(近現代)九. 植民地』, 『史學雜誌』第116編 5号(2007.5).

²⁴ 米谷匡史, 『アジア/日本』(岩波書店, 2006)[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그린비, 2010)].

즉 거기서는 우선 ‘저항하는 주체’로 한정된 기존의 이해방식을 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근대성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포착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주체화의 양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협력’의 양상에 치중되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원리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양상, 즉 ‘주체화의 복합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 역시 조선의 ‘주체성’을 분석하는 데 그 논의의 ‘복합성’을 중시한다. 주체화는 저항과 협력을 내재한 채 진행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 점에 대한 인식과 긴장감의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제국의 시선’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이분법의 부활을 결코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내/외를 설정한 조정달의 인식이 어떻게 이분법적 저항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는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분법의 함정은 비단 그에 게만 해당된 문제점은 아니다.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 또한 그것과 상반된 형태로 기존의 이분법을 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요네타나 나미키는 ‘주체화의 복합성=저항과 협력의 교차’에 대한 긴장감을 잘 유지한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분석대상은 기존에 ‘친일’로 간주되었던 ‘협력’의 영역에 한정된다. 물론 분석내용이 협력에만 한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는 기존의 ‘저항’의 영역을 분석대상에 들이지 않는 그 인식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나미키가 조선인의 정치참가를 나누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그것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참가”와 “식민지 통치기구에 대한 참입(參入)”으로 구분하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 “신간회운동과 적색노동조합운동의 고양을 마지막으로” 전자의 길은 사실상 봉쇄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관리, 교원,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후자의 케이스를 ‘대일협력’의 유형으로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구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자 민족해방운동(=기존의 저항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분법의 극복=주체화의 복합성’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실에 있다.

근대성의 외부에 배치된 민중의 세계에만 저항을 찾는 조정달의 인식이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일협력 안에서만 복합적인 주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합당한 근거 없는 인식이다. 양자는 입장을 달

리하는 듯 보이지만, ‘절대적인 저항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거기에 대해 적극적/소극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절대적인 저항의 영역이란 과연 가능했을까. 적어도 어떤 ‘정치적 행위’를 수반하는 데 식민권력과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나미키가 대일협력에서 분리시킨 ‘민족운동’이라는 참가방식 또한 식민권력과 접촉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주체화의 복합성’이 재현되었다고 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체성을 논의할 때 그 주체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역학을 내재한다. 특히 조선에서 주체성의 전개를 추적할 경우(Ⅲ, Ⅳ, Ⅴ 장)에 그러한 복합성은 각 차원을 관통하는 공통 양상으로 재현된다. 예컨대 생의 정치담론의 탄생(Ⅲ장)이나 신간회운동의 전개(Ⅳ장), 그리고 역사편찬사업에서 벌어진 논쟁(Ⅴ장) 속에 그것은 재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체화의 복합성’을 저항과 협력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분석하고자 하는 데 본고의 독자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교섭(bargaining)이라는 문제: 저항과 협력의 공존성

주체화의 복합성과도 연계되는 문제로서 다음으로는 교섭(bargaining)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의와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바게닝이라는 관점을 처음 제시한 것은 김동명이었다. 그는 ‘지배정착사와 민족운동사’ 혹은 ‘침략과 저항’의 구도에 대한 나미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다만 거기에 ‘정치이론’을 접목시키면서 분석개념으로서의 ‘바게닝’을 제시했다.²⁵ 구체적으로는 갤러거(J. Gallagher)와 로빈슨(R. Robinson)의 ‘협력이론’을 그 토대로 삼았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²⁶ 협력이론은

²⁵ 並木真人(1993); 金東明, 「支配と抵抗の狭間-1920年代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と朝鮮人の政治運動」,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研究科博士論文(1997); 김동명(2006).

²⁶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이론」, 『한국일본학회』 제43권(1999.12). 갤러거와 로빈슨의 협력이론에 대해서는 박지향, 『제국주의』(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이 논문은 지배국과 식민지의 계층적 협력 체제를 제국주의의 요인으로 부각시킨 연구로, 기존의 본국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식민지 사회에까지 시야를 넓혀 본국과 식민지의 토착 엘리트 및 자본가 간의 결탁 관계를 조명한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경성방직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에커트(Carter J. Eckert)의 연구를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하지만 협력을 저항에 대한 이분법적 개념으로 정립시킨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기존의 경제사 및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정치사 및 비유럽 중심의 시각으로 이행한 이론으로, 제국주의를 비유럽 사회의 “협력과 저항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양자간의 ‘정치적 반사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했다.²⁷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서 “조선인의 정치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3.1운동의 충격을 받은 일본제국주의는 제한적이지만 조선인의 정치활동을 허용했고 조선인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타나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바게닝(bargaining)을 시도하며 저항과 ‘협력’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은 채 식민지 현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작용(interaction)하며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실증 분석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정책사 연구와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가 분리되어 있었던 종래 연구의 난관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즉 식민지 지배 권력과 피지배자의 정치운동 사이의 정치과정에 착목해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 ‘협력(collaboration)’에도 주목함으로써 식민지조선의 정치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한 것이다.²⁸

‘지배정책사와 민족운동사’ 혹은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이 ‘협력’ 이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양자의 관계를 ‘상호작용’(=정치적 반사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조선의 정치운동을 일본의 식민지배에 다양한 방향성(=저항과 협력)을 가지고 ‘바게닝’을 시도한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게닝’은 식민지배와 정치운동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저항과 협력’의 역학을 내재한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이미 이러한 개념을 제시했던 김동명의 선구적인 연구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의의에 비춰볼 때 그 결과물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모순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마 연구자들의 인식을 끈질기게 규정하는 이분법의 생명력과 정치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진다. 협력이론의 적용은 식민지배와 정치운동의 관계에 일종의 일반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용된 모습은 이분법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상반되게, 오히려 지나치게 도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지배정책’에 대응한 정치운동을 ‘(분리형/동화형)협력’과 ‘저항’으로 배치하고 그러한 도식에 따라 정치과정을 분석하는 점에서 그렇다. 그 과정적 분석이

²⁷ 김동명(1999), p. 510.

²⁸ 김동명(2006), 서문.

지배와 운동 사이에 일종의 동태성과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과 저항의 역학은 그 복잡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분리된다.

협력과 저항 양쪽을 두루 분석하는 구성은 연구에 객관성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협력-저항이라는 이분법의 극복이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일견 아이러니컬한 긴장감을 내재적으로 파악했을 때 비로소 달성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운동을 협력으로, 또 다른 운동을 저항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전개를 두루 살펴보는 것만으로 이분법은 극복되지 않는다. 한 운동 속에서 해석되어야지만 분리 불가능한 복잡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항과 협력은 하나의 운동 속에 ‘공존’한다. 애초에 ‘바게닝’이란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하나의 장’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을 것이다.²⁹

그것이 제대로 재현되어야만 비로소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김동명의 연구는 바게닝 개념의 발명과 함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서술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 기존의 ‘친일운동’은 ‘동화형 협력운동’으로, ‘우파의 민족운동’은 ‘분리형 협력운동’으로, 이에 대해 ‘좌파의 민족운동’과 일부 ‘사회주의 운동’은 ‘저항운동’으로 도식화되었다. 그것은 협력과 저항을 세분화시켰을 뿐, 민족주의를 ‘좌/우’로 가르고 전자에 ‘저항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기존의 서술방식은 보다 정교하게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바게닝 개념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되, 그것을 새로운 인식론에 뒷받침된 서술로 이끌어가도록 유의할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주체화의 복잡성’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바게닝을 ‘저항과 협력이 공존하는 장’으로 봄으로써 그 역학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고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항’의 전개를 포함하지만, ‘협력’과 분리된 의미의 영역으로 점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항’과 ‘협력’ 어느 한쪽에 특화된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컨대 생의 정치담론(III장)은 민족주의 우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신간회운동(IV장)은 민족주의 좌파에

²⁹ 김동명과 같은 모순은 문학사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예컨대 김재용은 어떤 문학을 ‘협력’으로, 또 다른 문학을 ‘저항’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말기 ‘친일문학’을 재조명했다. 김재용(2004).

게 점유된 것도 아니다. 또한 역사편찬사업(V장)은 친일의 온상도 아니며 또 거기서 벌어진 논쟁은 절대적인 저항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기보다 양쪽이 공존하는 긴장감을 파악해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서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김동명의 바게닝 개념을 받아들인 나미키는 그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의 관심은 ‘운동’보다는 ‘지배’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합의조달’이라는 개념이다. 합의조달이란 식민지배자라고 하더라도 피지배자와의 바게닝에 임해야 했던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는 “일반적인 국민국가와 비교해 ‘민의’, 즉 피지배자의 합의조달이 극히 곤란”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통치자들은 합의조달을 위한 바게닝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³⁰

물론 통치자는 항상 ‘교섭’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국의 임계점—예컨대 독립, 혁명, 해방 등 체제의 근간에 저촉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는 ‘탄압’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중의 합의조달이 필요했던 사실이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3.1운동의 충격이 제국에 안겨준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배의 역학 또한 결코 일면적이지 않다. 즉 운동 속에 ‘협력과 저항’의 역학이 작동했던 것처럼, 지배에도 ‘탄압과 교섭’의 역학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이루어진 상관관계란 이처럼 중층적인 모습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미키의 합의조달 개념은 지배를 하는 쪽에서 탄압과 교섭의 역학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바게닝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예컨대 조선의 민족운동을 담당할 주체를 친일 세력에서부터 민족주의 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III장)이나, 신간회운동을 자치운동을 염두에 둔 온건한 방향으로 조율하려고 했던 것(IV장), 또한 역사편찬사업이 3.1운동 이후에 동화 대신에 학술성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V장) 등에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교섭에서는 제국의 의도에 부응하는 협력의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제국의 의도를 미끄러뜨리는 저항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주체성의 전

³⁰ 並木眞人(1993), p. 30.

개란 그러한 복합적인 과정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바게닝 개념 또한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장으로서 의의가 부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항과 협력의 공존성이 그 개념의 핵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식민지 공공성: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

‘식민지 공공성’은 앞서 본 저항과 협력, 그리고 바게닝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논의이다. 특히 이를 주도한 논자로 나미키와 윤해동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의 논의의 진전을 살펴보면서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것’이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식민지 공공성’은 나미키와 윤해동의 문제의식이 수렴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식민지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기존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판의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공공성’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나아가 ‘주체성’에 대한 이해와도 연계되는 논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미키의 문제의식은 초창기부터 ‘정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1993년의 논문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역사에 있어 정치사란 어떠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었는데, 식민지연구를 전공하는 사학자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의 존재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국민국가의 존재를 암암리에 전제”로 하는 “일국사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그것이 “식민지의 정치에 대해서도 의사적(擬似的)으로 준용(準用)”되어왔다.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의 정치를 바라볼 때도 국가를 전제로 하는 일국사적 관점이 적용되어왔다는 것이다. 나미키는 이러한 관점을 “의사국가(擬似國家)로서의 식민지”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데, 그 결과로 초래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연구 상황이었다.

종래 식민지 정치사연구는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억압을 고발하거나 대조적인 발상의 차이는 있지만 공히 통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과, 또 하나는 이를테면 피지배민족의 올바른 존재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족해방운동의 궤적을 검증하는 접근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식민지의 정치생활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고 안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역사상은 한편에서는 식민지배만능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적 영광찬미론이라 할 수 있는 극론으로 경도되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통합과 저항이 경합하는 속에서 전개된 식민지사회의 실태와의 간격(扞格)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³¹

식민지 정치사연구는 ‘통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과 ‘민족운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식민지배만능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찬미론’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식민지의 정치생활의 일면만’을 본 것에 불과하다. 즉 ‘의사국가로서의 식민지상’을 전제로 한쪽에서는 ‘지배’를 정당화/고발하는 논의가, 다른 한쪽에서는 ‘저항’을 검증하는 논의가 성장해왔지만, 이것이 과연 ‘식민지의 정치’를 올바르게 파악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 ‘국가적인 측면’만을 허락했던 편향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통치 측과 운동 측 각각이 안고 있는 문제상황 속에서 전개된 복잡한 정치과정이야말로 식민지의 정치사가 연구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³²

이러한 나미키의 주장은 10년이 지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정치사’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그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선근현대사연구를 통제해온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는, 식민지공간에서 이루어진 바게닝(bargaining)의 전개와 이에 수반된 정치과정론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³³ 즉 ‘식민지에서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오랜 문제의식은 바로 ‘바게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승화되는데, 이러한 나미키의 문제의식을 한발 더 진전시켜준 것이 윤해동에 의해 제출된 일련의 논의였다.

윤해동에게도 제국과 식민지는 결코 일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연관된 세계’”로 인식된다.³⁴ 따라서 나미키가 그랬듯이 그 역시 “수탈과 저항이라는 양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을 찾게 된다. 그것이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회색지대”였다.³⁵ 앞서 보았듯이 ‘바게닝’ 또한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곳’을 의미했다. 윤해동의 ‘회색지대’ 또한 이를 부각시킨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양자를 관통하는 것은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미키가 바게닝을 식민지 정치사연구의 새로운 분석개념으로 설정했

³¹ 並木眞人(1993), p. 30.

³² 여기까지 인용은 並木眞人(1993), pp. 29~31.

³³ 並木眞人(2004).

³⁴ 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 p. 52.

³⁵ 윤해동(2000.12).

던 것처럼 윤해동 역시 자신의 논의를 ‘식민지기 정치사’에 대한 비판과 연결시킨다.

요컨대 저항과 친일의 이분법은 한편으로 저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저항과 친일을 직접 대응시킴으로써 식민지기 정치사의 부재로도 운위될 수 있는 정치사의 빈약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근대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식민지배 기간을 이해함으로써 민족해방 투쟁을 새로운 국가형성을 위한 운동으로 규정하는 압도적인 정치사 우위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민족해방운동사 중심의 정치사 이해는 민족주의라는 프리즘에만 정치적인 행위를 투사시킴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민족해방운동사로만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다시 말하면 압도적인 정치사 우위의 인식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치사 구성에서 빈약함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저항 행위를 새로이 개념화하여 ‘정치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³⁶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민족운동사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정치사 우위’의 분석을 적용해왔으며 그 결과 민족주의의 프리즘을 통과한 행위만이 ‘정치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한 정치사(=민족운동사) 우위의 인식틀은 오히려 식민지기 정치사에 역으로 ‘정치적인 빈약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항’ 역시 ‘민족국가 형성’과 결부된 의미만 인정받았으며 ‘친일’의 대(對)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왜소화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윤해동은 자신의 논의를 ‘정치=저항의 복원’을 위한 시도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의미로 복원된 ‘정치’를 받아주는 개념이 바로 ‘식민지 공공성’이었다. “식민지배기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윤해동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으로 답한다.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정치적인 것’이란 바로 ‘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정치적인 것’을 ‘민족운동사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오는데, 거기서 ‘공공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정립된 ‘정치적인=일상적인=공적인 영역’은 ‘회색지대’로 연결된다.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즉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정치적인 것’=공공영역이 위치”한다는 그의 명제는 이리하여 도출되었던 것이다.³⁷

기존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미키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³⁶ 윤해동(2000.12), pp. 146~147.

³⁷ 윤해동(2000.12), p. 149.

‘바게닝’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윤해동은 ‘회색지대’가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이들의 논의를 수렴해줬던 것이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관점인데, 그것은 식민지조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발견하기 위해 도달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⁸

앞서 윤해동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에 대한 재해석은 동시에 ‘저항’의 새로운 개념화를 의미한다. 나미키의 연구가 ‘대일협력’을 향한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는 대일협력을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중’을 저항하는 주체에서 ‘생활자’로, 그리고 ‘저항’을 운동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관점을 제시했다.³⁹ 한편 정치를 ‘일상의 공적 영역’에서 찾았던 윤해동 역시 ‘일상적인 저항’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회사’의 영역으로 시선을 옮겨 기존의 ‘정치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연구영역, 예컨대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공간을 ‘식민지 공공성’이 구현된 장으로 개발했다.⁴⁰

이들의 전개는 ‘기존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무화되었던 영역을 ‘식민지 공공성’이 구축되었던 영역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새로운 ‘저항’의 의미를 창출하는 노력이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노력은 윤해동에게는 더더욱 명시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식민지기 저항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식민지배하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식민지기 저항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⁴¹

그는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회색지대)에 ‘정치적인 것’을 발견하는 작업이 곧 ‘저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과 연계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식민지 공공성’이란 애초에 이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이를 저항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작업으

38 나미키와 윤해동의 논의를 ‘정치’의 관점에서 언급한 글로는 戶邊秀明(2008), pp. 66~67; 岡本眞希子(2010), p. 120.

39 그 전개를 알기 위해서는 並木眞人, 『植民地期民族運動の近代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26輯(1989,3); 並木眞人(1993); 並木眞人(1999).

40 “나는 기존의 학계의 관심 축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민국가에서 ‘사회’로, 민족에서 ‘공공성’으로 나의 관심은 이동했다”[윤해동(2007), p. 32]. 윤해동(2006).

41 윤해동(2007), pp. 55~56.

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기존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미키와 윤해동을 하여금 새로운 연구영역—대일협력, 일상사, 사회사—을 개발하게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의 외연을 넓히고 또 저항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저항’(윤해동) 혹은 ‘저항의 일상성’(나미키)의 발견이 이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의 원점에 돌아간다면, 이들의 작업에는 일말의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치사’ 혹은 ‘운동사’에 대해 그간 얼마나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 그 규정력은 여전한 모습임에도 식민지 공공성은 거기에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접근법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것’을 개척한 그들의 접근은 확실히 정치의 ‘외연’에서 내부가 갖는 문제성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말해지던 것’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본고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물론 그동안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미키는 ‘저항성의 절정’으로 간주되어온 ‘신간회’에 대해 “그것이 합법적 단체인 이상 식민권력과의 바게닝은 필수적인 과업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한 교섭이야말로 “저항의 일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협력과 상호 배타적인, 전혀 격절(隔絶)된 성격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즉 “저항과 교섭과 협력은 연속적인 동일한 스펙트럼(spectrum)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사태”로, 신간회 또한 그 대상으로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확실히 기존의 운동사 서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⁴²

한편 윤해동도 ‘자치운동’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 바 있었다. 과연 “자치운동은 저항운동인가 협력운동인가?” 기존의 운동사에서는 “자치운동을 ‘민족개량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민족주의라는 겉꺼풀을 쓴 하나의 변종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으나 기실은 일본 식민주의자의 정치적 도구로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당한다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깔고 있다. “이처럼 자치운동은 민족개량주의로 규정됨으로써 민족주의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으로서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또한 기존의 운동사 서

⁴² 並木眞人(2004), p. 209.

술이 갖는 문제점, 즉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⁴³

하지만 식민지 연구는 문제제기를 넘어선 실천의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말해지지 않았던 것’을 개발했는지언정 ‘말해지던 것’에 대한 수정은 아직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말해지던 것’에 과고들어 그 ‘내부’에서 ‘정치적인 것’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컨대 1920년대 중반 문화운동이 ‘정치화’의 단계를 맞이했을 때 나타난 ‘생’의 담론은 독립이나 혁명으로 물든 기존의 ‘정치운동’을 새로운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담론적 노력이었다. 거기에는 ‘기존의 정치적 관점’에서는 가시화될 수 없는 새로운 의미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III장). 이미 나미키와 윤해동의 지적에서도 나오듯이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은 자치운동이나 신간회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재고를 요구한다. 즉 협력으로도 저항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면, 자치운동 그리고 신간회라는 실천 또한 ‘새로운 정치’(=생의 정치담론)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IV장). 한편 ‘정치적인 것’의 재해석은 운동사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편찬이라는 운동사와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제기되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조선사의 편찬에 나타난 ‘포섭’(=교섭)의 방식에서 어떠한 ‘정치’(=협력과 저항)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작업을 수행한다(V장).

(4) 식민지 근대성과 역사편찬: 주체성의 의의

여기서는 역사편찬사업을 둘러싼 기존의 시각과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이와 본고의 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는 V장과 관련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구시각들과 연동되는 의제이기도 하다. 특히 본고에서는 ‘식민지 근대성’에 주목하는 최근의 경향이 갖는 문제점으로서 ‘주체성’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지적할 것이다. 주체성의 관점은 역사편찬사업이 설정한 ‘학술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추적한다. 이는 학술성으로 호도되었던 사업의 ‘정치성’을 밝히는 동시에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이 중시하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

⁴³ 윤해동(2000.12), pp. 149~150.

한편 주체성의 관점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문제제기와도 연관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래 식민지 근대성의 논의와 함께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의 관계를 문제시하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더 나아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체성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과 입장을 같이한다. 학술성 속에서 전개된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은 그러한 관점에서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더 나아가 ‘근대역사학=식민사학’과 ‘조선학=민족사학’의 관계를 상관적인 관점에서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추진된 역사편찬사업은 오랫동안 ‘식민사학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함께 인식되었다. 그것이 ‘일제관학과 식민사관’의 온상이었다는 인식이 초기의 평가를 구성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사학’의 확립이 시대적 과제로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된 ‘식민사학’은 본격적인 연구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당위적인 비판이 앞서갔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 문제의식이 나타나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이는 식민지 근대론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은데, ‘근대성’에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역사편찬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왜곡성’뿐만 아니라 그 심층을 흐르는 ‘근대성’, 다시 말해 ‘근대 역사학’이 갖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편찬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고조되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실증연구조차 부진한 상태였지만,⁴⁴ 2000년대에 들어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⁴⁵ 이와 병행하여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⁴⁶

44 김성민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989).

45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2009.3); 박찬홍, 「『조선사』(조선사편수회 편)의 편찬 체제와 성격」, 『사학연구』 99(2010);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46 李成市,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學」, 『植民地主義と歴史學-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刀水書房, 2004); 箱石大, 「近代日本史料學と朝鮮總督府の朝鮮史編纂事業」,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2007); 桂島宣弘 編, 「特集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 「併合100年」からの照射」, 『季刊日本思想史』 76号(2010);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이마니시 료(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역사상」, 『한국사학사학보』 28(2013.12); 심희찬,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 발전과 ‘조선’의 위상-실증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그 그림자」, 『동서인문학』 52(2016.12).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일본의 ‘근대역사학’, 더 정확히는 그 방법으로서의 ‘실증주의’에 내재된 ‘식민주의’와의 관계에 있다. 요컨대 역사편찬사업은 ‘근대역사학=실증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진 장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15년에 중추원에 설치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된 『조선사』 편찬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조선사편찬위원회는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되었으며 『조선사』의 간행은 1938년에 완료되었다. 『반도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20여년에 걸쳐 역사편찬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의 역사편찬사업은 그 ‘식민주의적’ 성격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의 ‘근대역사학=실증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리 부각되지 못했다. 심지어 그 실증주의적 성격은 식민주의적 죄악 속에서도 구출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기까지 했다.⁴⁷ 이와 달리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는 ‘근대역사학’, 특히 그 ‘실증주의적 방법’에 대해 그동안 순진했던 믿음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거기에 배태된 ‘식민주의적 성격’을 파헤치려고 한다.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는 무관하거나 대립하기는커녕 단단히 엮인 관계로,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편찬사업은 ‘근대역사학’이 갖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이 작동하는 모습을 밝히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경향에 대해 본고는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특히 근대성에 비판적인 관점이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층 더 심화시킨 점은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을 질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수해야 할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주체성’에 대해 관심이 희박했던 데에서 비롯된다.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을 받아들인 연구에서는 ‘근대역사학’이 갖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에 대한 물음은 있어도 그것이 ‘식민지의 주체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처리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역사편찬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측면에 있다. 본고는 역사편찬사업이 ‘조선의 주체성’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거기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술’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성’의 실태와 ‘복합

47 桂島宜弘,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書編纂と歴史學」, 『季刊日本思想史』 76号(2010).

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주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반도사 사업'과 '조선사 사업' 사이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양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의 측면에서 파악된다.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신봉했던 '실증주의적' 방법이 적용된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를 양 사업에 일관된 '식민주의적'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또, 양 사업의 연속성은 인적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동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내걸었던 반도사와 달리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맥락에서 출범한 조선사의 경우 '동화'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화'를 대신할 가치로 내세워진 것이 바로 '학술성'이었다. 요컨대 반도사와 조선사 사이에는 '동화에서 학술로의 전환'이라는 사태가 개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할 때 비로소 '학술성', 다시 말해 '근대역사학=실증주의'와 '주체성'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학술성'이 '동화'의 대안으로 채택되었다면, 그것은 조선의 주체성을 다루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동화'가 조선의 주체성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동일성을 강요하는 방식이었다면, '학술성'의 자장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그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거기서는 배제가 핵심이 아니라 학술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있게 하는지', 즉 '존재'시키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화에 의한 배제'뿐만 아니라 '학술에 의한 포섭'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포섭은 존재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 위치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그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로써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포착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된다. 이는 동시에 제국이 설정한 '학술성' 속에서 '정치성'이 작동하는 모습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밝히는 문제와 연계될 것이다.

한편 '주체성'의 관점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묻는 오랜 질문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각되기 이전, 역사편찬사업은 '식민사학' 혹은 '식민사관'과 같은 말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이 조선의 역사에 수행한 ‘왜곡’이 문제의 초점으로 이해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민족사학’의 확립이 추구되었으며 그 정당성이 담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대립적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대립관계에 일찍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연구였다.⁴⁸ 식민사관에 대한 단죄의식이나 민족사학에 대한 사명의식에서 볼 때 ‘역사편찬사업에 참여했던 조선 지식인’의 존재는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아예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와무라는 이 문제에 일찍이 주목하면서 조선사 사업에 참여했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분석했다. 특히 단군을 둘러싼 논쟁을 조선에서 민속학이 성립한 배경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을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조선인 위원들의 발언을 ‘저항’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그의 관점은 결국 식민사학과 대립하는 ‘민족사학’을 ‘민속학’으로 대체하는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최남선의 조선학’에 대한 이해에서 보여준 것이 쓰루조노 유타카(鶴園裕)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⁴⁹ 그동안 조선에서 ‘국학’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 관학자들과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식이나 신채호의 경우 ‘민중적 민족사학’으로 높이 평가받는 한편, 이능화나 최남선의 경우 ‘타협적 민족사학’으로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는 조선사편수회에서 단군에게 고집했던 최남선의 발언은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쓰루조노의 문제 제기인데, 이 점에서 가와무라와 상통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쓰루조노는 조선학을 “식민지하 조선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연구, 일종의 학문적인 내셔널리즘운동”으로 규정한다. 최남선은 그 제창자로서 중시되는데, 그 경우에도 그가 “일본의 ‘근대적 학문’을 타자로서 의식했던 점”이 강조되며, 최남선의 발언을 통해 민속학의 성립을 보는 가와무라에 대해서도 “조선 측 위원의 역사

48 川村湊, 『『大東亞民俗學』の虛實』(講談社, 1996).

49 鶴園裕, 「近代朝鮮における國學の形成-「朝鮮學」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輯(1997).

적 내재적 내셔널리즘의 계기를 더 중시”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요컨대 조선학, 나아가 최남선의 언설을 ‘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읽어내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애초의 문제제기와의 관계성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쓰루조노가 최남선을 중시했던 것은 ‘민중적 민족사학’, 달리 말하면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그를 배제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중적’과 ‘타협적’을 가르는 인식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민중적’에 포함시켜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근본적인 비판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⁵⁰

가와무라와 쓰루조노에게 공통되는 문제점은 둘 다 결론적으로는 ‘저항’ 혹은 ‘내셔널리즘’의 관점으로 회수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식민사학과 민족사학’ 혹은 ‘민중적 민족사학과 타협적 민족사학’이라는 대립적인 이분법에 대한 비판은 일견 ‘내셔널리즘’을 넘어설 듯하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저항성’을 강조하는 서술은 결국 내셔널리즘으로 회수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논의가 제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주백이 제안하며 김종준이 발전시킨 ‘학술장’이라는 관점이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신주백은 193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조선학운동을 오로지 ‘운동’의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기존의 연구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때 기존연구는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조선학운동을 민족운동과 접목시키는 관점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관과 국가관이 반영된 학술운동적 대응”으로 보는 경향, 다른 하나는 “타협과 비타협을 구분하지 않고 민족주의운동 계열과 유물사관의 일부까지” 조선학운동에 포함시키는 경향이다.⁵¹ 즉 ‘타협과 비타협’의 구분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⁵⁰ 鶴園裕(1997), pp. 62~64.

⁵¹ 전자의 대표적 연구로 이지원과 방기중을, 후자의 경우로 한영우, 임형택, 전윤선 등을 들 수 있다.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한영우,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사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994);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작과비평사, 2000); 전윤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운동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민족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이지원(2007). 또한 최기영의 경우 ‘국학’이라는 큰 범주를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으로 나누어, 이 중 국사학의 분야에서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의 주도로 일어난 현상을 조선학운동으로 이해하며 사회경제사학(유물사관)과 실증사학(진단학회)까지 아울러 고찰하고 있다. 최기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한울, 2003).

조선학을 ‘운동’ 중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점은 공통된다. 신주백은 특히 이들 연구가 ‘저항’이라는 정치적 지형을 기준으로 조선학운동을 설명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학술장’이라는 관점이었다. 그는 ‘운동’이나 ‘저항’이 아닌 ‘아카데미즘’을 기준으로 당시의 지형을 설명한다. 곧 ‘조선학이라는 학술장’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⁵²

이를 계승한 것이 김종준의 연구이다. 그는 조선학을 ‘운동’의 차원에서 ‘저항’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문제점과 ‘학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중요성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역사의 과학화’ 논쟁을 통해 1930년대의 학술장을 재구성하고자 했다.⁵³ 그 시도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자신의 연구를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을 포괄하여 당대 역사학계의 계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라는 오랜 문제의식이 ‘학술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김종준의 연구에서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식민사학’은 기존의 인식을 포함하면서도 ‘관학아카데미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점에서 그는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카와무라나 쓰루조노의 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이기도 하다. 둘째로 ‘민족사학’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민족주의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사학’(유물사관)이나 ‘문헌고증사학’(실증주의)까지 그 개념에 포함된다. 셋째로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개념을 이렇게 재정리한 다음에, 그 속에 존재하는 분파들을 한데 모아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때 분파들 간의 관계는 “대립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연관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해된다.⁵⁵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 나아가 ‘조선학운동에 관여했던 주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쓰루조노의 연

52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朝鮮學學術場의 재구성과 관련한 시론적 탐색』, 『역사문제연구』 26호 (2011); 신주백, 『‘조선학운동’에 관한 연구동향과 새로운 시론적 탐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집 (2011.6).

53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소명출판, 2013).

54 김종준(2013), p. 25.

55 김종준(2013), p. 26.

구에서도 이 점은 지적되고 있는데, 그는 실증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등 각각 차이는 있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형태로 통일전선적인 학문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의 특징이었음을 시사했다.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대립관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긴 했지만, 조선학운동 안에서 ‘대립적이지 않은 관계’의 가능성을 지적했던 것이다.⁵⁶ 김종준의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에까지 시각을 넓혀 ‘대립과 연관’이 복합적으로 얽힌 관계성을 파악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보면 그의 연구는 ‘학술장’(아카데미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운동’과 ‘학술’을 넘나드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이처럼 ‘상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접근은 최남선에 대한 이해에서도 유용한 접근이 된다. 기존의 ‘저항’의 관점이 노정환 한계는 가와무라와 쓰루조노의 연구에서 이미 가시화되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그들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신주백의 제안에 이어 김종준이 발전시킨 관점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바라보는 단서를 열었으며 이 점에서 최남선에 대한 이해에도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조선사 사업이 설정한 ‘학술성’ 안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목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그 관점은 중요한데, 그것이 편수회에서 벌어진 논쟁과 최남선의 발언을 재해석하는 데 기본틀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최남선의 발언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의 발언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역사편찬사업과 최남선의 관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더 나아가 ‘근대역사학과 조선학’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누락된 주체성의 관점을 보완하는 본고의 분석은 ‘학술성’ 안에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는 동시에 ‘근대역사학=식민사학’과 ‘조선학=민족사학’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⁵⁶ 鶴園裕(1997), p. 67.

3. 연구시각과 방법론

(1) 내셔널리즘의 극복과 비민족주의적 주체성

앞 절에서는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연구 시각을 살펴보고 본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했다. 그동안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에서 ‘주체화’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피고 그 ‘복합적인 양상’에 유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그것이 ‘바게닝’ 개념에서 ‘저항과 협력의 공존성’을 파악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논의했다. 이어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관점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는 맥락을 밝히고 그 재구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역사편찬사업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을 살피고 거기서 누락된 ‘주체성’의 관점이 갖는 의의를, ‘학술성’에 배태된 ‘정치성’의 재해석=‘식민주의적 폭력성’의 파악, 그리고 ‘근대역사학=식민사학’과 ‘조선학=민족사학’의 상관관계라는 논점과 함께 밝혔다.

이상의 논점을 관통하는 의제를 찾는다면 거기에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이라는 문제가 새삼 떠오르게 된다.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에서 주체성 논의는 그동안 ‘저항하는 주체’에 점유되었던 연구 상황에 대한 대안적 문제제기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바게닝 또한 ‘저항의 절대성’을 넘어 상호 연관적인 역학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한편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의 ‘지배정책사와 운동사’, 다시 말해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라는 구도 중심의 정치 이해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역사편찬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식민사학에 단순 비난을 유지하는 ‘민족사학’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고조된 것이었다.

이처럼 일련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존의 연구영역을 ‘내셔널리즘’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다. 물론 식민지 근대론 자체가 원래 ‘민족주의 비판’을 특징으로 가졌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유달리 특이한 공통점은 아니다.⁵⁷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그

57 식민지근대론의 특징에 대해서는 松本武祝, 「『植民地的近代』をめぐる近年の朝鮮史研究-論点の整

특징을 확인하는 일은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셔널리즘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의외로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기존연구에서 ‘주체성’의 문제가 경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가 지적하듯이 전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에서 조선인의 주체성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늘 필수의 과제로 의식되어왔다.⁵⁸ 물론 해방 후의 한국에서도 주체성의 회복은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였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과제의식은 주체성의 문제를 ‘민족’이나 ‘저항’에 점유되는 상황을 자명한 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 비판’이 점차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자 주체성 문제 또한 일거에 복잡해졌다.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성의 파악이 지향되면서 ‘주체의 다양성’, 달리 말하면 젠더나 계급과 같은 ‘아이덴티티의 복합성’에 착목한 연구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⁵⁹ 또한 앞서 보았듯이 제국사연구에서도 ‘식민지의 경험’, 그 심상이나 논리를 부각시키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패러다임이 ‘제국주의’에서 ‘제국사’로 전환하는 가운데 식민지의 주체성이라는 문제에 계속해서 응답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한편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은 ‘주체성’을 ‘근대성’과 포리일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식민권력에 의한 규율화’와 ‘근대주체의 형성’에 주목한 연구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는 1990년대 이후 복잡화의 일로를 걸어갔으며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던진 질문, 즉 내셔널리즘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묻는 작업은 내셔널리즘의 극복이 외쳐지는 가운데 복잡해진 주체성

理と再構成の試み』, 『植民地近代の視座』(岩波書店, 2004); 板垣龍太, 「<植民地近代>をめぐる」, 『歴史評論』(2004.10).

⁵⁸ 三ツ井崇, 「朝鮮」,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アテネ社, 2008).

⁵⁹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하의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松本武祝(2004); 板垣龍太(2004.10).

논의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내셔널리즘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기본적으로 ‘비민족주의적인 것’이다. 일견 동어반복처럼 보이는 정의지만 이것이야말로 주체성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기축이 되어야 할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이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 가능한 가치가 아니다. 예컨대 젠더나 계급, 혹은 생활자 등 민족을 대신할 주체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석의 가능성을 ‘다른 것’으로 범주화시키는 접근이다. 물론 새로운 범주를 조명하는 논의의 연구사적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의 대개념으로 정립된 그것은 민족주의적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을 ‘다른 무엇인가’에서 구하는 접근은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을 구체적인 ‘대상’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은 민족이 갖는 절대성을 상대화시켜 새로운 가치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기존의 가치, 즉 ‘민족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적극적인 함의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 주체성의 ‘비민족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경우, 그것은 어떤 다른 대상을 갖는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내부로부터 재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이해된다. 요컨대 ‘방법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족의 대개념이 되지도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 민족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방법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은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방식은 ‘상황적’인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때그때의 특정한 국면에서 동태적으로 파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서 포착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논의할 ‘다차원적인 접근’과도 관계되는 측면인데, 본고에서 말하는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이란 이른바 정통적인 민족주의

적 서술의 영역—예컨대 운동사와 같은—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족주의적 서술이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만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처에, 그러니까 ‘다양한 차원’에서 포착이 가능한데, 따라서 그 존재방식은 해당 차원에서 전개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은 상황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상관적’인 패러다임이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 혹은 식민지의 각 주체들 간에서 형성되는 관계성은 대립이나 협력 혹은 분열이나 협동과 같이 일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측면이 내포된,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그 ‘상황’이 이해되는 것이다. ‘비민족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상관적인 패러다임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주체성’을 내셔널리즘 극복의 ‘방법’으로서 재정립하는 시발점이 된다.

(2) 사회적 관점과 비주권적 주체성

위에서는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주체성이란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을 의미한다는 점, 그것은 어떤 대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방법으로서 이해될 때 비로소 민족주의 자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논의했다. 또한 방법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상관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본고의 관점을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연구사적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상황에 내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국사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도베의 흥미로운 지적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는 그 특징을 “문화론적 전회(轉回)”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연구가 문화에 착목할 경우 그때의 문화란 대상으로서의 문화, 즉 일반적인 문화사나 문화연구가 염두에 두는 개별적인 문화장르의 작품이나 매스미디어, 신체문화 등 구체적인 대상에 환원될 수 없다. 이 경우의 문화란 경제적 정치적인 지배-피지배에 머무르지 않는 식민지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선택된, 이를테면 방법으로서의 문화개

넘인 것이다.⁶⁰

그는 새로운 연구경향—여기서는 제국사연구뿐만 아니라 식민지 근대론, 나아가 탈식민주의 연구 전반을 가리킨다—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이 갖는 두 가지 성격을 지적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후자의 맥락이 중요하다. 즉 ‘방법으로서의 문화’라는 측면인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지배-피지배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의미의 식민지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추상적인 개념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화란 ‘정치경제적 지배-피지배관계’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내셔널리즘의 극복’과 연동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지상황’이란 무엇보다도 ‘국권을 빼앗긴 시공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 ‘민족 국가의 형성’이 과제로 제시되며, 식민지 또한 그러한 지배-피지배관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시공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식민지상황’이란 결코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식민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화’라는 개념에 착목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문화’란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방법으로서의 문화’ 개념이란 달리 말하면 ‘비정치경제적 지배관계’를 핵심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에 환원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비정치경제적’ 의미를 띠는 기타 개념들과 연계된다. 예컨대 ‘생활’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방법으로서의 문화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는 식민권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또한 ‘비정치경제적’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데, 바로 이 점에서 식민지시기의 ‘사회담론’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식민지시기 사회란 ‘국가’를 상실한 상황에서 조선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이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 ‘제국’ 체제에 저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동원된 개념이기도 했다. 요컨대 그것은 ‘내셔널한 관점’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영위되는 영역으로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⁶⁰ 戸邊秀明(2008), p. 64.

‘내셔널리즘’을 벗어난 관점에서 식민지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의 문제 의식과 연동된다. 물론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벗어나야지만 했던 것, 또한 벗어나므로써 새로운 방식의 식민주의를 행사했던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지배관계’ 혹은 ‘국가적인 차원’ 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구도에서 그것들이 공통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방법으로서의 문화’란 식민지상황을 ‘비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시의 담론을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 뿐만 아니라 역사 내재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식민지상황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주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까. 다시 말해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도베가 제시한 ‘방법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이 점에서 앞서 논의한 ‘방법으로서의 비민족주의적 주체성’과 연결된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 관점 또한 ‘비민족주의적 주체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인 관점은 식민지상황을 ‘정치경제적 지배관계’로만 바라보았던 종래의 ‘국가적인 관점’의 극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특징은 ‘주체성’에 대한 접근에도 반영되는데, 여기서의 주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비국가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독립이나 민족국가의 형성과 같은 목표를 통해 달성되는 종류의 주체성, 이를테면 ‘주권국가적 주체성’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비주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앞서 ‘비민족주의적 주체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비주권적 주체성’ 또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갖지 않는다. 즉 그것은 ‘방법’으로서 설정된 개념인 것이다.

식민지시기의 주체성 문제를 논의할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으로 ‘민족주의적 서술체계로의 회수’라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주권국가적 주체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라면 차라리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과제로 내건 순간, 주체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주권국가적 의미’와의 긴장관계를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서술은 항상 애매성을 남기거나 아니면 회수를 허락하고 만다. 본고에서 주체성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고 역시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내건 이상 ‘회수되지 않는’ 주체성 논의를 모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주권적 주체성’을 다른 대상으로 구체화시키면 문제는 해결될까. 앞서도 지적했듯이 주체의 ‘다양성’이나 ‘복합성’에 눈을 돌리는 것 자체는 ‘주권적 주체성’을 상대화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그렇다고 그것자체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대안과 결합시켜도 그것자체로 ‘주권적 주체성’이라는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독립’과 직결되지 않는 운동을 ‘문화적 민족주의’로 조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권적 주체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요컨대 그것이 기존의 민족주의적 서술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남겨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 접근, 다시 말해 ‘방법으로서의 비주권적 주체성’은 문제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서술로 점유된 연구영역에 파고들어 그 속에서 주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당시의 담론을 반영한 역사 내재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식민지상황이란 물론 ‘주권국가적 주체성’에 대한 갈망을 내포한다. 그것은 식민지인의 심층을 흐르는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식민지상황이란 그러한 욕구가 철저히 저지되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점이란 바로 후자의 측면에서 호명되는데,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식민지상황에서는 ‘주권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패배주의나 식민주의의 긍정 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주권’을 불문에 부쳐 ‘국가적’ 관점을 뛰어넘은 순간부터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식민지상황에서 주체성의 문제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 경우의 주체성이란 물론 ‘비주권적’ 성격을 기축으로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셔널리즘의 극복’과 ‘주체성’은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으로서의

비주권적 주체성'이란 바로 이를 위해 고안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체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위에서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도출되는 '비민족주의적 주체성'과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비주권적 주체성'이 갖는 '방법론적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도되는 접근방식에 대해 그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식민지상황에서 전개된 '비주권적 주체성'의 양상을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포착한다. 정치적 지배관계를 중시하는 '주권국가적 관점'에서는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대립적'으로 이해된다. 그 경우 양자 사이의 역학은 '일방적'인 모습으로 이해되는데, 예컨대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침략'이,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저항'이 그 관계를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체성'에 대해서도 '일면적'인 이해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주체성은 '주권국가'라는 한 점만을 향한 역학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주체성'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분석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저항이나 독립, 즉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향한 역학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컨대 지배자는 식민지의 독립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혹은 피지배자는 그것을 위해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분석이 수렴될 것이다. 요컨대 분석차원의 '다원화'는 언제나 주권국가라는 가치에 '일원화'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주체성의 문제에는 '일차원적' 함의 밖에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적 관점'에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상관적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완전한 대립으로도 완전한 협력으로도, 혹은 분열이나 협동 어느 한 측면으로도 이해하지 않으며, 양면을 포함한 역학이 그 사이에 작동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체성의 문제는 각 차원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개된 '복합적인 교섭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주권국가적 관점이 갖는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를 향한 역학 속에서만 주체성을 이해하는 '일면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침략과 저항'이라는 한 측면뿐만 아니라 '지배와 협력'이라는 다

른 측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별개로 논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다. 요컨대 ‘저항과 협력’은 ‘하나의 현상 안에 공존하는 역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에 ‘침략과 지배’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만 비로소 양자 사이에서 ‘탄압과 교섭’ 혹은 ‘저항과 협력’이 맞물리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주체성’의 문제 또한 그래야만 주권국가(독립, 해방)를 향한 일면적인 ‘저항’의 스토리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에 분석차원의 ‘다원화’는 더 이상 ‘일원화’로 귀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비로소 ‘다차원적인 의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접근은 항상 예정된 가치—독립, 해방, 즉 주권국가적 주체성—로 수렴되었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은 어떠한 가치도 상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주권적 주체성을 ‘내파’시키는, 그럼으로써 주체성 논의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주체성을 이해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예정된 가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 차원에 ‘특정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점에서 주체성은 ‘상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분석의 ‘일원화’를 방지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파악되는 주체성은 마냥 다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각 차원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주체화의 양상에는 공통된 역학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위에서도 강조한 주체화의 ‘복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의 지배는 일방적인 침략이 아니라 ‘탄압과 교섭’이 교차하는 동태적 통치과정이었다면, 이에 대해 식민지의 대응 또한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주체화의 양상 또한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얽힌 상관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주체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예정된 가치가 아닌 ‘특정한 상황’에 특화된 분석을 시도하면서도 ‘공통된 양상’을 포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이상에서는 기존의 연구시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의 관점과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에서는 그것이 본론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 장의 구체적인 구성과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사회와 관련된 담론이 일본과 조선 양 측에서 어떻게 출현,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의미로 ‘사회,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맥락은 역사적으로도 존재했다. II장에서는 우선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나타난 ‘사회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가져왔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사회’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맥락에서 발견된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은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인식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주체성’이란 ‘비주권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조선과 일본 양쪽의 사회담론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의 주체성 논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이며, 후속 장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이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사회담론은 식민화 이후 상실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계성을 급격하게 약화시켰던 반면, 새로 들어선 ‘국가(제국)’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자율적인 영역’으로 정립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1차 대전을 계기로 주권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가 발견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식민통치’에 대한 논의에도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주권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은 다원주의적 국가론의 수용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제국공간에 반영되면서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본국과 서로 ‘협동’하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3.1운동의 발발은 이러한 담론적인 변화가 현실의 맥락과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 ‘문화정치’라 불리는 콘텍스트의 탄생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로 구성되었는데, 전자는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다원주의적 협동’을 이루려고 했던 담론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법제도적 차원’에 대해서는 ‘동화’의 입장을 취했지만, ‘정신, 역사, 문화’와 같은 차원에 대해서는 ‘관용’의 입장을 제시했다. 즉 자치주의 만큼의 적극성은 없었지만, 내지연장주의 또한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의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는 분명히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맥락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율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조선의 사회담론과도 어느 정도 호환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주체성/자율성’이란 결코 ‘주권국가적’ 의미를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적 의미가 탈색된 ‘비주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사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맥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태생부터가 ‘주권국가적’ 의미로부터 탈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성격은 동시에 ‘주체’의 성격을 규정한다.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서 인정되는 주체성이 ‘비주권적’ 성격을 가진 것은 여기에서 연원한다. 한편 ‘국가로부터의 탈각’이라는 맥락은 조선의 사회담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특징이었는데, 식민화 이후 국가가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그 의의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 특히 사회와 주체성이 갖는 비주권적 성격은 ‘주권국가적’ 관점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일본에서 식민정책학이나 자치론을 평가해온 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때의 주체성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성’ 혹은 ‘독립에 대한 진실성’을 기준으로 그 진위를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나타난 것이 ‘제국개조론’이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는 연구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관점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II장에서는 이 또한 ‘주체성’이 갖는 ‘비주권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로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사회담론의 분석은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살펴본 것은 양자의 맥락이 맞물렸을 때 주체성 논의에 어떠한 함의가 도출되는지 이해

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관점은 제국과 식민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비주권적 주체성’의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비주권적 주체성을 밝히는 일은 후속 장의 분석을 규정하는 틀이 된다. 거기서는 비주권적 맥락에서 전개된 주체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작업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Ⅲ, Ⅳ, Ⅴ장은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 할애된다. 구체적으로는 ‘담론’ ‘운동’ ‘학술’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 전개를 살펴볼 것인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각 차원은 저마다의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체화의 양상 또한 고유한 전개를 보여주지만, 그러면서도 각 차원을 아우르는 공통성이 존재한다.

첫째로 각 차원에는 ‘비주권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Ⅱ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은 문화정치기를 전후하여 한일 양쪽에서 사회담론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조선의 ‘주체성/자율성’에 중요한 함의를 가졌는데, 그것이 ‘비주권적’인 성격이었다. 그 전개를 살펴보는 후속 장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되 저마다의 맥락에서 ‘비주권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비주권적인 맥락에서 전개된 주체화의 양상은 ‘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사회적 관점에서 주체화의 양상은 일면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권국가적 관점과 차별화되는 측면인데, 거기서 주체화의 양상은 상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역학을 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탄압과 교섭, 저항과 협력을 넘나든다. 그 과정에서 비주권적인 주체화의 양상 또한 양 측면을 포괄한 복합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를 파악하는 것이 Ⅲ, Ⅳ, Ⅴ장에서의 목적이며 동시에 각 장을 관통하는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Ⅲ장 ‘담론’의 차원에서는 문화정치기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염두에 두는 것이 ‘통치와 민족의 상관관계’이다.

3.1운동의 충격을 누구보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 것은 실제 ‘통치’를 담당하고 있던 총독부였다. 조선사회로부터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자율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통치자의 인식이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합의조달’과 ‘체제 안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 특징은 통치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에 있다. 다만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조선사회의 요구를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뒷받침해줄 만한 세력으로부터 통치에 대한 합의를 조달할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담론은 통치자의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운동을 무조건 ‘탄압’하는 방식은 현실성을 잃었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비주권적’인 범위 내로 들이는가에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민족운동을 ‘육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비주권적’ 범위 내에서 민족운동의 세력화, 다시 말해 ‘주체화’를 인정하는 논의의 출현을 의미했다.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담론은 실제 통치의 수준에서는 민족운동을 어떻게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습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제국체제를 안정화시켜주는 세력을 육성하는 문제로 치환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III장에서 말하는 ‘비주권성’이란 흔히 말하는 ‘합법성’의 영역과 겹쳐있다. 다시 말해 ‘합법성’이란 ‘비주권성’이 반영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합법성’을 테두리 짓고 있던 것은 ‘제국의 기반이탈(羈絆離脫)과 독립회복(獨立恢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조선의 민족운동을 ‘합법적=비주권적’ 운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통치에 대한 합의조달’과 ‘제국의 체제안정성 확보’에 바람직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통치 측의 이러한 인식은 민족운동에 대한 논의를 ‘탄압’에서 ‘교섭’의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한편 ‘민족’ 측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다. 민족운동의 방향을 ‘문화운동’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3.1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영역’, 즉 ‘사회’에 대한 담론과 결부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정치기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담론은 통치와 민족이 맞물리는 역학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비주권적’ 범위 내에서 ‘주체화’를 모색하는 논의는 전개되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1920년대 중반에 나타난 ‘생(生)의 정치담론’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는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치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는 ‘합법성=비주권성’의 테두리 안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의미했던 동시에 ‘주권국가적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맥락에 ‘정치’를 놓이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관점의 분석이 요구된다. 정치를 ‘합법적=비주권적’ 영역으로 들이는 작업은 정치를 ‘주권국가적 의미=독립, 혁명’으로부터 탈각시키는 작업을 수반했다. 이로써 ‘정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한 그릇이 되어준 것이 ‘생’의 개념이었다.

‘생의 정치담론’은 통치 측이 설정한 ‘합법적=비주권적’ 영역에 스스로 포섭되는 담론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민족운동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담론이기도 했다. 전자를 협력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분명히 저항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의 정치담론은 그 전개과정에 복잡성을 함축하는데,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이 ‘비주권적’ 맥락에서 전개된 ‘주체화’ 담론을 밝히는 III장의 목적이 된다.

IV장 ‘운동’의 차원에서는 ‘생의 정치담론’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민족운동의 ‘정치화’는 1927년 ‘신간회’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동안 ‘협동전선’의 실천으로 간주되어온 신간회를 본고에서는 ‘생의 정치담론’이 실천된 장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정치에 대한 재해석은 운동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신간회 역시 ‘합법성=비주권성’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던 것이다.

신간회의 그러한 성격은 그것이 식민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고 결성된 사실에 이미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전선’의 관점은 그동안 이 점을 흐리게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간회를 ‘주권국가적 주체성=독립, 해방’을 추구한 운동으로 보고, 그러한 의미로 절대적인 ‘저항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일면을 포착한 것에 불

과하다. 오히려 그 일면을 절대화함으로써 ‘식민지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주체화의 양상’을 그들에 간혀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간회의 정치성은 ‘비주권적=합법적’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간회의 그러한 성격을 특히 ‘정치의 각축장’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은 ‘생의 정치담론이 실천되는 장’이었던 동시에 통치자,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식민지조선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의도가 복잡하게 얽힌 ‘각축장’이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간회에 대한 통치자의 대응은 복잡적이었는데, 그것은 ‘합법성=비주권성’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임계점에 대한 저축 여하에 따라 ‘탄압’과 ‘교섭’을 번갈아 수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운동 측에서도 대응은 일면적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는 두 개의 협동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에서,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간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관점은 전자를 신간회운동의 주체로 간주하는데, 양자는 비록 추구한 운동 형태는 달랐지만 ‘합법성=비주권성’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운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공히 ‘제국에 포섭된 협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양자의 협동에는 통치 측에서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에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른 맥락이 존재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제국이 의도한 주체화’의 기획을 미끄러뜨리는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상관관계’에 유의하는데, 그것은 바로 운동 측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협동에서는 스스로를 ‘생존운동’으로 정립하면서 당국과의 교섭에서 ‘자기결정’의 영역을 견지했던 측면을 밝힐 것이며, 후자의 협동에서는 스스로를 ‘생활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치’와 ‘반제’를 공존시키려고 했던 측면을 밝힐 것이다. 되풀이되지만 이는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포섭되어 있었 으면서도 제국이 의도한 운동형태는 거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 운동이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저항’의 역학이 존재했지만, 이 경우의 ‘저항’이란 결코 ‘주권국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비주권적 주체성’을 의미했다.

V장 ‘학술’의 차원에서는 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역사편찬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거기서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3.1운동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는 가운데 조선의 ‘자율성/주체성’을 부정하는 ‘동화주의’는 기존의 정당성을 급격하게 상실해갔다. II장의 분석에서 보듯이 3.1운동 이후에는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는 자치주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화’를 추구하는 내지연장주의에서도 ‘정신, 역사, 문화’와 같은 차원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취하는 필요성이 지시되었다.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사업 또한 이러한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와 무관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동화’를 대신하여 제시된 것이 바로 ‘학술성’이라는 개념이었다.

1915년에 착수된 반도사 사업은 ‘동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1922년부터 이를 이어간 조선사 사업에서는 ‘학술성’이 사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치로 내세워졌다. 요컨대 양 사업 사이에는 ‘동화로부터 학술로의 전환’이라는 현상이 개재되는데, 그것은 조선의 ‘주체성’을 다루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V장에서는 그 경위를 ‘단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반도사에서 단군은 일본과 조선의 동일성을 논증하기 위해, 즉 ‘동화’를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면, 조선사에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단군=조선의 주체성’을 어떻게 배제하여 일본과의 동화를 이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술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게 하는지, 즉 ‘존재’시키기 위해 ‘포섭’하는 문제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학술성은 그러한 포섭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틀로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단군’이 존재하는 자리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위치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결코 ‘주권국가적 주체성’이 담보된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학술성’이 설정한 역사의 가장자리에 위치지어진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학술성’이란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주권성’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

이었다. 요컨대 ‘담론’(Ⅲ장)과 ‘운동’(Ⅳ장)의 차원에서는 ‘합법성’이 그 그릇이 되었다면, 역사편찬사업에서는 ‘학술성’이 바로 ‘비주권성’이 반영된 틀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단군에게 주어진 ‘주변적 자리’란 ‘제국이 의도한 주체화’가 역사의 영역에서 구현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술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국의 주체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을까. 즉 조선 측에서 모색된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밝히기 위해 V장에서는 특히 최남선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다. 1928년에 뒤늦게 조선사 사업에 참여한 최남선은 단군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일으키는데, 본고는 이때의 발언을 통해 ‘학술성=비주권성’ 속에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역사편찬사업에서도 ‘학술성=비주권성’을 벗어나는 제안—예컨대 단군을 역사의 시조적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과 같은—은 어김없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최남선의 발언 역시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비주권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역시 ‘학술성=비주권성’ 안에 ‘포섭’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국이 설정한 테두리와 그 속에 주어진 주체화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협력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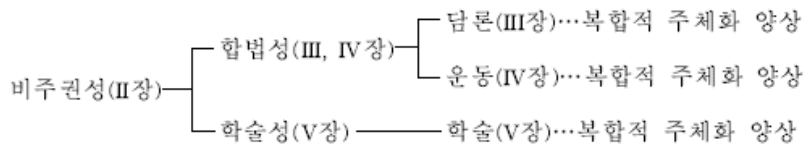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최남선의 발언은 조선사 사업이 예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학술성 안에 단군을 존립시키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제안한 ‘별편’의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술성=비주권성’ 속에서 ‘제국이 의도한 주체화’의 기획을 미끄러뜨리는 ‘저항’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역사편찬사업에서 이루어진 최남선의 발언은 ‘학술’의 차원에서 전개된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발언은 역사편찬사업 안에서의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근대역사학과 조선학’의 관계, 혹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라는 오랜 난문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역사편찬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근대역사학’에서 배출되었다는 점, 또 한국의 역사학의 흐름 속에서 최남선이 갖는 위치, 특히 ‘조선학’의 제창자로서의 위상은 그의 발언을 양쪽의 지적 지형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양쪽의 역학 속에서 조명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V장에서는 ‘역사와 신화’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구도를 실마리로 일본의 근대역사학 속에서 그의 입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1910년대의 국학에서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학의 흐름 속에서 그가 차지했던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역사학=식민사학’과 ‘조선학=민족사학’의 ‘상관관계’ 속에서 최남선의 발언이 가졌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논문의 구성을 ‘비주권성’의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논문의 구성도



문제제기에서 밝혔듯이 본 논문은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을 제국일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침략’ 혹은 ‘저항’을 절대화시키는 기존의 관점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주권국가적’ 관점을 뛰어넘어 ‘비주권적’ 맥락에서 민족담론을 파악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민족담론’이란 ‘비주권적’인 담론을 의미한다. 앞서의 논의와 아울러 표현한다면, 그것은 ‘비주권적 주체성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일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된 식민지조선의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주체성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는 본고의 접근은 바로 ‘민족담론=비주권적 주체성 담론’이라는 관점을 기축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민족담론은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Ⅲ장에서 말하는 담론이 민족운동을 둘러싼 통치자들의, 혹은 운동가나 지식인들의 언설을 의미한다면, 제목에서 말하는 담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괄하면서 ‘담론’의 차원에서, 혹은 ‘운동’이나 ‘학술’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거기에 공통되는 핵심은 조선의 ‘주체성’을 둘러싼 담론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듭 강조했듯이 그것은 ‘주체성=민족’ 담론이면서도 ‘민족주의적=주권국가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주권적=비민족주의적’ 맥락에서 구성된 ‘주체성 담론’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민족담론’과 상반된, 극복의 개념인 것이다.

II. 제국-식민지에서 사회의 출현과 비주권성

‘사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 출현했다. 사회의 이러한 속성은 본고에서 말하는 ‘비주권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 영역서 정립하는 ‘주체’의 성격 또한 규정한다. II장은 이처럼 ‘비주권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회’가 어떻게 출현, 발전했는지, 한국과 일본 양쪽의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할 것이다. 사회가 갖는 비주권적인 성격은 주체성의 전개(III, IV, V장)를 살펴보는 데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한다. 이 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밝히는 것이 II장의 목적이 된다.

조선에서 사회담론은 대한제국기에 탄생했는데,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반영하듯 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유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식민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상실된 국가와의 관계성이 약화된 반면 새로 들어온 국가(제국)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자율적인 영역’으로 정립하는 대항적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의 사회담론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1차 대전을 전후해서는 ‘사회’의 발견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전을 겪으면서 주권국가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도 다원주의적 국가론이 수용되면서 국가가 아닌 영역, 곧 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이러한 사상적 맥락이 식민통치담론에 연계되었던 측면을 밝힐 것이다. 식민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논의는 사회의 발견이 제국공간에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는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본국과 서로 협동하는 새로운 제국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때의 주체성은 어디까지나 국가로부터 분리된, 즉 ‘비주권적’인 성격을 전제로 했다.

이처럼 ‘사회-주체’는 그 태생부터 ‘비주권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은 그동안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민족주의적 관점이 주체성의 문제를 주권국가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

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극복하는 시도로서 ‘제국개조론’이라는 관점에 주목했다. 거기서 제기된 ‘주체성’ 논의 또한 본고에서 주장하는 ‘비주권성’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며, 나아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문제도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와 비주권성의 문제가 역사적 맥락에서 포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사적 맥락과도 연계되는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3.1운동의 발발은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나타나고 있던 담론적인 변화가 현실적인 맥락과 연계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식민화 이후 조선의 사회담론은 ‘문화’, ‘생활’과 같은 인접개념과 맞물리면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의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매일신보』에 나타난 이광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 뿌리를 두는 논의였다. 3.1운동은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전사회적인 규모로 표출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모습—주권국가적 주체성—까지 압박했던 점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현실적인 변경을 초래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주체성을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맥락과 연계된다. 본고에서는 이로 인한 변화를 3.1운동 이후의 조선통치담론, 더 정확히는 ‘문화정치의 콘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것이며,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밝힐 것이다. 문화정치의 콘텍스트를 구성했던 것은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 담론이었다. 전자는 사회의 발전, 그리고 식민정책학과 연계되는 논의인데, 3.1운동의 충격이 주어진 이후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영향력을 갖는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본고에서는 그 넓이를 당시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그 논의는 여전히 주체성의 인정과 제국과의 협동을 핵심으로 했다.

한편 내지연장주의는 일반적으로 동화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본고에서는 3.1운동 이후에 널리 확산된 ‘동화주의 비판’의 맥락이 자치주의 뿐만 아니라 내지연장주의 담론 속에도 존재했음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법제도적 차원에 대해서는 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 이외의 측면, 예컨대 ‘정신, 문화, 역사’와 같은 차원에 대해서는 ‘관용’의 방침을 지시했던 사실을

밝힐 것이다. 특히 내지연장주의의 경우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표명되었는데, 그 선두적인 인물인 하라 다카시(原敬)의 언설에 주목함으로써 동화의 다의성과 관용의 논리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콘텍스트가 조선의 주체성 문제에 함의했던 바는 중요하다. 자치주의 담론의 경우 ‘정신, 문화, 역사’의 차원은 물론 내지연장주의에서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법제도적 차원’에서까지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의를 구성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내지연장주의의 경우에도 ‘정신, 문화, 역사’의 차원에서는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관용’이 지시되었다. 하지만 누차 강조하듯이 이때의 주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비주권적인 성격을 전제로 했다. II장에서는 이처럼 ‘비주권성’이라는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것이 III, IV, V장에서 살펴보는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틀짓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 조선에서 사회의 탄생: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사회(society)’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 형성된 생소한 개념으로, 이를 재빨리 수용하여 개념화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society’라는 말이 일본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770년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 동안에 그 말에 대응하는 수많은 번역어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회’로 번역된 것은 1875년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한 신문논설에서 ‘소사이어티’라는 덧말을 붙여 ‘사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번역어들이 ‘사회’로 수렴되어갔는데, 이때를 분기점으로 그 의미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society’라는 말이 수용되기 시작했을 당시 그 의미는 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 혹은 ‘그러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다. 그것이 1870년대에 들어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18~19세기 유럽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society’ 개념은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⁶¹

⁶¹ 일본에서 ‘society’ 개념의 수용에 관해서는 김현주, 『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하지만 조선의 경우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의 변화보다는 그것이 ‘혼용’되는 형태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사회’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부터였는데, 때로는 단체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추상적인 영역으로서 상상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조선의 사회담론이 갖는 이러한 특징에 유의하면서 그것이 탄생하며 또 변천하는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특히 ‘국가’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이치노카와 야스타카(市野川容孝)는 ‘사회’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방식을 세 가지 유형을 들어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를 ‘자연’과 대립시켜 이해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개인’과 대치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로 ‘국가’와 대비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를 드는데, 이때의 사회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회수되기도 하며 또 어디까지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혹은 다원적 국가론처럼 국가 자체를 사회의 부분적 집합으로 위치시키기도 한다. 즉 사회를 국가와 대비하면서 이해할 경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 속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국가와 사회’라는 관계설정은 사회사상의 기본틀로 기능해왔다.⁶² 이는 조선의 사회담론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1) 국가와 구분된 영역으로서의 사회

조선에서 ‘사회’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 정확히는 1895년 일본유학생친목회(日本留學生親睦會)에서 발간한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에서였다.⁶³ 1895년 정부는 관비유학생의 파견을 실시하여 16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게이오의숙(慶應義塾)으로 보냈는데,⁶⁴ 『친목회회보』는 이때의 유학생들이 창간한 잡지다. 이들은 당시 일본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의 대내외적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졌던 청년들은 유학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소명출판, 2013), pp. 77~78; 김태진,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전통적 개념 속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상상」, 『개념과 소통』 제19호(2017.6).

⁶² 市野川容孝, 『社會 the social』(岩波書店, 2006).

⁶³ 박명균,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 역사』 제59집(2001), p. 53.

⁶⁴ 박찬승,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한일공동연구총서』(2003.3), pp. 76~87.

의 목적이 조선을 부국강병시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우승열패의 현실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 조선은 문명개화한 나라가 아니라 야만국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유학생들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조선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달성시키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에 대한 인식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영위되었다.

유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주목한 것은 ‘인민 개개인의 힘’이었다. 개개인의 힘을 양성하는 것이 곧 ‘사회의 힘’을 키우는 일이며, 그것이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이루는 동력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⁵ 이처럼 유학생들의 인식에는 ‘개인-사회-국가’라는 구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모두 ‘국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개인의 힘’이 ‘사회의 힘’이 되어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논의의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여기서의 ‘사회’는 국가에 종속된 ‘하위범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사회’ 개념이 조선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독립신문』이었다. 『독립신문』에서는 1897년 이후에 ‘사회’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유학생들의 인식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1895년의 유학생들은 1년 만에 보통과 과정을 졸업하고 진로를 찾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조선에 귀국하여 정치운동에 투신했다. 이들을 받아준 것이 바로 독립협회 운동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변하진, 신해영, 어용선 등이 유학생 출신으로 독립협회에 참여했는데,⁶⁶ 이들이 ‘사회’라는 개념이 유입되는 통로가 되어준 것이다.

『독립신문』에서도 사회는 국가와 구별되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박명규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주로 정치적 영역 또는 국가적인 일과 구별되는 새로운 공공의 영역”을 의미했던 것이다.⁶⁷ 유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난 특징

⁶⁵ 1890년대 일본 유학생들의 인식에 관해서는 박찬승, 「1890년대 후반 도일(渡日) 유학생의 현실 인식-유학생친목회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1집(1999.3); 노상균,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역사와 현실』 97집(2015.9).

⁶⁶ 박찬승(2003), pp. 100~112.

⁶⁷ 박명규(2001), p. 55.

이 독립협회 운동에도 계승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 이 시기에는 국가와의 구별 이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이 ‘단체’에 대한 강조이다. 『독립신문』은 사회를 ‘국가와 구별되는 영역’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러한 사회에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결성된 단체’를 강조했던 것이다.⁶⁸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서의 사회’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개념을 차용했던 독립협회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대한제국 정부와 구별되는 ‘단체’로 정립해야 했던 독립협회에 국가와 구별된 ‘사회’는 자신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영역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립신문』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의 갈등관계를 배경으로 의미가 규정되었다. 이 당시 자율성에 기초한 단체, 그것도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는 단체를 결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만큼, 사회는 국가와 다른 차원에서 정치운동을 펼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가치를 지녔던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반식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에 대한 담론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 사회담론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왕의 ‘단체’를 강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계적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특히 후자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갈등관계, 즉 ‘전통적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논의로 이해된다. 예컨대 1906년 6월 30일자 『만세보(萬歲報)』에 실린 논설은 민족사회를 ‘정당사회’와 ‘평민사회’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양반’들의 사회를 의미하며 후자는 ‘상놈’들의 사회를 의미한다. 전자는 후자를 원수와 같이 미워하며 후자는 전자를 하늘과 같이 두려워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구별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사회는 자유의 권능을 ‘전적으로 갖는 자’[專主]와 ‘전적으로 잃는 자’[專失]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를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전통적 지배체제’에 비판을 제기했던 것이다.

⁶⁸ 박명규(2001), p. 55; 박명규, 「근대 사회과학 개념구성의 역사성 한말 국가-사회-개인의 상호연관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호(2003.6), p. 151.

이러한 특징은 『만세보』 창간호에 실린 이인직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사회’를 처음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한 글로 평가된다.⁶⁹

政治社會란 苟祿의 輩가 膏粱을 徒食하고 人民社會란 愚昧의 徒가 涸轍에 苟活하니 此二者의 憂됨을 急히 救치 아니하면 我國民社會란 腐敗로 始하여 滅絶에 至하리니 어찌 可히 悲치 아니하리오. 從此로 吾人은 政治社會에 對하여 諤諤의 警告를 아니치 못하겠으며 人民社會에 對하여 또한 諄諄한 忠告를 아니함이 不可한지라 吁라 我國民社會가 進化하면 我子爾孫이 其利益을 均沾하려니와 若夫社會가 腐敗하고 人種이 滅亡에 至하면 彼我が 一轍에 同踏하리니 戒하며 慎할지이다.⁷⁰

위에서 조선을 국민사회로 표상하면서 그 내부를 ‘정치사회’와 ‘인민사회’로 나누는데. 전자는 타락한 ‘정치적 지배층’에 장악된 사회를, 후자는 우매한 ‘인민’이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정치’와 ‘인민’으로 나누어진 ‘신분적 사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체제는 국민사회 전체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세보』에는 ‘사회’의 개념화에 적극적인 글들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천도교 세력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진보회 등 기존의 정치권력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체활동이 모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해주는 영역으로서 사회의 규정이 필요했다. 신분질서에 기초한 전통적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담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와 구별되는 영역의 모색을 의미했던 것이며, 『독립신문』의 사회담론을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만세보』에 나타난 특징은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경우 ‘사회’라는 말은 ‘신분적 하위범주’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또한 특정한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⁷¹

이상 보았듯이 1890년대 후반 조선에 등장한 ‘사회’는 한편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서 ‘단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위에서는 그러한 사회개념을 특히 ‘국가’와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독립협회에서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갈등관계를 배경으로 국가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립적인 의

⁶⁹ 박명규(2001), p. 58.

⁷⁰ 이인직, 「사회」, 『만세보』 1906년 6월 17일.

⁷¹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에 관해서는 박명규(2001), pp. 68~69.

미가 더 부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 다시 말해 전통적 지배체제와 대립하는 사회상은 1905년 이후 위계적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사회개념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유학생들에게 나타난 위기의식을 계승한 논의 또한 1905년 이후에도 있었다. 즉 반식민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국가에 종속된 하위개념으로 다루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서의 논의와 함께 조선의 사회담론이 갖는 특징을 도출하도록 한다.

(2) 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사회

앞서 『만세보』에 글을 썼던 이인직은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글을 연재했는데, 1906년 11월에 실린 아랫글에서는 사회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社會라 하는 것은 多少 恒久한 關係로 共同生活하는 諸人의 一團體라 定義함을 可히 得할지라...數代間에 同一한 生活을 永續하는 家族도 一社會오, 瞬時間 集合도 또한 一社會라 稱할者 有한지라 故로 社會란 것은 長하든지 短하든지 共通生活을 分擔하는 諸人의 一團體를 指함이라 然而 其發展하여 一定의 職能을 遂하는 小社會와 此等 小社會를 包含하는 大社會의 間에는 重要な 差別이 有함으로써 某學者는 是等 小社會를 指하여 (社會的 機關) 또는 (社會的 團體)라 稱하였으니 此는 眞實로 個人과 個人에 屬한 大社會 中間에 位한 者인데...⁷²

위에서 사회는 ‘특정기간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는데, 그 기간은 수세대일 수도, 한 순간일 수도 있다. 즉 장단에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회를 이루는 기준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다시 ‘소사회’와 ‘대사회’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과 대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단체’를 의미했다면, ‘사회’로서의 방점은 오히려 후자에게 있는데, 이는 “사회라 하는 말은 그중에 제(諸)사회적 단체가 존재하는 대형체(大形體)”를 가리킨다. ‘사회적 단체=소사회’로 구성된 ‘대형체=대사회’야말로 ‘사회’를 대표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사회와 소사회 사이에는 “중요한 차별(差別)”이 있는데, “사회가 차등(此等) 소단체와 이(異)함은 확정(確定)한 일 직능을 수(遂)하기를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고로 사회는 그 임무를 갈(竭)하기보다 차라리 소단체의 임무를 갈케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⁷³ 즉 양자의 차이는 특정한 ‘목적’

⁷² 이인직, 「사회」, 『소년한반도』 제1호, 1906년 11월 1일.

(직능, 임무)을 갖는지의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대사회는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으며 소사회들의 목적을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 추상적 개념’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개념은 ‘국가’와 대비하여 어떻게 의미가 규정되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국가와의 구별은 사회개념이 등장했을 당시부터 줄곧 영위된 방식이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는 그 구별이 한층 더 명확해지는데, 1906년 9월 19일부터 『만세보』에 연재된 글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특히 ‘양자가 어떻게 다른지’ 명시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예컨대 법적인 범주인 국가가 구성원의 동등함을 담보한다면, 역사적인 범주인 사회는 구성원들 간에 격차를 전제로 한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단결로 단일한 의지를 갖지만, 사회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란 입법기관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일을 의미했지만, 사회의 경우 그것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분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⁷⁴

이처럼 양자는 한층 더 명확하게 대비되면서도, 국망(國亡)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는 국가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기도 했다. 그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인식이다. 정치적 의식이 강한 신문이었던 만큼, 사회개념 역시 독립이나 자강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영위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사회는 국가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립에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1906년 6월 21일자 기사에는 “일개인이 합해야 사회를 성(成)하고 사회가 합해야 국가를 성”한다는 언급이 보이는데, 이때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국가의 성립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가의 쇠망 또한 사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905년 이후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을사조약으로 국가에 대한 인식이 고무되자 그 기반으로서의 사회 또한 중요성을 더해갔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사회’란 “비록 국가의 정치적 주권이 상실했을지라도 사회적 기반이 남아 있으면 최소한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

⁷³ 이인직, 「사회」, 『소년한반도』 제1호, 1906년 11월 1일.

⁷⁴ 박명규(2001), pp. 64~65.; 박명규(2003), pp. 149~151.

는 희망의 표현”⁷⁵이자, “주권체와 현존의 국가가 붕괴한 이후 그것을 대체할 개념으로 제시된 것”⁷⁶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상 1890년대 후반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사회개념이 등장했을 당시부터 1910년 한일병합 직전까지 그것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식민화 이후 사회개념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사회담론이 갖는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의 사회담론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국가의 이중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일본의 경우 ‘사회의 발견’은 현실적으로는 ‘메이지 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는 1차대전을 전후하여 나타난 ‘주권국가’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형태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양상은 조금 더 복잡했는데, ‘사회’와 대비되는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전통국가’를 의미하기도 ‘근대국가’를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서 ‘단체’를 강조하며 ‘국가’와 구별된 영역으로서 ‘사회’를 부각했던 것은 ‘대한제국 정부’와 대립하는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의 ‘국가’란 전통적인 지배층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체로 비판의 대상이다. 1905년 이후 『만세보』에 나타난 ‘신분질서적 사회관’ 또한 이와 상통하는데, ‘정당사회’나 ‘정치사회’를 비판하며 ‘평민사회’나 ‘인민사회’를 부각하는 논의는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사회’를 분리시키는 노력이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찍이는 1895년 유학생들 사이에, 혹은 1905년 이후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사회담론에서 ‘국가’는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근대국가’로서 의미를 띠고 있었다. 갑오정권이 파견한 유학생들은 자국의 위기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부국강병과 문명개화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경우의 ‘사회’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때의 ‘국가적 목표’란 서구열강에 비견하는 ‘근대적 주권국가의 형성’에 있었던 것이다. 1905년 이후 『대한매일신보』에서 ‘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사회’를 강조했을 때도 그것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근대국가’를 의미했다.

⁷⁵ 박명규(2001), p. 67.

⁷⁶ 김현주(2013), p. 66.

이처럼 조선의 사회담론에서 ‘국가’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그것은 ‘비판’과 ‘지향’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전통국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근대국가’에 대한 지향이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한 식민화는 여기에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조선의 사회담론에 어떤 함의를 가져다주었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절에서는 1910년대 사회담론이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국가의 이중적 상실과 사회

전통국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은 구습·구사상 비판과 신문화건설론이었다. 병합 이후 언론매체들이 잇달아 폐간된 상황에서 1914년 4월에 창간된 『학지광(學之光)』은 조선인 유학생들의 근황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 신학문의 소개 등 다양한 글들이 게재되었다. 따라서 『학지광』은 당시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독보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여기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논의 중 하나가 바로 구습·구사상 비판과 신문화건설론이었다.⁷⁷

그 대표적인 논설이 1915년 5월 2일자 송진우의 「사상개혁론」이다. “사상은 생활의 표준”이다. “신시대에는 신생활”이 요구되지만 “신생활은 신사상”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습의 권위를 타파하며 도덕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신활동의 원천을 계발”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 된다. 그는 이를 “사상계 혁명”이라고 부르며, ‘사상개혁론’을 통해 유교사상과 가장의 권한, 계급적 결혼제도와 조혼, 관직 지향적인 교육 등을 타파하는 것이 조선에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⁷⁸

이러한 구습·구사상 비판은 물론 송진우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미호생(眉湖生)이라는 필명의 학생 또한 시대의 변화와 습관의 개량을 주장했다는데, “시대가 한번 변천하면 사회는 다시 구일(舊日)의 형용(形容)”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선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와 사회가 도래했다는 “자각”을 못하고 있다. “습관은 제이의 천성이라” “개량코자 함이 실로

77 『학지광』의 논의를 바탕으로 1910년대 구사상·구습 비판과 신문화건설론을 지적한 연구로는 김명구, 「1910년대 도일유학생의 사회사상」, 『사학연구』 제64호(2001.12); 박찬승,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2007.5).

78 송진우, 「사상개혁론」,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용이한 업(業)은 아니”지만 “우리의 금일은 가위(可謂) 자각할 시대이며 개량할 시대”에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습관의 개량을 주장했다.⁷⁹

구습·구사상 비판은 그 대안으로 신문화건설론을 주장했다. 그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17년 7월 19일자 전영택(田榮澤)의 글이다. 거기서는 구습·구사상의 ‘파괴’와 신문화의 ‘건설’이 우주의 생명원리로 설명된다. 파괴와 건설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반복되어온 현상으로, “우주의 일대(一大)리즘”이며 “자연계의 변치 않은 법칙”이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지구상 모든 생물이 진화발달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다, 따라서 파괴와 건설이 멈추면 “인류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계의 대법칙”은 “사람의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파괴력과 건설력이 있기에 생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이를 “가졌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파괴와 건설의 생명원리를 강조한 터에 “효도”나 “남존여비”, “노인은 공연(空然)히 청년을 압제하고 어른은 무리(無理)히 아해를 무시하는 습관”, “지체니 문벌이니 양반이니 하는 계급제도” 등을 “우리도 대파괴(大破壞)를 하자”고 주장했다.⁸⁰

이와 같은 ‘구습·구사상 비판’은 전통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 ‘전통국가 비판’을 계승한 논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가’가 누락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화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비판은 ‘이중의 어려움’을 갖는다. 식민지에서 ‘국가’는 그것이 전통 국가 됐든 근대국가가 됐든 이미 ‘상실한 대상’이다. 특히 전통국가의 경우 그 의미는 더 큰데, 현실적으로 사라진 국가에 대한 ‘비판’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사라져도 전통적인 ‘습관’이나 ‘사상’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국가가 누락된 형태로 구습·구사상 비판이 전면화된 맥락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대국가의 경우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지향’의 대상이었기 때

79 미호생, 『謹告我半島父兄』, 『학지광』 제3호, 1914년 12월 3일. 그는 “爲先事業”과 “爲子孫計”를 “우리의 習慣 중 第一 改良할 必要가 有한 惡習”으로 지적했는데, 전자는 “祖先墳墓에 대한 觀念”에 나타나듯이 “巨額의 財産을 消費하여 祖先의 墳墓를 雄大히 建築”하는 습관을 의미했으며, 후자는 “遺産의 相續”과 “子女의 嫁娶”에 나타나듯이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습관을 의미했다.

80 전영택, 「구습의 파괴와 신도덕의 건설」, 『학지광』 제13호, 1917년 7월 19일.

문에 상황은 조금 복잡했다. 비록 완벽한 형태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형성의 과도기에 있었다. 식민화는 거기에 결정적인 좌절을 의미했는데, 이로써 ‘국가’는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사라져도 그에 대한 지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담론으로서 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근대국가의 자리는 이제 제국일본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현주의 말을 빌리면, 병합 직후의 상황이란 “기왕의 국가(대한제국)가 삭제되고 새로운 국가가 이식되는 과정”을 의미했던 것이다.⁸¹

이처럼 1910년대 조선에서 ‘국가’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담론에서도 ‘상실’되었다. 구습·구사상 비판과 신문화건설론 또한 이러한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1917년 11월 20일자 이광수의 「우리의 이상」은 신문화건설론이 ‘전통국가’가 아니라 ‘근대국가’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거기서는 구습·구사상 비판 없이 신문화의 건설이 제창된다. 즉 “조선족이 존재의 가치를 얻을 길은 하나이요 또 오직 하나이니 즉 조선족의 것이라 일컬을 신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² 다른 글에서지만 그 역시 구습·구사상 비판을 전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논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었다.⁸³ 하지만 이광수의 논의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점, 즉 신문화건설의 주장을 구습·구사상 비판과 다른 근거로 전개한 점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정치와 문화’에 대한 ‘양자택일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다.

어떤 民族의 歷史上의 位置를 말할 때에는 政治史的의 文化史的의 二種이 있겠지요...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文化는 政治의 從屬的 產物이라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어떤 民族의 價値를 論할 때에 반드시 政治史的 位置를 判斷의 標準으로 할 것은 아닌가 합니다...만일 二者를 不可得兼할 境遇에는 나는 차라리 文化를 取하려 합니다. 政治的 優越은 그때 一時는 매우 赫赫하다 하더라도 그 勢力이 衰하는 同時에 朝露와 같이 그 榮光도 스러지고 마는 것이로되 文化는 이와 反對로 그 當時에는 그대도록 榮光스럽지 못한 듯하나 永遠히 人類의 恩人이 되어 不滅하는 榮光과 感謝를 받는 것이외다.⁸⁴

⁸¹ 김현주(2013), p. 157.

⁸² 이광수, 「우리의 이상」, 『학지광』 제14호, 1917년 11월 20일, pp. 3~4.

⁸³ 이광수의 구사상 및 구습 비판을 볼 수 있는 글로는, 이광수, 「卒業生諸君에게 들이는 懇告」, 『학지광』 제13호, 1917년 7월 19일; 이광수, 「신생활론」, 『매일신보』 1918년 9월 6일~10월 19일[『이광수전집』 10권(三中堂, 1976)].

⁸⁴ 이광수, 「우리의 이상」, p. 1.

위에서 이광수는 ‘정치’보다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을 설명한다. 문화는 흔히 정치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일시적으로 위세를 떨쳐도 순식간에 영광이 사라지는 정치와 달리 문화는 세월이 지나도 인류로부터 영광과 감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만약 양자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자신은 차라리 ‘문화’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치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광수는 굳이 ‘양자택일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있다. ‘식민지 상황’, 바로 그것이 ‘양자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를 중시하며 ‘신문화의 창조’를 주장했는데, 이 경우의 ‘정치’란 바로 ‘근대국가의 건설’을 의미했다.

眞實로 現今 朝鮮人은 沒理想이외다. 個人個人으로는 或 富者가 된다든지 學者가 된다든지 하는 理想이 있을지나 全民族의 理想이라고 할 만한 理想은 없습니다. 비록 短時間이나마 또 極히 不確實하게 抽象的으로나마 독립이라든지 富國強兵이라든지를 理想으로 한 때는 있으되 庚戌八月에 일한합병이 實行된 뒤로는 거의 沒理想의 狀態에 빠졌으니 만일 이대로라면 精神的으로 滅亡하는 地境에 이를 것이외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民族的 理想을 定할 必要가 있으니 그것을 卽 新文化의 產出이라 합니다.⁸⁵

조선이 “신문화를 창조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내적 가능성”의 유무로 결정된다. “내적 가능성이라 함은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정신력” “자각” “노력”으로 구성된다. 이광수는 “조선민족은 문화를 산출할 만한 정신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1910년 8월 이후 ‘독립’이나 ‘부국강병’의 이상을 잃어버린 상태, 즉 ‘근대국가’를 상실한 ‘물이상의 상태’는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멸망시킬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이상’으로서 ‘신문화의 산출’을 제창했던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의 ‘문화’는 ‘정치=근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국가의 이중적 상실’이 어떻게 ‘신문화건설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국가의 상실은 신문화건설론뿐만 아니라 사회담론 자체에서도 나타났는데, 앞서 보았듯이 1910년 이전까지 ‘사회’는 항상 ‘국가’와 대비되면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1910년대 사회담론에서 부각된 것은

⁸⁵ 이광수, 「우리의 이상」, p. 8.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개인’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사회’라는 구도보다 ‘개인-사회’라는 구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개인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집합체, 특히 ‘사회’에 대한 논의는 늘 ‘개체’나 ‘개인’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1910년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보다는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대체하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식민화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사회’의 논의 또한 ‘국가의 상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관계짓고 논의한 대표적인 글로 1917년 7월 19일자 장덕수의 「사회와 개인」이 있다. 이 글에서 장덕수는 “사회지상주의”와 “개인지상주의”를 각각 비판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진정한 관계”를 제시한다. 먼저 사회지상주의의 “결점”은 “개인의 재능과 창의를 무시하는 것”에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의 가치는 사회의 가치에 종속되고 개인의 자유는 사회에 의해 희생된다. 한편 개인지상주의는 이러한 “사회지상주의의 만만폐점(萬般弊點)”을 타파청결하고 개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출현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를 절대로 인정”하고 사회를 “개인생존의 편의적 수단”으로 치부하는데, 그러나 “이 주의의 결점”은 “사람은 천생(天生)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있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시에 자기의 사회를 위하여” “그의 존재까지라도 희생하는 성질”을 갖는다. 요컨대 사람에게서는 “사회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와 개인의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에 앞서 강조되는 것이 ‘인격’에 관한 논의이다. “원래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외다.” 따라서 개인은 인격을 갖는데, 이 “인격이라 하는 요소”의 특징은 “그의 가치목적이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의 가치목적이 외부에 있다하면 그이는 자주(自主)되는 인격자가 아니고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치목적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도 단체”로, “단체되는 이상에는 그 내부에 가치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회는 “개인목적의 수단”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와 개인’의 관계

에서 ‘인격’은 ‘상호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개인의 진정한 관계’ 또한 ‘상호성’이 강조되었는데, 요컨대 “양자의 관계는 서로 가치목적을 보존하는 단체인 동시에 호상(互相)관계에 즉(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여기서는 ‘사회’ 또한 ‘인격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본 「국가학」(『만세보』 1906.9.19~11.22)과 대조할 때 그 의의가 파악되는데,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비교한 이 글에서 사회는 국가와 달리 단일한 의지를 갖지 않는 영역, 즉 ‘인격을 갖지 않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장덕수의 글에서 사회는 개인과 동일한 단체(團體)로서 그 인격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사실 장덕수의 글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강조점은 ‘사회’ 쪽에 있었다. 그는 마지막 절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개인의 권리의무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상주의를 밟고 나타난 “근대문명은 개인의 권리를 주창”했다. 그러나 “최근세에 와서 다시 사조가 일변”하고 있다. “개인이 권리를 주창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 갠 까닭”이었지만, “사람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사회적으로 깨어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깨는 것”이 오히려 최근의 추세라는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갠다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을 의식하는 동시에 사회를 의식하고, 권리를 주창하는 동시에 의무를 주창”하는 것이다. 즉 이제 개인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자각”하도록 촉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민 개개인에게 사회성을 갖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⁸⁶

이상 1910년대에 들어와 사회담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계속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통’과 ‘근대’로 표상된 ‘이중적 국가’는 식민화 이후 담론의 자리에서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매꿔준 것이 ‘구습·구사상’과 ‘정치=근대국가’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문화건설론’이었다. 한편 국가의 상실은 사회담론에서도 나타나는데, 사회는 이제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었다.

⁸⁶ 雪山(장덕수), 「사회와 개인」, 『학지광』 제13호, 1917년 7월 19일.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실된 ‘국가’ 대신 ‘문화’나 ‘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된 점에 있다. 식민지 상황은 ‘사회’(혹은 문화)를 한층 더 중요한 영역으로 전면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를 개인과 국가의 매개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을 갖는 주체’로 인정했던 장덕수의 논의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조선사회’를 창출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식민지 사회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식민정책학의 논의와 어떤 면에서 공명하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서 나타난 사회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일본에서 사회의 발견: 사회-주체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사회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던 시기, 일본에서도 사회를 둘러싼 담론은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식민통치’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사회’의 발견이라 불리는 현상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식민통치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도 ‘국가’와의 관계는 초점이 되는데,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회’의 발견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장에서는 발견된 ‘사회’와 함께 ‘주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앞서 장덕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사회’에 대한 논의는 늘 ‘개인’이나 ‘개체’에 대한 논의를 수반한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회’의 발견은 동시에 개인이나 자아부터 민중이나 대중과 같은 집합체까지 다양한 ‘주체’의 발견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와 함께 발견된 ‘주체’의 성격 또한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주체의 성격을 묻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통치담론에서 ‘조선의 주체성’이 부여받았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 당시 식민통치담론에서 주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의문을 던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상황은 식민통치론을 이해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이하에서는 ‘제국개조론’이라는 관점이 제기되는 경위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거기서 제시되는 ‘주체’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견된 ‘사회-주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1) 사회의 발견과 주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가령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보편적 경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정치, 경제, 학문, 교육, 미술, 풍속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경향을 특징짓는 것은 “국가적 가치에 대한 비국가적 가치의 자립화”이다.⁸⁷ 다시 말해 ‘국가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된 영역들의 자립화, 일본에서 ‘사회’의 발견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사회’의 개념화는 ‘society’의 수용과 함께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이쇼 시기,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거쳐 나타난 ‘사회의 발견’은 새로운 국면을 의미했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변화를 이하에서는 ‘사회의 발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회의 발견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것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이다. 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대표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 헤겔의 법철학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동경제대 시절 헤겔철학의 가치를 “개인주의적 기계관”을 넘어 “유기체로서 국가”를 사고하게 된 점에 찾고 있었는데,⁸⁸ 그러한 요시노에게 ‘국가’란 ‘최상의 가치를 체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편 ‘사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떨 때는 국가와 동의어로 이해되는 영역에 불과했다. “개인의 생활은 원래 사회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든지, “국가(즉 사회)를 떠나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사회’는 최상의 존재인 ‘국가’에 덮여진 비영역적 개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한 요시노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1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다.

⁸⁷ 三谷太一郎, 『大正デモクラシー論』(東京大學出版會, 1995), pp. 1~2.

⁸⁸ 吉野作造, 「ヘーゲルの法律哲學の基礎」, 『法學協會雜誌』(1904. 9).

요시노의 사유 속에 ‘사회’가 발견된 시점은 1920년 3월경으로 추정되는데,⁸⁹ 이달 요시노는 두 편의 논설을 발표했다. 먼저 첫 번째 글에서 요시노는 ‘국가’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강제명령의 권력으로 통제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공동생활체”로서의 측면인데, 특히 후자에 대해 “국가라는 말 대신 공동체 혹은 사회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⁹⁰ 즉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그 말이 생활공동체를 의미할 때는 ‘사회’로 지칭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요시노에게 ‘사회’는 ‘국가’와 구분되는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글에서 요시노는 “국가와 사회를 혼동하는 잘못”을 지적한다. 이는 「크로포트킨의 사회사상 연구」(『경제학연구』 1920년 1월호)를 발단으로 일어난 모리토 다쓰오(森戸辰男)의 필화 사건을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거기서 요시노는 무정부주의가 “국가를 부인하는 학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생활 그 자체에 대한 부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리토 사건은 이러한 “국가와 공동생활, 즉 사회 사이의 개념적인 구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사회’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리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다.⁹¹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요시노에게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역전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는 국가로부터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있는 영역으로 발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요시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일본에서 ‘사회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한 이시다 다케시(石田雄)는 메이지 후기부터 다이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사회의 의식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사회정책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⁹² 이러한 이시다의 설명은 사회정책학의 형성에 기여했던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주는데, 후쿠다는 요시노와 함께 여명회(黎明會)를 창립했던 멤버이자 사

89 飯田泰三, 「吉野作造-ナショナル・デモクラットと「社會の發見」」, 『日本の國家思想(下)』(青木書店, 1980). 이는 ‘사회의 발견’을 지칭한 최초의 연구로 간주된다.

90 吉野作造, 「國家的精神とは何ぞや」, 『中央公論』 1920년 3월.

91 吉野作造, 「言論の自由と國家の干涉」, 『我等』 1920년 3월.

92 石田雄, 『日本の社會科學』(東京大學出版會, 1984)

회정책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견’을 추진한 인물이었다. 후쿠다는 1921년 동경상과대학(東京商科大學)에서 사회정책강의를 맡고 있었는데, ‘사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강의에서 후쿠다는 ‘사회의 발견’이 사회정책학의 형성에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역설했다.⁹³ ‘사회의 발견’은 단지 요시노 개인에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학문분야의 형성에 관계될 정도로 넓은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회현상’이었던 셈인데, 그 영향은 심지어 국가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에게도 발견된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편으로 ‘사회정책학’의 탄생으로 이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조사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던 것이다.⁹⁴

일찍이 요시노를 통해 사회의 발견에 주목한 이이다 다이조(飯田泰三) 역시 그 현상이 갖는 광범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의 발견이 갖는 시대 정신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금 길지만 후속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요시노뿐만 아니라 ‘다이쇼적’ 사상상황 일반을 특징짓는 메르크말(merkmal)로서 ‘사회’와 ‘인간’의 발견을 들 수 있다. 그 움직임은 이미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현저해지고 있었는데, 1차대전 후 ‘해방’과 ‘개조’의 기운 속에서 일거에 사람들의 의식 앞으로 뛰어나온 것이다. ‘국가의 발견’으로 시작된 ‘메이지 정신’의 도정은 메이지 말기에는 그 사이클을 거의 마치고 있었고 일종의 해체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그런 한편으로-필자) ‘생활’ ‘생존’ ‘생명’ ‘인생’이라는 일련의 말들이 여러 방면에서 빈번히 쓰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라는 의식 뒤에 숨어 있던 보다 근본적인 ‘생’(生)의 양상들이 대자화(對自化)된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 하에 있는 ‘실생활’의 현실을 대상화(對象化)하려는 지향을 낳았고 곧 ‘사회의 발견’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의 일체감을 상실하여 ‘무엇을 위해?’라는

93 福田徳三, 『經濟學全集 第5集 社會政策研究』(同文館, 1927). 사회의 발견과 관련하여 후쿠다의 사상을 검토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川島章平, 「福田徳三における「社會の發見」と個人の生」, 『相關社會科學』 15号(2005); 猪原透, 「「社會の發見」再考-福田徳三と左右田喜一郎」, 『立命館大學人文科學研究所紀要』 96号(2011.3). 또한 이외에도 구가 가쓰난(陸羯南),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 오카 아사지로(丘淺次郎) 등도 분석대상이 되었다. 松本三之介, 「陸羯南における「國家」と「社會」」, 『明治思想における伝統と近代』(東京大學出版會, 1996); 上野成利, 「群體としての社會-丘淺次郎における「社會」の發見をめぐる」, 『変異するダーウィニズム: 進化論と社會』(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3); 織田健志, 「共同性の探求-長谷川如是閑における「社會」概念の析出」, 『同志社法學』 59卷2号(2007). 한편 최근에는 문학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제출되었다. 田中裕介, 「社會の發見は文壇に何をもたらしたか-1920年の「文芸の社會化」論議と人格主義的パラダイムの行末」, 『日本近代文學』 87号(2012.11).

94 有馬學, 「社會の發見」, 『「國際化」の中の帝國日本』(中央公論新社, 1999).

물음에 ‘번민’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일부는 ‘인생’의 진실과 ‘자아’의 ‘생명’을 찾아 문제를 내면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인격’으로서의 주체를 발견했다. 이러한 ‘사회의 실증적 대상화’와 ‘자아의 내면적 주체화’의 성립과 함께 ‘메이지 내셔널리즘의 해체’는 결정된 것이다.⁹⁵

‘국가의 발견’으로 시작된 ‘메이지 내셔널리즘’은 러일전쟁과 1차대전을 거치면서 ‘해체’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국가’ 뒤에 숨어있던 ‘생’의 양상들이 의식 앞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편으로 ‘실생활’을 대상화하여 ‘사회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한 번민과 함께 ‘내면적 자아를 주체화’시켰다.

위의 구절은 굉장히 많은 의제를 담고 있는데, 예컨대 ‘국가’로부터 분리된 인식이 ‘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실생활’을 대상화하거나 ‘내면적 자아’를 주체화하는 맥락은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이었던 때문이다. ‘생’에 대한 관심은 일본과 조선 양쪽의 사회담론을 잇는 의제였다고 할 수 있다.⁹⁶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의 발견이 새로운 ‘주체’의 발견을 수반하고 있는 점이다. 이이다의 경우 그것은 ‘인간’ 혹은 ‘자아’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었다면, 이는 논자에 따라 ‘민중’이나 ‘대중’, 혹은 ‘개인’으로 파악되기도 한다.⁹⁷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사회’의 발견이 새로운 ‘주체’의 발견을 수반했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사실 사회의 발견이 주체의 발견을 수반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사회’에 대한 논의는 늘 ‘개체’나 ‘개인’ 등 ‘주체’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는지에 있는데, 사회의 성격은 ‘주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적용된 논의였는지도 중요하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제기된 식민통치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발견된 ‘사회’에 관한 논의가 제국공간에 적용

⁹⁵ 飯田泰三(1980), pp. 51~52.

⁹⁶ ‘생’은 다이쇼 사상을 대표하는 특징이었다. 이 점에 주목한 연구로 鈴木貞美, 『「生命」で讀む日本近代-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日本放送出版協會, 1995); 鈴木貞美, 『生命觀の探究』(作品社, 2007).

⁹⁷ 石田雄(1984), pp. 73~80; 有馬學(1999), pp. 272~277; 織田健志(2007), pp. 685, 702~704.

될 때 그 속의 ‘식민지’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주었는지 알기 위한 관점이 된다.

(2) 발견된 사회-주체와 식민정책학

위에서 지적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발견’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일국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일본사회 안에서의 현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식민통치’와 무관한 논의로 간주되었다. 이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이다.⁹⁸ 그는 ‘사회의 발견’이라는 현상 속에 흐르는 ‘다원주의적 맥락’을 실마리로 이를 ‘식민통치’ 담론, 더 정확히는 ‘식민정책학’과 연계시키는 시각을 제공했다.

사회의 발견이 다원주의적 맥락을 갖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도 지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⁹⁹ 하지만 사카이가 독려했던 것은 사회의 발견에 내포된 다원론적 맥락에 ‘주권국가 비판’이라는 계기가 있었다는 점,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협동주의’라는 내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상의 맥락이 ‘식민정책학’의 전개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 데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카이의 논의를 실마리로 발견된 ‘사회-주체’와 ‘식민정책학’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카이의 논의는 국제적 현상을 다루는 지식이 과거에 어떻게 존재했

98 酒井哲哉, 「國際關係論と「忘れられた社會主義」-大正期日本における社會概念の析出状況とその遺産」, 『思想』 945号(2003.1); 酒井哲哉, 「「植民政策學」から「國際關係論」へ-戰間期日本の國際秩序論をめぐり一考察」,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展開』(信山社出版, 2004); 酒井哲哉, 「戰間期における帝國再編と國際主義」, 『國際問題』 546(2005); 酒井哲哉, 「「帝國秩序」と「國際秩序」-植民政策學における媒介の論理」, 『「帝國」日本の學知 第1卷 帝國編成の系譜』(岩波書店, 2006); 酒井哲哉, 『近代日本の國際秩序論』(岩波書店,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연암서가, 2010)].

99 예컨대 이이라는 요시노와 동일 계통의 논자로 다카타 야스마(高田保馬)를 언급하면서 그의 『사회와 국가』(1921)의 배경에 당시 영미의 다원주의 이론을 소개했던 나카지마 시게루(中島重)의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요시노의 사회개념과 관련하여 “19세기적인 헤겔, 슈타인, 블룬칠리 식의 ‘Gesellschaft’가 아니라 20세기적인 맥키버, 쿨, 래스키의 ‘community’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식의 국가학에서 영미식의 다원주의로의 전환을 사상적 배경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이시다의 경우도 요시노에게 나타난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당시 일본에 소개되고 있던 ‘다원적 국가론’과 함께 생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飯田泰三(1980), pp. 22, 53;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 下』(東京大學出版會, 1989), pp. 190~194; 田畑忍, 「中島重博士の國家論」, 『キリスト教社會問題研究』 8卷(1964).

는지 고찰함으로써 지금의 국제정치학에서 ‘잊혀진 계보’가 된 식민정책학을 발굴하는 데서 출발한다. 근대일본에서 국제적 현상을 다루는 지식은 주권 국가 관계를 다루는 ‘국제법 및 외교사’와 제국질서를 다루는 ‘식민정책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카이는 여기에 ‘국제질서’와 ‘제국질서’가 중첩되는 독특한 지적 환경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차대전 후에 초래된 변화의 맥락이다.

1차 대전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장이 된 유럽에서도 미증유의 충격을 남겼다. 전쟁은 그때껏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세력균형 원칙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의 절대성 또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요컨대 1차 대전의 충격은 ‘주권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을 분출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다원주의적 국가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다원주의에서 국가는 교회, 도시, 조합 등 기타 사회집단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므로, 국가의 절대적 주권성은 상대화된다. 다원주의적 논의가 도입되면서 국제적 현상을 다루는 지적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는 ‘국제법 및 외교사’와 구별되는 ‘국제정치학’의 탄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식민정책학’ 내부에서 일어났다. 이를 가장 잘 체현한 인물이 식민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였다.

이처럼 사카이는 ‘국제질서=국제정치학’과 ‘제국질서=식민정책학’을 병행하면서 근대일본에서 국제적 지식의 존재양태를 밝혀나가는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본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발견’ 속에 흐르는 ‘다원주의적 맥락’이 ‘주권국가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식민정책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야나이하라를 ‘사회의 발견’과 ‘식민정책학’의 연관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로 보고 그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권국가 비판과 다원주의적 관점을 수용한 그는 식민현상을 ‘국가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그것은 ‘사회의 발견’을 ‘식민정책학’에 접목시키는 논의였던 동시에 ‘발견된 사회’를 ‘제국공간’에 적용하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사회’는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되었으며 ‘주체’ 또한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그의 논의를 살피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주체성’을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야나이하라는 1920년부터 동경제대에서 식민정책강좌를 맡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출판된 것이 『식민 및 식민정책』(1926)이었다.¹⁰⁰ 그 1장을 ‘식민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기존의 식민개념과 대비하면서 설명했다. ‘식민과 이민’의 구별에 관한 아래 구절은 그 한 예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식민과 이민을 구별하는데, 그 기준으로 신발전지(新發展地)와 본국 사이에 정치적 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목청 높이 주장한다.…법률적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본국과의 통치관계는 중요한 하나의 사항이다. 그러나 식민이라는 사회현상 자체를 보고 그 사회적 실질적 의미를 찾는 입장에서는 해당지역의 정치적 귀속을 필수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소위 말하는 식민과 이민의 본질적 구별을 부정한다. 정치적 종속관계는 속령의 요건은 될 수 있으나 식민지의 요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¹⁰¹

‘국가적’ 입장에서는 식민의 본질을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정치적 종속관계’로 본다. 그러나 ‘사회적’ 입장에서 그것은 식민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건이 되지 못하는데, 야나이하라는 자신을 후자의 입장에 두면서 ‘정치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식민과 이민’을 구별하는 ‘국가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이주를 식민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식민을 “통치권의 연장 또는 영토확장과 동의어”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통치적 권력을 중심으로 한 국법적 입장”으로 “식민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¹⁰² 또한 식민을 “군사적 정복 또는 정치적 지배”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식민의 주체”를 “국가”로만 알고 “국가권력을 기초로 형식적 해석”을 한 것이라며 “실질적 관찰”에 의해 식민의 “사회적 본질” 밝히는 입장을 강조했다.¹⁰³

100 식민정책강좌는 1903년에 교토제국대학에, 1909년에 동경제국대학에 각각 개설되었다. 이때 강좌를 맡은 사람은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였으며 야나이하라는 그 후임으로 동경제대의 강좌를 맡은 것이다. 니토베의 강의 내용은 사후 야나이하라의 감수로 출판되었다(『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論文集』(岩波書店, 1943)[『新渡戸稻造全集』第4卷(教文館, 1969)에 수록]. 니토베의 경력 및 식민정책강좌의 성립에 관해서는 金子文夫, 「日本の植民政策學の成立と展開」, 『(季刊)三千里』 41号 (1985.2); 北岡伸一, 「新渡戸稻造における帝國主義と國際主義」,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第4卷 (岩波書店, 1993); 酒井哲哉(2005); 酒井哲哉(2006); 井上勝生, 「札幌農學校と植民學の誕生 佐藤昌介を中心に」,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 第1卷(岩波書店, 2006).

101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有斐閣, 1926), p. 8.

102 矢内原忠雄(1926), pp. 10~11.

103 矢内原忠雄(1926), pp. 13~14.

이러한 야나이하라의 주장은 “식민이라는 개념을 국가적 및 국민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¹⁰⁴ 그러한 의미에서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관점이란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의 발견을 ‘식민정책학’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론이 식민을 ‘국가정책’이 아니라 ‘사회현상’으로서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식민개념을 산출했던 것이다.¹⁰⁵ 그렇다면 그 경우의 ‘식민의 주체’는 무엇이었을까.

인류사회는 종족, 민족, 국민 등의 사회군 또는 사회적 집단의 교착 및 병렬로 이루어진다. 각 사회군은 각자 일정한 지역에 점거(占居)하지만, 반드시 이에 구속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역적으로 이동한다.…나는 이러한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을 식민으로 이해한다. 여기에 식민이라는 사회현상이 갖는 특징 및 본질을 찾을 수 있다.¹⁰⁶

야나이하라에게 ‘식민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군’으로 이해된다. 이들이 ‘이주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을 바로 ‘식민의 본질’로 보았던 것이다. 사회군은 구체적으로 ‘종족, 민족, 국민’과 같은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유의할 것은 그러한 ‘주체’로서의 사회군은 ‘상호적으로’ 발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범위에는 이주를 하는 쪽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 또한 포함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식민지 사회’, 또는 그 ‘민족’까지도 식민현상을 이루는 ‘주체’로 간주했던 것을 의미한다.

식민현상은 “이주자와 원주자” 사이에서 “여러 사회적 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식민정책학은 “이주 사회군과 원주 사회군의 접촉에 기초한 사회적 여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한다.¹⁰⁷ 이처럼 식민을 사회현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시된 것은 ‘제국’과 ‘식민지’의 ‘상호관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사회관계’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국공간’에 적용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하는지 아래 구절은 여실히 보여준다.

¹⁰⁴ 矢内原忠雄(1926), p. 3.

¹⁰⁵ 야나이하라의 식민정책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그 독특한 식민개념에서 찾아진다. 淺田喬二, 『日本植民地研究史論』(未來社, 1990); 村上勝彦, 「矢内原忠雄における植民地と植民政策」,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4卷(岩波書店, 1993).

¹⁰⁶ 矢内原忠雄(1926), p. 3.

¹⁰⁷ 矢内原忠雄(1926), pp. 12~15.

식민이란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그 지역은 완전히 무주지(無住地)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미 다른 사회군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은 사회군 간의 접촉이다. 이 접촉은 식민자 및 원주자 양쪽의 사회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자를 포용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성립 발전시킨다. 뒤부아(Dubois)가 말했던 것처럼 식민의 종극은 두 개의 사회가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¹⁰⁸

여기서도 식민자와 원주자 ‘양쪽 사회군’은 식민현상을 이루는 동일한 ‘주체’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들 사회군의 접촉은 최종적으로는 양자를 포용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성립시킨다. 즉 ‘제국’과 ‘식민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사회’의 성립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로 발견된 식민지가 제국이라는 ‘사회’ 속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때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어떻게 설명될까. 야나이하라는 그것을 ‘자주주의’(自主主義)라는 통치이념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자치’의 적합성을 주장했다. “식민지인의 참정 요구에 대해서는 본국의회에 대표를 보내거나 혹은 별도로 식민지의회를 개설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자를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자치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본 본국과의 제국적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주주의’는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제시해야 했다.¹⁰⁹

자주주의 정책은 각 사회군이 독립된 집단적 인격(group personality)을 갖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저마다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가능한 발전과 완성을 이루고 서로의 협동제휴를 통해 인류사회가 세계적 결합을 완수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자주주의는 각 사회군의 평균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개성을 몰각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독립적 사회군 사이에 투쟁적 상태 대신 호조(互助)적 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할뿐이다. ...각 사회군에 독립적 집단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학적 사실로, 이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모든 정책은 결코 관철될 수가 없다. 그런데 독립적 집단의식의 하나의 특성은 배타성이다. 이는 독립성의 당연한 요구이다. 더구나 사회는 결합에 의해 존재가 유지된다. 자주독립은 결합하기 위한 자주독립이어야 한다. 배타는 결합의 파괴이다. 그러므로 자주독립의 침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소극적인 수단이다. 독립의 적극적인 요구는 결합에 있어야 한다. 개인이 사회 안에 있어야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군 또한 사회군의 사회 안에 있어야 비로소 생존하고 발전할 수가 있

¹⁰⁸ 矢内原忠雄(1926), p. 173.

¹⁰⁹ 矢内原忠雄(1926), pp. 352~360.

기 때문이다.¹¹⁰

위의 인용문은 『식민 및 식민정책』 마지막 장에서 ‘식민정책의 이상’을 논한 구절로, 그는 ‘종속주의’와 ‘동화주의’를 부정하는 형태로 ‘자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그 주장에는 많은 논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독립된 집단적 인격’에 대한 언급이다. 그것은 자주주의가 기타 주의들과 구별되는 점으로, 야나이하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야나이하라의 주장을 따라 자주주의를 기타의 사상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먼저 종속주의는 “원주사회군을 자신에게 종속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지만 원주사회군 “또한 독립적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적 생존요구는 종속주의적 식민정책”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동화주의는 “세계 각 종족은 본래 근본적인 차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변경으로 그 종족적 특징 또한 변경할 수 있다”는 이론에 의거한다. 동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르봉(Gustave Le Bon)의 영향을 암시하는데,¹¹¹ 따라서 야나이하라 역시 동화주의의 이론을 부정한다. 즉 동화주의는 “수천만 년을 요하는 가정”에 불과하므로, “동화의 강제는 원주사회군의 독립적 집단의식에 상처”를 줄 뿐이다. 따라서 동화주의 또한 실현 가능성이 부정되었다.

이와 달리 자주주의는 제국과 식민지 각각의 사회군에 대해 ‘독립된 집단적 인격’을 인정한다. 이 점이 야나이하라가 자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핵심인데, 다음으로 중요한 논점은 그렇게 인정받은 사회군의 ‘자주독립’은 다만 ‘결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있다. 독립적 집단의식은 ‘배타성’을 갖는다. 그것은 제국적 결합에 파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데, 따라서 자주주의에 대해서는 ‘결합을 위한 것’이라는 논증이 요구된다. 야나이하라는 이 또한 ‘독립된 집단적 인격의 인정’을 출발점으로 논증한다. 제국적 결합을 파괴할 배타성은 자주독립이 침해될 경우에 작동하는 소극적인 수단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침해되지 않을 경우 배타성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하는데, 자주주의란 그러한 가정을 실현한 유일한 통치이념이 된다. 즉 식민지 사회에 대해서도 ‘독립된 주체’로

¹¹⁰ 矢内原忠雄(1926), pp. 588~589.

¹¹¹ 르봉의 이론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서 집단적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자주독립에 대한 요구는 ‘파괴’가 아니라 ‘결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주주의는 ‘독립된 집단적 인격의 인정’을 핵심으로 제국과 식민지를 ‘결합’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주권국가 비판과 다원주의적 맥락은 식민정책학에서 ‘사회-주체’를 발견하게 만드는 동시에 제국을 ‘협동주의적’ 원리로 재구성했던 것이다. 식민현상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제국과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상호인정하는 논리를 제공했지만, ‘주체화된 사회군’은 더 큰 ‘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협동관계’를 이루어야 했다. 이리하여 ‘식민지의 독립’과 ‘제국적 결합’이 양립하는 독특한 논리체계가 탄생한 것이다.

이상 사카이의 논의를 실마리로 ‘사회의 발견’이 ‘식민정책학’과 연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그 ‘비주권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 사회의 발견은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 사회를 발견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절대적 주권성’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그 대안으로 수용된 것이 ‘다원주의적 국가론’이었으며 그것이 제국과 식민지 관계에 투영되는 형태로 ‘협동주의적 제국론’이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된 ‘사회-주체’는 그 시발점부터 ‘주권성’을 부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야나이하라의 자주주의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사회’로 재구성된 제국은 식민지 사회에 대해서도 ‘독립된 집단적 인격’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정된 ‘주체성’이란 어떠한 성격을 규정받았을까. 다시 말해 그것은 ‘주권국가적 독립성’을 인정받았던 것일까. 새로 발견된 ‘사회’는 애초에 ‘주권성’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이는 그 논의가 ‘제국’에 적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원주의적 제국’은 본국사회의 절대성을 상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식민지 사회의 주권성 또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민지 사회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했지만, 이때의 ‘주체성’이란 결코 ‘주권국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 즉 ‘비주권적’인 주체성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당시 식민통치 담론에서 거론된 ‘조선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식민정책학이나 조선자치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제국개

조론'이라는 과점이 제기된 것 또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국개조론'과 그것이 '비주권성'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3) 제국개조론과 주체의 비주권성, 그리고 정치적인 것

야나이하라가 자주주의의 현실적 대안으로 본 것은 영제국의 코먼웰스(commonwealth)적 결합이었다. 자치령이었던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를 조선과 일본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독립된 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주장하는 그의 논의와는 달리,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분명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야나이하라의 논의가 갖는 딜레마를 상징한다. 식민의 본질을 '사회적 상호관계'로 재정의한 그의 논의는 제국의 구성에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오는 동시에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는 논리를 정립시켰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 종속관계'나 '주권국가적 독립'에 대한 문제의식을 왜소화했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동안 식민정책학이나 조선자치론에 대해서는 그 '기만성'이 지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식민정책학 연구를 집대성한 아사다 교지(淺田喬二)의 연구이다. 그는 어떤 논자를 평가할 때도 '식민지의 독립'에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는지를 물음의 대상으로 삼았다.¹¹² 하지만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서 야나이하라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그것은 '주권국가적 관점'을 벗어나는 데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인정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비주권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기존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사상(捨象)한 채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요시노의 조선자치론을 평가할 때도 재현된다. 예컨대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의 경우 요시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의 경우 어디까지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¹¹³ 양자는 겉으로는 침예하게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결론이 다를 뿐 평가의

112 淺田喬二(1990).

113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岩波書店, 1974); 松尾尊兌, 『民本主義と帝國主義』(みすず書房, 1998); 中塚明, 『近代日本の朝鮮認識』(研文出版, 1993).

기준이 되는 관점은 공통적이다. 즉 식민지의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에 대한 진실성을 기준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얼마나 견지했는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에 대한 평가에서도 반복되는데, 사카이도 지적했듯이 니토베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였는지 아닌지’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다.¹¹⁴ 사카이는 니토베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립구도가 식민정책학에 적용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¹¹⁵

전간기에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총론적으로는 승인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국질서가 청산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질서론에서는 제국주의와 민족자결이라는 단적인 대립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반(半)주체화하면서 본국과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제국재편론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¹¹⁶

위에서 ‘제국재편론’이란, ‘제국주의와 민족자결’이라는 대립구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식민지를 반(半)주체화하면서 본국과의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했던 논의를 의미한다. 야나이하라를 비롯해 식민정책학의 논의는 여기에 포함된다. 즉 사카이는 식민정책학을 포함한 ‘제국재편론’을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립구도로는 포착되지 않는 논의로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제국개조론’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제국개조론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립구도를 바탕으로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시도였다고 이해된다. 이를 처음 제기한 것은 히라노 유키카즈(平野敬和)였다. 그는 마쓰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데, 특히 요시노의 식민통치론을 ‘동화→자치→독립’이라는 발전단계로 파악하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식민지의 독립’은 요시노에게 주된 과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물론 그렇다고 나카쓰카의 입장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독립’을 기준으로 보는 인식

114 사카이는 5천엔 지폐에의 채용을 놓고 벌어진 찬반론을 예로 니토베에 대한 평가의 양극성을 지적한다. 酒井哲哉(2006), pp. 289~290.

115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립구도에 대한 사카이의 견해는 양의적이다. 사카이는 그 배경에 ‘맑스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일본의 지적 특성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대립구도 속에 식민정책학의 계보를 잊어버린 미국의 국제정치학과 달리 일본에서 식민정책학에 대한 관심이 유지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酒井哲哉(2004), pp. 4~5; 酒井哲哉(2006), pp. 288~289.

116 酒井哲哉(2005), p. 24.

자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히라노에 따르면 요시노의 핵심은 ‘식민지의 독립’이 아니라 ‘제국의 개조’에 있었다. 1차 대전을 계기로 제국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자 일본에서도 식민통치 체제를 재고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는데, 요시노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제국개조론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을 평가기준에서 제거하는 히라노의 시각은 ‘주체성’의 문제에 어떠한 논의를 가져왔을까. 그에 따르면 요시노는 번벌(藩閥)에 대항하는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정립시킨 반면, 식민지 인민에 대해서는 그 주체성을 ‘문화적 차원’으로 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에 대한 주장도 ‘독립’이 아니라 ‘협동’을 지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¹¹⁷

히라노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문제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립구도, 나아가 ‘주권국가적 주체성’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할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히라노가 요시노의 ‘주체’를 논하는 데 사용한 ‘정치와 문화’라는 구분은 여전히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본국의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정립시킨 반면 식민지 인민을 ‘문화적 주체’로 치부했다고 할 때, 혹은 ‘독립’이 아니라 ‘협동’을 지향한 ‘자치’ 주장은 식민지를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문화적 주체’로 다루는 것이었다고 할 때, ‘정치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에 있기 때문이다.

요네타니의 연구는 바로 이 점에서 더 발전된 논의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요시노는 제국과 식민지 안팎에서 정립된 주체에 대해 상호승인과 제휴를 도모했다. 이때의 주체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요네타니는 이를 민본주의의 논리를 통해 설명한다. 민본주의는 ‘주권의 소재’와 같은 법적 문제를 불문에 붙이는 대신 사회에서 작용하는 ‘정치권력’의 문제에 주목했다. 요시노는 인민을 그러한 ‘정치권력을 운용하는 주체’로 정립시켰던 것이다.¹¹⁸ 주체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식민지 인민’을 논할 때도 적용되었다. 요컨대 요시노는 ‘주권적 차원’과 구별되는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주체의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식민지 인민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

117 平野敬和, 「帝國改造の政治思想-世界戦争期の吉野作造」, 『待兼山論叢』 34(2000); 平野敬和, 「吉野作造のアジア-第一次世界戦争から國民革命の終結まで」, 『吉野作造記念館研究紀要』 1号(2004).

118 米谷匡史, 「戦間期知識人の帝國改造論」, 『日本史講座 9 近代の轉換』(東京大學出版會, 2005).

었다. 이를 전제로 본국민민과 서로 ‘승인’하며 ‘제휴’하는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요네타니는 의식적이지 않지만, 그가 제시한 논점은 발견된 ‘사회-주체’가 갖는 ‘비주권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앞서 보았듯, 야나이하라의 ‘주체’는 ‘독립적이지만 비주권적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요네타니는 요시노의 ‘주체’를 ‘주권적 차원’과 ‘정치권력적 차원’으로 분리시켰는데, 그 자신이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발견된 ‘사회-주체’가 갖는 ‘비주권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권적 차원과 분리된 영역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은 발견된 ‘사회-주체’에 ‘정치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인 영역은 ‘국가적’인 영역과 대비되면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는 ‘정치’와 구분되기도 한다. 이광수가 「우리의 이상」에서 보여줬던 ‘문화’와 ‘정치’의 구분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경우의 정치란 ‘국가적인 것’, 즉 이미 잃어버린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정치’는 원래 그러한 의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역’의 등장은 이 점에서 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영역’은 ‘국가적인 것’이 독점했던 ‘정치’를 분리시켜 때로는 그것을 비판하는 형태로 자신을 정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동시에 새로 구축한 자신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과정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 ‘사회’의 등장은 ‘정치적인 것’에 재해석을 요구하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요시노의 논의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주권적 차원’으로부터 ‘정치권력의 차원’을 분리시킨 그는 그곳에서 ‘정치적인 주체’를 정립시켰다. 이 경우 주체란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영역’을 살아가는 주체로, 여기서 ‘사회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과 이퀄(=)의 관계가 된다.

발견된 ‘사회-주체’가 ‘비주권적’ 의미를 띠었다면, 그 경우의 ‘비주권성’ 또한 ‘정치성’을 배태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영역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비주권적’인 주체성 또한 ‘사회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식민지 조선의 주체성’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선의 주체성’을 파악하는 접근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재해석을 수반하는 것이다.

3.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와 문화정치

앞서 1절에서는 1890년대 후반 이래 조선에서 사회담론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전개되었는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910년 식민화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중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사회’(혹은 ‘문화’)가 한층 더 중요한 영역으로 전면화되었음을 알아봤다. 장덕수의 『사회와 개인』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사회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었으며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각’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은 동경의 유학생들의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인물이 이광수였는데, 이하에서는 『매일신보』에서 전개된 논의를 중심으로 1910년대 조선에서 사회가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장덕수의 논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논점은 ‘사회’를 ‘인격을 갖는 집합체’로 인정하는 관점을 제시한 점에 있었다. 그 전에 사회는 단일한 의지를 갖는 ‘개인’이나 ‘국가’와 달리 그저 의지들이 모여있는 ‘매개항’으로 간주되었다. 장덕수는 그러한 영역에 ‘단일한 의지’(인격)를 인정하고 개인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에 ‘인격’을 인정하는 논의는 일본의 사회담론, 특히 그것과 연계된 ‘식민정책학’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었다.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10년대 1차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는 ‘사회의 발견’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야나이하라의 자주주의는 ‘사회적’ 관점으로 식민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식민지 사회에 ‘집단적 인격’을 인정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본국사회와 상호 결합하는 제국상을 제시했다. 요시노 자치론 또한 식민지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서로 제후를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식민지 ‘사회’의 ‘인격’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주체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국가적’ 의미에서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조선인의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1910년대 일본과 조선의 사회담론은 따로 발전하면서도 서로 공명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 이제 조선사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제국에 다가가게 되었으며, 민족적 주체성의 표출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문화정치’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사회에 새로이 제시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것을 구성한 콘텍스트로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에 주목한다. 특히 3.1운동 직후 조선 통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형성된 담론은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는지 밝힐 것이다.

(1)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 문화, 생활

‘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은 동경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형성되었는데, 이를 분석해낸 것이 김현주의 연구이다. 그는 『매일신보』를 분석대상으로 식민권력과 조선지식인 사이에서 사회를 둘러싼 담론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김현주의 연구에 도움을 받으면서,¹¹⁹ 1910년대 조선에서 사회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규명하고, 그것이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문화’나 ‘생활’ 등 다른 코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김현주는 분석에 앞서 『매일신보』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강조한다. 『매일신보』는 일어판 『경성일보』와 함께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쌍을 이루는 존재였는데, 이 때문에 총독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공식 매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김현주는 그것이 조선인들의 생활세계를 재현하는 성격 또한 갖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통치영역’과 ‘생활영역’을 매개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 양자를 매개하는 방식을 ‘사회의 규율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매일신보』는 ‘규율화’를 통해 ‘조선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신보』에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을까. 『매일

119 이하 김현주(2013)의 논의에 관한 것은 주로 제2부 제1장 「식민주의 저널리즘과 식민지민의 규율화」, 제2장 「『매일신보』에서 재창조된 사회」, 제3장 「사회의 자기 통치라는 문제」를 참조.

신보』는 자신을 조선사회의 규율화를 대행하는 기구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기서 생성되는 담론 또한 통치자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었다. 『매일신보』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이후의 일이었다. 병합 직후에는 식민화된 조선에 ‘국가’(제국일본)를 이식하는 작업이 일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1912년에 이르러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사회’라는 낱말이 간간히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때의 사회는 어떠한 영역으로 표상되었을까. 그것은 집과 학교를 나온 후 생업을 위해 들어가게 되는 영역, 즉 ‘생활영역’을 의미했는데, 거기에는 ‘질서/무질서’의 구도가 적용되었다. 즉 조선인들의 생활영역은 ‘질서 없는 공간’으로, 질서의 실현이 조선사회가 추구할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그 달성을 위해서는 ‘도덕적 관점’과 ‘치안적 관점’이 동원되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무질서’는 낭비, 불결, 불효, 부정(不貞)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면, 위생, 효, 열(烈) 등이 대안으로 강조된다. 이처럼 근면/낭비, 청결/불결, 효/불효 등 이분법적 대비를 통해 ‘도덕/부도덕’의 관점이 적용되었는데, 이를 수렴했던 것이 ‘질서/무질서’의 구도였다.

한편 치안적 관점에서는 ‘법’에 의한 개입으로 생활을 보호하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여기서도 조선은 ‘무질서한 사회’로 간주되었으며, 조선인의 행동 또한 ‘규칙/불규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평가되었다. 사회에 질서를 실현하고 인민의 행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는 것이다. 『매일신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강도, 살인, 매춘과 같은 범죄나 가족, 이웃, 이성 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때로는 처벌을 내리면서 질서의 유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식민권력에 의해 조선사회는 ‘무질서한 영역’으로 재현되었으며, 이에 ‘도덕적’ ‘치안적’ 관점에서 질서의 실현이 촉구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조선인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1914년에 이르러야 나타나게 되었다. 김현주에 따르면 『매일신보』가 처음 조선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지목한 것은 ‘조선귀족’이었는데, 이들에게조차 사회에 대한 발언권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14년 12월 장지연이 객원논설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전통적 집단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어 최남선이나

이광수 등 근대적 지식층이 섭외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매일신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장이 교체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914년 8월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가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부임과 함께 조선의 여러 사회계층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는 경영과 관련하여 독자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었다. 장지연의 초빙을 추진한 것도, 또 근대적 지식인층을 섭외한 것도 아베였다. 특히 아베는 후자의 인적 자원으로 유학생 출신자들에게 주목하였는데, 최남선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최남선은 1915년 1월부터 다수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광수 역시 매일신보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1916년 초가을 심우섭의 소개로 아베를 만난 그는 학비조달을 위해 기고를 승낙했다.¹²⁰

이처럼 아베의 취임과 함께 『매일신보』는 다양한 사회계층을 끌어들이었고,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조선인의 발언 또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매일신보』에는 식민권력에 의한 규율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인에 의한 대응의 측면, 즉 조선인 스스로 사회를 재현하는 역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김현주는 이를 이광수의 「대구에서」(『매일신보』 1916년 9월 22~23일)를 통해 분석했다. 이광수의 사회담론이 어떻게 통치자에 의해 제시된 사회상을 상대화하고 있었는지 밝혀낸 것이다.

‘사회’에 대한 이광수의 관심은 이미 동경 유학시절부터 나타난다. 그 역시 『학지광』의 논자로 유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지적 맥락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에 나타난 특징은 이때의 논설에서도 확인되는데, 『학지광』에 기고된 논설에서도 사회는 ‘법이 없어도 스스로 다스려지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예로부터 조선사회는 “강행(強行)시키는 권력이 없어도” “불문율”이 지켜졌으며, “주권의 소재도 자못 미분명(未分明)”하고 “입권자(立權者)는 선거로 됴도 아니오 세습으로 함으로 아니”었지만 잘 다스려졌다. “대저(大抵) 어느 나라이나 어느 시대나 법령으로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심(道德心)이 있으면 사회는 스스로 잘 다스려”지기 때문이다.¹²¹

120 아베는 1920년대에는 조선의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후술 하겠다. 1910년대 아베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형식, 「경성일보·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8~1918.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사충』 87권(2016); 심원섭, 「경성일보·매일신보 시대의 아베 미쓰이에」, 『아베 미쓰이에와 조선』(소명출판, 2017).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도덕심’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법령’을 대비시키면서 그것 없이도 ‘스스로 다스려지는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대구에서」는 식민권력에 의한 ‘사회의 규율화’와 맞닥뜨리면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를 탄생시키는 현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1916년 9월 4일에 일어난 조선인 청년들의 강도 사건을 비평한 글이었다. 먼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타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유교적 규범의 강화 등이 대안으로 주장되었다. 한편 ‘치안적 관점’에서 그것은 인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므로, 법에 의한 처벌과 경찰력의 강화가 주장되었다. 그런데 이광수는 이러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청년들의 동기를 해석하는 중요성이 강조된다. 청년들은 사치나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핍감에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존재의의에 대한 욕구는 본래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권리로, 심리적 관점은 청년들의 ‘타락’을 추궁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다. 청년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이 단순한 타락이 아닌 이상 ‘도덕’은 적격이 될 수 없으며 ‘법’ 또한 제외된다. “법령은 소극적이라 이미 죄악을 범한 뒤에 이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을 뿐이니 애초에 죄를 범치 못하게 하는 힘”은 없기 때문이다.¹²²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청년들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사회가 지금의 조선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사회적 관점은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사회의 결여’로 재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경우 다음으로 오는 것은 ‘사회의 형성’에 대한 주장이다. 더 정확히는 ‘법 없이도 스스로 다스려질 수 있는 사회’, 다시 말해 ‘자기통치’ 능력을 가진 사회의 형

¹²¹ 孤孤舟(이광수), 「공화국의 멸망」,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pp. 9~11.

¹²² 孤孤舟(이광수), 「공화국의 멸망」, p. 11.

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의 사회담론은 조선사회를 ‘자율적인 영역’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도덕적’ ‘치안적’ 관점을 상대화하는 효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조선사회를 ‘무질서한 통치의 대상’에서 ‘자율성을 갖는 주체’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김현주의 논의를 바탕으로 1910년대 조선에서 전개된 사회담론의 내용을 살펴봤다. 식민화 이후 『학지광』을 중심으로 ‘상실된 국가’ 대신 ‘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았다면, 『매일신보』에 이르러서는 ‘새로 들어온 국가’와 길항하여 ‘자율적 영역’으로서 사회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처럼 식민지조선에서 ‘사회’가 담당한 기능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문화’나 ‘생활’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까.

앞서 신문화건설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화’는 1910년대의 담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토픽이었다. 그것은 ‘구습·구사상’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광수의 『우리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잃어버린 국가’ 대신에 선택된 것이기도 했다. 즉 그 경우의 ‘문화’란 ‘국가’를 대체해주는 영역으로 발견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사회’는 이콜(=)의 관계로 이해되는 개념이었다. 사회 역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된 공간”이었으며,¹²³ 국가 대신 “조선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반영하는 영역”으로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⁴

물론 ‘문화’를 ‘국가’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이광수의 논의에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상윤은 이광수가 설정한 ‘양자택일적인 가정’에 의문을 던지는데, 식민지 현실에서 선택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적 이상(理想)이라 하여 장래의 희망을 말하는 이상” “현재의 경우(境遇)”에 좌우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다.¹²⁵ 이처럼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대치에는 반발이 제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화’의 중요성은 ‘사회’만큼 널리 공유된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김현주는 당시 “사회를 전면화하는 유학생들의 담론정치”를 “제국과

¹²³ 김현주(2013), p. 259.

¹²⁴ 박명규(2003), p. 159.

¹²⁵ 현상윤, 「이광수군의 『우리의 이상』을 독함」, 『학지광』 제15호, 1918년 3월 25일. p. 56~57.

식민지의 지배-종속관계를 괄호 안에 넣으면서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집합체를 생산”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¹²⁶ 여기서 ‘괄호 안에 넣는다’는 표현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이는 본고 III장에서 강조하는 ‘불문에 부치는 것’과 같은 지점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이나 체제 전복을 연상시키는 언어들은 식민지하에서 쉽게 입에 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 단순하고도 자명한 여건은 현상윤의 지적처럼 단순히 현실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해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혹은 ‘불문에 부침’으로써 생겨난 논의들을 이해하는 것이 식민지하에서 전개된 담론을 이해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1910년대 사회담론이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었다면, ‘생활’과는 어땠을까. 생활에 관한 논의들 또한 당시 중요한 토픽이었음은 1917년 4월 19일자 전영택의 글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전적 생활론(全的 生活論)」을 쓰면서 “현대 사람은 어떻게 생활(生活)할까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¹²⁷

또한 1920년 7월 6일자 변영로(卞榮魯)의 글은 “자기의 생활(물론 정신상으로)” 혹은 “‘내’적 생활”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주아적(主我的) 생활”을 하지 못했던 과거를 참회하는데,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그것이 요구하는 도덕과 의식(儀式)에 따랐던 세월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멸각(自己滅却)의 생활을 유일한 도의적(道義的) 생애로 오신(誤信)”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자아’는 만물의 척도”라는 사실, 따라서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의 본령을 발휘하여 자기적 생활”하는 것이 “천(天)이 부여한 특수한 권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⁸

변영로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내적 자아’에 의거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사회의 발견’은 ‘생’의 양상들에 대한 관심을 수반했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인식은 ‘사회’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내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다이쇼기의 사상적 맥락을 동경

¹²⁶ 김현주(2013), p. 259.

¹²⁷ 전영택, 「전적 생활론」, 『학지광』 제12호, 1917년 4월 19일.

¹²⁸ 변영로, 「주아적 생활」, 『학지광』 제20호, 1920년 7월 6일.

의 유학생들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생활을 정신적 측면에 주목하거나 내면적 자아를 중시하는 경향은 베르그송과 오이켄 등 ‘생의 철학’이나 시라카바파(白樺派)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설명된다.¹²⁹

시라카바파는 자연주의에 대항하여 나타난 일본 근대문학의 한 조류로, 주관론 없애는 데 가치를 두는 자연주의와 반대로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동경의 유학생들은 양쪽 경향을 두루 흡수하면서도 후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런 한편에서 생의 철학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15년 7월 23일자 장덕준(張德俊)의 「오인(吾人)의 이상(理想)」이다.¹³⁰ 글에서 장덕준은 “생(生)이 오인의 최후요구”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인생의 본성은 결코 자연주의자”의 주장과 같이 않으며 “인(人)의 인(人)된 소이(所以)”는 “영원보편한 내적생명(內的生命) 내적생활(內的生活)”을 갖는 점에 있다. 즉 “내적 정신생활의 요구”야말로 인생의 본성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것이 오이켄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 또한 밝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참의 생”을 보내고 있다. 거기서 탈출하는 길은 “소자아(小自我)를 몰각하고 대자아(大自我)를 건(建)함”에 있는데, 대자아의 건설이란 바로 “내생명(內生命)의 부활과 정신생활의 재건”을 의미했다.¹³¹

이처럼 1910년대 ‘생활’에 대한 논의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언급 또한 있었다. 이 역시 ‘사회’와 ‘생’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는 경향인데, ‘생’에 대한 관심은 ‘내면적 자아’로 향했던 한편으로 ‘실생활’을 대상화하여 ‘사회’를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생활’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16년 11월 26일부터 연재된 이광수의 글이다. 그것은 “실생활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글이었었는데, 여기서 ‘생활’은 ‘생물학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生物의 行動의 全體는 卽 生活이니, 生物 卽 生活이요, 生活 卽 生物이라. 故로 人生 卽 生活이요, 生活 卽 人生이니, 生活을 離하여 何處에 更히 人生이 有하리요. …然則 生活이란 何뇨. 生活이란 自己 一身의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고 發展하며 更히 自己의 未來의 子孫을 爲하여 知識과 體力과 精神과 財産을 有하는 萬般行動의 總和를 謂함이라. 此를 進化論者들은 個體의 保存·發展 及 種族의 保存·發展이라 하나니…이 目的을 爲하여 奮闘함을 生存競爭이라

¹²⁹ 박찬승(2007.5), pp.173~178.

¹³⁰ 장덕준은 장덕수의 친형으로 추송생(秋松生)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재했다.

¹³¹ 秋松生(장덕준), 「오인의 이상」, 『학지광』 제6호, 1915년 7월 23일.

하나니, 此 簡單한 原理야말로 動植物界의 萬般現像을 支配하는 大法則이라. …人類도 生物인 卽 人類 萬般活動은 卽 生存競爭이요, 此 活動의 原動力은 卽 生하려는 慾望 又は 意志라. …現 今에는 生하려는 慾望 又は 意志로써 人生之本을 삼으니…(밑줄은 원문의 방점을 따름).¹³²

생활은 “건강과 행복과 번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 ‘개체와 종족의 보존·발전’이며 ‘생존경쟁’인데, 인류의 활동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생물의 행동의 전체는 즉 생활’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그러한 생활은 ‘생하려는 욕망 또는 의지’를 원동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광수는 이를 ‘인생지본(人生之本)’, 즉 ‘인생의 본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본성을 ‘내적 정신생활’에서 찾았던 장덕준의 경우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내적 급(及) 외적 생활”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이광수는 생활을 내/외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정신적 우(又)는 영적(靈的), 가족적 및 종족적 생활”로, 후자를 “물질적 우(又)는 육적(肉的), 사회적 및 대타종족적(對他種族的) 생활”로 규정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생활(內生活)이 주가 되고 외생활(外生活)이 종(從)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히 뒤바뀐 사실을 지적한다. 즉 장덕준과 반대로 ‘외적 생활’을 강조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³³

그렇다고 생활의 내적 측면을 경시했던 것은 아니다. 1918년 9월 6일부터 연재된 글에서는 오히려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과거의 실패의 생활의 방식을 탈(脫)하여 생기(生氣) 있는 신생활(新生活)로 입(入)하는 중”에 있는데, 이를 “생활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비판”에 있다. 비판은 생활의 변화를 추진하는 “인위적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정신생활의 부활은 실로 비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비판을 통해 정신생활을 부활시켜 신생활을 향한 진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다.¹³⁴

이처럼 생활의 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도 외적 생활, 즉 ‘실생활’의 중

¹³² 이광수, 『教育家諸氏에게』, 『매일신보』 1916년 11월 26일~12월 13일[『이광수전집』 10권(1976), pp. 54~55에서 재인용].

¹³³ 여기까지 인용은 이광수, 『教育家諸氏에게』, 『이광수전집』 10권(1976), pp.49~55.

¹³⁴ 이광수, 『新生活論』 『매일신보』 1918년 9월 6일~10월 19일[『이광수전집』 10권(1976), pp. 325~329에서 재인용].

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의 목적은 바로 실생활의 능력, 다시 말해 “개체를 보존·발전하고 종족을 보존·발전할 만한 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¹³⁵ “교육”은 “혁명”과 함께 “인위적 진화의 이대(二大) 호실례(好實例)”였기 때문이다.¹³⁶ 이렇게 볼 때 이광수의 생활론은 한편으로 ‘혁명’을 통해 ‘내적 생활=정신생활’을,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통해 ‘외적 생활=실생활’을 충족시킴으로써 조선을 ‘신생활’로, 다시 말해 ‘새로운 사회’로 진화(재탄생)시키는 길잡이로 삼았던 것이다.

(2)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

위에서는 1910년대 조선에서 사회담론의 전개를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위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사회가 같은 시기 ‘문화’나 ‘생활’과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것이 일본의 전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히 1920년대 ‘문화정치’의 콘텍스트를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조선에서는 식민화 이후 ‘국가의 상실’과 함께 ‘사회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를 ‘단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논의를 낳았다. 조선사회의 ‘자율성’을 부각시키는 논의 또한 이러한 흐름이 한층 더 강화된 양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회에 인격을 인정하는 논의는 당시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의 발전을 식민 정책학과 접목시킨 야나이하라의 논의는 식민지 사회에 대해서도 ‘독립된 집단적 인격’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요시노에게도 식민지 인민은 본국과 같은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어야 할 존재였다. 물론 여기서의 ‘사회-주체’는 ‘주권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국가로부터 분리된다’는 성격은 ‘자율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처럼 사회담론의 발전과 함께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조선의 주체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3.1운동의 발발은 식민통치에 새로운 담론의 전개를 야기했다. ‘문화정치’는 그 응답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통치

¹³⁵ 이광수, 『教育家諸氏에게』, 『이광수전집』 10권(1976), p. 58.

¹³⁶ 이광수, 『新生活論』, 『이광수전집』 10권(1976), p.328.

이념이었는데,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 문제에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가이다. 이는 단순히 지배정책적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담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3.1운동 이전의 담론적인 맥락이 이후 현실의 통치담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문화정치를 구성한 콘텍스트로서 ‘자치주의’와 ‘내지연장주의’ 담론을 살피고자 한다.

1) 자치주의: 독립된 주체와 협동의 논리

수상 하라에 의해 표방된 내지연장주의와 달리 자치주의는 비공식적 수준에 그친 논의였다. 때문에 3.1운동 직후에 잠시 불거졌던 논의로 보거나¹³⁷ 총독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시점을 위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¹³⁸ 하지만 3.1운동 이후 자치주의 담론의 확산은 ‘조선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의 대중화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3.1운동 이후 자치주의 담론의 전개를 당시의 신문논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담론적 넓이를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그 속에서 앞 시기부터의 맥락, 특히 ‘독립된 주체성의 인정’과 ‘다원주의적 협동의 논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1운동의 발발에 즉각 반응했던 것은 역시 요시노였다. 그는 3월 22일에 열린 여명회 제3회 강연회에서 조선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지배의 반성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조선의 “독립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¹³⁹ 사실 요시노는 3.1운동 이전부터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16년에 시찰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밝힌 글에서도 이미 조선에 “이민족으로서의 독립을 존중하고” “정치적 자치를 부여하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었다.¹⁴⁰ 이러한 요시노의 주장은 당국의 반발을 일으켜 ‘독립’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찍히기도 했지만,¹⁴¹ 이후에도 언론활동을 왕성하

137 姜東鎮, 『日本言論界と朝鮮』(法政大學出版局, 1984).

138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연구』(국학자료원, 1997); 김동명(2006).

139 吉野作造, 「先づ自己を反省せよ」, 『黎明會講演集』 第1卷 第3輯(1919).

140 吉野作造, 「滿韓を視察して」, 『中央公論』 1916년 6월호. 당시 동경제대 교수로 있던 요시노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빈번하게 교류했는데, 그 인연을 통해 시찰여행을 다녀왔다. 松尾尊兌, 「吉野作造と朝鮮・再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輯(1997); 松尾尊兌(1998), pp. 163~203.

141 小松綠, 「朝鮮統治の真相」, 『中央公論』 1916년 7월호. 당시 총독부 관방외사과(官房外事課) 과장 겸 추밀원 서기관장(書記官長)이었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에 의해 발표된 비판논설이다.

게 전개했다.

특히 6월 25일에 열린 여명회 제6회 강연회에서는 조선문제를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특히 “긴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전통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일본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3.1운동을 통해 “민족적 독립의 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동화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일본민족은 일본민족으로서, 조선민족은 조선민족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²

요시노의 주장은 당시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서도 요시노의 논설이 여러 번 게재되었는데, 6월의 강연내용은 물론 여운형의 방일문제에 관한 논설도 바로 게재했다.¹⁴³ 여운형을 만난 요시노는 그의 주장에는 “침범하기 어려운 정의의 섬광(閃光)”이 있다며 “불령(不逞)한 무리”로 대하는 여론을 타일렀는데, 요시노에게 ‘정의’란 자신의 사상—민본주의와 국제평등주의—을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를 의미했다. 요컨대 조선의 ‘독립’ 주장에 양심이 아닌 본질적 가치를 인정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독립’을 옹호하는 주장은 아니었다. 상대방이 “일편의 도의를 가지고 독립을 외친 이상 우리는 그 이상으로 높은 도의적 이상”을 가지고 “일편의 정의를 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독립’에 대한 인정은 어디까지나 제국의 ‘품 속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⁴⁴ 그런 의미에서 요시노의 주장은 야나이하라를 통해 봤던 ‘다원주의적 협동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었으며, ‘독립’에 대한 주장 또한 ‘주권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비주권적 주체성’의 인정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노의 주장은 또다시 당국의 반발을 일으켰다. 당국은 일본에 병합된 이상 조선이 추구해야 할 “도덕상의 지선(至善)”은 “국법을 준수”하는 데 있음에도 요시노는 “조국의 회복”을 꾀하는 것을 “도덕상의 선사(善事)”로 안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결국 일본은 조선을 포기”해야 한

142 吉野作造, 「朝鮮統治の改革に關する最小限度の要求」, 『黎明會講演集』 第1卷 第6輯(1919).

143 6월의 강연내용은 1919년 8월 21일 창간호부터 9월 4일까지 연재되었으며, 여운형의 방일문제에 관한 글은 1920년 1월 11일에 게재되었다. 여운형의 방일문제는 상해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는데, 반대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안창호는 일정한 이해를 보여줬다. 당시 『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는 이를 추종하는 입장에서 여운형에게 호의적인 요시노의 논설을 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운형의 방일문제에 관해서는 姜德相, 『呂運亨評伝 1 朝鮮三・一獨立運動』(新幹社, 2002).

144 吉野作造, 「所謂呂運亨事件について」, 『中央公論』 1920년 1월호.

다는 결론에 귀착한다는 것이다.¹⁴⁵ 요시노의 주장은 결코 조선을 포기하라는 결론에 귀착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동주의’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를 ‘조선의 독립’, 다시 말해 ‘주권국가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의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인식은 ‘제국개조론’이 제기된 상황과 중첩된다. ‘독립’에 대한 찬반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을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점에서는 공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시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주체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들로 결합’을 이루는 데 있었다. 만약 한일병합이 “노예적 복종을 강요”하는 “결합”을 의미한다면 일본은 “조선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굳게 결합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결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어지는 문장에서 요시노의 논리가 잘 드러난다.

그는 “다년간의 학술적 연구의 결과” “동화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동화의 불가능성’은 자치주의 담론의 논리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시노 역시 이를 식민정책학을 통해 확신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⁶ 그렇다면 조선통치의 이상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그것은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초” 혹은 “실질적인 최고원리를 통해 제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여운형을 논할 때 강조했던 ‘더 높은 도의적 이상’과도 겹치는 말인데, 이를 기준으로 “그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할 때” 비로소 ‘결합’은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국의 회복에 대한 도모”를 “보편적으로 시인되어야 할 도덕적 입장”으로 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즉 ‘독립성’에 대한 인정을 제국 속에서 ‘협동’을 이루어내는 기초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인정되는 독립성이란, 누차 강조하지만, 주권국가적 성격이 아니라 ‘비주권적 주체성’을 의미했다.

145 丸山鶴吉, 「朝鮮統治策に關し吉野博士に質す」, 『新入』 1920년 3월호. 당시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이었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에 의해 발표된 비판논설. 6월의 강연에 대한 비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기와 내용상 여운형 문제까지도 포함한 글이었다.

146 요시노는 1909년부터 동경제대 정치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야나이하라가 니토베의 후임으로 취임한 것은 1920년부터였다. 즉 둘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게다가 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식민정책학을 물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자치주의는 3.1운동 직후 요시노 이외에도 많은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한 대표적 인물로 스에히로 시게오(末廣重雄)를 들 수 있다. 1919년 6월 10일부터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大阪毎日新聞)』에서 연재된 「조선에 자치를 허용하라」는 잡지 『다이요(太陽)』에도 게재되었으며 『동아일보』에서도 소개되는 등 안팎으로 영향을 미쳤다.¹⁴⁷ 이 때문에 그동안 자치론자로서의 측면이 주목을 받았지만,¹⁴⁸ 한편으로 그의 학문적 경력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받지 못했다. 스에히로는 요시노와 같은 동경제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교토제대에서 정치사강좌(1906~1934)의 초대 담당자가 되었다. 이외에도 외교사강좌(1922~)나 국제법강좌(1927~)도 한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했다.¹⁴⁹ 사카이의 논의를 상기한다면, 스에히로는 ‘국제정치학’과 ‘식민정책학’이 교차하는 바로 그 점점에 위치했던 인물로 이해된다.

그의 논의 또한 자치주의 담론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10년 동안에 “물질적으로 진보”한 조선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다. “조선소동의 근본원인”은 그러한 요구를 외면했던 “우리의 통치”에 있는 것이다. “조선통치”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동화정책을 과연 앞으로도 계속 실행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즉 그 역시 ‘동화주의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치주의 담론으로서는 전형적인 주장이었지만 스에히로 개인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이전의 그는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⁵⁰ 그만큼 ‘동화주의 비판’은 3.1운동 이후에 규정력을 갖게 된 것이다.

스에히로의 논의의 특징은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데 있었다. 동화정책에 대해서도 외국의 실패 사례를 망라하면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편

147 末廣重雄, 「朝鮮に自治を与えよ」, 『大阪毎日新聞』 1919년 6월 10~13일; 末廣重雄, 「朝鮮自治問題」, 『太陽』 1919년 7월호; 장덕준, 「朝鮮騷擾에 對한 日本世論을 批評함」, 『동아일보』 1920년 4월 2~13일. 자치주의에 대한 동아일보의 인식을 다룬 연구로 강명숙,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치에 관한 인식」, 『역사와현실』 41호(2001.9).

148 小野一一郎, 「第一次大戰後の植民政策論」, 『兩大戰間期のアジアと日本』(大月書店, 1979); 姜東鎭(1984), pp. 210~213; 김동명(2006), pp. 199~203.

149 藤岡健太郎, 「戰間期日本知識人の東アジア國際秩序認識の構造-蠟山政道と末廣重雄の場合」, 『九州史學』 125(2000. 5); 伊藤信哉, 「1920年代『外交時報』にみる日本知識人の對外認識-半澤玉城と末廣重雄を中心に」, 『大正・昭和期の日本政治と國際秩序』(思文閣出版, 2014).

150 末廣重雄, 「朝鮮總督政治」, 『太陽』 (1912.1).

“데모크라시” 또한 세계적 추세인데, 그것은 “조선인 본위의 정치”에 대한 요구를 고조시켰다. 이 양쪽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 바로 ‘자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가 ‘조선인 본위의 정치’, 즉 그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그것을 “독립의 한 계단”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자치의 허용은 조선인의 독립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도리어 “일선융합의 일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독립성’을 인정하는 목적 또한 ‘협동’에 있었던 것이다.¹⁵¹

한편 당시 교토제대 경제학부에서 식민정책강좌를 맡고 있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 또한 스에히로와 쌍을 이루듯 자치주의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식민정책학자로서의 야마모토는 “국민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인물로 평가된다.¹⁵² ‘국가정책에서 사회현상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야나이하라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1차 대전 후에 나타난 변화를 체현한 인물이었다. 학자로서의 야마모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¹⁵³ 여기서는 3.1운동 이후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벌였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물론 자치주의 담론의 넓이와 다원주의적 협동논리의 재현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간과된 측면을 밝히는 의의를 갖는다.

스에히로와 달리 이전부터 동화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야마모토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여러 매체를 통해 자치주의 주장을 펼쳤다.¹⁵⁴ 그러한 모습은 그의 거점이었던 간사이(關西) 지방의 신문에까지 시야에 넓힐 때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1919년 5월 11일 야마모토는 ‘식민지의 통치책’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정책을 ‘동화주의’와 ‘자치주의’로 대비하면서 전자의 실패와 조선통치의 과오, 3.1운동의 인과성을 설명했다.¹⁵⁵ 이어 6

151 여기까지 인용은 末廣重雄, 「朝鮮に自治を与えよ」, 『大阪毎日新聞』 1919년 6월 10~13일

152 金持一郎, 「我國に於ける植民政策學の發達」, 『經濟論叢』 38卷 1号(1934).

153 金持一郎(1934); 高木眞助, 「山本美越乃博士年譜・著書論文目錄」, 『經濟論叢』 第38卷 第1号(1934.1); 小野一一郎(1979); 金子文夫(1985); 淺田喬二, 「山本美越乃の植民論(上・下)-矢内原忠雄の植民論との對比において」, 『經濟學論集』 18卷 1・2・3号(1986.11).

154 3.1운동 이전의 논설로는 이하를 참조. 山本美越乃, 「植民地統治の二大主義に就いて」, 『外交時報』 第232号, (1914. 7); 山本美越乃, 「我植民政策上に於ける一大教訓」, 『太陽』 1914년 4월; 山本美越乃, 「滿鮮を巡遊して我植民政策を論ず」, 『大阪毎日新聞』 1918년 9월 8~19일; 山本美越乃, 「戰後の植民地統治策」, 『大阪毎日新聞』 1919년 1월 11~16일.

월 4일의 논설에서는 조선에 ‘자치주의’를 실행하라는 주장을 펼쳤다.¹⁵⁶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도 여러 지면을 통해 반복되었다.¹⁵⁷ 내용적 측면에서는 각각의 논설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대비하면서 후자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방식은 늘 반복되었는데,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는 그 또한 르봉의 영향을 내비치면서 “이성”의 평등성을 믿는 “계몽주의적 사상기반”의 과오를 지적하며 ‘동화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다.¹⁵⁸

한편 야마모토는 신문지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조선시찰담에 대한 반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노우에는 3.1운동의 원인을 “관료내각”에 의한 “악정비책(惡政秕策)”으로 보고, “정당내각”의 성립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마모토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3.1운동의 원인이 “조선인의 불타는 독립사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야마모토에 따르면 “조선의 정치는 조선을 위한 조선인의 정치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인의 “절대적 신념”으로,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그 해결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마모토도 조선의 ‘독립’ 요구를 인정하는 중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독립’ 또한 일본과 조선이 “서로 제후”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했다. 즉 야마모토의 주장의 핵심 또한 ‘협동’을 위한 ‘독립’에 있었던 것이다.¹⁵⁹

또한 야마모토는 정우회 계열의 중의원 의원이었던 하타노 쇼고로(波多野承五郎)의 시찰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하타노의 담화는 ‘내지연장주의’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른 것이었는데, 이에 야마모토는 내지연장주의는 “아무런 문화도 없고 국가였던 역사도 없고 따라서 조금도 국민적 자긍심이 없는 미개야만의 원시적 민족”에 적용될 정책으로, 조선처럼 “과거에 문화의 흔적이 있는데다가 독립국으로서 타국을 흘려왔던 민족”에게는 적합

¹⁵⁵ 『山本博士講演』, 『京都日出新聞』 1919년 5월 13일.

¹⁵⁶ 山本美越乃, 「朝鮮に自治を許せ」, 『大阪時事新報』 1919년 6월 4일.

¹⁵⁷ 山本美越乃, 「植民政策より觀たる朝鮮の統治」, 『大阪時事新報』 1919년 11월 23일~12월 3일; 「朝鮮統治私見」, 『大阪新報』 1919년 12월 23일~12월 25일; 「誤れる同化策」, 『京都日出新聞』 1920년 11월 17일; 「植民地領有目的」, 『神戸又新日報』 1921년 1월 2일. 이처럼 신문논설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대표작 『식민정책연구』(1920)를 출판, 잡지 『다이요(太陽)』에 「조선통치 문제 사건」(1920.5)을 발표하기도 했다.

¹⁵⁸ 山本美越乃, 「植民政策より觀たる朝鮮の統治」, 『大阪時事新報』 1919년 11월 23일~12월 3일

¹⁵⁹ 山本美越乃, 「朝鮮統治私見」, 『大阪新報』 1921년 1월 7~9일.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¹⁶⁰

하타노와의 논쟁에서도 보이듯이 자치주의 담론은 내지연장주의를 지지하는 정우회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정당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헌정회 총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의 연설을 둘러싼 논쟁이다. 먼저 그 도화선이 된 것은 총무 에기 다스쿠(江木翼)의 논설이었다. 1919년 4월 에기는 하라내각의 조선통치 방침에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요점은 ‘동화주의 비판’과 ‘독립된 단위’로서의 인정이었다. 3.1운동의 원인은 프랑스의 예를 보더라도 실패가 명확한 동화주의를 역사와 문화를 갖는 조선에 실행한 데 있으며, 식민지는 결코 본국의 부속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화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¹⁶¹

에기의 담화로부터 나흘 뒤 후쿠시마에서 열린 헌정회 동북대회에서 가토는 조선에 ‘자치’를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3.1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에 대한 종속관계”로 지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조선인을 열복(悅服)”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에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코의 연설은 4월 14일자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¹⁶²

5월 23일 정우회에서는 간부 단합회를 열어 “가토 헌정회 총재 및 동간부가 말하는 자치론을 부인”하기로 합의했다. 그의 연설은 “내지의 연장인

160 이러한 주장은 다른 논설에서도 발견되는데, 예컨대 동화주의는 ‘아프리카처럼 포악한 인민’에게 적용될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명과 야만’을 척도로 동화주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관점은 야나이하라에게도 발견되는데, 그는 이를 근거로 사할린 및 남양군도에 대한 동화주의를 주장했다. 『朝鮮統治方針: 波多野承五郎氏談(上·下)』, 『時事新報』 1920년 12월 25~26일; 山本美越乃, 『朝鮮統治私見』, 『大阪新報』 1921년 1월 7~9일; 山本美越乃, 『植民政策より觀たる朝鮮の統治』, 『大阪時事新報』 1919년 11월 23일~12월 3일; 米谷匡史, 『矢内原忠雄の〈植民・社會政策〉論-植民地帝國日本における「社會」統治の問題』, 『思想』 945号(2003.1).

161 『鮮人暴動鎮壓策: 政府の方針決定』, 『神戸又新日報』 1919년 4월 8일; 『植民地統治の誤謬: 江木翼氏談』, 『大阪毎日新聞』 1919년 4월 9일; 『朝鮮騷擾批判』, 『萬朝報』 1919년 4월 9일; 『殖民政治禍根: 江木憲政會總務談』, 『東京朝日新聞』 1919년 4월 9일; 『植民地統治の誤謬: 江木翼氏談』, 『大阪毎日新聞』 1919년 4월 9일. 또한 식민통치의 의의가 ‘문명의 선전’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식민통치를 ‘문명의 선전’이라고 표현했던 라인슈(Reinsch)의 영향을 암시한다. 라인슈는 당시 일본의 식민정책학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그에 관해서는 金持一郎(1934); 酒井哲哉(2005); 酒井哲哉(2006).

162 『同化主義と文化主義』, 『大阪朝日新聞』 1919년 4월 14일.

조선”에 악영향을 미쳐 “폭동에 호소하여 조선의 독립”을 성취하는 움직임을 선동한다는 것이다.¹⁶³ 이에 반발하듯이 스에히로는 앞서 본 6월의 논설에서 가토의 연설을 옹호했다.¹⁶⁴ 사태가 커지자 가토는 변명을 하는데, 자신의 연설은 “독립은 물론 말 그대로 자치(self-government)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¹⁶⁵ 이로써 상황은 수습되었지만, 그 뒤에도 예기는 주장을 거듭했다.¹⁶⁶

2) 내지연장주의: 동화의 다의성과 관용의 논리

이상에서는 3.1운동 직후에 대중적으로 확대된 자치주의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고, 거기서 ‘독립된 주체성의 인정’과 ‘다원주의적 협동의 논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문화정치의 또 하나의 콘텍스트, 즉 내지연장주의 담론에서 ‘조선의 주체성’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이하에서는 이 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내지연장주의를 흔히 ‘동화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동화주의의 범주에는 문화정치기의 정책뿐만 아니라 무단정치기의 정책도, 전시기의 이른바 황민화정책도 포함된다. 내지연장주의를 동화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할 경우 정책들 간의 차별성은 애매하게 처리되고 평등을 내세운 정책의 기만성만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화정책’이라는 개념의 남용에 의문을 던진 고마고메의 문제제기와 상통한다.¹⁶⁷ 일본의 식민지배가 동화주의로 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기의 어떤 차원에 적용된 것이었는지, 이 점에 의식적이지 않으면 통치담론에 대한 이해는 일반론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동화’를 거론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았다면 엄밀한 검토가 따라야지만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내지연장주의를 이해하는 데 특히 ‘차원적 차이’와 ‘동화의 다의성’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에서는 내지연장주의의 주창자 하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골격을 알아보고, 3.1운동 이

163 「自治否認: 政友對鮮意見」, 『東京日日新聞』 1919년 5월 23일.

164 末廣重雄, 「朝鮮に自治を与えよ」, 『大阪毎日新聞』 1919년 6월 10~13일.

165 「所謂自治の意味」, 『大阪朝日新聞』 1919년 7월 15일.

166 江木翼, 「愛蘭問題と朝鮮: 異民族の同化は果して可能なりや」, 『讀賣新聞』 1919년 10월 1일.

167 駒込武(1996), pp. 10~24.

후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당시의 신문논설을 보충재료로 살피고자 한다.¹⁶⁸ 이로써 내지연장주의 담론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어떻게 다루어져 있었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하라의 내지연장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5년 대만영유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청일전쟁으로 얻어낸 대만에 어떠한 통치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이를 검토하기 위해 대만사무국이 설치되었는데, 당시 외무관이었던 하라는 여기에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제출된 「대만문제이안(台灣問題二案)」에 내지연장주의의 골격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하라는 대만을 식민지로 보고 최종적으로 ‘자치’에 도달케 하는 갑안(甲案)보다 식민지로 보지 않고 ‘본국화’시키는 을안(乙案)을 권장했다. 서구제국의 식민지와 달리 대만은 일본과 거리도 가깝고 인종도 같기 때문에 본국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⁶⁹

그런데 내지연장주의의 핵심은 이와 같은 전형적인 동화주의 언설보다도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있다. 즉 총독에게는 마땅한 권한을 부여하되 본국의 담당대신에게 감독권을 쥐게 하고, 또 기타 사무에 대해서도 본국의 관청에 관할권을 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국의 현행법을 가능한 시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법이나 긴급칙령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가 말한 ‘내지연장=동화’란 ‘법제도적 차원’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화주의’는 그 ‘다의성’을 염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라는 ‘흔히 말하는 동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만 문제를 논의했을 당시까지 만해도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168 하라의 내지연장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하루야마 메이테쓰(春山明哲)의 연구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돋보이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나 사카이의 연구도 부분적으로 참조가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그 골격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春山明哲·若林正丈, 『日本植民地主義の政治的展開 1895~1934』(アジア政経學會, 1980);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新曜社, 1998); 酒井哲哉, 『帝國日本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23卷 アジアとヨーロッパ』(岩波書店, 1999).

169 ‘지리적 근접성’과 ‘인종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법을 마크 피티는 일본 제국주의의 특수성으로 설명한다. Mark Peattie 著, 淺野豊美 譯, 『植民地-帝國50年の興亡』(讀賣新聞社, 1996). 또한 여기서 갑안은 당시 일본 사법성의 고문외국인이었던 영국인 커크우드(Kirkwood)의 제안을 가리키는데, 커크우드는 하라와 반대로 ‘지리적으로도 멀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대만에는 본국의 법체계와 분리된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春山明哲(1980), pp. 3~4; 小熊英二(1998), pp. 113~116; 酒井哲哉(1999), pp. 278~280.

다. 물론 지리적 근접성이나 인종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그 관심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를 본국의 법체계로 포섭하는 것’, 즉 ‘제도적 차원의 동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라의 입장은 한일병합 당시에도 일관되었다. 조선의 통치체제는 대만을 따르면서도 그 안보적 중요성 때문에 보다 엄격한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예컨대 총독의 제령권(制令權)을 포함한 법령이 영구법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해군 대장이라는 조건과 천황에 대한 상주권(上奏權)이 부여되는 등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하라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권한 축소에 힘쓰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러한 하라에게 3.1운동의 발발은 기존의 통치체제에 변혁을 가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하지만 3.1운동이 준 충격은 그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지연장주의에 이전에는 없었던 맥락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는 식민지 인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동화주의 비판’의 맥락이었다.

먼저 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난 조선민족의 자결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방향은 조선인을 ‘제국의회’에 참여시키든지, 본국과는 별도로 ‘식민지의회’를 설치하든지,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이에 하라는 전자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당장은 ‘자방자치’에 한정시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은 3.1운동 직후에 마련된 「조선통치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서는 “구미각국의 신영토에서 하는” 것과 같은 “자치를 허용한다고 논의하는 자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 주의를 그릇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그 대신 “부현제(府縣制) 시정촌제(市町村制)와 같은 의미의 자치”에 대한 찬성이 표시되었다.¹⁷⁰ 이러한 하라의 의견은 사이토를 통해 공식적 입

170 原敬, 『朝鮮統治私見』,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104-19[장인성·김태진·이경미 편,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에 번역문 수록, 이하 문서명과 문서번호만 표기]. 하라는 같은 시기에 찾아온 7명의 조선 인사들에게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선의회의 설치를 염두에 둔 자치제의 실행을 요구한 이들에게 그러한 의미의 자치는 “합병과 상반된 것, 즉 독립을 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실행과 장래 “제국의회에 참여”시킬 의사를 표시했다(「8월 1일」, 原奎一郎 編, 『原敬日記』第5卷, (福村出版, 2000) p. 124). 이때 하라를 찾아온 것은 박병철(朴炳哲), 심우섭(沈友燮), 이기찬(李基燦), 고희준(高義駿), 채기두(蔡基斗), 박승빈(朴勝彬), 고원훈(高元勳)으로, 이들은 하라 외에도 일본 정계 및 조선 통치와 관련된 요인들을 면회했는데, 이를 알선해준 것이 아베였다. 「朝鮮人概況 第7章 朝鮮自治制施行運動員の入京」, 『朝鮮人에 대한施政關係雜件一般의 部2』; 「高元勳外六名の意見書」, 近藤劬一 編, 『万歳騒擾事件』(友邦協會,

장으로 표방되었다. 9월 3일 취임과 함께 시정방침을 밝힌 사이트는 “장래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목적”을 명시했던 것이다.¹⁷¹

다음으로 ‘동화주의 비판’의 맥락을 보면, 정치적 권리의 문제와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내지연장주의를 동화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그 속에 흐르는 비판적인 맥락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화의 다의성에 유의한다면 그것은 결코 비논리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3.1운동이 보도되자 조선통치에 대한 비판이 일거에 제기되었는데,¹⁷²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세를 이룬 논점이었다. 그것은 앞서 본 자치주의 담론뿐만 아니라 내지연장주의를 주장하는 글에서까지 나타날 정도였는데, 3월 19일자 논설은 당시 ‘자치’와 ‘동화’ 사이를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1차 대전 이후 세계는 “무력을 타괴(打壞)하고 데모크라시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조선 또한 군인 중심의 통치방식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논설은 “데모크라시란 결국 영국과 같은 자치주의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 정치의 요체는 정복하지 않고 동화하는 데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요컨대 통치의 대안을 ‘자치’에서 찾으면서도 동시에 ‘동화’를 주장하는 혼동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⁷³

하지만 어쨌건 이때의 ‘동화’는 ‘정복’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논설에서는 본래 조선의 통치기관은 “본국정부의 지휘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동안 “군벌”에 맡겼던 것이 최대의 잘못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관동도독부와 같은 개정안을 조선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하라가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제시한 내지연장주의적 관제개혁안으로 당시 추밀원에서 심의 중에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긍정되는 동화란 ‘법제도적 차원의 동화’를 의미했던 것이다.¹⁷⁴

1964) pp. 116~123; 「人物月旦(9) 李基燦君」, 『매일신보』 1919년 8월 21일.

171 「訓示」,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69-1.[장인성·김태진·이경미 편,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에 번역문 수록, 이하 문서명과 문서번호만 표기].

172 당시의 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연구로 姜東鎭(1984).

173 「總都督文官制」, 『萬朝報』 1919년 3월 19일.

174 「總都督文官制」, 『萬朝報』 1919년 3월 19일. 개혁안의 요지는 관동도독부의 폐지와 관동청의 설치, 관동장관의 문무병용제에 있었다. 春山明哲(1980), pp. 52~53; 酒井哲哉(1999), pp. 286~287.

이와 반대로 3월 27일자 논설에서 동화는 ‘부정적인 의미’로 거론된다. “총독부의 군인정치는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억지로 양성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민지 인민을 동화하는 어려움”은 명백한데, 그보다 짧은 기간에 “조선인을 일본화하는 것”이 용이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론되는 동화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쓰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차원의 동화’를 부정했던 것이다.¹⁷⁵

이처럼 3.1운동 직후의 논설에서 동화는 ‘법제도적 차원’을 의미하기도 했고 ‘정신적인 차원’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내지연장주의 담론 또한 이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4월 14일자 논설은 ‘내지연장주의’와 ‘동화주의 비판’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었는지 알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된다. 여기서 동화는 우선 부정적인 의미로 거론된다. “동화의 강요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 통치는 “고압적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자치적 문화주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즉 ‘동화주의’에서 ‘자치주의’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듯이 보이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에서 말하는 ‘자치적 문화주의’란 결국 ‘동화주의’를 의미함을 보여준다.

동화하기 어려운 것을 동화시키려고 하면 그 힘은 여러 방면에 고압적인 수단을 쓰게 된다. 그런데 동화는 의사감정의 일치에 기초한 일로, 고압적 수단은 결국 동화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다만 유일하게 문화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를 세로로, 교화를 가로로 짜여진 정의인도의 넓은 땅에 입각하여 인류의 이름 밑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의사감정의 충돌이 있을 리가 없고, 고도의 문화는 결과적으로 동화의 실적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선통치의 극치가 아니겠는가.¹⁷⁶

동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동화시키려고 하면 그 정책은 반드시 고압적인 수단을 쓰게 된다. 하지만 동화란 ‘의사감정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압적 수단은 결국 동화를 실패하게 만든다. 여기서도 비판받는 동화는 ‘의사감정’이라는 ‘정신적 차원’에 강요되는 동화이다. 그러한 ‘고압적 동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적 문화주의’가 제시되는데, 하지만 위에서

175 「朝鮮の施政」 『萬朝報』 1919년 3월 27일.

176 「同化主義と文化主義」, 『大阪朝日新聞』 1919년 4월 14일.

문화주의는 ‘동화’의 실적을 올리는 정책으로 설명된다. 언뜻 지리멸렬해 보이지만, 동화의 다의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 속에 ‘동화주의 비판’이 ‘진정한 동화’로 나아가는 내지연장주의적 담론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위에서 문화주의는 자유와 교화로 짜여진 정의인도로 식민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통치이념이다. 이것이 식민지를 ‘동화’에 이르게 하는 토대로 설명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고압적 동화주의는 ‘자유’와 ‘교화’를 결여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것이 4월 16일자 논설이다. “동화의 진수(眞髓)는 정신의 교통”에 있기 때문에 “국민 상호 간에서 의사가 연락”되어야 동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동화는 ‘정신적 차원’에서 파악된다. 동화정책의 잘못은 그러한 동화를 위로부터 강요한 데 있다. 교육을 통해 충성심을 강요한 것이 그 현저한 예인데, 충성심은 “정신적 이해가 있어야만 비로소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은 “동화를 강요”하는 것보다 “자유”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즉 ‘강요’보다도 ‘자유’를 통해 ‘동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점에서 앞서의 논설과 동일한 주장에 도달한다. 따라서 “진정한 동화란 교화의 힘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¹⁷⁷

정리하자면, 내지연장주의 담론에서 ‘동화’는 우선 ‘법제도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의미했다. 이 맥락에서 3.1운동으로 고조된 식민지의 ‘정치적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에의 참여를 염두에 둔 자방자치제의 실시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즉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국의 법체계의 포섭’을 의미했던 것이다. 한편 ‘정신적 차원의 동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요’해왔던 기존의 통치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동화주의 비판’이란 바로 이 맥락에서 내지연장주의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 또한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었는데, 여기서의 비판은 자치주의 담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화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화를 ‘강요했던 방식’을 비판했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통해 ‘진정한 동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지연장주의 식의 ‘동화주의 비판’이 결국

177 「朝鮮の統治—鎮定後の方針」, 『東京朝日新聞』 1919년 4월 16일.

‘진정한 동화’로 회귀한 사실에 있지 않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에서 비롯된 ‘관용’의 논리이다.¹⁷⁸ ‘정신적 차원의 동화’에 대해 ‘자유’를 주장하는 논리는 ‘조선의 주체성’에 대해 ‘동화의 강요’가 아니라 ‘관용’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때의 관용은 동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주의에서 보았던 만큼의 적극성은 없다. 즉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에서 ‘관용’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하라의 「사견」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나타난다. 대만문제를 논의했을 당시 ‘정신적 차원의 동화’는 관심의 대상에 들지도 않았지만, 3.1운동 이후의 ‘동화주의 비판’은 더 이상 무관심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제도적 차원’을 중시하는 하라의 관점에서 ‘정신적 차원’의 동화는 ‘점진적인 가능성을 낙관하는 수준’에서 처리되었다. 하루야마가 지적했듯이 “동일한 제도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¹⁷⁹는 식의 ‘선 제도, 후 동화’의 낙관론이 그의 내지연장주의를 관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미래’에 예정된 결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아니다. ‘관용’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현실적인 맥락에 적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견」에 제시된 아래 구절은 하라가 조선인의 ‘정신’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그 관용의 자세를 보여준다.

조선이 특하면 독립을 꾀한다는 의구심으로 대선(對鮮)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에게 반항하고 독립을 꾀하는 염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심각한 우책(愚策)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독립을 잃은 인민이 독립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은 수세기 지나도 전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통치하에서 행복안녕을 얻고 향상발전하는 이상, 그들에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관념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 반역을 꾀하는 자는 대체로 없다.¹⁸⁰

위에서 하라는 조선의 독립정신을 의심하는 정책을 비판한다. 그것은 도리어 실천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정신’ 자체에 대

¹⁷⁸ 자유주의 제국과 관용의 관점에 대해서는 Brown, Wendy., *Regulating aversion :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이승철 옮김,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길무리, 2010)].

¹⁷⁹ 春山明哲(1980), p. 61.

¹⁸⁰ 「朝鮮統治私見」(No.104-19).

한 그의 인식이다. 그것은 수세기가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당연한 심성으로,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행복안녕을 얻고 향상발전하는 일’, 하라식으로 말하면 ‘법제도적 동화’의 진전이야말로 독립정신을 누그러뜨리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차원을 ‘법제도’와 ‘정신’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로, 후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인정’으로 대하는 내지연장주의 답론은 ‘조선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양면적인 대응으로 나타난다. 앞서 보았듯이 전자의 맥락에서 조선의 ‘정치적 권리’는 결코 조선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적 권리는 어디까지나 제국의 국민으로서 조선의 인민 개개인 주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조선의 주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저 동화와 차별이 있을 뿐이다. 그와 달리 후자의 맥락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자치주의보다는 소극적이거나 ‘관용적인 인정’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것은 ‘조선을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확실히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내지연장주의 답론이 법제도와 ‘다른 차원’에 관용을 보인 사실은 ‘정신’ 이외의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의 ‘역사’에 대한 교육방침을 논한 구절에서도 ‘조선의 주체성’은 ‘관용적 인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하라는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엄이도령(掩耳盜鈴)”의 우책이라고 비난한다. “조선의 역사는 그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이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기왕의 주장이 반복된다.¹⁸¹ 요컨대 여기서도 ‘법제도적 동화’를 우선시하는 이면으로, ‘조선의 역사적 주체성’에 대한 ‘관용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라의 의견 역시 사이토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밝힌 같은 글에서 그는 “가능한 조선의 문화와 구관(舊慣)을 존중”하는 방침을 밝혔던 것이다.¹⁸²

181 『朝鮮統治私見』(No.104-19)

182 『訓示』(No.69-1).

III. 정치담론과 주체성

조선의 사회담론은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를 출현시켰다면, 일본에서 발견된 사회 또한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맥락을 띠면서 식민통치담론으로 연계되었다. 제국과의 협동을 전제로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는 그러한 맥락을 이어 나타난 것이었는데, 3.1운동의 발발은 주체성을 둘러싼 문제를 보다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속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이제 명백한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 혹은 적어도 관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조선을 자율적인 사회로 존립시키는 논의와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는 변화였지만, 이때의 주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비주권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비주권적 주체성’은 어떠한 전개를 보였을까. 이하 III, IV, V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선 III장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들’을 대상으로 그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비주권성’을 받아주는 개념으로 기능한 것이 ‘합법성’이다. 문화정치가 조선의 민족운동은 ‘합법성’을 존립의 조건으로 규정받았는데, 이때의 합법성은 ‘제국의 기반이탈(羈絆離脫)과 독립회복(獨立恢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 달리 말하면 ‘비주권성’을 핵심으로 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들의 전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합법성=비주권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III장에서는 ‘합법적=비주권적 민족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특히 유의한 것이 그러한 논의들을 ‘통치’와 ‘민족’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통치자의 인식은 흔히 ‘분열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특정한 입장—민족주의 좌파—을 대변한 관점으로 보고 지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총독 사이토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조선의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아베의 ‘인심수렴론’(人心收攬論)을 통해 통치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¹⁸³

그런 한편으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분석했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

은 이광수가 상해에서 귀국한 이후 아베를 매개로 통치 측과 가졌던 관계와 조선의 민족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오피니언 리더적인 역할이다. 특히 「민족개조론」(1922)에서 「민족적 경륜」(1924)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그 과정에 통치 측의 인식이 어떻게 얹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써 통치와 민족 양자의 상관관계 속에서 ‘합법적=비주권적’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고자 했다.¹⁸⁴

조선의 민족운동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치적 세력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생의 정치담론’이 탄생했다. 그것은 ‘독립 혹은 혁명’에 연루된 기존의 ‘정치’ 개념을 ‘생활’과 연결시킴으로써 ‘합법적=비주권적’ 공간에서 가능한 운동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이 ‘생의 정치담론’을 통해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비주권적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포섭된 점에서 ‘협력적’인 담론이었지만, 민족운동을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시키는 의도를 수행한 점에서 ‘저항적’인 담론이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밝히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이 된다.

1. 민족개조론과 인심수렴론(人心收攬論)의 접속

¹⁸³ 1910년대에 경성일보 사장직을 지냈던 아베는 사이토의 취임과 함께 비공식 브레인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사이토와 직접 서한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아베의 활동은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게다가 사이토의 취임기간에 걸쳐 일관된 인식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인식과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다. 이하 아베에 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아베의 중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강동진의 연구였다. 한편 심원섭은 좀 더 구체적인 생애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시켰는데, 최근에 이형식에 의해 제출된 연구들은 기존의 흐름을 종합시키면서 더욱 실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姜東鎭(1978); 심원섭,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생애 기초 연구」, 『한국학연구』 25집(2001); 심원섭(2017); 이형식, 「메이지·다이쇼 초기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궤적」, 『일본역사연구』 42호(2015.12); 이형식(2016);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호(2017.4); 이형식, 「1920년대 중 후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 『민족문화연구』 78호(2018.2).

¹⁸⁴ 이광수는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인물로, 그동안 각계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제출되어왔다. 이를 여기서 망라할 수는 없는데, 기초적이면서도 여전히 인정받는 논저로 김윤식의 연구가 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솔, 1999).

(1) 이광수와 아베의 만남

1922년 5월 『개벽』에 발표된 「민족개조론」은 상해에서 귀국한 이광수가 조선에 충격을 준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의 귀국은 그로부터 1년 전인 1921년 봄에 이루어졌다. 1919년 2·8선언을 기초한 직후 상해로 건너간 이광수는 독립운동의 선전에 종사했는데,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는 기관지 『독립』의 편집장이 되었다. 하지만 신문발행은 곧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즈음부터 독립운동의 장래에 고민을 안게 된 이광수는 다음 두 가지 계기로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나는 1920년 10월의 혼춘 사건(璦琿春事件)이다. 당시 일본에 대한 보복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 휘말린 이광수는 이동휘가 이끄는 임정의 분위기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안창호의 홍사단(興士團) 활동이다. 당시 임정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안창호는 홍사단을 조직하여 자체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¹⁸⁵ 상해에서 안창호와 인연을 맺게 된 이광수는 그의 사상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¹⁸⁶

그리하여 이광수는 1921년 봄 조선을 향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홍사단의 취지는-필자) 민족의 독립은 독립을 운동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민족이 독립의 실력을 갖추므로만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길은 민족 각 개인의 실력을 기르고 이러한 개인들이 단결함으로 독립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나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제 주권이 있는 나라의 혁명 운동은 국외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제 주권이 없이 남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도의 독립을 보면 간디를 비롯하여 모두 국내에서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하므로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동지의 결속을 많이 하면 기회를 얻어서 각지에서 일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었다.¹⁸⁷

위의 글은 그가 귀국 당시 조선의 민족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내준다. 그가 말하는 홍사단의 취지란 ‘실력양성

¹⁸⁵ 홍사단은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단체로 1920년 1월에 상해에서도 결성되었다.

¹⁸⁶ 귀국에 이르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권(三中堂, 1976), pp. 251~268에서 재인용]; 김윤식(1999), pp. 648~737; 波田野節子, 『李光洙·『無情』の研究』(白帝社, 2008), pp. 434~438.

¹⁸⁷ 「나의 고백」, p. 264.

론'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실력을 갖춘 개개인의 단결로 이루어지는 운동이었던 만큼 그는 많은 동포들이 많이 사는 '조선'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주권이 없는 식민지'로, 따라서 그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은 '합법적인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작 영감을 줬던 안창호는 귀국을 말렸지만, 이광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1921년 4월 상해를 떠난 그는 봉천에서 밤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갔다가 이동경찰에 잡혀 신의주 경찰서로 연행되었다.¹⁸⁸ 순간 가혹한 대우를 각오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덮밥 한 그릇이었고, 결국 그날 밤 차로 무사히 서울에 올 수 있었다. 귀국 후에도 몇 번 불려간 일이 있었지만 그가 각오했던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문화정치'의 덕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그는 세상으로부터 더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귀국이 곧 명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안창호의 충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3.1운동에 관계했던 인물들이 아직 수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광수에게 세상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이제 유학시절부터 알던 몇 명 인사를 빼고는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처지가 되어버린 이광수는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내 장래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글을 쓰고” 지냈다고 한다.¹⁸⁹ 「민족개조론」 역시 이때에 쓰여진 글이었다.

개조론은 “신유(辛酉) 11월 11일 태평양회의가 열리는 날에” 집필되었다.¹⁹⁰ 3.1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민족자결원칙에 종지부가 찍힌 바로 그 날에 조선의 민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이끄는 글이 집필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타이밍을 연출한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조론이 발표보다 6개월이나 이른 시점에 이미 집필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통치와 민족의 역학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그 연관성은 같은 해 12월 29일에 사이토 앞으로 보내진 아베의 서한에서 발견된다.¹⁹¹ 그는 거

188 「歸順證을 携帶하고 義州에 着한 李光洙」, 『조선일보』 1921년 4월 3일

189 「나의 고백」, p. 265. 이때 이광수와 접촉한 인물로는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최남선, 홍명희, 김기전 등이 언급된다.

190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1922년 5월[『이광수전집』 10권(1976) p.116에서 재인용]

191 아베와 사이토의 연락은 주로 서한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고 있는 『齋藤實關係文書』에는 아베가 보낸 서한 225통의 수록되어 있으며, 『阿部充家關係文書』는 사이토가 보낸 서한 60통이 수록되어 있다.

기서 민족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이광수라는 자의 안(案)에서 보여드렸던 조선인 개조의 문화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암시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 쌍방에게 득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¹⁹²

아베가 이광수를 처음 만난 것은 이로부터 5년 전인 1916년 가을의 일이었다. 당시 경성일보 사장으로서 경영 확대에 착수했던 아베는 조선인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글쓰이를 찾고 있었으며, 이광수는 와세다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의 조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름방학을 마쳐 동경으로 돌아가려던 어느 날 이광수는 심우섭의 소개로 아베의 저택을 찾아갔다. 이때의 만남으로 이광수는 매일신보의 필자가 되어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아베 또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아베 서한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12월 29일의 서한이 처음이었다.¹⁹³

서한의 내용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아베는 사이토에게 ‘이광수의 안’을 보여줬다는 것, 둘째로 그것은 ‘조선의 문화운동’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 셋째로 아베는 그로부터 ‘방향전환’의 암시를 받았고 그것을 사이토에게 제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베가 이광수의 안을 통해 문화운동에 관한 암시받았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아베의 전환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의미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조선통치론부터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심수람론의 함의

1) 인심수람과 친일육성의 흑백론

3·1운동부터 1년이 지난 1920년 5월 아베는 조선을 방문했다. 경성일보를 그만 둔 지 2년 만에 돌아온 조선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192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8.

193 둘이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李光洙, 「無佛翁の憶出-私が翁を知った前後のこと」,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近代朝鮮文學作品集』(1939~1945) 評論・隨筆篇 3 (綠蔭書房, 2002); 波田野節子, 「李光洙が出會った四人の日本人」,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50号(2017.10); 이형식(2016). 김윤식에 따르면 이광수와 허영숙이 베이징으로 도피했을 때도 아베는 여권 발행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김윤식(1999), p. 639.

지방을 순회하면서 주로 일본인과 친근한 조선인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쌓인 원한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사찰을 마친 아베는 조선통치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 마음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그것이 「아베 미쓰이에 의견」이다.¹⁹⁴

의견서에서 아베는 3.1운동의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한다. ①미국의 민족자결주의의 등장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절하했다는 점, ②한일 병합 이래 총독정치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다는 점, ③신교육의 결과 자유사상에 계발된 청년층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3.1운동이 발발했다고 보는데, 그는 특히 총독정치에 대한 반감(②)과 청년층의 등장(③)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지적은 ‘사회주의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계된 것이었다. 그는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신교육을 받은 청년층이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자유사상에 계발된 청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상계의 변화, 즉 ‘사회주의사상’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19년에 제출된 「조선통치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거기서 세계대전으로 각성한 혁신의 기운이 조선사회에 신규전환을 일으켜 구세력인 양반유생에 대해 신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길항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는 ‘사회주의’ 확대를 초래하는 경향으로, 조선통치의 ‘제일난관’으로 지목했다.¹⁹⁵

다음으로 총독정치에 대한 반감은 사찰을 통해 가장 크게 실감한 문제로, 문화정치가 표명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실천은 의심받고

194 「阿部充家意見」,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104-20. 아베에 의견서는 『齋藤實關係文書』에 2통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阿部充家意見」(No.104-20)과 「朝鮮統治意見」(No.104-21)이다. 의견서에 관해서는 작성자 미상의 「意見書」(No.104-16)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姜東鎭(1978), 박찬승(1992)],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이는 초기의 아베가 재조일본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자치를 반대했던 증거로 제시되는데, 문서의 문맥상 이때의 자치는 ‘지방자치’를 의미한다는 점, 같은 해에 제출된 의견서(「조선통치 의견」)에서는 재조일본인의 존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베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阿部充家意見」에 관해서는 기존연구에서 1919년에 작성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1920년 5월로 추정했다. 첫째로 문서 중 ‘2년 만에 경성에 왔다’는 언급이 1918년 6월에 경성일보 사장을 그만둔 지 2년 된 시점을 가리키는 점, 둘째로 1920년 4월 27일의 서한(No.283-8)에서 ‘조선행에 관해서 도쿠토미 사장의 승낙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했다.

195 「朝鮮統治意見」,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104-21.

있다. 이토록 반감이 쌓인 원인은 하급관리를 비롯한 재조일본인들의 조악한 행실에 있는데, 덕분에 날마다 반일의 알맹이가 부화하며 독립운동을 자연 발생시켜준다는 야유까지 받고 있다. 아베는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는데, 재조일본인에 대한 문제의식은 「조선통치의견」에서도 제시된 관점으로, 그는 이를 조선통치의 ‘제이 난관’으로 지목했다.¹⁹⁶

이상 문제점을 지적한 아베는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통치방침의 확립을 강조했다. 다소 변변찮은 제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의 초점이 ‘조선인의 마음’에 두어져 있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심의 수렴 외에 없다. 인심수렴이라고 하면 매우 추상적이라 혹자는 구식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법령을 시행할 때도 인심의 귀향(歸向)을 잘 살피고 그 질고(疾苦)를 자세히 알고, 굉장히 이해심 많은 동정을 가지고 임해야지만 인민은 당국자의 뜻을 양해하고 충심(衷心)으로 만족하고 복종하여 안도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상승(上乘)으로, 여기에 어찌 신구의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총독정치는 유래부터 이 점에 결함이 있었다. …인심수렴은 모든 정치기관을 원활하게 운전하기 위한 기름과 같은 것이다. 만약 당국자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여기에 두고 완미(玩味)한다면, 그것이 지금 전도(全道)에 충만해 있는 총독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재가 되지 않겠는가.¹⁹⁷

위에서 아베는 조선을 통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인심수렴’(人心收攬)에서 찾고 있다. 일견 추상적이고 식상해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상승’, 즉 최상의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통치의 결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인심수렴은 조선통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휘발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는 조선의 민심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원활한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일본의 제국체제를 이루는 근간을 의미했다.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핵심－인심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제국의 체제 안정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진 주장이었다고 이해된다. 3·1운동은 제국체제를 근간으로부터 뒤흔든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총독부에서는 아베의 문제제기에 어떠한 해답을 제시했을까. 1920년 8월 사이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총독부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에

196 「朝鮮統治意見」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104-21.

197 「阿部充家意見」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104-20.

대한 대책』이라는 내부문서가 마련되었다. 전문에서는 먼저 최근 ‘실력양성론’에 기울이고 있는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를 무작정 탄압하는 것보다 ‘제국의 기반이탈(羈絆離脫)과 독립회복(獨立恢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동으로 유지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해 그것이 ‘반일인지 친일인지’ 흑백을 가리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태도를 선명히 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각 사회계층에서 중심적인 인물을 선출하여 단체를 조직하도록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¹⁹⁸ 즉 ‘친일육성론’을 민족운동에 대한 방침으로 설정했는데, 그 핵심은 ‘반일과 친일’의 이분법적 흑백론에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동안 문화정치기의 운동정책에 대해서는 ‘친일육성에 의한 민족분열’이라는 평가가 공유되어왔다.¹⁹⁹

하지만 그것은 실제 통치에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다시 말해 아베가 제기한 ‘인심수렴’과 ‘체제 안정성의 확보’라는 과제에 얼마나 적합했는지 그것이 문제였다. 12월 29일의 서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광수의 안(案)’과 ‘방향전환’을 제의한 아베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오늘날 형세에 있어서는 민원식(閔元植) 및 선우(鮮于)적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 세력을 지배하기는 어렵습니다.²⁰⁰

위에서 ‘선우’란 선우순, 선우갑 형제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당시 이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를 결성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동 회는 내선 양 민족의 공존공영을 목적으로 내세워 일본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였다.²⁰¹ 한편 민원식이 이끌었던 국민협회(國民協會) 역시 병합의 정신을 찬양하는 신일본주의를 내세워 내선의 공존공영을 추구했던 단체였다.²⁰² 요컨대 둘 다 모두 명실상부한 ‘친일파’로서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이

198 「朝鮮民族運動に對する對策」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95-10.

199 이러한 평가는 강동진(1978) 이래 공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위의 내부 문서였다. 하지만 이를 문화정치기 내내 관철된 정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00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283-28.

201 평안도지사 시노다(篠田治策)와 일본재계의 시부사와(澁澤榮一)에게 후원을 받고 1920년 10월에 결성되었는데, 약 3천 명의 회원을 모았다고 한다. 『治安狀況』(1922); 『高等警察要史』(1929.10); 姜東鎭(1978), pp.197, 232~233.

었던 것이다.²⁰³

아베는 1922년 1월 24일의 서한에서도 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친일육성’에 대한 아베의 인식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매번 말씀드린 대로 민원식이나 선우 세력으로는 전도(全道)의 민심을 수렴하는 일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²⁰⁴

아베가 친일육성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들의 운동을 통해서는 ‘조선의 민심을 수렴할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인심수람론’에 기초하여 친일 세력이 조선의 민족운동을 이끌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아베의 ‘전환론’은 총독부의 ‘흑백론’에 맞서는 주장이었다고 이해된다.

이것이 12월 29일의 서한이 갖는 중요한 함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친일육성에 의한 민족분열’을 핵심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과 정반대적인 맥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친일육성의 흑백론’이 조선의 ‘인심수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방향전환을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의 주장은 친일육성을 떠난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출발점을 바로 잡는 일은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아베의 인식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요점이 된다. 20년대 중후반의 아베의 활동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회유정책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자치운동에 대해서도 ‘친일육성에 의한 민족분열’을 의도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친일육성의 흑백론을 부정하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아베의 전환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음으로는 이 점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2) 인심수람과 민족육성의 회색론

202 1920년 1월 결성 이래 단기간에 1만 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대규모로 활동을 펼쳤던 단체로, 교육과 산업 방면의 실력양성운동을 주장하는 한편,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청원하는 이른바 참정권운동을 벌였다. 『治安狀況』(1927.12); 『高等警察要史』(1929.10); 姜東鎭(1978), pp. 197, 231~232.; 松田利彦, 「植民地朝鮮における參政權要求運動団体—「國民協會」について」,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信山社出版, 2004).

203 민원식은 암살대상으로 지목될 정도였으며, 선우순은 사이토와 가장 빈번하게 면회했던 조선인으로 꼽힌다. 「獨立新聞論說」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27卷 朝鮮3(みすず書房, 2004); 姜東鎭(1978), p. 174.

204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0.

12월 29일의 서한에서 아베는 친일 세력을 대신하여 ‘문화운동’을 담당해야 할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서서히 조선인 사이에서 세망(勢望)이나 신용이 있는 인사의 양해를 얻도록 하는 수밖에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²⁰⁵

조선인 사이에서 세망과 신용이 있는 인사야말로 조선의 ‘인심수람’을 가능케 하는 세력으로 ‘문화운동의 주체’에 적합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베가 주목했던 것은 ‘3.1운동의 주도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1921년 6월의 서한에서 확인되는데, 아베는 당시 수감 중에 있던 이들의 가석방을 여러 번 건의하고 있었다.²⁰⁶ 이를 받아들인 사이토는 우선 최남선의 가출옥을 감옥과장에게 지시했으며,²⁰⁷ 이어 12월 22일에는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도 풀려났다.²⁰⁸ 12월 29일의 서한은 일련의 석방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기도 했다.

이후의 아베의 관심은 최린과 최남선 두 사람에게 물리게 되는데, 최린에 주목했던 것은 천도교 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며,²⁰⁹ 석방 직후 아베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²¹⁰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이광수 못지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최남선에 대해서는 주로 잡지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관심을 보였다. 출옥 후 잡지 『동명(東明)』의 발행을 신청한 최남선은 반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학문(秦學文)을 통해 아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정을 들은 아베는 사이토에게 수차례 건의를 올렸다.²¹¹ 최남선의 잡지를 돕는 일을 아베는 이광수 등 신지식층에게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일로 인식했으며, 이는 나아가 ‘사상악화’에 견제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²¹²

²⁰⁵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8.

²⁰⁶ 6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최남선 등의 가석방을 건의한 아베는 그 뒤에 별다른 소식이 없자 9월 6일에 다시 진척을 확인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3, 24, 26.

²⁰⁷ 이형식(2017.4)

²⁰⁸ 최남선은 10월 18일에(「崔南善氏 假出獄」, 『동아일보』 1921년 10월 19일),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은 12월 22일에 풀려났다(「獨立宣言한 七氏假出獄」, 『동아일보』 1921년 12월 23일).

²⁰⁹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8.

²¹⁰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0. 이를 중개한 인물 또한 심우섭이었다.

²¹¹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0~34.

이처럼 아베는 1921년 6월경부터 3.1운동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같은 해 2월에 일어난 ‘민원식 암살 사건’이 한 예인데,²¹³ 이 때문에 중의원에서 처음으로 청원이 채택되는 등 일본 정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당시 동경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아베에게도 ‘친일’에 가해진 ‘민중의 뜻’은 큰 의의를 가졌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우갑의 미국 파견계획에 대해 ‘선용(善用)론’을 펼쳤던 그는 결코 친일육성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²¹⁴ 그러던 것이 6월에는 3.1운동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고, 12월에는 문화운동의 담당주체를 ‘친일파에서 민족주의자’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상에 논리적 근거를 준 것이 바로 ‘이광수의 안’이었다. 12월 29일의 서한에서 언급된 ‘이광수의 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강동진이 이를 수양동맹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서」로 보았다면, 조성구는 「민족개조론」으로 보고 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조론은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영감을 얻어 구성된 논의였던 반면, 수양동맹회는 흥사단의 조선지부로서 결성된 단체였다. 즉 양자는 ‘논리’와 ‘실천’의 관계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구별을 두는 일은 실증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해야 한다.²¹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안’을 개조론과 건

212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2. 결국 『동명』은 1922년 5월에 허가를 받고 9월에 창간되었다. 1923년 1월에는 신문으로 개편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때도 허가가 나지 않자 최남선은 아베에게 상의했고(No.283-44), 4월에는 총독 사이토를 만났다(『阿部充家關係文書』, No.111-12). 아베는 이후에도 요청을 계속했고(No.283-46, 47), 결국 7월에 허가를 받은 『동명』은 1924년 3월에 『시대일보(時代日報)』로 거듭났다. 하지만 곧 경영난에 빠져 결국 최남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아베는 적극 도움을 줬지만,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최남선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된 듯하다. 사이토가 최남선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졌던 것도 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잡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형식(2017.4)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213 참정권 청원운동을 벌이기 위해 동경으로 갔던 민원식이 조선인 청년 양근환(梁謹煥)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214 2월에 일어난 ‘민원식 암살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건의 여파로 민원식의 청원이 중의원에서 처음으로 채택되는 등 그것은 일본정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당시 동경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아베에게도 ‘친일’에 가해진 ‘민중의 뜻’은 큰 의의를 가졌을 것이다. 아베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우갑의 미국 파견 계획을 놓고 선용(善用)론을 주장하는 등 친일육성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17).

의서 양자를 아우르는 내용이었다고 이해하는데, 특히 후자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이 ‘책임자의 자격’이라 이름 지어진 부속서의 내용이다.

1. 조선인 사이, 특히 조선청년 사이에서 명망이 있는 자
2. 조선인에게 친일파로 지목되지 않을 것.
3. 교육에 관하여 천견(淺見)을 갖고 사무적 수완이 있을 것.
4. 일선동화를 제창하지는 않지만 급진적인 사상 또한 없어야 하며, 교육과 산업의 부역을 유일한 조선인 구제책으로 믿는 자.²¹⁶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인 사이에서 명망이 있는 자’라는 첫 번째 조건일 것이다. 이것이 앞서 문화운동의 담당주체를 ‘조선인 사이에서 세망과 신용이 있는 인사’로 지목했던 아베의 인식과 연동되고 있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친일파’로 지목되는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렇다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는 인물이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부연되고 있었다. 요컨대 ‘친일파’도 ‘사회주의자’도 아니면서 조선인 사이에 ‘명망이 있는 자’, 이것이 건의서에 제시된 책임자의 자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아베는 일찍부터 ‘사회주의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친일파에 대해서도 전환론을 통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건의서에 제시된 책임자란 그러한 아베의 인식, 즉 그가 ‘문화운동의 담당주체’로 제시했던 인물상과 정확히 겹치는 것이었다. 이 역시 이광수와와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정치 1년 차에 총독부에서 마련한 방침은 ‘친일/반일의 흑백론’에 기초한 ‘친일육성정책’이었다. 아베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친일 세력’을 대신하여 ‘문화운동의 주체’가 될 세력으로 3.1운동의 주도자들, 즉 ‘민족주의세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베는 민족주의자를 두고 종종 ‘회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²¹⁷ 이 역시 흑백론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된다. 그에게 문화운동을 담당할 주체란 확실히 ‘반일분자’(회색)도 ‘친일분자’(백색)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베의 전환론은 ‘친일육성의 흑백론’의

²¹⁵ 姜東鎭(1978); 趙聖九, 『朝鮮民族運動と副島道正』(研文出版, 1998). 또한 건의서에 관한 연구로,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사이토 문서와 이광수의 「건의서」」, 『근대서지』 8호(2013.12).

²¹⁶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2, No.2166-1.

²¹⁷ 예를 들어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0, 79.

반대편, 이를테면 ‘민족육성의 회색론’을 주장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점은 기존의 연구시각에 대해 일정한 수정을 요구한다.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통치자의 의도는 흔히 ‘친일육성과 민족분열’이라는 인식틀 속에서 해석되었는데, 아베의 인식은 그것과 정반대적인 상황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더불어 물어야 할 것은 그가 ‘민족육성’을 주장했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이다. 아베의 ‘인심수렴론’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아베가 친일 세력을 부정하고 민족주의 세력에 주목했던 기준은 바로 조선의 인심을 수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었다. 3.1운동의 충격으로 흔들린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민통치에 대한 ‘합의조달’이 필수적이다. 아베의 ‘인심수렴’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을 나타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3.1운동 이후 통치자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이전 통치자의 인식에서 조선의 민중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한 인식이 달라진 원인은 무엇보다 3.1운동으로 분출된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고, 이에 비로소 조선 민중에 대한 대응에는 일방적인 ‘탄압’이 아니라 ‘교섭’의 측면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 통치자의 인식 속에는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마음, 그 ‘주체성’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제국 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인식변화는 주체성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독립(=주권국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의 출현을 의미했다. II장에서 보았듯이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속에서 조선의 주체성은 인정(혹은 관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실제 통치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지배의 범위 안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비주권적’ 주체성을 의미했던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또한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제국의 기반이탈과 독립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미의 문화운동’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발상은 조선의 민족운동을 ‘독립=주권국가적 공간’이 아니라 ‘합법적 공간’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이때 ‘합법성’은 ‘비주권성’과 연동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통치자들이 조선의 민족

운동을 ‘합법적 문화운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아베는 그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문화운동의 주체를 친일 세력에서 민족주의 세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인심수람(=합의조달)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국의 체제 안정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이처럼 통치자의 목표가 ‘합법적 문화운동’에 있었다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또한 ‘합법적 운동’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상해로부터 귀국할 당시에 이미 ‘식민지’에서의 운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방안(개조론·건의서)이 아베를 통해 통치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던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다만 통치자의 의도가 ‘합법적 운동’을 통해 조선의 독립요구를 ‘비주권적 범위’로 한정하고 이로써 제국체제의 안정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면, 이광수의 의도는 ‘합법적인 범위’로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민족운동의 ‘세력화=주체화’를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 경우의 주체는 ‘비주권적’ 성격을 조건 지어진다는 점에서 통치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의도와 완전히 부합된 논의도 아니었다. 양자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동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베와 이광수의 만남 또한 이처럼 서로 의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민족개조론의 함의

이상의 논점을 확인하면서 이하에서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에 대한 연구가 방대한 만큼 개조론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방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어왔다. 여기서는 이를 모두 포괄한 논의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민족운동을 둘러싼 담론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동화와 문명화 사이에서

먼저 첫 번째는 ‘동화’와 ‘문명화’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기 맥락화’의 측면이다. II장에서 보았듯이 3·1운동 이후 ‘동화주의 비판’은 문화정치의 콘텍스트를 널리 규정하게 되었는데, 개조론 역시 그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

었다. 이는 르봉의 수용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광수의 르봉 수용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본래 상충되는 두 가지 논리, 즉 ‘동화의 불가능성’과 ‘개조의 가능성’을 양립시킨 데 있다. 이 대립은 ‘동화’와 ‘문명화’ 사이에서 고뇌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자기 맥락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¹⁸

개조론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광수는 『개벽』에 노아(魯啞)라는 필명으로 글을 하나 게재했는데, 그것은 르봉의 『민족진화의 심리학적 법칙』(1894)을 일부 번역한 글이었다.²¹⁹ 르봉은 인간이성의 보편성을 믿는 계몽주의적 평등사상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종족이 갖는 ‘심리적 성격’(caractères psychologiques)을 밝혀, 그것을 종족의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낸 ‘불변한 요소’로 강조했다. 이광수는 이러한 르봉의 주장을 잘 읽어내고 있었다. “언어, 제도, 사상, 신앙, 미술, 문학 등 무릇 일국의 문명을 조직하는 각종 요소는 이를 지어낸 민족성의 외적 표현이라.”²²⁰ 이는 개조론에 인용된 르봉의 한 구

218 개조론이 르봉의 민족심리학을 이론적 근거로 원용했던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는데, 지금까지 ‘동화주의 비판’의 맥락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김윤식(1999)은 일찍이 르봉과 이광수의 사상을 비교할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구체적 연구 성과를 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먼저 엘리 최(2008.1)는 르봉의 영향을 개조사상과의 관계에 유의하여 분석하였다면, 이재선(2010)은 개조사상의 수용을 개념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한편 최주한(2011.4)은 르봉의 수용을 사회진화론적 인종주의의 측면에서 해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조의 가능/불가능성을 둘러싼 차이를 지적했지만, 그 이상의 분석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한 하타노(2013)는 일본의 르봉 수용과 함께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광수의 르봉 수용에 대해서는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김윤식(1999), pp. 32~45; 엘리 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세계적 흐름으로서의 개조론’의 문맥에서의 구스타브 르봉의 위상과 관련하여」, 『문학사상』 2008년 1월호; 이재선, 「『민족개조론』의 읽기와 반복, 다시 읽기-러셀, 르봉과 관련하여 다시 보기」,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서강대출판부, 2010); 최주한, 「민족개조론과 相愛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 (2011.4); 波田野節子, 「李光洙とギュスターヴ・ル・ボン」, 『韓國近代文學研究』 第4章(白帝社, 2013).

219 원본의 제목은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이다. 이광수가 번역의 저본으로 했던 책은 일본에서 출판된 『民族心理及群衆心理 全』(대일본문명협회, 1918)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번역은 제4편 ‘종족(種族)의 심리적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수록된 제1장 ‘국민의 생활에서 사상의 세력’이다. 마지막 두 페이지 가량이 생략되기는 했지만, 번역은 원문에 충실했다. (譯)魯啞, 「國民生活에 대한 思想의 勢力」(르.본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 『개벽』 제22호, 1922년 4월[『이광수전집』 10권(1976), pp. 177~182에서 재인용]; 波田野節子(2013), pp. 59~69.

220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 125. 이 인용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만, 개조론에서 르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짝막한 한 문장뿐이다(물론 그 이론이 논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 1921년 8월에 발행된 『개벽』 제14호에는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이라는 이광수(魯啞)의 글이 실렸는데, 여기서는 훨씬 길게 두 단락에 걸쳐 르봉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과 앞서 지적한 1922년 4월의 번역 글(「國民生活에 대한 思想의 勢力」)을 볼 때 르봉에 대한 이광수의 이해가 굉장히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절인데, 그가 참조했던 일어판에서는 “언어, 제도, 사상, 신앙, 미술, 문학 등 모두 일국의 문명을 조직하는 각종 요소는 이들을 만들어낸 국민혼의 외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로 번역되어 있었다.²²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어판에서 ‘국민혼’(國民魂)으로 번역되었던 말을 이광수는 ‘민족성’(民族性)으로 고쳐 번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원문의 ‘사람들의 영혼(l'âme des hommes)’²²²을 번역한 말로 ‘종족이 갖는 심리적 성격’과 매칭되는 말이었다. 요컨대 이광수에게 ‘민족성’이란 ‘종족의 심리적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민족 개조라 함은 민족성 개조라는 뜻”²²³이었다고 한다면, ‘민족개조론’이란 바로 ‘종족의 심리적 성격’의 개조를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논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르봉의 이론은 분명히 ‘종족의 심리적 성격’, 다시 말해 ‘민족성’을 밝히는 논의였지만, 동시에 그 ‘불변성’을 논증하기 위해 제출된 이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르봉의 이론은 ‘민족성’을 밝히되 그 ‘개조’를 주장하는 논의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르봉은 이성의 평등성에 대한 믿음에서 ‘문명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비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종족의 심리적 성격의 ‘불변성’을 논증하려고 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이론은 당시의 식민통치담론에서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도고 미노루(東郷實)의 식민정책론이다. 대만총독부의 고급관료였던 그는 르봉의 이론을 저본으로 ‘분화정책’을 주장했다. 그것은 식민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자치적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 즉 ‘자치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말로, 내지연장주의적 동화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²²⁴ 개조론 역시 르봉의 이론이 동화주의 비판에서 자치주의 정

²²¹ 이 구절은 ‘제2편 종족의 심리적 성격은 어떻게 그 문명의 각 요소 상에 발현하는가’에 수록된 ‘제1장 국민혼의 외적 발현으로서 본 일국 문명의 각 요소’에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온다. ギュスターヴ・ル・ボン, 『民族發展の心理』(大日本文明協會, 1910), pp. 65~66.

²²²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élix Alcan, 1895). 참고로 르봉은 ‘homme’, 그리고 ‘peuple’나 ‘race’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았다. 이 점은 1900년에 영문판을 번역한 쓰카하라 세이지(塚原政次)도, 또 개념적 분석을 시도한 이재선도 지적하고 있다. 塚原政次, 『心理學書解説 ルボン氏民族心理學』(育成會, 1900), p. 102.; 이재선(2010).

²²³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 124.

책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이광수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정책을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모국화시키는 데 힘쓰는 전자와 달리 식민지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후자의 경우를 보다 월등한 정책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족개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데, 영국의 식민정책이 성공적인 요인도 그 월등한 ‘민족성’에 있다고 강조되었다. 앵글로색슨족은 ‘자유’를 근본도덕으로 갖는다. 여기서 ‘근본도덕’이란 ‘심리적인 성격’의 다른 표현으로,²²⁵ 그는 자유를 영국의 ‘민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르봉의 인용은 바로 여기에 삽입되었는데, ‘식민정책’ 또한 일국의 문명을 조직하는 요소로 ‘민족성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개조론은 이러한 논리를 역으로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즉 월등한 민족성이 월등한 외적 표현을 만든다면, 조선의 문명이 쇠퇴한 원인 또한 그 민족성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광수가 르봉(그리고 도고)과 달랐던 것은 그러한 민족성의 ‘개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족성을 개조한다면 그 외적 표현 또한 개선될 수 있다. ‘문명화’를 추구하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르봉이 주장하는 ‘불변성’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르봉의 불변성은 ‘동화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동화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문명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식민지 지식인만의 모순적인 과제가 성립한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이를 실천하면서 독특한 ‘자기 맥락화’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광수는 개조론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민족성의 개조는 가능한가”. 만약 민족성이 불변하다면 “우리는 일종의 실망에 빠지게” 된다. “민족성의 개조란 불가능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이다.²²⁶ 르봉의

224 東郷實, 『植民政策と民族心理』(岩波書店, 1925); 水谷智, 「〈比較する主体〉としての植民地帝國: 越境する英領インド教育政策批判と東郷實」, 『社會科學』(同志社大學) 85号(2009).

225 르봉은 ‘심리적 성격’을 ‘심리적 구조’(formation mentale), ‘심리적 조직’(constitution mentale) 등 다양한 용어로 대체했다. ‘근본 도덕’ 또한 그 중의 하나로, 원문의 ‘d’idées fondamentales’를 일어판에서 ‘근본적 사상’으로 번역했던 것을 다시 ‘근본 도덕’으로 고쳐 번역했던 것이다.

226 이 질문이 중편의 두 번째 제목이었다.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p. 127~128.

‘불변성’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서 수용되었을 당시에 도 있었다. 그것이 일본의 ‘문명화’를 부정하는 논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 문제는 비판으로만 끝났는데, 거기에는 ‘동화의 불가능성’을 논증해야 할 맥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문명화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데만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 르봉의 오류를 지적하고 ‘민족성의 변화 가능성’을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다.²²⁷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경우 단순한 반박은 ‘동화의 불가능성’까지도 부정해버린다. 여기에 이광수의 고뇌가 있었는데, 결국 그는 르봉의 이론을 살짝 비틀어 메꾸놓는 변법을 수행했다. 먼저 그는 르봉이 민족성에 ‘근본적’과 ‘부속적’의 구별을 설정한 점에 주목하는데, ‘불변적’인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가변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구별을 이용하여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선민족은 “근본적인 성격은 좋지마는 부속적인 성격이 좋지 못하는 경우”로, 자신이 말하는 개조란 “르봉 박사의 이른바 부속적인 성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족성의 개조는 가능할뿐더러 용이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²²⁸

르봉은 분명히 민족성에 근본적/부속적 구별을 설정했지만, 그 의도는 결코 ‘가변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전혀 반대로, 예컨대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나 프랑스혁명 이후 민족성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일어난 변화일 뿐 속은 전혀 변함없다는 점, 즉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별이었다.²²⁹ 이를 ‘문명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비판했던 쓰카하라는 근본적 성격까지도 ‘가변성’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면,²³⁰ ‘동화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수용했던 도고는 르봉의 주장대로 ‘불변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²³¹ 하지만 양자를 동시에 성립시켜야 했던 이광수에게는 완전한 반박도 완전한 수용도 아닌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2) 단체의 사회성과 비정치성

제국과 식민지는 늘 맞닿아 있다. 양자는 늘 상관적인 역학 속에서 담

²²⁷ 르봉에 대한 반박은 塚原政次(1900), pp. 100~112. 일본에서의 쟁점은 하타노(2013), pp. 59~69.

²²⁸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p. 127~132.

²²⁹ 『民族發展の心理』(1910), pp. 24~31.

²³⁰ 塚原政次(1900), pp. 100~112.

²³¹ 東郷實(1925), pp. 68~71.

론을 만들어내는데,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독특한 ‘자기 맥락화’를 수행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문명화의 가능성’과 ‘동화의 불가능성’을 양립시켜야 했던 이유는 다음이 아니라 그의 의도가 ‘주체형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측면, 즉 ‘단체’의 역할이었다.

이광수는 조선민족의 부속적 성격으로서 “허위와 나타(懶惰)와 비사회성과, 및 경제적 쇠약과 과학의 부진” 등을 들고,²³² 이를 개조하기 위해 “덕·체·지의 삼육(三育)과 부의 축적, 사회봉사심의 함양”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봉사심이란 “개인보다 단체를, 즉 사(私)보다 공(公)을 중히 여겨 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명으로” 하는 마음으로, ‘사회성’의 획득이 단체 구성의 핵심적인 가치로 간주되었던 것이다.²³³ 사회성의 획득과 사회적 단체의 형성은 조선에서 사회담론이 나타난 이래의 의제로, 사회담론의 맥락은 민족개조론 속에도 계승되어 재현되어 있었다. 이광수의 사회담론을 분석한 김현주에 따르면, 1920년대 들어 ‘사회’라는 말의 빈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를 대체한 개념이 바로 ‘민족’이었다. 개조론이 발표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회개조’를 쓰지 않고 ‘민족개조’를 사용했던 것 또한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사회’를 대신하게 된 ‘민족’은 ‘단체’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되기도 했다.²³⁴

‘사회적 단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은 “단결의 정신”²³⁵이라고도 표현되었는데, 이는 개조를 ‘민족’의 차원에서 승격시켜주는 매개로서 중요했다. 소크라테스의 실패라 불렸던 것처럼²³⁶ 아무리 개개인이 개조를 자각하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로 매개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족개조’는 실패로 끝난다. 개인의 자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체를 통해 개조의 사상이 민중화되어야 하는데, 민중의 사상이 된 개조는 그 다음으로 이성적 영역에서 감성적 영역으로 승화된다. 이로써 민족개조는 완성되는 것이었다.²³⁷

²³²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 131.

²³³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 137.

²³⁴ 김현주(2013), pp. 391~392.

²³⁵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 142.

²³⁶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p. 117~119.

이러한 단체의 구체적 사례가 바로 1922년 2월에 결성된 ‘수양동맹회’였다.²³⁸ 이를 통해 개조론이 추구한 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측면, 즉 ‘비정치성’이었다. 「규약」에 따르면 수양동맹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을 통해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부과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시사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³⁹ 요컨대 수양동맹회에 대해서는 ‘비정치적’인 성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된 측면이었다.

世界思潮의 影響을 입어 近來 朝鮮思想界의 民族이나 社會에 대한 思想分類의 範疇가 흔히 民主主義 對 帝國主義, 資本主義 對 勞農主義의 二雙에 分한 듯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民族改造主義는 이 範疇中에 어느 것에 屬한 것도 아니요, 또 어느 것을 特히 排斥하는 것도 아니외다. 이 改造主義者中에는 帝國主義者, 資本主義者도 있을 수 있는 同時에 民主主義者, 勞農主義者도 있을 수 있는 것이외다. 이런 것은 政治組織에 관한 것이니, 改造主義에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이외다. …改造主義는 政治에 對하여 아무 干涉이 없습니다. 이 主義者中에는 政治家도 나리다. 改造主義者로는 同志인 者로도 政治的 意見으로는 몇 가지로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改造主義의 團體自身은 永遠히 政治에 參與할 것이 아니외다.²⁴⁰

당시의 조선 사상계는 ‘민주주의 대 제국주의’ 혹은 ‘자본주의 대 노동주의’로 분열되고 있었지만, ‘민족개조주의’는 그 중 어느 것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또한 배척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주의들은 모두 ‘정치조직에 관한 것’으로, 이와 달리 개조주의는 정치에 상관하지도 간섭하지도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민족개조론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주의’를 고수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개조론 곳곳에 나타난다. 예컨대 “동화를 하거나 자치를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또 세계적 의의를 가진 대혁명을 하거나” 무엇을

²³⁷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134. 단체를 이끄는 ‘선각자’ 혹은 ‘중신인물’의 역할도 강조되었는데, 이는 귀국 후 처음으로 발표한 「中樞階級과 社會」(『개벽』 1921년 7월호)의 내용과 연계된다. 여기서 ‘중추 계급’이란 양반이 몰락한 조선에서 상실된 사회를 다시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했다.

²³⁸ 수양동맹회와 그 후신인 수양동우회(1926)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가 있다. 수양동맹회의 결성에서도 아베는 총독부와 이광수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줬다. 河かおる, 「植民地朝鮮における同友會-植民地下ナショナリズム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6輯(1998).

²³⁹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2, No.2166-1.

²⁴⁰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p.136~137.

하든 조선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문명한 생활을 경영할 만한 실력을 가지게 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²⁴¹ 혹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또는 독립주의, 자치주의, 동화주의, 어느 것에나 속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색채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주장에서도 그 ‘비정치성’은 거듭 강조되었다²⁴²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논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민족개조론은 문화정치의 콘텍스트를 흐르고 있던 ‘동화주의 비판’의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동화의 불가능성’과 ‘개조의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민족의 ‘주체화’를 모색했던 논리로, 그 실천을 맡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성’의 강조와 동시에 ‘비정치성’이 부과했다. 둘째로 이것이 상해에서 돌아온 이광수가 조선에 제시한 ‘민족운동’의 모습이었다면, ‘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운동이란 바로 ‘합법적인 문화운동’을 의미했다.

2. 연정회와 민족적 경륜

(1)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와 연정회 조직계획

주지하다시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당시 호응을 얻기보다도 물의를 일으켜 여러 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비교적 이광수와 입장이 가까웠던 최원순도 바로 비판의 글을 게재했는데, 특히 조선의 민족성을 열악하다고 표현했던 점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²⁴³ 한편 사회주의 논자들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지적도 있었지만, 특히 3.1 운동을 야만 민족의 자각 없는 변화로 치부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²⁴⁴ 대

241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132.

242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1976), p.147.

243 최원순, 「李春園에게 問하노라」, 『동아일보』 1922년 6월 3~4일. 물론 개조론의 요점은 민족성을 비하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조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데 있었다. 최원순도 이광수가 르봉의 이론을 토대로 주장한 점을 인식하고 열악한 민족성을 근본적 성격으로 파악한 것처럼 이해하고 비판했다.

244 신상우,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讀하고 그 一端을 論함」, 『신생활』 1922년 6월호; 신일용,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評함」, 『신생활』 1922년 7월호.

체로 논자의 사상적 입장에 상관없이 조선민족에 대한 평가절하적 인식이 초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조론에 대한 반응을 결코 좋지는 않았고 심지어 이를 계재한 개벽사를 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문화운동’은 절정기를 이루었는데, ‘비정치적’인 분야, 즉 ‘교육’과 ‘산업’을 중심으로 민립대학기성준비회(1922.11)나 조선물산장려회(1923.1) 등과 같은 대표적 단체들이 만들어졌다.²⁴⁵ 하지만 이러한 운동도 1923년 가을쯤에는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라는 상황이 있었다. 그 조짐은 1922년 1월의 ‘김윤식 사회장’ 문제를 계기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조선의 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열된 첫 계기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사회주의 청년운동’ 내부의 또 다른 분열이 내재되고 있었다.

김윤식이 사망하자 바로 24일에 ‘사회장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동아일보의 장덕수와 오상근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 간부를 맡고 있었다.²⁴⁶ 한편 27일에는 ‘사회장반대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때 선두에 섰던 김사국 역시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 간부를 지내고 있었다. 요컨대 사회장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 내부에 ‘장덕수파’와 ‘김사국파’의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를 결정지은 것이 4월에 열린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회 정기대회였다. 대회에서 김사국파는 사기공산당 사건²⁴⁷을 이유로 간부의 개편을 제의

²⁴⁵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경성제대 개설계획(1922.1)에 대하여 설립되었는데, 기금 모집 계획을 위주로 지회설치와 강연회를 추진했고, 정식 결성 후 회원이 2천명까지 확대되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조선청년회연합회와 박영효의 민우회를 2대 세력으로 했으며, 이에 조만식의 조선물산장려회와 이광수·염태진(廉台鎭)의 자작회 등 20여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결성되었다. 「獨立運動終息後に於ける民族運動の梗概」(1927.1),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95-16[이하 「梗概」으로 통일]; 『治安狀況』(1927.12)(1929.5)(1930.10);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고려대학교출판부, 1970), pp. 15~16;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 27집(1992)

²⁴⁶ 사회장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박종린,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박사논문, 2006, pp. 43~44. 서울청년회 및 조선청년회연합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김준엽·김창순(1970), pp. 44, 107~109

²⁴⁷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활동자금이 상해 고려공산당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를 조선노동공제회와 조선청년연합회의 일부 간부들이 남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개된 사건을 말한다. 이때 장덕수, 오상근, 김명식도 관련인물로 거론되었다.

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자 서울청년회 자체를 연합회에서 탈퇴시켰다. 이로 인해 장덕수파도 연합회에서 자동 탈퇴되었는데, 김사국파는 그 후에 이들을 서울청년회에서 제명시켰다. 이로써 실권을 장악한 김사국파는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서울파’를 형성했으며 이듬해에는 추종단체와 함께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할 만큼 세력을 확대시켰다.²⁴⁸

한편 연합회 측에서는 정노식을 중심으로 간부가 재조직되었는데, 새로운 간부는 ‘문화운동과의 제휴노선’을 선택했다. 예컨대 정노식은 조선물산장려회의 임원이 된 동시에 민립대학기성회에서도 중앙멤버로 활동했는데, 이러한 노선은 제3회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물산장려회에 대한 참여는 정노식 개인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²⁴⁹

이처럼 연합회와 문화운동 단체들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 서울청년회가 이끄는 서울파는 최대의 반대 세력이었다. 앞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했던 신일용도 서울파계열의 사회주의자였으며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했던 논자들도 대부분이 서울파 인물이었다.²⁵⁰ 이들과의 논쟁은 문화운동이 전개되는 내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가 1923년 가을쯤에는 운동 자체가 침체되고 만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맞이했는데, 1923년 여름에 재동경 북성회(北星會) 세력이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다.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단체였던 흑도회(黑濤會)의 분열로 탄생한 북성회는 8월에 조선에서 실시한 순회강연을 계기로 세력부식을 본격화했고, 11월에는

²⁴⁸ 제3회 정기대회에 대해서는 김준엽·김창순(1970), pp.109~114.;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서울파 사회주의그룹의 노선과 활』(선인, 2006), p.127. 한편 전조선청년당대회는 서울청년회와 함께 연합회를 함께 탈퇴했던 18개의 단체를 포함한 94개의 추종단체와 200명을 넘는 참가인원을 모아 1923년 3월 24일에 개최되었다.

²⁴⁹ 김준엽·김창순(1970), pp. 111~112. 건의안은 교육에 관하여 민립대학의 실현을, 산업에 관하여 “조선인의 제조품을 사용하여 조선인의 상가를 통하여 매매할 것”을 실천사항으로 내세웠다. 한편 물산장려회에는 정노식뿐만 아니라 최순탁, 김철수, 고용환, 이시완 등 많은 간부들이 이사직을 차지했다.

²⁵⁰ 이성태, 주종건, 장적파, 박형병 등이 대표적 논자이다. 이들은 특히 ‘무산자적 생산동맹론’에 반대했는데, 그것은 민중의 국산 소비를 바탕으로 공업 생산력을 키워나간다는 경제적 실력양성론이었다. 이를 중산계급과 소수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윤해동(1992), pp. 345~350.

마침내 조선에서 북풍회(北風會)를 결성했다.²⁵¹ 이리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운동 내부에는 토착 세력인 ‘서울파’와 외래 세력인 ‘북풍파’라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생겨났지만, 사회주의 자체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력 확대에 다름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착수된 것이 ‘연정회(研政會) 조직계획’이었다. 그것은 문화운동이 주춤해진 1923년 가을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듯 발표된 것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년 1월 2~6일)이었다. 이광수는 이 논설로 또다시 조선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민족운동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는 우선 연정회 조직계획부터 간략하게 알아본다.

먼저 관헌자료에서는 연정회 조직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923년 가을부터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송진우, 천도교의 최린, 그리고 조선일보의 신석우 등이 김성수의 저택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졌고 ‘유력한 민족단체의 조직’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다가 이듬해 1월 중순, 최원순(동아일보), 이종린(천도교), 안재홍(조선일보), 박승빈(변호사), 이승훈(기독교), 서상일(대구), 조만식(평양) 등 16~7명을 모아 대규모 회합을 가졌는데, 거기서 연정회 조직계획에 대해 의논했지만, 이때는 이미 이광수의 논설이 발표된 이후로 세간의 반발을 우려하여 주도에 나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⁵²

한편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1923년 12월말 김성수, 송진우, 최린, 안재홍, 이승훈, 조만식, 김동원 등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망년회도 할 겸 명월관(明月館)에서 모임을 가졌다. 거기서 당면의 문제와 장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중 몇 명에게 추후 연구를 계속할 것을 부탁하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 후 두 차례쯤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다.²⁵³

마지막으로 김성수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연정회 계획은 문화운동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제기되었다. 먼저 김성수가 송진우에게 제안했고 최린의 찬동을 얻는 형태로 일이 시작되었으며, 1923년 하순에 김성

²⁵¹ 『治安狀況』(1923)(1927.12)(1929.5)(1929.10)(1930.10); 김준엽·김창순(1970), pp. 38~41.

²⁵² 「梗概」(1927.1)

²⁵³ 「兩問題의 真相」,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

수의 저택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김성수·송진우·최원순(동아일보), 신석우·안재홍(조선일보), 최린·이종린(천도교), 이승훈(기독교), 박승빈(변호사), 조만식·김동원(평양), 서상일(대구) 등 16~7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수가 기부한 2만원을 포함해 총 10만원의 자금이 모아졌고, 이로써 조직결성을 합의하고 명칭을 연정회로 정했다는 것이다.²⁵⁴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합법적 문화운동이 주춤해지던 즈음 새로운 민족단체의 조직을 결심한 김성수와 송진우는 1923년 가을부터 최린, 신석우와 함께 수차례 소규모 모임을 가졌고, 12월 말에는 망년회 명목으로 대규모 회합을 실시했다. 이때 계획의 추진멤버들이 선정되고 연정회라는 명칭이 정해졌다. 추진멤버들은 그 뒤에 몇 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이광수의 논설이 물의를 일으킨 여파로 결국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계획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연정회라는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정회를 ‘자치운동을 목표로 한 단체’로 이해했다.²⁵⁵ 하지만 그것은 이때의 계획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1926년 가을에 추진된 연정회 2차 계획과 신간회 결성까지의 상황을 소급시킨 평가에 불과하다. 이에 그동안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순 지적에 그치거나²⁵⁶ 자치운동의 맹아적 단체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지는 못했다.²⁵⁷ 한편 최근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시도한 윤덕영은 연정회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정치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치운동’이라는 측면보다는 ‘합법적 정치운동’이라는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 운동’이라는 지적 자체는 전에도 있었지만, 윤덕영의 연구는 이를 구체적인 논설분석에 기초하여 주장했다는 점, 자치운동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논의를 제공했다.²⁵⁸

²⁵⁴ 『仁村 金性洙傳』(인촌기념회, 1976), pp. 260~268.

²⁵⁵ 예컨대 姜東鎭(1978); 박찬승(1992).

²⁵⁶ 並木眞人(1989.3), p. 103.

²⁵⁷ 김동명(2006), pp. 205~218

²⁵⁸ 윤덕영,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호(2010.10).

먼저 그동안 소급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연정회 계획을 ‘자치운동’이라는 틀 속에서만 해석해온 경향에 대해서는 본고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정회 자체를 자치운동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덕영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²⁵⁹ 문제는 ‘자치운동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공간에서의 정치운동’이라는 바로 그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더 파고들기 위해 「민족적 경륜」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민족적 경륜의 함의: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

「민족적 경륜」(이하 「경륜」으로 약칭)은 연정회 조직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24년 1월 2~6일에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다. 이를 집필한 이광수는 전년 5월부터 논설위원을 지내고 있었는데, 따라서 「경륜」은 이광수 개인의 글이라기보다는 동아일보,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던 연정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글로서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동아일보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으며 연정회 조직계획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이광수는 퇴사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때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이 바로 ‘정치적 결사’에 대한 주장이었다.

「경륜」은 개조론에 비하면 그 분량도 구성도 훨씬 간결한 글이었다.²⁶⁰ 정치, 산업, 교육 분야에서 각각 결사를 조직할 필요성과, 그 결사들 간의 관

259 그는 자치운동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각파유지연맹과 동아일보 사이에서 일어난 식도원 사건을 근거로, 당시 동아일보가 친일세력 및 총독부와 대척관계에 있었다는 점, 둘째 동아일보는 자치를 주장한 내정독립기성회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친일파도 자치와도 대립적인 지점에 동아일보와 연정회의 입지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정독립기성회를 조직한 이회간 등은 각파유지동맹의 간부이기도 했으며, 그들이 주장한 자치의 내용도 천황의 비호 아래 총독부를 철폐하고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내정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총독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당했는데, 이를 흔히 말하는 ‘자치운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治安狀況』(1922); 「同光會の行動に關する件」,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94-13; 「同光會支部の狀況に關する件」,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94-15; 「同光會の朝鮮に於ける行動に關する件」,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94-16.

260 「경륜」의 세부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민족 백년대계의 요(要), 2. 정치적 결사와 운동, 3. 산업적 결사와 운동, 4. 교육적 결사와 운동, 5. 교육, 산업, 정치의 관계. 이광수, 「民族的經綸」, 『동아일보』 1924년 1월 2~6일[『이광수전집』 10권(1976), pp.183~188에서 재인용]

계에 대해 논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때 단연 돋보이는 변화는 ‘정치’를 하나의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개조론의 단계에서 운동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적’인 성격을 고수해야 했다. 그런데 「경륜」에 이르러서는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정치적’인 분야에서 ‘결사(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경륜」은 확실히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한 담론의 개시를 의미했던 것이다.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본래 정치란 자유사상이 보급될수록 민중화되기 때문에, 자유사상의 보급은 자연히 민중에게 정치적 생활을 영위하게 만든다. 조선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유사상은 급격하게 침투했다. 그런데 조선민족에게는 여전히 정치적 생활이 없는데, 그 요인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로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이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해왔다. 둘째로 조선인 또한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부정해왔다. “참정권 자치권의 운동”은 물론 “일본정부를 대수(對手)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부정하는 “강렬한 절개의식(節介意識)”으로, 오로지 “일본을 적국시하는 운동”만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정치생활은 사라지고 정치운동 또한 “해외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方法으로나 朝鮮內에서 全民族的인 政治運動을 하도록 新生面을 打開할 必要가 있다. 우리는 朝鮮內에서 許하는 範圍內에서 一大政治的 結社를 組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이다. 그런데 그 理由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들려고 한다. (一) 우리 當面の 民族的 權利와 利益을 擁護하기 爲하여, (二) 朝鮮人을 政治的으로 訓練하고 團結하여 民族的 政治的 中心세력을 作하여써 將來 久遠한 政治運動의 基礎를 成하기 爲하여.²⁶¹

이미 상해를 떠날 때부터 ‘주권이 없는 식민지조선’에서 전개되는 운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이광수에게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라는 문구는 별다른 뜻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운동은 이미 ‘합법적 문화운동’으로서 실천되고 있었다. 다만 새로웠던 것은 문화운동에 부과했던 ‘비정치적’이라는 원칙을 철회하고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합법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었다. 이를테면 ‘합법적 문화운

261 「民族的經綸」, 『이광수전집』 10권(1976), p.184.

동의 정치화'를 주장했다는 점이 「경륜」이 조선의 민족운동에 던진 최대의 함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정회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성격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모색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추구했던 '정치성'의 내용일 것이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 외의 정치운동은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운동은 일체 금지되었던 조선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더구나 '합법적 운동'으로서 전개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정치성'을 달리 하겠다는 선언인데, 「경륜」이 일으킨 논란도 정치적 결사의 정체, 즉 그 '정치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륜」이 추구한 정치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할 이유로 제시된 두 가지 논점, 즉 '당면의 민족적 권리의 옹호'와 '정치적 중심 세력의 작성'을 실마리로 이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중심세력담론의 주체: 민우회와 연정회

먼저 '정치적 중심 세력'이라는 논점부터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도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었는데, 특히 중심세력담론이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1922년 1월로 보는 입장과 7월로 보는 입장으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⁶² 이에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라는 맥락을 중시하는 본고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비정치주의'를 제창한 개조론이 발표된 시점(5월)을 고려한다면, 그 이전(1월)이나 그 직후(7월)에 이미 '정치적' 운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

²⁶² 박찬승(1992)은 1922년 7월 6일의 「정치와 중심세력」(『동아일보』)을 자치운동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최초의 글로 보고, 이것이 1923년 1월의 「조선의 특이한 처지와 이에 대한 특이한 구체책」(『개벽』)으로 이어졌다가, 11월 2일의 「중심세력 작성의 필요」(『동아일보』)에서 본격화되고 「경륜」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김동명(2006) 역시 7월의 「정치와 중심세력」을 「경륜」으로 이르는 중심세력담론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윤덕영(2010.10)은 이미 1922년 1월부터 정치운동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었던 점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세력담론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7월의 「정치와 중심세력」에서 외양을 갖추었다가 1923년 4월의 「곳 해야 할 민족적 중심세력의 작성」(『개벽』)에서 구체화되고 경륜으로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으로 수궁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중심세력담론의 ‘주체’에 주목함으로써 그 ‘정치성’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1922년 1월에는 확실히 일종의 정치운동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논의들이 어떤 ‘단체’와 연계되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민우회’(民友會)라는 존재가 떠오르게 된다.

민우회가 결성된 것은 1922년 6월의 일이었지만, 그 제안은 이미 1월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1월 4일 박영효는 신년회 자리에서 새로운 단체의 조직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6월에 이르러 민우회로 구현되었던 것이다.²⁶³ 민우회는 그 임원의 1/3 가량이 조선경제회(朝鮮經濟會)의 회원들로 채워져 있었다. 조선경제회는 회장 박영효를 비롯해 조선의 ‘지주 자본가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였는데, 농공상의 장려발전을 목적으로 “어떠한 정치에도 불관”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²⁶⁴ 즉 ‘비정치주의’를 내세웠던 것인데, 민우회는 “경제회의 목적을 확장하여 온건한 정치적 색채를 띤 단체로 조직”되었다.²⁶⁵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 구성원에도 일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까지 포함되었다.²⁶⁶

요컨대 민우회란 조선경제회를 모체로 하면서도 그 ‘비정치주의’를 철회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구도 자체는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모색한 연정회와 흡사한데, 그 구성 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짐에 따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민우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여전히 경제회 회원들, 즉 ‘지주 자본가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온건한 정치적 색채’를 띤 운동을 모색했던 것인데, 이때 ‘온건한 정치성’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심세력담론이 나타난 1922년 1월이란 시간이 민우회 조직계획이 제안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살펴보겠다.

²⁶³ 『治安狀況』(1922)

²⁶⁴ 「朝鮮經濟會發會式」, 『매일신보』 1919년 12월 8일.

²⁶⁵ 「朝鮮高等警察情報二〇一四号 新団体創立の件」,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94-21.

²⁶⁶ 민우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윤해동(1992), pp. 308~309을 참조.

민우회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활동을 벌이지 않았지만,²⁶⁷ 그 이면에서는 널리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민우회 세력이 처음 가시화된 것은 김윤식 사회장 문제를 통해서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장 문제는 사회주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구도를 부각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때 민족주의 측에서 동아일보와 함께 일을 추진했던 것이 민우회 세력이었다.²⁶⁸ 민우회는 문화운동에서도 주도적 세력을 형성했는데, 물산장려회가 청년회연합회와 민우회를 주도 세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면,²⁶⁹ 민립대학기성회 역시 회장 이상재를 비롯해 민우회의 여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²⁷⁰

이처럼 1922년에 ‘중심세력담론’이 나타났을 당시 그 배경에는 ‘민우회’라는 단체의 등장이 있었다. 그것은 연정회와 마찬가지로 ‘정치운동’을 모색하는 단체였지만, 그 구성원의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연정회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송진우, 천도교의 최린, 조선일보의 신석우 등 신지식을 흡수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면, 민우회를 주도했던 이들은 조선경제회 출신의 전통적인 ‘지주 자본가계층’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²⁷¹

윤해동의 표현을 따르면 민우회를 주도했던 지주 자본가계층은 식민 권력에 예속화된 ‘친일적 세력’이었다.²⁷² 이들은 문화운동의 단계에서는 확실히 민족주의 세력과 비견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정회 계획이 추진된 당시에는 오히려 그 구성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전의 문

267 구체적 활동으로는 강연회와 지부활동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民友會講演初日』, 『동아일보』 1922년 10월 8일; 『民友會靑島講演會』, 『동아일보』 1922년 10월 18일; 『民友會靑陽支部』, 『동아일보』 1922년 10월 22일; 『民友會定期總會』, 『동아일보』 1923년 5월 30일; 『民友會總會經過』, 『동아일보』 1923년 6월 2일.

268 김윤식사회장위원회는 민우회와 동아일보를 2대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박종린(2006), pp. 42~49.

269 물산장려회의 세력구성에 대해서는 윤해동(1992), pp. 297~298.

270 민립대학기성회에 참여했던 민우회 임원은 이상재, 송진우, 유진태, 허헌(許憲)이다. 특히 민우회의 부회장이었던 이상재는 기성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다.

271 물론 호남지방의 대지주이자 경성방직의 설립자였던 김성수의 동아일보 세력 또한 지주 자본가적 기질을 지니고 있었지만, 신지식층을 중심으로 인맥을 형성했던 동아일보 세력과 구세대 중심의 민우회 세력을 동일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와 김성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木村幹, 『韓國における「權威主義的」体制の成立—李承晩政權の崩壊まで』(ミネルヴァ書房, 2003).

272 윤해동(1992), p. 300.

화운동 단체와 비교해볼 때 연정회는 민우회 세력을 제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친일적’인 민우회 세력이 제외된 연정회는 확실히 그전보다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민우회’와 ‘연정회’ 사이에는 ‘친일에서 민족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연찮게도 아베의 전환론과 동일한 구도를 취하고 있었다. 아베는 이광수의 개조론을 통해 ‘친일에서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암시받았는데, 연정회에서 또다시 그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모습은 통치와 민족의 상관관계를 다시금 확인해준다. 그런데 연정회 계획이 아베의 전환론과 달랐던 점은 역시 그 ‘정치에 대한 지향’에 있었다.

아베는 조선의 민족운동, 다시 말해 합법적 문화운동의 주체를 ‘민족주의자’로 보기는 했지만, 그 운동에 대한 ‘정치적’인 발상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그는 전환론을 제기하여 문화운동을 지지했을 때도, 또 연정회 계획이 추진되었을 때도, 조선의 민족운동에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민족주의자에게 보인 꾸준한 관심도 이 단계에서는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문화운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²⁷³

하지만 연정회 계획은 확실히 ‘정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친일적인 지주 자본가 계층’이 아니라 진정 ‘민족주의적 세력’에 의해 모색된 정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정치성’이란 무엇을 의미했는가.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합법적 정치운동’을 둘러싼 담론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3. 생(生)으로서의 정치담론

(1) 생활과의 연결과 혁명으로부터의 탈각

여기서는 「경륜」에서 제시된 두 번째 논점, 즉 ‘민족적 권리’에 관한 논의를 실마리로 이 당시 모색된 ‘정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권리’는 늘 ‘정치’와 ‘생활’과 얽혀 논의되었는데, 우선 그 양상을 1922년 1월 2일의 논

²⁷³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2, 26.

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민중의 력(力)”은 “조선인 일체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이다. “부호(富豪)의 부”도 “국가의 권(權)”도 모두 이를 “토대”로 생겨난다. 따라서 민중은 내부의 힘이 “행복의 원천”이며 “권리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은 그러한 힘을 합쳐 단결하는 중요성, 즉 중심 세력을 형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중의 힘을 ‘생활’과 ‘권리’와 연관짓고 설명하는 그 인식구도이다. 즉 민중의 힘은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인 동시에 ‘권리를 창조하는 근본’으로 설명되었다.²⁷⁴

이러한 인식구도는 1월 20일의 논설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도 민중이 근본이라는 주장이 거듭되는데, 하지만 이때의 근본은 민중의 힘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서 설명된다. “부력(富力)”이나 “권력”이 아무리 중요한들 그것은 “생명을 양육하는 일수단”에 불과하다. 즉 힘은 “그 근본이 되고 목적이 되는 생명” 이상일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어서 논설은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諸君의 生命을 擴充하고 發達하고 또한 發揮하여야 이에 비로소 諸君의 人格은 完成하며 諸君의 價値는 充實하나니, 諸君이 生命을 充分히 發揮하고 擴充하는 그것은 諸君 本來의 權利이며 諸君 本來의 義務이라. …社會는 時代와 民度を 따라 그 當然한 것을 오직 ‘認定’할 따름이오. …權利는 人生의 發達 그 自體를 認定함이오, 人生의 發達은 生命 그 自體의 擴充을 意味함이니 世人의 所謂 人格이 무엇인가. 요컨대 그 生命의 擴充에 不過하는 것이로다. …民衆의 權利를 拒否하는 社會는 그 發達을 拒否하는 社會이며 그 發達을 拒否하는 社會는 곧 그 生命과 그 人格을 無視하는 社會라 하노라. …諸君은 그 貴重한 生命의 擴充을 爲하여 如何한 權利를 持하며 그 生命의 發揮를 爲하여 如何한 自由를 有하는가. 諸君은 諸君의 生命에 嚴重한 關係를 有하는 國家生活에 對하여 卽 政治에 對하여 參與하는 權利를 有치 못하며 國家는 姑舍하고 諸君의 生活에 最密接한 關係를 有하는 地方生活에 對하여 卽 地方政治에 對하여 參與할 權利가 無하도다.²⁷⁵

생명의 확충은 민중이 갖는 본래적인 권리로, 사회는 이를 오로지 인정해야만 한다. 권리의 인정은 생명의 확충을, 나아가 인생의 발달과 인격의 인정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권리의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도, 인생도, 인격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생활’은 생명, 인생, 인격과 같은 좀더 포괄적인 ‘생’(生)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때도 그것은 계속해서 ‘권리’의 문제와 함께 논의된다.

²⁷⁴ 「民衆의 力을 更新하라」, 『동아일보』 1922년 1월 2일.

²⁷⁵ 「朝鮮民衆은 蹶起하라-自由와 權利를 爲하여」, 『동아일보』 1922년 1월 20일.

이러한 ‘생’과 ‘권리’의 관계를 조선이라는 사회에 적용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정치’의 문제와 연결된다.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생명을 확충할 수 있다면, 조선사회는 어떠한가. 즉 조선의 민중은 사회로부터 그 본래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조선의 민중은 국가생활뿐만 아니라 지방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즉 ‘정치’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확충하고 ‘생활’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설을 통해 ‘생’의 문제군(생명/인생/인격/생활)과 ‘권리’와 ‘정치’가 단단히 얹힌 논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1월 27일의 논설은 ‘생활’과 ‘정치’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민중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은 이제 그 힘도 생명도 아니라 곧바로 ‘정치’로 논의된다. “대개 정치는 민중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 차(此) 지배의 권리를 피탈(被奪)하고 어찌 심사(心思)의 화락(和樂)을 득하며 그 생명의 창달을 기하리오.”²⁷⁶ 정치란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인데, 그 권리에 대한 인정없이 어떻게 생명을 펼치고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이상은 1922년, 즉 중심세력담론이 제기된 당시에 나타난 ‘정치’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생활’과 연관짓고 이해하는 관점은 1924년의 「경륜」에서도 발견된다. 요컨대 거기서 제시된 ‘민족적 권리’라는 논점 또한 ‘생활’과 단단히 얹힌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주장된 ‘정치적 결사’ 또한 ‘생활’과 결부된 논리체계 속에서 그 성격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된 정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합법적 정치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1924년 1월 29일 「경륜」이 일으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아일보는 ‘정치적 결사’의 의미를 해명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要컨대 問題는 ‘政治的結社’라는 意味에 있어서 疑問의 焦點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生存權을 統一的으로 系統的으로 保障하며 擴張하는 데는 이것을 政治的結社라 하여도 何關이 있으랴. 이것은 現代의 生活을 離하여 政治가 없으며 또한 政治를 離하여 生活을 向上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의 主張은 이러한 모든 生活運動은 民族自體의 團結力으로써 向上發展케 하라 함이다. 民族的으로 團結을 作하고 團體의 力으로 우리의 經濟와 教育問題를 發展向上케 하는 것이 이곳 政治的結社가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政治的

²⁷⁶ 「實地에 就하라 徹底하라」,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結社와 運動'을 提唱하는 데 불과하였다.²⁷⁷

위에서는 '조선인의 생존권을 통일적으로 계통적으로 보장하며 확장하는 것'이 정치적 결사를 제창한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거론된 '생존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좀 더 살피겠지만, 그것은 앞서 본 '생'의 문제군(생명/인생/인격/생활)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는 개념이었다. 논설은 이어서 '정치와 생활'의 관계에 언급하는데, 생활을 떠난 정치가 없듯이 정치를 떠난 생활 또한 없다. 이것이 정치적 결사가 '생존권'을 위한 단체가 되는 까닭인데, 따라서 논설은 자신들의 운동을 '생활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경륜」에서 주장하는 '정치운동'이란 바로 '생활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단결이 '민족적 권리'를 위한 운동이 되며 '정치=생활운동'을 위한 중심 세력의 형성을 의미했다.

「경륜」은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즉 '합법적 정치운동'의 개시를 주장한 논의였지만, 이 경우의 '정치'란 '생활'과 굳게 결부된 개념이었다. 그것은 '정치운동=생활운동'이라는 구도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생'의 문제군과 밀접하게 결부된 '정치' 담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는 '합법적 정치운동'의 제창과 함께 '생의 정치담론'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당시 정치담론은 '생'과 연결되었을까. 이 질문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식민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1922년 1월 30일에 게재된 논설은 '문화와 정치' 그리고 '정치와 혁명'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果然 朝鮮에 必要한 것은 政治보다도 文化이며 果然 朝鮮人에게는 一切 政治範圍에 入하기를 禁止하였으며 果然 朝鮮人은 이럼으로 政治에 意를 抱하는 者는 不可不 革命的運動에 그 身を 投할 수밖에 無하도다. 그러나 政治는 人生生活의 殆의 全部를 支配하는 것이라...政治에 不關하고 民衆의 文化的向上을 可히 期望할 수 있는가...政治와 文化發達の 關係가 大概 如此한즉 文化運動者도 必要하거니와 政治運動者가 亦 同一히 必要하며 朝鮮人의 政治的運動은 一切 禁止를 當한 것이 事實이라 따라 革命的運動에 그 力を 傾하고 政治的運動에 그 力を 費할 餘地가 無한 것은 事實이며...²⁷⁸

조선에 필요한 것은 정치보다 문화라고 이야기되면서 정치에 관여하

²⁷⁷ 「政治的結社와 運動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²⁷⁸ 「政治家의 欠乏 實地的聰明이 必要」, 『동아일보』 1922년 1월 30일.

는 일은 일체 금지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에 뜻이 있는 자들은 모두 혁명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치는 인생생활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으로, 정치 없이는 문화 또한 발달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운동’ 못지않게, 아니 차라리 그것을 위해서도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에서도 정치운동은 ‘생활을 지배하는 것’, 즉 ‘생활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운동’이 금지된 상황은 그것을 ‘혁명운동’으로 기울이게 했고, 따라서 정치운동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졌다. 즉 여기서는 정치운동을 ‘생활운동’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부족이 그것을 ‘혁명운동’으로 몰아내어 ‘문화운동’만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논의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운동은 혁명운동과 동일하지 않을 뿐더러 문화운동의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과 연계된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논설에서 정치와 생활, 그리고 혁명의 관계는 굉장히 시사적인데, ‘정치’를 ‘생활’과 연결함으로써 ‘혁명’으로부터 탈각시키는 담론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활과의 연결’과 ‘혁명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구도가 떠오르게 된다. ‘생의 정치담론’에서 수행된 ‘정치의 재구성’이란 이처럼 ‘생활=정치≠혁명’이라는 논리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경륜」에서도 확인된다.

왜 只今에 朝鮮民族에게는 政治的 生活이 없나, 그 대답은 가장 單純하다. 日本이 韓國을 併合한 以來로 朝鮮人에게는 모든 政治的 活動을 禁止한 것이 第一因이요, 併合以來로 朝鮮人은 日本의 統治權을 承認하는 條件 밑에서 하는 모든 政治的 活動, 즉 參政權, 自治權의 運動 같은 것은 勿論이요, 日本政府를 對手로 하는 獨立運動조차도 願치 아니하는 強烈한 節介意識이 있었던 것이 第二因이다. 이 두 가지 原因으로 只今까지 하여 온 政治的 運動은 全히 日本을 敵國視하는 運動 뿐이었었다. 그러므로 이런 種類의 政治運動은 海外에서나 해야지 만일 國內에서 한다면 秘密結社의 일 수밖에 없었다.²⁷⁹

조선인이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던 일본, 한편으로 일본의 통치권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기시했던 조선, 이 두 요인으로 정치운동이라면 일본을 적국시하는 운동뿐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정치운동이란 해외에서나 가능한 일이 된다. 즉 모든 정치생활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조선’에서 ‘독립’이나 ‘혁명’과 결부된 ‘정치운동’은 사실상 ‘정치를 잃게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279 「民族의經綸」, 『이광수전집』 10권(1976), p.184.

1월 29일의 해명논설에서도 이처럼 정치를 ‘독립·혁명’으로부터 탈각시키는 담론작업이 발견된다. 그것은 정치적 결사를 ‘주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주장으로서 나타났다. 「경륜」이 주장한 ‘정치운동=생활운동’을 의미하는 점을 밝힌 데 이어 논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럼으로 當初부터 主權組織의 政治的 方面에는 言及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設슈 우리의 最高한 政治的 理想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到底히 論議할 自由가 없는 것을 熟考치 아니 하면 아니 될 것이다. 다만 文化的 方面으로 政治的 結社를 云々하는 것은 이러한 原因이 潛在한 까닭이다. 만일 吾人의 提唱하는 『政治的 結社와 運動』이라는 論旨를 一人이라도 다른 意味로 誤解한다 하면 이는 그 責이 修辭의 拙에 있을지언정 決코 論文의 主旨가 아닌 것을 茲에 一言하며...280

「경륜」이 말하는 정치운동이 생활운동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주권조직의 정치적 방면’에 대한 언급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륜」은 결코 ‘주권국가적’ 의미로 정치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인데,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백했다. 설령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혁명·독립)과 결부된 정치’는 식민지조선에서 도저히 논의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숨은 의지’를 찾아내거나 ‘패배주의적 순간’을 읽어낸다면 그것은 선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적 의미의 정치를 이상으로 품고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거나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조선에서 주권국가적 의미의 정치는 담론화될 수 없다’는 그 주장 자체에 있다.

생의 정치담론은 ‘정치’를 ‘생활’과 연결시킴으로써 ‘혁명·독립’으로부터 탈각된 영역에 정치를 재정립시키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생’을 매개로 ‘정치’를 재구성하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정립된 ‘정치’는 주권국가적 의미가 탈색된, 이를테면 ‘비주권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주권성’은 ‘합법성’과 연동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의 정치담론’은 통치자가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의 영역으로 스스로 포섭되는 논의였지만, 한편으로 ‘비주권적=합법적 영역’에 ‘정치’를 정립시키는 논의이기도 했다. 즉 그것은 논의조차 될 수 없었던 정치를 담론화시켰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 조선의 민족운동이 정치화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는

280 「政治的結社와 運動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점에서, 식민지조선에서 ‘주체화’를 모색하는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라는 사태도, 합법적 정치운동에서 ‘정치와 생활’이 갖는 관계도, ‘주권(혁명·독립)’으로부터의 탈각도, ‘생의 정치담론’도, 모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타협적 민족운동=자치운동’이라는 구도 속에 회수되며 ‘비타협적 민족운동=독립운동’에 종속될 뿐이다. 하지만 합법적 정치운동은 ‘독립을 포기한 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불문에 부쳤을 뿐’ 그해야만 ‘정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권(혁명·독립)’으로부터 탈각해야만 정치가 담론화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식민지조선’을 조건짓는 일상이었다.

(2) 연정회와 자기결정

‘주권(혁명·독립)’으로부터 탈각’은 수동적인 의미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포섭은 ‘주체화’의 계기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민족적 권리’라는 논점을 실마리로, 「경륜」이 제기한 ‘정치담론’이 어떻게 ‘생’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는지, 즉 ‘합법적 정치운동’을 가능하게 만든 ‘생의 정치담론’의 존재를 밝혔다. 여기서는 이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체화의 계기에 담긴 의도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은 1922년에 전개된 논의, 즉 민우회에서 추구된 운동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될 것이다.

1922년 1월 11일부터 연재된 「총독정치의 제도적 비판」은 문화정치가 표방한 통치개혁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논설에서는 먼저 무단정치와 대비하면서 문화정치의 ‘근본’을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 승인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문화정치는 자유를 근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자유가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요점이었다.²⁸¹ 이처럼 자유의 관점에서 문화정치를 비판하는 글은 2월 7일자 논설에서도 발견된다. 거기서는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자유를 승인하지 않는 정치형태로 비판하는데, 이는 문화정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다.²⁸²

²⁸¹ 「總督政治의 制度的批判(上·中·下)」, 『동아일보』 1922년 1월 11~13일.

²⁸² 「專制政治를 打破하라」,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자유와 관점에서 통치개혁의 핵심으로 간주된 것이 바로 ‘지방제도’였다.²⁸³ 지방제도에 대해서는 1920년 7월에 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에 허용의 뜻을 밝힌 하라의 「사건」과 그것을 구현한 사이토의 「훈시」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물론 개정의 수준은 자유의 승인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²⁸⁴ 당시의 논설도 이를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다.²⁸⁵

하지만 당시의 논설은 개정의 한계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의 ‘철저한 실행’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예컨대 개정은 “실로 문화정치와 특색인 인민자유의 제도상 표현”으로 찬양되었고,²⁸⁶ 다만 그 “정신에 불철저하고 형식에 모순”이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경(更)히 혁신하여서 일층(一層)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²⁸⁷ 이러한 논조는 3월 5일의 논설에서도 보이는데, 이때도 “지방제도의 관료주의와 소위 자문(諮問)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결론은 “민치(民治)주의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특히 이 논설에서는 “국가의 권리를 민중의 수중에 장악하라 하는 민중운동”과 “지방생활의 결정권을 그 지방민중의 수중에 회수하라 하는 지방운동”을 대비하면서 후자의 해결 없이 전자의 획득이 없음을, 즉 지방자치를 우선시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⁸⁸

이처럼 1922년의 논설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는 당시 담론을 주도했던 민우회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²⁸³ 「總督政治의 制度的批判(上)」, 『동아일보』 1922년 1월 11일.

²⁸⁴ 종래 부(府)에만 허용되었던 협의회가 면(面)에도 설치되었지만, 그 권한은 여전히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부(府)뿐만 아니라 면(面)에도 선거제가 허용되었지만, 지정면(指定面)에만 한정되고 보통면(普通面)은 여전히 임명제로 운용되었다. 이는 재조일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한 결과였는데, 결국 대다수의 조선인에게 배제된 자유에 불과했다. 협의회 의장 역시 선출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의 수장이 맡아서 하는 등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며 그 권한도 막대했다. 예컨대 자문안전의 제출, 협의회 소집여부, 회원의 자격상실 결정권 및 해임권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지방제도 개정에 관해서는 姜東鎭(1978), pp. 345~348; 최유리(1997), pp. 215~218.

²⁸⁵ 예를 들어 의장이 제출한 안전에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비꼬면서 협의회에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總督政治의 制度的批判(上)(中)」, 『동아일보』 1922년 1월 11~12일.

²⁸⁶ 「總督政治의 制度的批判(下)」, 『동아일보』 1922년 1월 13일.

²⁸⁷ 「總督政治의 制度的批判(中)」, 『동아일보』 1922년 1월 12일.

²⁸⁸ 「地方制度의 改善이 如何」, 『동아일보』 1922년 3월 5일.

이다. 지방제도 개정에는 여러 가지 제한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선거제가 적용된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경우에도 그 자격에는 연 5엔 이상의 납세요건이 부과되었다.²⁸⁹ 당시 대다수가 농민과 노동자였던 조선민중이 이를 통과할 수 있을 리는 없었다. 즉 그것은 극소수의 ‘지주 자본가’들에게나 가능한 조건이었던 셈이다. 민우회의 주도 세력은 바로 그러한 계층을 기반으로 했다. 관련자료에서 민우회의 성격이 ‘온건한 정치적 색채’를 띤 운동으로 평가받았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²⁹⁰ ‘자방자치’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하는 운동이란 확실히 그 정치성이 통치자의 의도에 들어맞는 온건성을 띠었기 때문이다.²⁹¹

그렇다면 연정회의 경우는 어땠을까.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1922년 7월 6일의 논설을 ‘정치적 중심 세력’ 담론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²⁹²

政治는 要件대 勢力關係라 國民의勢力에 依하여 取하는 國家的活動의 根本이라. 이럼으로 그 國民의中心勢力을 持하는 者 그 任에 當할지오, 不然한 者 그 任에 當치 못할지니...그러나 吾人의 注意할 것은 所謂 그 國民의中心勢力을 持한다 함은 單히 理論으로 多數가 首肯하고 思想으로 多數가 共鳴하는 것을 意味함이 아니라 更히 一步를 進하여 그 首肯과 그 共鳴을 基礎하여 此多數를 組織하고 此多數에 訓練을 加하여 一體를 作함으로써 그 勢力을 持함이 니 이 所謂 組織의中心勢力이라.²⁹³

위의 구절은 ‘정치적 중심 세력’의 형성을 주장한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이다. 거기서는 분명히 ‘중심 세력’의 중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중심 세력은 국민 다수로부터의 공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조직화’를 이루었

²⁸⁹ 선거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姜東鎭(1978), pp. 350~351.

²⁹⁰ 「新団体創立の件」,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1, No.94-21.

²⁹¹ 1922년의 논설의 온건성은 지방제도에 대한 다른 시기의 논조와 비교해볼 때 더욱 부각된다. 개정이 발포된 1920년 당시 이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심오했는데, 자문기관이나 임명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극도로 제한적인 선거자격, 막대한 의장의 권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규의 부재, 의견 제출에 대한 제한이나 자문의 수동성 등의 문제까지 파고들어갔다. 특히 선거자격에 대한 비판은 일 본인과의 비율조정 문제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통과한 인물이 ‘자본가 계급’에 국한된다는 점까지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논조에 비하면 1922년의 논설들은 확실히 ‘온건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地方制度改善에 臨하여 官民의게 바라노라」, 『동아일보』 1920년 8월 1일; 「地方制度의 改正에 就하여」, 『동아일보』 1920년 8월 7~8일; 「奇怪한 地方制度, 立案의 本意가 郡邊에 在한가」, 『동아일보』 1920년 8월 24~9월 3일.

²⁹² 박찬승(1992), p. 330.; 김동명(2006), pp. 209~210.

²⁹³ 「政治와 中心勢力」, 『동아일보』 1922년 7월 6일.

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러므로 ‘국민적’ 중심세력이란 곧 ‘조직적’ 중심세력을 의미한다. 논설은 중심 세력의 중요성을 아일랜드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데, 전자의 두 나라와 달리 러시아가 정치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이유는 내부적 분열의 유무, 다시 말해 조직화된 중심 세력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다.²⁹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중심 세력의 형성=조직화’인데, 인용문의 앞줄에 제시된 명제, ‘정치는 요컨대 세력관계’라는 주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다. 즉 ‘중심 세력의 형성=조직화’ 자체가 ‘정치’라는 주장으로, 그것이 혁명과 같은 국가적 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논설은 분명히 ‘정치’와 ‘중심 세력’의 관계를 논하고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형용사적 의미’도 부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치가 곧 중심 세력’이었던 것이지 ‘정치적인 중심 세력’을 논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경륜」으로 이르는 ‘정치적’ 중심세력담론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1923년 1~4월에 발표된 두 편의 논설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되었지만, 그것이 분기점으로서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주목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연정회가 추구했던 정치운동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설은 1923년 1월 『개벽』에 게재된 「조선의 특이한 처지와 이에 대한 특이한 구제책」이다. 이는 조선의 현황과 대책을 분야별로 논의한 글로, 이때의 분야는 ‘경제적’, ‘정치적 내지 사회적’, ‘도덕적’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우선 경제적 분야에서는 귀농운동과 국산운동이 주장되었다. 경작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을 받은 이들이 귀농하여 농작지의 개간과 농작법의 개량을 가르치도록 권장하는 한편, 낙후된 상공업을 위해 국산품의 구입을 돕는 생산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물산장려운동에서 주장된 무산자적 생산동맹과 같은 논리로, 논설에서는 생산조합의 사례로 자작회(自作會)가 언급되었다. 자작회는 물산장려회를 구성했던 단체 중 하나로, 이광수의 지도하에 연희전문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²⁹⁴ 아일랜드는 자유국(자치)이나 공화국(독립)이나를 둘러싸고, 독일은 사회당과 제정파(帝政派)로 분열되어 있다면, 분열이 없는 러시아는 혁명 이래 나날이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도덕적 분야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이 모든 분야의 근간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단체의 형성은 개인의 도덕적 인격에 기초하기 때문에 도덕적 단체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을 수양하는 기관”으로 “봉사, 신뢰, 신의, 용기, 애단심, 준법, 헌신” 등 정신적 덕목을 수양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개조론에서 제기된 논의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신수양은 민족성을 개조하는 방법이었으며, 물산장려운동 또한 합법적 문화운동의 2대 분야였다. 다만 이 논설이 특이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 내지 사회적’ 분야를 설정했던 점이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특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싶고 절실하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제목을 고쳐 “후일에 발표”하겠다는 말과 함께 “민족적 중심단체를 지으라”는 한마디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분야’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모색한 「경륜」과 같은 구도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이다.²⁹⁵

4월에 게재된 「곳 해야할 민족적 중심세력의 작성」은 바로 그 후속논설로서 발표된 것이었다. 논설에서는 먼저 ‘민족적 의사’의 부재가 강조된다. “조선민족의 의사를 누구에게 무르랴. 이완용에게 무르랴 김명준에게 무르랴. 또는 독립주의란 동아일보 사장이나 동명 주간에게 무르랴. 또는 사회주의라는 신생활 잡지 사장에게 무르랴. 무르면 각각 대답은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대답”에 불과할 뿐이다.²⁹⁶ 만약 그것이 ‘민족적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²⁹⁷

이처럼 논설은 정치적 분야에서 민족의 의사를 대표할 단체의 형성을

²⁹⁵ 「朝鮮의 特異한 處地와 이에 對한 特異한 救濟策」, 『개벽』 1923년 1월호.

²⁹⁶ 이완용은 병합 당시의 총리대신으로 상징적인 친일파 인물이었으며 김명준은 민원식파 사후 국민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또한 동아일보 사장은 당시 송진우가 맡고 있었으며 『동명』의 주간은 최남선이었다. 한편 『신생활』은 박희도를 사장으로 한 사회주의 잡지로, 필화사건으로 인해 발행이 금지되어 논란의 와중에 있었다. 『治安狀況』(1922)(1927.12); 『高等警察要史』(1929.10); 松田利彦(2004); 「本社創立總會」, 『동아일보』 1921년 9월 20일; 「『新生活』發賣禁止」, 『동아일보』 1922년 11월 16일; 「言論界의 被禍-新天地 新生活兩社 事件」, 『동아일보』 1922년 11월 26일; 「週報新生活」, 遂히 發行禁止」,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新生活的 發行禁止-主義上 衝突」, 『동아일보』 1923년 1월 11일.

²⁹⁷ 「곳 해야할 民族的 中心勢力的 作成」, 『개벽』 1923년 4월호.

주장한다. ‘정치적’ 중심세력의 형성을 제창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향도 드러내지 않았다. 예컨대 동화주의, 자치주의, 독립주의, 사회주의 등 현존하는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논의방식은 1922년의 논설에서도 보였지만,²⁹⁸ 그때와 달리 ‘지방자치’에 특별히 적극적인 언설은 나타나지 않았다.²⁹⁹

하지만 비록 구체적인 목표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중심 세력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여졌다. “가장 그 민족의 마음에 드는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그 이상을 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굳게 단결된 단체가 그 민족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것이다.”³⁰⁰ 중심세력의 핵심은 바로 그 민족의 ‘이상’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상이란 무엇인가. 4월의 논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륜」과 연결된다.

조선에 민족적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경륜」의 도입부에서도 보인 논법이었다. 많은 이들이 조선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만, 그 어느 것도 “조선민족의 대답은 아니요, 오직 그네 개인의 대답”일 뿐이다. 그것이 “민족의 중심단결의 의견이 된 뒤에야 비로소 민족적 행위 또는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중심단체’는 어떠한 ‘이상’을 가졌을까. 1월 29일의 논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民族의 政治的 最高理想은 炳若日星하게 民族自體의 決定으로부터 解決될 것은 確然한 事實이다.…그러나 吾人으로 하여금 이러한 政治的 最高理想을 解決하는 方法으로는 무엇 보다도 民族의 團結을 堅固히 해서 지금부터 當面の 權利와 利益을 增進케 할 必要가 有치 아니할까.³⁰¹

조선민족의 정치적 최고이상은 ‘민족자체의 결정으로부터 해결될 것’이

²⁹⁸ 「專制政治를 打破하라」,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朝鮮人の 參政權問題」, 『동아일보』 1922년 3월 6일.

²⁹⁹ 1923년 가을에는 개정 후 두 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의 논설들에서는 지방자치의 철저한 실행을 요구하는 식의 주장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活路-團結과 前進」, 『동아일보』 1923년 10월 17일; 「大同團結의 機運-兄弟여 猛醒하라」, 『동아일보』 1923년 11월 17일; 「團結하는 方策이 如何-公德心訓練 組織의 計劃」, 『동아일보』 1923년 11월 25일; 「府面協議員의 改選-正々堂々히 結束하라」, 『동아일보』 1923년 11월 9일.

³⁰⁰ 「곳 해야 할 民族의 中心勢力의 作成」, 『개벽』 1923년 4월호.

³⁰¹ 「政治的 結社와 運動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다. 민족적 단결, 즉 정치적 결사의 조직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권리’를 증진한 끝에 이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자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다.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경륜」에서도 강조된 바 있었다.

그 政治的 結社의 最高 또는 最後의 目的이 무엇인가. 다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政治的 結社가 生長하기를 기다려 그 結社自身으로 하여금 모든 問題를 스스로 決定케 할 것이라고.³⁰²

정치적 결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운동의 목적을 ‘자기결정’에 둔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운동형태를 밝히지 않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식민지상황’에 기인한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소극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결정’을 내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함의를 가졌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언설이 처해진 구체적 상황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다면, ‘주권(독립·혁명)’을 탈각해야만 ‘정치’를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리하여 ‘비주권적=합법적’ 영역에서 ‘정치담론’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민지조선의 민족운동이란 그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운동이었으므로 ‘생으로서의 정치담론’과 ‘생활운동으로서의 정치운동’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의 핵심—이상—을 ‘자기결정’에 둔다는 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조선의 ‘정치운동=생활운동’을 포섭시키면서도 그 정체성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자기영역’에 확보해놓는 작업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민족운동의 ‘주체성’을 ‘비주권적’인 맥락에서 발휘하는 담론이었다.

(3) 생존권과 양립의 사상

위에서는 식민지상황에서 생활과 연결된 정치의 의미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추구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생의 정치담론은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고안된 담론이었다면, 이때의 정치운동은 생활운

302 「民族의經綸」, 『이광수전집』 10권(1976), p.184.

동으로서 합법적 공간에서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가는 운동을 지향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생존권’이라는 논점 또한 이러한 생의 정치담론 속에 작동했던 개념인데, 이 절에서는 특히 그것이 갖는 ‘양립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생존권이라는 논점은 정치적 결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도 인용된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정치운동이 ‘생활운동’을 의미한다면, ‘살아가는 권리’의 보장과 확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존권은 기타 생의 개념들(생명, 인생, 인격, 생활)과 달리 운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독특한 논의 양상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생존권’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좌/우’를 끌어안는 ‘양립적 논리전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IV장에서 살펴볼 ‘운동’의 전개와 ‘생의 정치담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 된다.

1922년 1월 18일의 논설에서 생존권은 ‘생명의 확충’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생명의 확충이 그랬던 것처럼 생존권 또한 사회로부터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본래적 권리이다. 따라서 총독부는 조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공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왜 유독 조선인에게만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논리가 도입되었다. “자유경쟁 시대”에 “자본주의적 사회제도 하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생존권의 확충을 자연에 맡기는 것은 “곧 그 생명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³⁰³

이러한 관점은 6월 6일의 논설에서도 나타난다. 19세기 이래 권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생존권 또한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되었는데, 따라서 국가는 “오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오인의 생명의 침해를 방어하며 오인의 재산의 안고(安固)를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는 재산 있는 자를 보호”하고 “재산 없는 자의 생활자료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있는 자’에게는 그 권리를 보장하지만, ‘아직 없는 자’에게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생활자료의 보장이 무한지라 어찌 그 생존의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여기서 사

303 「經濟的 特別保護의 意思가 無한가—朝鮮人の 生存權」, 『동아일보』 1922년 1월 18일.

회진화론적 관점의 자본주의 비판이 다시 도입된다. “자유경쟁의 원칙을 시인함은 결코 국민과 인민의 생존하는 권리를, 생존코자 하는 욕망의 충족을 사회가 인정하는 도리”가 아니다. 생존권의 충족은 자유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의 근본권”을 국가에 요구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³⁰⁴

6월 20일의 논설에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존권 주장이란 지금의 사회조직 하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위해 그 조직의 개조를 요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조직의 근본이 경제조직이라면 지금의 사회조직은 바로 “자본주의적 경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조직 하에서 노동자는 생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분배에서 큰 차별을 겪고, 또 생존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노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 개조를 요구하는 것이 생존권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³⁰⁵

이상과 같은 논의들의 배경에는 조선청년회연합회와 민우회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4월에 열린 제3회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생존권의 보장’에 관한 방침이 제시되어 있었는데,³⁰⁶ 6월에 결성된 민우회 또한 그 「회칙」에서 ‘생존권의 보장’(제2조)을 내세웠다.³⁰⁷ 앞서 본 논의들은 연합회의 입장에서 생존권의 의의와 그 주장의 핵심—자본주의 비판—을 밝힌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우회는 과연 “차(此) 조건을 충분히 구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³⁰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회 측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생활상 일반권리의 보장’(제4조)이라는 조항이었다.

‘生活上 一般權利의 保障’은 果然 如何한 具體的 條目을 包含하는가. 生活上 一般權利에 財產權

304 「生存權-聯合會 建議의 一節」, 『동아일보』 1922년 6월 6일.

305 「民友會-生存權과 社會改善」, 『동아일보』 1922년 6월 20일.

306 생존권은 ‘산업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다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 萬人の 平等한 生存權은 産業的 權利를 確保함에 비로소 實地的 價値가 生함을 宣言함”. “다. 朝鮮人の 産業的 權利를 否認 或은 剝奪하는 者は 곧 그 生存權을 否認하고 그 生命을 剝奪하는 者로 認定함”. “바. 社會는 萬人の 平等한 生存權과 幸福權을 保持하며 增進하기 爲하여 産業發達에 對한 基礎的 權利를 保存함을 宣言함”. 김준엽·김창순(1970), pp. 111~112.

307 「朝鮮高等警察情報二〇一四号 新団体創立の件」,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No.94-21.

308 「民友會-生存權과 社會改善」, 『동아일보』 1922년 6월 20일.

을 意味하며 自由權을 意味한다 하면 그 財産權과 自由權으로 因하여 發生된 目下の 資本主義를 認定함이요. 資本主義를 認定한다 하면 資本主義의 倒壞를 目的하는 生存權의 主張과 矛盾이 되나니...309

앞서 보았듯이 민우회가 말하는 ‘생활상의 권리’란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연합회가 문제시했던 것 또한 그러한 민우회의 ‘온건성’이었다. 거기서 말하는 권리가 만일 ‘재산권’이나 ‘자유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본주의’에 대한 인정을 함축한 개념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의 주장과는 상충된다. 민우회의 ‘지주 자본가적’ 기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합회는 ‘합법적 운동’ 자체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제3회 정기대회 이후 정노석 중앙간부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문화운동과 제휴하는 노선을 추구했다. 따라서 연합회와 민우회의 갈등은 같은 ‘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속에서 ‘재산권·자유권’과 ‘생존권’의 관계를 묻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산권·자유권과 생존권을 대비시키는 연합회의 논의 방식은 6월 25일의 논설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논설은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의 「생존권개론」(1913)을 번역한 글이었는데, 후쿠다의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⁰ “근세국가가 하는 소위 보호보장은 기존하는 자에게 한하는 것이요. 장차 생(生)하려 하는 것에까지 급(及)치 못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보호는 재산이 기존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재산이 있는 자’만 보호하고 ‘없는 자’의 생활자료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6월 6일의 논설이 이와 연동되고 있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노동과 그 산물과의 관계라든지 욕망과 그 충족과의 관계”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류의 생활은 즉 인류 욕망충족의 활동”으로 성립된다. 이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경우 “욕망을 충족한다 함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의 제공은 불가불 노동을 의미”한다.

309 「民友會－生存權과 社會改善」, 『동아일보』 1922년 6월 20일.

310 「생존권개론」은 『續經濟學研究』(1913)에 수록되어 있다. 논설은 이를 저본으로 했던 것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 이하 본문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福田德三, 『續經濟學研究』(同文館, 1913); 「生存權概論(一)~(五)」, 『동아일보』 1922년 6월 25일~7월 2일.

따라서 욕망의 충족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산물을 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욕망-노동(즉 비용)-충족”으로 순환하는 생활의 근본으로, 경제조직이란 원래 “일체 욕망을 적당 차(且) 충분히 충족하며 일체 노동에 그 산물을 정당 차(且) 완전히 소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요컨대 생활의 근본이 되는 순환을 제대로 이루게 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도출된다. “노동에 충분한 산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욕망에 충분한 충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것은 개조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후쿠다는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본주의의 근본이 “재산권”에 있는 데서 찾는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의 근본권”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후쿠다의 ‘생존권 우위론’은 여기서 도출된다. 6월 6일의 논설이 ‘생존의 근본권’을 주장했던 논거 역시 여기서 찾아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 하에서는 “공법의 수단으로써 사법의 불비(不備)”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존권을 근본권으로 인정하여 재산권보다 우위에 둘 경우 사회정책은 ‘사법=재산권의 영역’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후쿠다의 이론은 ‘사법의 사회정책화’로 특징지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후쿠다에게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비판이 담긴 개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주의와 사회정책”의 “분기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자는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혹은 회의적”이라면, 후자는 “긍정적 교정적” 입장이다. 전자는 일종의 “철학”을 갖는 반면, 후자는 “하등 철학을 유(有)치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전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그의 이론이 ‘혁명’의 철학을 대신하는 ‘개량’의 철학이라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후쿠다의 이론은 분명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견지하고 있었다. 후쿠다의 사상적 입장은 ‘사회정책적 자유주의자’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그 사상의 핵심은 ‘양립’에 있었다.³¹¹ 이러한 특징은 조선의 생존권 논의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

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자본주의 비판이나 생존권의 우위 등 후쿠다의 이론은 조선의 생존권 논의를 많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립의 사상’ 또한 생존권 논의에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시기는 다소 내려가지만, 1925년 1월 12일에 발표된 논설 「자유권과 생존권」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自由權이 政治的으로는 모든 改革을 斷行하였으나 經濟的으로는 生活上 機會均等を 破壞하였으며 階級的 觀念을 挑發케 한 것이 事實이었다. 이곳 自由權 發展의 餘弊를 匡救하기 爲하여 自然的으로 社會 最後의 生存權이 絶叫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兩大思想이 互相衝突이 되고 撞着이 되는 것은 아니다. 當初에 政治的으로만 機會均等を 絶叫하던 世界人類는 一轉하여 經濟的으로도 그 機會均等の 必要를 覺醒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 兩大思想은 鳥의 兩翼과 車의 兩輪과 같이 互相提携가 되어 發展하여야 될 것이다. 問題는 自由權의 病的 發展 곧 不合理 無節制한 資本主義를 咀呪할 뿐이다. 換言하면 過去 封建時代에 特權階級の 武士貴族의 手中에 掌握되었던 政治的 權利가 自由權의 發展에 依하여 一般民衆에게 均布된 것과 같이 現代의 資本階級の 獨占된 經濟的 權利가 生存權의 覺醒에 依하여 平等的으로 分配될 것도 必須의 運命이다. 이로 보면 自由權은 政治的 生存權이며 生存權은 經濟的 自由權이다. …自由權과 生存權이 表裏가 될지언정 背馳는 되지 아니할 것이며 並行이 될지언정 相悖가 되지 아니한 것을 단언코자 한다.³¹²

18세기의 프랑스혁명으로 “자유권 발전시대”가 열렸다면, 20세기의 러시아혁명은 “생존권 확충시기”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논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권’과 ‘생존권’을 대비하는데, 위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에는 양자는 ‘양립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자유권’이 특권 계급으로부터 일반 민중에게 양도된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면, ‘생존권’은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양도되는 ‘경제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유권의 병적 발전으로 나타난 ‘자본주의’에 의해 빼앗긴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런 맥락에서 생존권의 요구는 자유권의 폐단에 대항하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양자는 절대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새의 양익과 차의 양륜처럼

311 예컨대 자립적 사회와 적극적 국가, 자유방임과 국가간섭, 자주적 원리와 사회정책 등 후쿠다의 사상은 일견 모순된 가치를 양립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 후쿠다의 사상과 그 특징에 관해서는 宮島英昭, 「近代日本における社會政策的自由主義の展開-福田德三の『生存權論』の史的分析」, 『史學雜誌』 92編 12号(1983); 清野幾久子, 「福田德三における『生存權論』の受容とその展開」, 『明治大學大學院紀要 法學篇』 21集(1984); 田澤晴子, 「『デモクラシー』と『生存權』-吉野作造と福田德三の思想的交錯」, 『政治思想研究』 第11号(2011).

312 「自由權과 生存權(上)」, 『동아일보』 1925년 1월 12일.

서로 제휴하면서 발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을,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철저하게 ‘양립 가능한 관계’로 묘사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운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것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논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전자는 자유권 운동으로 그 서막을 개(開)하였고 후자는 생존권 운동으로 그 단서를 발(發)하였”다. 양자는 일견 별도의 운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자유권을 요구하는 민족운동이 생존권을 아울러 주장하게 되고 또한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아울러 자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바로 자유권과 생존권이 그렇듯이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³¹³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협동전선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논설이 발표된 당시에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제휴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1924년 4월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파와 북풍파의 협동으로 결성된 청년총동맹 임시대회에서 ‘민족운동’과의 제휴방침이 천명된 것이다.³¹⁴ 그 사흘 전에 열린 창립대회 당일에는 조선공산당의 강달영과 천도교의 이종린 사이에 비밀 회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종린은 연정회 계획에도 참여했던 인물인데, 이날 둘은 ‘주의보다 단결’이라는 합의하여 헤어졌다.³¹⁵

이러한 상황은 흔히 신간회로 이르는 ‘협동전선론’의 시발점으로 간주되어왔다.³¹⁶ 하지만 협동전선론에서 ‘양립’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 하에서는 ‘민족주의 우파’는 배제되며 ‘타협과 비타협’의 좌우구분이 적용된다. 요컨대 협동전선론은 ‘민족주의 우파의 타협적 운동’을 ‘양립’ 밖으로 위치시켰다.

313 「自由權과 生存權(中)」,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

314 이날 ‘타협적 민족운동을 배척하고 혁명적 민족운동을 찬성한다’는 사항이 결의되었다.

315 「京鍾警高秘第九三八三號 共產黨檢舉ノ件 被疑者訊問調書(姜達永)」,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2(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p. 118[이하 「被疑者訊問調書」로 통일].

316 金森襄作, 「論爭を通じて見た新幹會-新幹會をめぐる民族主義と階級主義の對立」, 『朝鮮學報』 93集(1979); 水野直樹, 「新幹會東京支會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叢』 1号(1979)[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朴慶植, 「朝鮮民族解放運動と民族統一戰線」, 『ファシズム期の國家と社會 8卷運動と抵抗(下)』(東京大學出版會, 1980)[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水野直樹, 「新幹會の創立をめぐる」, 『近代朝鮮の社會と思想』(未來社, 1981).

이 점은 청년총동맹 창립대회와 같은 날에 열린 노농총동맹 임시대회에서 잘 드러난다. 이날은 ‘반동 세력 및 방해자에 관한 건’이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이때 연정회 계획에 대한 조사를 보고한 김종범은 그것을 ‘친일단체’와 다를 바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경무국장을 비롯해 총독부와 협의 하에 추진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³¹⁷ 김종범의 조사는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단체는 국민협회의 주도로 결성된 ‘친일단체의 연합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이 당시 국민협회 회장 김명준은 “합법적으로 아(我)민족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³¹⁸ 이 때문에 더더욱 양자가 뭉뚱그려진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보고는 연정회를 ‘친일=합법’의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그로부터 분리시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 우파’를 ‘타협적 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양립’ 밖으로 위치시키는 현동전선의 관점 또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양립은 결코 ‘민족협동’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족협동까지도 포함한 ‘생의 정치담론’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1924년 10월 30일의 논설은 “생활운동”으로서의 “정치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朝鮮의 政治運動은 결국 二大戰線으로 分野될 것이다. 하나는 歷史的 傳說的 在來思想에서 一層 進歩한 民族的 政治運動이요, 다른 하나는 階級的 政治運動이 될 것이라...(양자가-필자)對立하는 權力이 同一한 同時에 그 權力의 威壓은 兩個戰線에 對하여 同一한 方針 同一한 程度로 斷行될 것이니 이러한 實際事實은 非常時에 있어서는 兩個戰線으로 하여금 協同提携케 할 可能性이 없지 아니한다.³¹⁹

여기에는 민족주의를 좌우로 가르는 인식은 없다. 또한 ‘합법성’이 좌우를 가르는 기준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생의 정치담론’은 ‘합법적 공간’에서 민족과 사회 양자를 아우르는 ‘정치운동’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17 「勞農總同盟臨時大會」,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

318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권운동 연구-國民協會·同民會·時中會 계열을 중심으로」 중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pp. 31~32에서 재인용.

319 「朝鮮의 政治運動」, 『동아일보』 1924년 10월 30일.

IV. 정치운동과 주체성

‘생의 정치담론’은 조선의 민족운동이 ‘합법적=비주권적’ 공간에서 ‘정치화’하는 과정과 함께 나타났다. 이로써 정치운동은 ‘독립·혁명’과 연루된 기존의 의미를 탈각하여 ‘생활’과 연계되는 담론적 작업을 마쳤는데, 그 실천으로서 시도된 ‘연정회’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은 담론의 차원에서 제안되었을 뿐 운동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IV장에서는 그 이후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이 실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생의 정치담론’이 실천된 장으로서 본고에서 착목한 것이 ‘신간회운동’이다.

먼저 신간회운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살피는데, 특히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을 향한 두 가지 ‘정치화’의 흐름에 주목했다. 하나는 ‘통치 측’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III장에 이어 계속해서 아베의 활동과 인식을 살피면서 조선의 민족운동을 ‘정치화’시키는 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밝힐 것이다. III장에서 보았듯이 통치 측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제국의 기반이 탈과 독립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동’으로 규정짓고 있었는데, 그 영역이 ‘문화’를 넘어 ‘정치’로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물론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모색하는 민족주의 측의 담론변화에 대응한 변화이기도 했다. 연정회 계획 당시까지만 해도 통치 측이 ‘정치운동’에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 일이 없었다. 그것이 1925년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정치화’를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계기를 살피는 동시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아베·최린 대담’의 함의를 성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합법적 정치운동’을 출현시키려고 했던 통치 측의 의도를 밝히는 동시에 ‘자치운동’이 안고 있던 ‘역설적인 아포리아’를 통해 ‘식민지 정치성’의 문제를 성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정치화’를 향한 흐름은 ‘사회주의 측’에서도 나타났다. IV장에서는 이를 ‘정우회선언’이 발표된 경위와 그 함의를 통해 고찰한다. 1926년 11월에 발표된 정우회선언은 민족주의 측의 정치운동과 ‘제휴’함으로써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주의운동이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을 향해 전환된 분기점으로 이해한다. 이로써 ‘합법적=비주권적 정치공간’에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통치자와 사회주의까지 모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결성된 것이 바로 ‘신간회’였다.

신간회운동은 그동안 결성을 주도한 세력—‘민족주의 좌파와 일부 사회주의자’로 이루어진 ‘협동전선’—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느 한 세력에 점유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운동’을 향한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각의 의도가 얹힌 ‘각축장’이었다는 것이 본고가 제안하는 관점이다. 예컨대 통치자는 신간회를 탄압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종하기 위해 교섭하기도 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또한 교섭에 응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운동을 규정 지었던 것이 바로 ‘합법성=비주권성’이라는 데두리이다. 이처럼 신간회를 ‘정치의 각축장’으로 보는 관점은 그것을 ‘합법적=비주권적 정치운동’으로 보는 관점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비주권적 주체성’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IV장에서는 이 문제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유형의 ‘협동’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생의 정치담론’이 ‘합법성=비주권성’ 속에서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하기 위해 고안된 논의였다면, 신간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이었다. 즉 ‘합법적=비주권적 정치공간’에서 ‘주체화’의 의도를 수행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협동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먼저 하나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스스로를 ‘생존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통치 측과의 교섭에서 ‘자기결정’의 영역을 견지했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스스로를 ‘생활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치’와 ‘반제’를 공존시키려고 했다. 양쪽 모두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포섭된 운동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이 의도한 바를 미끄러뜨리는 측면—자기결정 및 반제의 공존—을 내포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이를 통해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밝히려고 했다.

1. 정치와 자치의 접속

(1) 통치 측의 정치화와 우경적 단체

합법적 정치공간에 새로운 전개를 불어넣은 것은 통치 측에서였다. 1920년대 중반까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아베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문화운동의 범위 안에 있었지 정치운동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를 깨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자치운동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아베가 언제부터 자치운동을 의도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쉽지 않다. 자치론자로 알려져 있던 소에지마 마사미치(副島道正)가 경성일보 사장에 선출된 것을 알았을 때 이를 반기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지만,³²⁰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좀 더 능동적인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아베-이광수-안창호 루트를 통해 주어졌다. III장에서 언급했듯이 ‘민족개조론’을 비롯해 그 실천으로서 결성된 ‘수양동맹회’에 이르기까지 이광수의 사상과 행동의 배후에는 늘 안창호의 존재가 있었다. 이광수는 개조론을 탈고한 직후에도 비밀리에 상해를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안창호를 만난 그는 개조론을 조회하는 동시에 홍사단의 국내 지부로서 수양동맹회의 결성을 지시받았다.³²¹ 또한 1923년 10월경에도 당시 안창호가 체재하고 있던 베이징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연정회 계획’과 ‘민족적 경륜’에 대한 양해를 얻었던 것으로 기록된다.³²²

이처럼 이광수는 상해를 떠난 이후에도 안창호와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아베는 이러한 관계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광수를 이용하여 안창호와 연락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내려가지만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26년 7월의 서한이다. 당시 아베는 코민테른이 이동휘와 여운형에게 공화국의 수립을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

320 1924년 7월 23일의 서한에서 아베는 소에지마 선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 “실로 근래에 있던 유쾌한 일” 중의 하나로 “마치 의중 속의 인물이 뽐힌 기분”이라고 반가워했다. 소에지마는 이미 1923년부터 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를 조선의 정보통이었던 아베가 몰랐을 리는 없다.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70; 副島道正, 「朝鮮統治に就て」, 『朝鮮』 1923년 7-8월호; 「朝鮮統治の將來」, 『朝鮮地方行政』 1923년 8월호.

321 姜東鎮(1978), p. 416; 河かおる(1998).

322 「梗概」(1927.1); 「勞農總同盟臨時大會」,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

었는데, 때마침 사이토로부터 여운형과 안창호가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이광수에게 사실 관계를 타진했던 것이다. 그러한 아베에게 이광수는 곧바로 답장을 써서 안창호의 입장이 변함없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³²³ 이러한 경위를 보더라도 이광수를 통해 안창호의 동향을 확인하는 루트는 항시적으로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안창호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을까. 관련자료는 1921년 당시의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안창호는 조선의 독립이 “일본을 적대시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 오히려 “일본에 기대[倚]”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측근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³²⁴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당시 안창호는 이광수가 『경륜』에 썼던 문제의식, 즉 정치운동이라면 오로지 “일본을 적국시하는 운동”만을 인정하고 “일본정부를 대수(對手)로 하는” 운동은 “독립운동조차도” 부정하는 조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⁵

이외에도 경찰당국은 안창호의 동향을 줄곧 주시해왔다. 1920년까지는 임시정부 내 온건파(혹은 문치파)로 알려진 안창호의 입장을 국제연맹에서 독립을 승인받도록 ‘미국을 상대로’ 호소하는 외교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²⁶ 앞서 본 관련자료는 그러한 인식이 1921년에 들어 ‘일본을 상대로’ 하는 노선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1925년에 들어오면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수준을 넘어 바로 ‘자치운동’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당시 김성수, 송진우, 최린, 이종린, 최남선 등이 회합을 거듭하는 것도 “안창호 일파가 품고 있는 자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³²⁷ 이러한 당국의 인식을 아베 역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광수를 통해 안창호의 동향에 신경 쓰고 있던 아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기는 ‘아베-송진우-이승만·서재필 루트’를 통해 주

323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107;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7월 13일자 阿部宛齋藤書簡;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111.

324 「梗概」(1927.1)

325 「民族的經綸」, 『이광수전집』 10권(1976), p.184.

326 「朝特報第四十一号」, 「朝特報第七十九号」, 「朝特報第八号」,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6卷 朝鮮 2(みすず書房, 2004).

327 「梗概」(1927.1); 『治安概況』(1928.5).

어졌다. 1925년 7월에는 하와이에서 제1회 태평양문제조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조선대표로 참가했던 송진우는 현지에서 이승과 서재필을 만나 ‘자치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내용을 귀국길에 들른 동경에서 아베에게 알려줬던 것이다. 아베는 이를 7월 30일자 서한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승만과 서재필은 공산주의운동에 반대하는 동시에 자치제도를 통해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둘은 송진우가 조선 의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³²⁸

태평양문제조사회에 대한 조선대표단³²⁹의 참가는 연일 보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국제회의’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호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현지에서 맞아준 것이 이승만을 비롯한 재미한인들이었으며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서재필이 이들의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표단의 의도는 식민통치로 고통받는 조선의 현실을 호소하는 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약소민족문제를 의제로 제출하여 조선문제를 국제문제로 제기하는 동시에 자결주의를 적용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다.³³⁰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사전에 봉쇄되고 마는데, 조선의 참가로 야기될 문제에 대해 이미 주최 측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³³¹

이 때문에 대표단의 연설은 당초의 계획보다 온순해질 수밖에 없었으며,³³² 이에 대한 보충이 토론시간에 시도되었다. 서재필과 일본대표 사이에

328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86.

329 대표단은 동아일보의 송진우 외에 조선 YMCA의 신흥우와 유억겸, 그리고 조선일보의 김양수로 구성되었다.

330 「太平洋問題研究會」, 『동아일보』 1925년 6월 11일; 송진우, 「하와이 가는 길에(1)~(2)」, 『동아일보』 1925년 6월 17~18일; 송진우, 「太平洋會議에-今日부터 「호놀룰루」」, 『동아일보』 1925년 7월 14일.

331 송진우, 「太平洋會議에(1)-팔린톤總督의 歡迎辭」, 『동아일보』 1925년 7월 30일; 片桐庸夫, 「太平洋問題調査會(IPR)と朝鮮代表權問題-朝鮮グループの脱退, 1925-1931」, 『法學研究』59卷 4号(1986);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현실』 제6호(1991); 外村大, 「太平洋問題調査會朝鮮支會に關する一考察」, 『戰間期のアジア太平洋地域』(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1996).

332 조선대표단의 연설에 대해서는 기록에 차이가 있다. 일본 측이 기록한 연설문에는 자결주의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조선에서 그러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현지에서 발간된 『Honolulu Star-Bulletin』에도 ‘Want Right to Determine Destiny’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서재필에게 일본 대표단은 국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³³³ 이러한 갈등은 참가 자격 문제를 초래하여 그것을 ‘국가 단위’로 한정하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선 대표단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독립적 단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참가 자격은 후일에 정식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주권국과 자치국’만을 국가단위로 인정하고 ‘식민지와 속령’에 대해서는 본국의 승인이 조건으로 부과되었다.³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이 자치 문제에 호의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베는 이를 근거로 향후 조선의 운동은 ‘무단파→노국파→과격파→공산파’와 ‘문치파→미국파→온화파→자치파’로 분해될 것이라며 이승만과 서재필의 귀국조치까지 건의했다.³³⁵ 송진우를 통해 얻은 정보는 그만큼 아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는 아베가 행동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III장에서 보았듯이 아베는 3.1운동 당시부터 조선의 ‘사회주의화’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예상대로 사회주의 세력은 꾸준히 그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특히 1925년에 들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1925년 1월 동경에서 일월회(一月會)가 결성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이것이 1926년 11월의 정우회선언의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재동경 사회주의 단체를 총괄하는 지도 단체의 탄생을 의미했다는 사실이다.³³⁶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아베는 5월 18일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

것으로 기록된다. 澤柳政太郎 編, 『太平洋の諸問題』(太平洋問題調査會, 1926), pp. 133~138; 「同化政策과 日語注入은 朝鮮人에게 致命傷」, 『동아일보』 1925년 7월 31일; 「太平洋會議에(3)-朝鮮에서 間 代表의 演說」, 『동아일보』 1925년 8월 9일; 고정휴(1991).

³³³ 澤柳政太郎(1926), pp. 123~133.

³³⁴ 片桐庸夫(1986), pp. 51~58; 外村大(1996), p. 188; 고정휴(1991), pp. 317~318.

³³⁵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86.

³³⁶ 일월회는 북성회 내부에서 김약수파와 대립했던 안광천파가 김약수의 귀국을 기회로 북성회를 개편하여 만든 단체였다. 당시 재동경 사회주의 단체의 간부급 인물들로 구성된 지도단체였다. 水野直樹(1979); 박종린,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일월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0(2007).

을 드러내고 있었다. 동경의 청년층은 나날이 좌경화되고 있는데, 특히 일월회의 결성은 재동경 사회주의 단체들이 협동하여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월회의 지도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베는 이어서 그러한 경향이 도리어 반대 세력의 형성에 호기를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주의화의 진전은 위협적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회색 세력’을 곤경에 빠뜨리게 한다. 따라서 이때를 기회로 알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조만간 “조선으로 건너가 최린 등과 면회하여 깊이 마음속을 두드려볼 각오”라고 밝혔다.³³⁷

이로 볼 때 아베는 이미 5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은 나날이 진전되는 좌경화 경향을 역으로 이용하여 회색 세력, 즉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조선행은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송진우를 통해 회소식을 듣게 된 아베는 조선행에 대한 결심을 다시금 다지는데, 그때의 심정을 8월 17일의 서한에서 아래와 같이 드러내고 있었다.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조선에 손을 뻗치지 않을까 우심(憂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생이 평소부터 주장해왔듯이 길항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최린, 김성수, 송진우 등을 연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월경에 조선에 건너가 그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호의 의향이 공산주의 등 과격주의를 반대하는 데 있다는 의견은 이광수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송진우를 통해 이승만과 서재필 등 영수자(領袖者)의 의견 또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일을 고려하는 데 큰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³³⁸

위의 구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나날이 증가되는 소련의 영향력에 길항하는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창호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서재필까지 반공 자치파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조선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10월에는 또 하나의 회소식이 들려왔다. 조선을 다녀온 다카쓰 마사미치(高津正道)를 만난 아베는 최근 조선에서는 공산주의 경향과 함께 우

³³⁷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79.

³³⁸ 『齋藤實關係文書』 書翰の部1, No.283-88.

경적 단체를 설립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다. 그 근거를 추궁한 아베에게 다카쓰는 조선일보의 안재홍과 나눈 대화에서 그 단서를 발견했다고 답했다.³³⁹ 시기와 거론된 인물을 볼 때 그것은 ‘조선사정 연구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베가 좌경화에 대항하는 ‘우경적 단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아베는 이를 근거로 “송진우의 귀국선물의 일단이 벌써 열매”를 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요컨대 조선사정연구회를 자신이 계획하는 우경적 단체의 맹아적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아베의 인식은 ‘통치자의 눈으로 본’ 연정회와 신간회의 관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사정연구회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성격이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민족단체로, 일반적으로 자치운동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연정회와는 구별되는 단체로 간주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회로 귀착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 포함되는 단체로 인식되어왔다.³⁴⁰

하지만 이를 ‘우경적 단체’의 일환으로 봤던 아베에게는 그러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민족주의 세력이 만든 단체로 인식되었지만, 거기에는 특별히 연정회와 구별짓는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간회에 대한 인식과도 관계되는 측면인데, 아베에게는 민족주의 세력을 ‘좌우’로 가르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세력에 길항하는 ‘우경적 단체’의 출현을 모색했던 아베에게 그것이 ‘타협적인지 비타협적인지’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운동에 대한 통치자의 인식과 우경적인 범위, 즉 ‘합법적 정치공간’의 범위를 이

339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91. 서한에는 ‘동아일보 안재형(安在衡)’이라고 적혀있는데, ‘조선일보 안재홍’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했다.

340 조선사정연구회는 1925년 9월 15일 명월관에서 결성되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도그마적 적용에 반대하며, 조선의 독자적 역사와 민족성에 기초한 사회사정을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고정휴(1991)는 이를 ‘사회주의세력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세력이 결집한 단체’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조선사정연구회는 흔히 태평양문제연구회와의 연관성이 지적되는데, 태평양문제연구회는 태평양조사회 조선지회로서 조직된 단체로 별도의 배경을 갖지만, 창립된 날에 같은 장소에서 조선사정연구회의 제1회 조사보고회가 열리거나 회원의 대다수가 겹치는 등 연관성을 시사하는 요소가 많다. 「梗概」(1927.1); 『治安狀況』(1929.5); 「朝鮮事情調査研究の必要」, 『조선일보』 1925년 11월 30일; 저자, 「朝鮮事情研究會 第一回調査報告講話」, 『조선일보』 1925년 11월 30일; 「太平洋問題研究會 朝鮮支會를 創立」, 『조선일보』 1925년 11월 30일; 고정휴(1991).

해하는 데 중요한 인식이 아닐 수 없었다.

(2) 아베·최린 대담과 소에지마 사설의 함의

우경적인 단체의 맹아를 확신한 아베는 이 경향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정 참여라는 광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조선행을 감행했다.³⁴¹ 11월초에 조선에 도착한 아베는 계획대로 ‘회색 세력’들과 만남을 시도했다.³⁴² 물론 그 목적은 “우경적 단체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이었는데,³⁴³ 결국 이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사람은 최린뿐이었다.³⁴⁴ 아베는 이때 이루어진 최린과의 대담의 내용을 사이토에게 자세히 보고했다.³⁴⁵

대담은 먼저 아베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이제 ‘조선 자치’의 토대를 확립할 때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당국은 자치의 단서를 부(府)평의회부터 열었으며 이는 조만간 결의 기관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진전 끝에 조선 의회가 개설된다면 지금까지 독립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이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선출을 승낙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통치를 승인한 증거가 될 것이다. 셋째 만약 승낙하지 않는다면 조선 의회는 가장 혐오스러운 계급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이러한 아베의 문제제기에 최린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애당초 통치 측에서는 자치를 허용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왜 그 의사를 여태 표명하지 않는 것인지. 조선의 민중은 경제적 곤경에 빠진 원인을 통치자의 압박에서 찾고 현실을 비판하며 고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베의 말

341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91.

342 아베의 서한에서는 최린과 송진우만이 언급되었지만, 미쓰야(三矢宮松)의 서한에 따르면 아베의 환영회에는 김성수, 신석우, 방태영, 진학문도 참석했다.(『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2, No.1470-2).

343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130.

344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93.

345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1, No.283-93. 이 서한의 날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926년 10월’로 간주했는데[姜東鎭(1978), 박창승(1992), 김동명(2006)], 본 논문에서는 이하의 이유에서 ‘1925년 11월’로 간주하기로 했다. 먼저 대담의 장소는 문서의 내용에서 ‘경성’이라는 점이 확실한데, 최린은 1926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경에 체류했기 때문에 10월에 경성에서 만나는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서한에는 조선사정사연구회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아베는 조선으로 떠나기 직전인 10월에 다카쓰를 통해 조선사정사연구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를 우경단체의 맹아로 주목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서한은 1926년보다는 192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로 사상의 악화는 피할 수 없는데, 일본은 왜 민중에게 광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되물었다.

양자의 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아베는 조선의회에 대한 출마 의사를 통해 통치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고 한다면, 최린은 일본의 의사 표명을 통해 광명을 얻으려고 한다. 즉 ‘승인이 먼저냐, 광명이 먼저냐’를 놓고 양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베는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최린에게 다가간다. 도대체 조선은 누구의 것인지, 만약 조선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통치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린은 자치운동을 표명할 경우에 예상되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하나는 ‘당국으로부터 받는 의심’이다. 자치운동을 표명한다고 해도 늘 의심하는 당국이 있는 한 결국 뜻과 반대의 결과로 끝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중으로부터의 매도’로, 민중은 자치운동이 민족의 앞날에 유익하다는 점을 속으로 알고 있어도 자치주의에 동조하는 자를 변절한(變節漢)으로 매도할 것이다. 이처럼 최린은 양자 사이에서 꿈쩍도 못하는 것이 자치운동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베의 요구를 승낙하는 뜻을 밝혔는데, 오늘날 독립이 불가능하다면 조선의 문제는 가능한 조선의 여론을 존중하고 조선인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방법, 즉 의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회 출마에 대해서도 민중의 신임만 얻을 수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자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 아베·최린 대담의 가장 중요한 함의도 여기에 있는데, 이로써 ‘합법적 정치운동’이 ‘자치’와 접속되는 순간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아베는 이번 체류 중에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를 만나 각종 문제에 ‘편의’를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데,³⁴⁶ 미쓰야 또한 아베에게 ‘최린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로서도 지장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사이토에게 보고하고 있었다.³⁴⁷

346 『齋藤實關係文書』書簡の部1, No.283-120.

347 『齋藤實關係文書』書簡の部2, No.1470-2.

즉 아베는 최린과 대담한 직후 미쓰야를 만나 자치운동에 대한 합의를 얻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직후에 이루어진 미쓰야의 행동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미쓰야는 아베와 협정한 바로 직후에 동경으로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소에지마에게 전보를 날려 면회를 요청했다. 당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머무르고 있던 소에지마는 그날 밤차로 조선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를 들은 미쓰야는 얼른 소에지마에게 달려가 면회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급하게 마련한 자리에서 미쓰야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이는 소에지마의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날 찾아온 미쓰야는 소에지마가 평소에 주장했던 자치론에 대해 찬동하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소에지마는 이에 힘입어 경성일보의 주필 마루야마 간지(丸山幹治)에게 연락을 취했고 불과 나흘 만에 사설 「조선통치의 근본의」가 발표된 것이다.³⁴⁸

한편 20일에 동경에 돌아와 있던 아베는 사설이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미쓰야와 함께 사이토를 찾아갔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일이 모두 세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암시하는데,³⁴⁹ 그렇다면 왜 이때에 자치운동을 부추기는 일이 시도되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일본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1924년 6월 일본에서는 호헌삼파(護憲三派) 내각이 수립되었다. 수상에는 헌정회의 가토 다카아키가 선출되었는데, 이때부터 내각과 총독부 사이에는 식민통치 방침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영국형의 정당정치를 지향했던 헌정회에서는 내지연장주의보다 자치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³⁵⁰ 이는 앞서 II장에서 봤던 상황과도 연계되는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조선통치를 둘러싸고 정당 간의 갈등이 나타났는데,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했던 정우회 내각에 대해 자치주의를 지지하는 논의들이 헌정회 계열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가토였다. 게다가 가토 내각은 1925년 8월에 단독 내각으로 거듭났는데,³⁵¹ 국내의 정국에 밝았던 아베가 분위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한

348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1, No.955-26.

349 소에지마 사설이 미쓰야-아베-사이토 간의 사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은 조성구(1998)의 연구에서도 지적된다. 趙聖九(1998).

350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 pp. 178~182.

편 미쓰야도 이러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영국의 식민 정책에 호의적인 글을 발표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나이하라와 만난 적도 있었다. 그 역시 자치주의 맥락을 공유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³⁵²

이것이 간접적인 요인이었다면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베·최린 대담에서 제기된 난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최린은 자치운동을 표명하는 데 어려움으로 ‘당국의 의심’과 ‘민중의 매도’를 들고 있었다. 우선 전자에 관해서는 미쓰야와의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민중에 대한 광명, 즉 통치층의 의사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에지마의 존재는 절묘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총독부의 기관지 경성일보의 사장으로서 그의 사설 또한 그러한 공적 기관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아베는 이로써 최린의 문제 제기에 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경성일보는 최린이 요구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대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기관지’라는 위상은 결코 적게 평가될 문제가 아니다.³⁵³ 특히 소에지마의 자치론 발표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만 물의가 일어났던 사실에서도 그것은 증명된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의 논설은 이 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경성일보가 “총독부의 기관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총독부의 승인을 거친 것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뿐”이라고 강조했다.³⁵⁴

351 헌정회와 자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덕영도 주목한 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연관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그가 헌정회의 자치주의 경향을 정책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치주의를 정책적 실효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은 자칫하면 자치주의 논의 자체를 정책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윤덕영,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 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한국동립운동사연구』 37호 (2010.12).

352 三矢宮松, 「英國紳士の尊敬すべき個性と異民族統治の要領」, 『朝鮮公論』 12권 11호, 1924년 11월. 미쓰야의 이러한 측면은 내지연장주의를 지지했던 마루야마와 함께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같은 경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선통치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쓰다나 이형식이 지적하듯이 통치층의 인식 또한 반드시 일면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校倉書房, 2009); 李炯植(2013).

353 총독부와 경성일보의 관계, 그 위상에 대해서는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地 第7巻 文化のなかの植民地』(岩波書店, 1993).

354 姜東鎮(1978), p. 375 및 趙聖九(1998), pp. 172~173에서 재인용.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경제국장이었던 마쓰오카 마사오(松岡正男)였는데, 그는 이후 소에지마의 추천으로 경성일보 부사장이 되었

하지만 나머지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그 선두에 섰던 것이 재조일본인들이었는데, 사실이 발표되자 이들은 사이토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고 갑자구락부에서는 소에지마의 배척을 결의하기도 했다.³⁵⁵ 이러한 반응에 당국은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그 목적은 애초에 반응 관측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냉담했다는 설명 외에 별다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침묵으로 일관했던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문제를 사실에서 다루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³⁵⁶ 따라서 다음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소에지마 사실을 둘러싼 논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합법적 정치운동’이 봉착했던 문제를 밝히고 ‘식민지 정치성’의 문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3) 식민지 정치성의 역설적인 아포리아

소에지마 사실의 내용 자체는 당시의 자치주의 담론의 기본적인 틀을 따랐을 뿐 별다른 논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내지연장주의 방식의 참정권 부여는 본국 의회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홈룰(Home Rule)적 의미의 자치’, 즉 의회 설치 방식으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조선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정치형식’이라는 점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자치는 ‘독립을 향한 길’이 아니라 조선을 ‘건전한 길’로 이끄는 정책이었던 것이다.³⁵⁷ 이처럼 소에지마는 특별히 진취적인 주장을 펼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발표된 매체의 성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비판했던 측에서는 어떠한 논리를 폈을까. 먼저 재조일본인 측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자치론은 병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역죄가 존재했던 당시로서 치명적인 비판일 수 있었다. 따라서 경성일보의 해명 또한 이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자치론은 통치 방침이 아니라 통치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형식이

다.

³⁵⁵ 재조일본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姜東鎭(1978), pp.373~375; 趙聖九(1998), pp. 172~182.

³⁵⁶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上·中·下)』, 『조선일보』 1925년 12월 4~6일.

³⁵⁷ 副島道正, 『朝鮮統治の根本義(上·中·下)』, 『京城日報』, 1925년 11월 26~28일.

시대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뿐더러 병합의 정신에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둘째로 자치는 곧 독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결국 병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 귀착되는 주장이었다. ‘당국의 의심’을 지적했던 최린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자치를 ‘독립을 향한 걸음’으로 보는 시각은 당시에는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해명 논설에서는 결코 ‘제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⁵⁸

한편 조선일보에 게재된 논설은 ‘민중의 시선’을 대변하는 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2월 4일의 논설에서는 조선의 “정치적 계통”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국민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는 계통으로 “독립파”라 불렀으며, 둘째는 계급의식에 의거하여 무산자의 국제적 단결을 통해 사회적 해방을 모색하는 계통으로 “사회운동자”라 불렀다. 그리고 셋째는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권력 계급과 결탁하여 점진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계통으로 “참정권운동의 일파”라고 불렀다.³⁵⁹ 이러한 분류는 1월 21일의 논설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었는데, 거기서는 “조선인의 정치적 분야”를 “사회운동자와 민족운동자의 좌우의 양익”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친일파류라 범칭할 수 있는 자못 계선(界線)이 선명치 못한 일파”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때 친일파에는 구한말 이래의 전통적인 조류와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 있었는데, 후자를 특히 “회색분자”라고 불렀다.³⁶⁰ 회색분자의 문제는 2월 6일의 논설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회색분자의 세력이 또한 서서히 조장”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³⁶¹ 요컨대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의 정치운동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친일파’라는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었고, 특히 친일파의 경우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경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색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에지마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회색당의 번민할 문제”³⁶²라는 부제를 달았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론은 ‘회색

358 「副島伯の朝鮮統治論(上·中·下)」, 『京城日報』 1925년 12월 10~12일.

359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上)」, 『조선일보』 1925년 12월 4일.

360 「朝鮮人の 政治的分野」, 『조선일보』 1925년 1월 21일.

361 「灰色黨의 擡頭의 機微」, 『조선일보』 1925년 2월 6일.

362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上)」, 『조선일보』 1925년 12월 4일.

분자', 즉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친일파'의 논의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참정권운동을 펼치는 세력이나 자치운동을 도모하는 세력이나 다 똑같은 친일파였으며 회색분자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은 '회색 세력'에 대한 아베의 인식과 대비해 볼 때 흥미로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II장에서 보았듯이 아베에게 회색 세력이란 '친일 세력'을 대신하여 선택된 '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에게 '참정권 운동'과 '자치운동'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경우 양자의 간극은 큰 의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공히 '친일파'의 논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를 '비타협적 민족운동=민족주의 좌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치운동' 사이의 간극일 뿐, 거기서 갈라진 '타협적 운동'은 친일파와 뭉뚱그려질 수 있었다. 아베에게 민족운동의 좌우 구분이 그다지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일보에 자치와 참정권의 구분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자치론에 대해서는 친일파와 동일한 문맥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 “조선자치론의 진의”는 식민권력과 결탁하여 “조선인 대중의 보조의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다.³⁶³ 조선의 정치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의 병립” 곧 “협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는데,³⁶⁴ 그러한 목적 앞에서 자치론은 “우리의 해방전선”을 “혼란상태”에 빠뜨리고³⁶⁵ “민족적 또는 계급적” “피압박 군중”의 “보조를 교란”시키는 논의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조선은 자치를 “최고의 정치형식”으로 알아야 한다. 즉 독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서서히 “마취 혹은 질식” 되는 것이 그 앞날이라고 비판했다.³⁶⁶

자치는 협동전선을 교란시키는 방책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치를 '민족분열책'으로 알았던 기존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아베를 통해 알아봤듯이 통치자의 인식에서 자치운동은 결코 단순한 민족분열책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중의 합의조달(=인심수렴)을 도모하는 맥락에서 도출된 방책으로, 그것을 이끌어

363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下)」, 『조선일보』 1925년 12월 6일.

364 「朝鮮人の 政治的分野」, 『조선일보』 1925년 1월 21일.

365 「灰色黨의 擡頭의 機微」, 『조선일보』 1925년 2월 6일.

366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中)」, 『조선일보』 1925년 12월 5일.

갈 세력의 ‘육성’을 의도했던 것이다. 요컨대 자치운동이라는 같은 현상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분열’로 인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육성’으로 인식하는 역설(paradox)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사이에서 자치운동이 안고 있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정치운동’에 배태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시각이 아니라 상관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이를 ‘식민지 정치성’의 ‘역설적인 아포리아(aporia)’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안한다.

자치론을 협동전선을 교란시키는 친일의 논리로 규정한 조선일보는 이어 재조일본인 측의 비판에 대해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자치론은 “과연 얼마의 위험성을 피등(彼等) ‘제국의 대방침’에 미치는 바가 있을까?”³⁶⁷ “조선인 자치를 운위하는 것은 소위 ‘중대한 악영향’을 ‘조선의 통치’에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등 ‘열렬한 반대’자의 분개는 곧 무엇을 의미함인가?” “오인의 눈에 비치는 조선인 대중을 마취 또는 질식케 하는 강렬한 독와사(毒瓦斯)가 피등에게는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 것일까?”³⁶⁸

오인의 눈에는 독립을 포기하는 주장이 그들의 눈에는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를테면 ‘독립의 포기가 곧 그 지향’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는 최린이 대담에서 호소했던 문제와도 연동되는데, 재조일본인의 시선이 ‘당국의 의심’을 대변한다면, 조선일보의 시선은 ‘민중의 매도’를 대변했기 때문이다.³⁶⁹ 하지만 양자의 시선은 겉으로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나타났지만, 근본에서는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결론이 다를 뿐 조선의 정치운동을 ‘독립=주권국가적 관점’을 갖대

367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上)」, 『조선일보』 12월 4일.

368 「所謂『副島伯의 言論』問題(下)」, 『조선일보』 12월 6일.

369 실제로 자치를 바라보는 당국의 시선은 늘 의심에 차 있었다. 1919년 여름 자치를 요구하려 찾아온 고원훈 일행에게 하라는 ‘자치란 곧 독립을 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해 가을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자치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군은 이를 ‘독립의 목적’을 갖는 수작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경찰당국에서는 안창호의 동향, 이광수의 수양동맹회, 연정회계획과 경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일들을 모두 ‘독립에 도달점이 있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高元勳外六名の意見書』(1964), pp. 120~121.; 「8月1日」, 『原敬日記』(2000), p. 124.; 「朝特報第七十九号」, 『現代資料26 朝鮮2』(2002), pp. 285~290; 『梗概』(1927); 『治安狀況』(1927.12)(1928.5)(1929.10)(1931.7); 『高等警察要史』(1929.10).

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까. 본고의 ‘비주권적 관점’은 문제의 본질을 ‘독립’을 잣대로 묻는 질문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해야만 비로소 ‘식민지 정치성’이 갖는 ‘역설적인 아포리아’는 그 자체로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합법적 정치운동은 그 자체가 애초에 ‘비주권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태생부터가 주권국가적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문맥을 지니고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점은 늘 조선의 운동을 따라 다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차 강조하듯이 식민지조선에서 정치운동이란 애초에 ‘주권성’이 부정된 ‘합법성’의 영역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추구된 ‘주체성’ 역시 ‘비주권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조선의 정치운동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식민지조선에서 정치운동을 ‘합법성=비주권성’으로 전제한다면, 그 속에서 ‘주체성’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질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정치의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 정치의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1) 정우회선언의 함의: 사회주의관 정치화

정우회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된 일본의 사회주의 사상을 무시할 수 없다. 정우회선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동전선론의 맥락 혹은 신간회의 결성을 촉구한 한 계기로서 다루어졌는데,³⁷⁰ 그 초기부터 주목받은 것이 후쿠모토이즘의 영향이었다.³⁷¹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370 金森襄作(1979); 水野直樹(1979); 朴慶植(1980); 水野直樹(1981).

371 조지훈,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 스칼라피노 외, 『신간회연구』(동녘, 1983); 徐大肅, 『朝鮮共產主義運動史, 1918~1948』(코리아評論社, 1970);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제기되는데, 특히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후쿠모토이즘 외에도 코민테른, 야마카와이즘, 그리고 ‘조선의 주체적 객관적 조건’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³⁷² 가지무라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코민테른의 반제연합전선론과의 관계, 야마카와이즘과 후쿠모토이즘의 비교, 그리고 ‘조선의 독립지향’을 중시하여 ‘민족주의 제후론’에 주목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³⁷³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한 것이 김석근의 연구이다. 그는 후쿠모토이즘과 야마카와이즘, 코민테른의 영향 등 검증하면서 그동안 외부적 요인에 관심이 치우쳤던 점을 한계로 지적, ‘반제적 협동전선’을 추구한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했다.³⁷⁴

이렇게 볼 때 정우회선언에 대한 기존 연구는 후쿠모토이즘의 영향을 시작으로 복합적인 영향관계가 제출되다가 결국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조선의 독자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협동전선’이라는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관점에 의문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정우회선언의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926년 11월 15일 발표된 정우회선언은 전문(前文)과 4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⁷⁵ 우선 전문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이 분열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의 경향”은 나날이 대두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방침으로 제시된 것이 4개의 세부 조항이었다. 첫 번째는 “사상단체의 통일”로, 모든 전위분자들이 정우회로 통합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대중의 조직 급(及) 교육”으로, 대중을 조직하여 계급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계급의식의 자연생

372 梶村秀樹, 「新幹會研究のためのノート」, 『労働運動史研究』 49号(1968)[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梶村秀樹, 「朝鮮の社會狀況と民族解放闘争」, 『岩波講座 世界歴史27 世界恐慌期』(岩波書店, 1971).

373 후쿠모토이즘의 영향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는 강만길,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신간회운동」,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 코민테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명구, 「코민테른의 대한 정책과 신간회」, 『신간회연구』(1983). 후쿠모토이즘과 야마카와이즘을 비교검토한 연구로는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독립지향을 중시하여 민족주의 제후론에 주목한 연구로는 水野直樹, 「新幹會運動に關する若干の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4集(1977)[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374 김석근, 「후쿠모토이즘과 식민지하 한국사회주의운동」, 『아세아연구』 통권94호(1995).

375 「正友會의 新陣營」, 『조선일보』 1926.11.17.

장성을 퇴치할 것을 주장했다. 세 번째는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에 대한 방침으로, 사회주의운동 또한 “경제적 투쟁의 형태”를 벗어나 “정치적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면 아니 될 전환기”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방향전환론’인데, 이어서 정치투쟁으로 전환한 사회주의운동은 “타락한 형태로 출현”하지 않는 한 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 “적극적으로 제휴”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 즉 ‘협동전선론’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론적 투쟁”의 중요성이다. “타협만에 그치는 타협, 개량만에 그치는 개량은 분명히 타락”을 의미한다. 이론적 투쟁이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협과 항투” 혹은 “개량과 ××(혁명-인용자)을 대립”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특히 핵심은 세 번째 조항-방향전환론과 협동전선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것이 ‘정치’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지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자 한다. 전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우회선언의 배경이 된 것은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으며 ‘전환’과 ‘협동’도 근본적으로 이를 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경우의 ‘정치투쟁’이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은 계급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³⁷⁶ 다시 말해 이때의 ‘정치투쟁’이란 ‘대중운동’을 의미했는데, 여기에 야마카와이즘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야마카와는 무산계급운동이 전위적 소수자의 사상 순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그것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³⁷⁷ 이것이 그의 방향전환론의 핵심이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무산계급운동과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었을까. 무산계급운동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정치적운동’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첫째 정치에 무관심한 단계로 투쟁의 목적과 장소도 경제와 공장에 한정된다. 둘째 목적은 여전히 경제적이지만 투쟁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변한 단계로, 의회주의가 모색된다. 셋째 정치가 부르주아에 지배되고 있다는 자각이 생겨 이를 비판하기에 이르는 단계

376 「戰線이 整理되는 朝鮮의 無産運動, 經濟鬭爭으로 政治鬭爭에 正友會는 昨日解體」, 『조선일보』 1927년 2월 22일.

377 山川均, 『無産階級運動の方向轉換』, 『前衛』 1922년 7·8월合併号[『山川均全集』 4卷(勁草書房, 1982)에서 재인용].

로, 여기에 이르러 투쟁은 ‘정치적 운동’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야마카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부르주아의 정치 지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의 정치 바깥에 ‘무산계급의 정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항’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산계급운동이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원리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야마카와의 정치투쟁의 핵심이 ‘대중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었던 점이다.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은 자본주의의 철폐에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원래대로 간직하면서도 만약 대중이 눈앞의 생활의 개선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⁷⁸ 야마카와는 소극적인 부정에 머물렀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부르주아 정치에 침식된 대중의 생활은 구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대항이란 바로 대중의 ‘생활’에 입각한 것으로, 그래야만 무산계급운동은 대중을 그 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정치투쟁=대중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야마카와에게도 ‘정치’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개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전환론, 다시 말해 무산계급운동의 ‘정치투쟁화=대중운동화’ 논의 속에서도 ‘생으로서의 정치담론’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은 정우회선언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정우회선언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이란 ‘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의 제휴’를 의미했는데, 그것은 동시에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을 의미했다. 즉 운동의 핵심을 ‘대중의 이익’에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야마카와리즘과의 연관성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의 ‘정치’ 역시 대중의 ‘생활’과 결부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본고의 관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우회선언에서 제창된 ‘협동전선=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의 제휴’란 결국 ‘생활과 결부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우회선언은 분명히 ‘협동전선’에 대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합법적 정치운동’을 향한 전환을 의미했다.

378 山川均, 「政治の否定と政治の對抗」, 『社會主義研究』 1922年7月号[『山川均全集』(1982)]; 山川均, 「無産階級運動の方向轉換」, 『山川均全集』(1982).

그런 의미에서 정우회선언은 ‘사회주의판 정치화’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했던 것으로, 이로써 사회주의운동 또한 ‘합법적 정치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정우회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언에 대한 비판은 서울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계열단체인 전진회로부터 검토문이 제출되면서 양자의 갈등은 지면에서 가시화되었다.³⁷⁹ 검토문에서 전진회는 선언을 ‘개량주의적 우경화’로 규정하고 이를 ‘개량이나 혁명이나’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우회에서는 그것이 ‘정치적 운동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반박했다.

本執行委員會가 取한 態度는 政治運動(眞實한 意味에 있어서의)을 是認한 것임에 反하여 前進會가 取한 態度는 政治運動 否認(部分的으로는 政治鬭爭을 是認하면서)에 立脚한 것이다. 그리고 前進會는 政治運動에 대하여 認識上 混亂 誤謬에 빠져있다. 우리는 如斯한 意識上 混亂 誤謬에 대하여 民衆의 앞에서 赤裸裸하게 討論하러 한다.³⁸⁰

정우회는 정치운동을 ‘시인’하는 입장이라면 전진회는 ‘부인’하는 입장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초에 ‘정치운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혼란이며 오류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우회의 정치운동을 ‘개량주의’로 규정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선언은 분명히 ‘대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주장했다. 그것은 ‘개량주의’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는데,³⁸¹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네 번째 조항에서 제시된 ‘이론적 투쟁’이었다. 그것은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의 제휴’를 ‘개

379 전진회의 검토문은 「前進會檢討文-正友會宣言에 對하여」, 『조선일보』 1926년 12월 18~30일. 또한 논쟁을 알 수 있는 기사로, 「正友會宣言과 前進會決議」, 『동아일보』 1926년 11월 23일; 「正友會宣言 大體로 反對, 서울靑年會에서」, 『동아일보』 1926년 12월 7일; 「前進會의 反對決議, 正友會宣言에 對해」, 『동아일보』 1926년 12월 16일; 「朝鮮社會主義運動 左右翼으로 分裂, 정우회의 선언을 前進會측에서 검토」, 『동아일보』 1926년 12월 17일; 「正友, 前進의 酬應과 서울靑年의 態度」, 『동아일보』 1926년 12월 21일; 「正友會宣言에 對한 서울靑年會態度-執行委員會에서 決議文發表」, 『조선일보』 1926년 12월 21일.

380 「政治運動是認과 否認의 對立이라고-전진회의 검토문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6년 12월 22일.

381 이 점은 야마카와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대중의 요구와 타협하는 것은 최종적 목표인 자본주의의 철폐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개량주의로의 타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山川均, 「無産階級運動의 方向轉換」 『山川均全集』(1982).

량'에만 그치는 투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개량과 혁명'을 '양립'시키는 방법이였다.

원래 '이론적 투쟁'이라는 말 자체는 후쿠모토이즘에서 차용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아무런 논리기제 없이 진행시키는 야마카와이즘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개념이었는데, 야마카와이즘이 계급의식의 발전(경제→정치)을 '자연생장적'으로 이해한다면, 후쿠모토이즘에서 그것은 이론적 투쟁이라는 외재적 요소를 개입시켜야 가능한 과정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후쿠모토는 '이론적 투쟁'을 통해 대중과 '결합 이전의 분리'를 수행하여 전위분자들끼리 '결정'(結晶)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³⁸²

이러한 개념을 정우회선언에서는 대중운동=정치투쟁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것과 동시에 수행하여 '개량과 혁명의 양립'을 이루는 방법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후쿠모토이즘을 통해서 야마카와이즘을 관철시키는 것과 같은, 일본의 사상적 맥락을 완전히 일탈한 독특한 논리를 구성했던 것이다. 만약 정우회선언에서 '한국의 독자성'을 찾는다면, 바로 이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대립적인 야마카와이즘과 후쿠모토이즘의 개념을 가져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이라는 조선의 맥락에 적용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관 정치화', 즉 '합법적 정치공간'과의 접촉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2) 협동과 자치의 결합

1926년 2월 17일, 정우회선언이 발표되기 9개월 전에 일월회의 안광천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열린 환영회에서 그는 '사상단체의 통일'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³⁸³ 이를 보도한 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사회주

382 福本和夫, 「『方向轉換』は如何なる諸課程をとるか我々はいまそのいかなる過程を過程しつつあるか」(1925.9.5.) 『無産階級の方向轉換』 第一分冊; 福本和夫, 「折衷主義の批判」(1926.4.19.) 『無産階級の方向轉換』 第二分冊; 福本和夫, 「我々は今や理論的闘争に政治的曝露を重ね始めなければならぬ」(1926.10.14.) 『無産階級の方向轉換』 第二分冊. 모두 『福本和夫初期著作集』 3卷(こぶし書房, 1972)에 수록되어 있다.

383 이때의 방문은 전년 여름에 큰 수해를 입은 조선을 위해 모은 기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금은 2월 17일 오후에 조선기근구제회 회장 이종린과 간부 강인택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어 저녁에는 사회주의 단체의 주최로 환영회가 열렸다. 「五錢六錢式 一千九百圓」, 『동아일보』 1926년 2월

의단체의 친화'를 다루었다. 그만큼 그의 연설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⁸⁴ 당시 동경에서는 '협동'의 분위기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었으며,³⁸⁵ 안광천 또한 조선의 사회운동은 “민족운동과 제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1년 전부터 드러내고 있었다.³⁸⁶

그러한 안광천의 방문은 조선의 협동논의에도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방문 직후 사회주의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2월 26일 동아일보의 간부 양원모의 저택에서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민족운동자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천도교 세력의 포섭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이들은 우선 교단이 “최린 일파의 타협적 자치운동”와 “권동진 일파의 순연한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어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달영은 이종린을 찾아갔다. 그가 나선 것은 언급했듯이 이미 2년 전에 비밀 회합을 가진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달영의 접촉에 즉각 반응한 이종린은 3월 10일 권동진의 저택에서 회합을 마련했다.³⁸⁷ 거기서는 주로 최린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이종린이었다. 최린은 이미 “자치운동에 찬성한 모양”으로 “이광수, 동아일보, 그리고 홍사단장 안창호 등과 제휴”하여 “수양단이나 연정회”를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사(代議士)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 등과도 “제휴하여 자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서 협동단체를 조직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아갔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못 내리고 헤어졌다.³⁸⁸

그 후 다시 모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발각된 불온 문서를 발단으로 공산당 2차 검거가 감행되었으며 강달영은 구속되고 만다. 이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일월회 세력

17일; 「氣分이 濃厚한 思想團體合同」, 『동아일보』 1926년 2월 19일; 김기승, 「1920년대 안광천의 방향전환론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현실』 제6권(1991), p. 109; 김석근(1995), pp. 84~85.

384 「社會主義團體의 親和」, 『동아일보』 1926년 2월 19일.

385 水野直樹(1979), pp. 13~14.

386 內務省警保局, 「在京朝鮮留學生概況」(大正14年12月),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卷(三一書房, 1975), p. 328.

387 참가자는 강달영, 권동진, 이종린, 오상준, 신흥우, 박동완, 유억겸, 안재홍 등이다.

388 「被疑者訊問調書」, 김준엽·김창순(1980), pp. 118~121.

이었다. 그해 8월 조선에 귀국한 안광천 등은 정우회를 장악하는 한편 공산당의 재건에 착수했다.³⁸⁹ 그리하여 11월에 정우회선언이 발표되고 12월에는 제3차 공산당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연정회 2차계획이었다. 이종린의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린이 자치운동을 도모한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³⁹⁰ 그렇다면 당시 그는 어떠한 활동을 벌였을까. 최린은 1926년 9월 동경으로 건너가 이듬해 1월까지 거기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¹ 하지만 동경에 체류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위장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는 정보도 있지만,³⁹² 그의 동경행은 단순히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10월말 최린은 소에지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동경에서 “시부사와 자작, 사카타니 남작, 이노우에 준노스케” 등과 회견했음을 알렸다.³⁹³ 일본 재계의 거물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 대장성(大藏省) 출신의 귀족원 의원 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郎), 일본은행 총재 및 대장대신 등을 맡았던 귀족의원 이노우에는 앞서 이종린의 비판에서도 언급되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이노우에는 자신을 “불잡고 오찬을 함께” 할 정도로 두텁게 맞이해줬다고 한다.³⁹⁴ 한편 11월 24일에는 아베와 함께 사이토를 찾아갔던 사실도 확인되는데, 귀국을 앞둔 1월 9일에도 사이토와 면회한 바 있었다. 소에지마에 따르면 최린은 귀국 후 미쓰야의 후임으로 경무국장이 된 아사리 사부로(淺利三朗)와 경성일보 부사장 마쓰오카 마사오(松岡正男)를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는

³⁸⁹ 정우회는 1차 공산당 검거(1925.11) 후 북풍회, 화요회, 노동회, 무산자동맹회의 연합으로 결성(1926.4)된 단체로, 6월의 2차 검거로 간부들이 잡혀갔다. 『治安狀況』(1929.5)(1927.12)

³⁹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풍설이 돌 정도였다. 「被疑者訊問調書」, 김준엽·김창순(1980), p. 119.

³⁹¹ 그가 동경으로 건너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사이토 서한에 첨부된 1927년 2월 22일자 보고문에는 ‘9월 25일’로, 1927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10월’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1928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9월에 구미로 떠났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이는 『如菴文集』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다만 출발 날짜를 9월 9일로 기록한다. 『阿部充家關係文書』 No.111-47; 「一年予定으로 崔麟氏洋行」,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崔麟氏歸國」, 『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 「崔麟氏再昨歸國」, 『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 『如菴文集』(如菴崔麟先生文集編纂委員會, 1971).

³⁹² 『阿部充家關係文書』 No.111-47; 「一年予定으로 崔麟氏洋行」,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³⁹³ 원문에는 ‘坂谷’이라고 적혀있지만, ‘坂谷’의 잘못으로 판단했다.

³⁹⁴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 1, No. 955-41.

데,³⁹⁵ 특히 마쓰오카는 소에지마 사설이 발표된 당시 『오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이를 지지하는 논설을 썼던 인물이었다.

요컨대 최린은 동경에 체류하는 동안에 사이토와 아베 외에도 재계 및 정계의 거물급 인물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중앙조선협회(中央朝鮮協會)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던 점이 눈길을 끈다. 중앙조선협회는 조선의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교단체였지만, 식민정책 연구부문을 개설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은 단체였다. 특히 부문에는 야마모토 미오노나 이즈미 아키라(泉哲) 등 식민정책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경향 역시 자치주의정책에 호의적이었다.³⁹⁶ 아베 또한 협회의 설립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³⁹⁷

이처럼 최린이 동경에서 의미심장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연정회 2차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26년 10월 초순에 김성수, 송진우, 최린, 이종린, 최남선을 중심으로 자치운동을 모색하는 단체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유억겸(兪億兼)이 준비를 맡아 대규모 회합 자리를 계획했다고 한다. 회합은 13일에 시사간담회의 명분으로 열여 그 자리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³⁹⁸ 한편 다른 자료에서는 중심 멤버가 김성수, 송진우, 최린으로 언급되는데, 이들은 1926년 말쯤 총독부의 인물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조선에 자치를 시행하는 정책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 후 최남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때마침 찾아온 홍명희와 이 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³⁹⁹

앞의 자료와는 다소 경위가 다르지만, 어쨌든 최남선을 통해 자치운동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게 된 홍명희는 바로 다음날 안재홍을 찾아가 반대의사를 확인했다.⁴⁰⁰ 안재홍은 김준연과 함께 민흥회(民興會)를 찾아가 계획

395 『齋藤實日記』 1926년 11월 24일, 1927년 1월 9일.;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 1, No. 955-41.

396 야마모토에 대해서는 1장에서 자세히 보았지만, 이즈미 또한 니토베의 후세대로 조선에 자치주의 정책을 주장했고, 후일에는 경성제대 교수로 부임하기도 했다.

397 중앙조선협회에 관해서는 李炯植,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 『朝鮮學報』 204集 (2007.7).

398 「梗概」(1927.1). 이때 회합에 참여한 인물로 박희도, 김준연, 조병옥, 김여식, 최원순, 한위건, 심우섭, 이광수, 하영로, 김찬영, 홍명희, 박승철, 백관수, 민태원, 김필수 등이 언급된다.

399 홍명희는 당시 평안북도 정주(定州)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동기휴가차 올라왔다.

400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을 알렸으며,⁴⁰¹ 민홍회의 명제세(明濟世)는 바로 허일(許一)과 이영(李英, 전진회)을 만나 자치운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사간담회가 열리는 장소로 회원을 파견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간담회에는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았고⁴⁰² 안재홍이 모임의 중지를 알리면서 사태는 수습되었다. 이리하여 연정회 계획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⁴⁰³

(3)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안재홍을 찾아간 홍명회는 그 자리에 신석우까지 불러 대책을 협의했는데, 그때 합의된 것이 “순진한 민족당”의 조직, 즉 신간회의 결성이었다. 이에 안재홍은 국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역할을 맡았고 홍명회는 베이징의 신채호에게 연락하여 승낙을 얻어냈다.⁴⁰⁴ 이리하여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그 사실관계보다는 인식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신간회 계획의 중심에는 조선일보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⁴⁰⁵ 그 와중에 게재된 논설 「조선 금후의 정치적 추세」에는 “민족적 운동”과 “사회적 운동”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만약 “통치군들의 정책”이 지금처럼 “좌익의 운동”에는 “억압”으로, “우경적 계통”에는 “조장”으로 일관한다면, “조선인의 정치생활은 결국 좌경이나 우경이나 하는 기로에서 그 하나를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이때 좌경과 우경의 분기점은 “비타협적 민족운동”과 “민족적 타협운동” 사이에 있는 것으로, 조선의 정치운동은 앞으로 ‘좌경적 비타협운동’과 ‘우경적 타협운동’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앞날 또한 이러한 경향과 함께 결정되는데, ‘좌경적 비타협운동’으로서 ‘협동’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401 민홍회는 1926년 7월에 서울과 계열과 물산장려회 계열의 제휴로 이루어진 단체로 정우회와 다른 노선으로 협동을 모색했지만, 결국 신간회로 흡수되었다.

402 안재홍, 김준연, 유익겸, 김여식, 조병옥 5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403 「梗概」(1927.1)

404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405 결성 당시 회장에는 조선일보 사장 이상재가, 부사장 신석우와 주필 안재홍은 총무간사를 맡았다. 「新幹會 創立大會 會衆은 無慮 千餘」, 『조선일보』 1927년 2월 16일; 「部署까지 整頓된 新幹會의 陣容」, 『조선일보』 1927년 2월 19일.

논설은 이러한 입장에서 ‘우경적 타협운동’에 나아갈 세력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내지연장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각파유지연맹 혹은 시국대동단”과 같은 종류이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타협운동의 위상을 절하시킬 뿐이라고 보았다. 둘째로 “협의원, 도평의원 기타 공직자급의 인물들”로 “지방적 이권문제”를 중심으로 “타협운동의 중견세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셋째로 “식자계급 또는 지사(志士)의 부류의 사람들로 민중의 신망이 있는” 세력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비로소 민족적 및 사회적의 해방전선 위에 상응한 혼란과 및 분열”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즉 마지막 세력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는데, 그것은 “소위 자치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을 의미했다. 자치운동에 대해서는 “기미운동 당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회색분자’의 대두라는 맥락에서 인식했으며 따라서 첫 번째 세력과 동일한 “타협파”(=친일파) 범주로 이해하고 있었다.⁴⁰⁶ 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 민중의 선망을 토대로 협동전선에 분열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힘이야말로 아베가 ‘인심수람=합의조달’의 원천으로 보았던 것이었다.

논설은 우경적 타협운동을 “기회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좌경적 비타협운동을 “민족좌익전선”으로 규정하여 대치시켰다.⁴⁰⁷ 이러한 규정은 물론 신간회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는데, 신간회란 “우경적 사상을 배척하고 민족주의 중의 좌익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⁴⁰⁸ “좌익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써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⁴⁰⁹ 이처럼 좌우를 기준으로 자타를 구분해 나갔는데, 이때 ‘타협성’의 핵심으로 본 것이 ‘통치자와의 관계’였다. 일본은 조선이 “얼마쯤 좌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회유적 혹은 양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협운동이란 “통치군들과 연락 및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관계적 타협운동”에 다름없다. 따라서 그것은 “출발점부터 그릇된” 운동이라는 것이다.⁴¹⁰

406 「朝鮮今後の 政治的趨勢(1)-(4)」, 『조선일보』 1926년 12월 16~19일.

407 이러한 규정은 다른 논설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新幹會의 創立準備」,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 「民族左翼戰線의 意義 및 使命」, 『조선일보』 1927년 2월 9일.

408 「劃期的 會合이 될 新幹會 創立準備」,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

409 「民族左翼戰線의 意義 및 使命」, 『조선일보』, 1927년 2월 9일.

410 「朝鮮今後の 政治的趨勢(1)-(4)」, 『조선일보』 1926년 12월 16~19일.

그렇다면 역으로 ‘신간회와 통치자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 신간회에 대한 통치자의 인식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1926년 12월 15일의 서한에서 아베는 조선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선은 현재 “분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정세”에 있는 것으로, 총독부에서는 이 “분해작용”에 “간섭”하는 것보다 “방임”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조선은 “총독정치에 반항하는 것을 유일한 방침으로 알고 이에 위반하는 자에게는 매국 변절 등 온갖 악명”을 씌워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결력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극좌적 경향을 전환하고 우경적 방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그러한 “혁명운동이 정책적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이 분해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아베는 이러한 인식에서 조선의 분해작용을 방임하는 정책을 권유했다. 그것은 혁명운동으로부터의 전환, 다시 말해 ‘우경적 경향’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1925년 11월에 조선행을 감행했을 때도 아베의 목적은 ‘우경적 단체’를 출현시키는 데 있었다. ‘조선사정연구회’를 그러한 단체의 맹아로 보고 더 구체적인 정치단체, 즉 자치운동 단체의 출현을 모색했지만 최린과의 대담과 소에지마 사설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난 연정회 2차 계획, 그리고 ‘신간회 결성의 흐름까지도’ 그는 ‘우경적 방면을 향한 분해작용’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의 인식에서는 ‘민족주의의 좌우구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 좌경화’에 길항하는 세력의 출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에서 강조하는 분기점—우경적 타협운동과 좌경적 비타협운동—또한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혁명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하는 흐름이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협동전선=신간회’ 또한 ‘우경적 경향’에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베의 인식은 과연 통치자에게 ‘정치운동’의 경계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준거가 된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며 어디서부터가 위반인지, ‘합법적 정치공간’을 경계 짓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의 기반이탈과 독립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 통치자의 ‘임계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이것이 합법성의 안과 밖을 결정짓는 기준이었다면, 신간회에 대한 인식 또한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신간회에 대한 통치자의 대응을 결정짓는 준거로도 적용된다. 신간회에 대한 통치자의 대응을 바라보는 관점은 흔히 ‘탄압’의 측면을 강조해왔다. 물론 탄압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양자의 관계는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었다. ‘합법적 정치공간’을 경계짓는 임계점은 조선의 정치운동에 대해 ‘탄압’과 ‘교섭’이 교차되는 지점을 설명해 준다. 그것은 신간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그 후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탄압과 교섭’의 교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복합적인 접근의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다.

신간회의 결성을 결의한 홍명희, 안재홍, 신석우 세 사람은 즉시 강령을 작성했다. 이를 받기인 명단과 함께 각 신문사에 돌렸지만, 거의 모두가 게재를 주저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 시비를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의 양해”⁴¹¹를 얻을 필요성을 실감한 세 사람은 “당국과 접근성을 갖는 신석우를 중개로”⁴¹²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다.⁴¹³ 종로경찰서를 찾아간 신석우는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때 당국은 ‘강령’에 대해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비교한 것이 아래 표이다.

[표1] 강령의 수정 내역⁴¹⁴

수정 전	수정 후
1. 조선민족으로서 정치경제의 구경적(究竟的) 해결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타협주의를 부인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함

수정내역을 보면 먼저 전반에 걸쳐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수정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3항에서는 ‘타협주의’라는 말이 ‘기회주

411 「梗概」(1927.1)

412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413 신석우는 1925년 9월에 조선일보가 발행정지를 당했을 때도 아베를 통해 미쓰야 경무국장과 교섭을 벌인 바 있었다. 『齋藤實關係文書』書簡の部 1, No. 283-89.

414 수정 전은 「梗概」(1927.1), 수정 후는 「劃時期的 會合이 될 新幹會 創立準備」,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

의'로 수정되었다. 이는 '우경적 타협운동', 즉 '자치운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조항이었는데, '기회주의'라는 표현은 그 의도를 모호하게 만드는 조치였다고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1항에서는 '구경적 해결'이라는 말이 삭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방'을 연상시키는 말로 바로 제국의 임계점에 저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이 같은 관련자료에 기록된 신석우와 전진회 간부 사이의 대화이다. 대화는 전진회 간부가 신간회 계획에 설명을 요구하는 대목에서 시작한다. 신석우는 “우리가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는 좌경단체”라고 대답했는데, 전진회 간부는 “그렇다면 우리와 제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석우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데, “우리는 민족주의자 중의 우경파를 배척하고 좌익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적 좌경운동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⁴¹⁵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당국이 이를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확인하고자 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신석우는 자신이 말하는 '좌경단체', 즉 신간회는 '민족주의 내 우경파'에 대한 '좌익전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산주의적 좌경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었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 전체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전진회는 정우회선언을 '개량주의적 우경화'로 규정하고 '방향전환=사회주의운동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신석우의 말은 '합법적 정치운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은 좌익전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휴 또한 불가능하다는 의사표명이었던 것이다.

당국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 또한 이 점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말은 같은 '좌경단체'이지만 '합법성' 속에 들어온 단체란 그들의 인식에서는 '우경단체'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신간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합법적 및 온건한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복리증진과 장래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점, “제국의 조선통치를 부인하거나 이에 항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확인하고 있었다.⁴¹⁶ 당국이 신간회의 결성을 허가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합법성'은 제국

415 「梗概」(1927.1). 전진회는 정우회선언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협동전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신간회에 대해서도 결국 뒤에 참여하게 되었다.

416 『治安狀況』(1930.10)

이처럼 신간회와 당국 사이에도 ‘교섭’의 측면이 엄연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이 늘 ‘탄압’과 표리일체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강령’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맥락을 잘 보여주는데, 앞서 ‘민족’과 ‘타협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우리’와 ‘기회주의’로 수정하는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정치경제의 구경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하는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교섭과 탄압을 갈랐던 것은 바로 ‘해방’(독립·혁명=주권국가)을 연상시키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 늘 ‘합법성’을 결정했던 기왕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illegible]

- 186 -

주도권을 장악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당분간은 협동을 유지하도록 당부되었다.⁴¹⁷

한편 결성 당시 배제되었던 ‘민족주의 우파’도 신간회 확대에 따라 참여 방침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초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송진우는 최린의 천도교신파, 최남선의 계명구락부파, 이광수의 홍사단파 등과 함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른 시기에 파탄할 것으로 예측”했던 신간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자 “잠재세력을 부식하는 방책으로 전환”했던 것이다.⁴¹⁸ 이에 따라 1927년 12월에는 평양지회의 간부로 김성수의 이름이 올라왔고⁴¹⁹ 1928년 1월에는 경성지회에 송진우가 가입했다. 특히 민족주의 좌파의 본거지였던 경성지회에 대한 가입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간회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릴 정도였다.⁴²⁰

이는 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결성 당시 신간회 본부는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 대세였다.⁴²¹ 이들은 기타 세력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는데,⁴²² 먼저 5월의 회합에서는 다음 세 가지 인식을 확인했다. 첫째로 동아일보, 천도교신파, 수양동우회 등 자치운동 세력들은 신간회 탈취 계획을 수행할 것이며, 둘째로 공산당 또한 신간회를 몰래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의 총역량을 결속한 신간회는 각 계층의 혼합체로 성립된 만큼 내부에 분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하에 마련

417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治安狀況』(1929.5). 이 방침은 안광천이 헤게모니 전취론을 제기하면서 잠시 흔들리지만, 안광천의 실각으로 다시 유지되었다. 노정환(안광천), 「신간회와 그에 대한 임무」, 『조선지광』 1927년 11월호; 미성, 「신간회와 그 임무에 대한 비판」, 『조선일보』 1927년 11월 29일~12월 3일; 김기승(1991), pp. 113~114; 이균영(1993), pp. 137~139.

418 『治安概況』(1928.5)

419 평양지회는 1927년 12월 20일에 설립되었다. 당시 평양은 회유회와 서울과의 갈등으로 지회설립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김성수는 주요한(朱耀翰)을 통해 조만식(曹晩植), 김동원(金東元), 이승훈(李昇薰) 등 민족주의적 지방유지 세력을 설득하여 지회설립을 성사시켰다. 주요한은 이광수와 함께 수양동우회(수양동맹회의 후신)의 기관지 『동광』을 발행했던 인물로 이 당시 동아일보 평양지국장을 지니고 있었다. 『治安概況』(1928.5); 이균영(1993), pp. 304~310.

420 『治安概況』(1928.5) 당시 가입요건은 ‘강령을 승인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기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송진우는 이를 통과하기 위해 원로 윤치호의 양해를 얻고 회장을 설득시켰다.

421 본부의 중심이었던 총무간사회도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대세였다. 이균영(1993), p. 155.

422 회의의 참가자는 신석우, 안재홍, 홍명희, 박동완, 권동진, 박래홍(朴來泓), 최익환(崔益煥), 이관용(李灌鎔), 이옥(李鈺) 등이었다.

된 대안이 ‘경성지회의 장악’과 ‘신간그룹의 조직’이었다. 경성지회는 6월 설립 예정이었는데, 이때 한용운을 회장에 취임시키는 동시에 권동진을 중심으로 신간그룹을 조직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치운동 세력을 의식한 대책이었다.

이어 11월에도 회합을 가졌는데,⁴²³ 이때도 주된 경계 대상은 자치운동 세력이었다. 회합에서는 일본이 자치를 허용할 의사가 없는 이상 운동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선전할 것, 신간회 내부에 자치당이 출현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간그룹을 ‘산간당’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이미 마련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 이때 신간당계획과 함께 새로운 강령까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吾等の 政治經濟的 究竟의 解決을 도모한다.
2. 吾等の 단결을 鞏固히 한다.
3. 吾等은 自治運動을 배척한다.⁴²⁴

여기서는 ‘타협주의’에서 ‘기회주의’로 수정받았던 말이 ‘자치운동’이라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방’을 연상시키는 ‘정치경제적 구경의 해결’이라는 말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⁵

송진우의 경성지회 가입은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그 대응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배척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듯이 각 세력의 ‘혼합체’로 구성된 만큼 분열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었던 신간회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신간회가 갖는 ‘각축장’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상황이기도 했다. 통치당국과 민족주의 좌파의 교섭으로 결성된 신간회는 이제 그 속에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우파 세력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각축장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신간회운동에 나타난 두 가지 협동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

423 첫 번째는 이관용의 저택에서, 참가자는 신석우, 박동완, 박래홍, 권동진 등. 두 번째는 신석우의 저택에서 참가자는 박동완, 안재홍, 홍명희, 박래홍, 권동진, 최익환, 이관용, 송내호 등.

424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425 이상 대책회의에 관한 내용은 모두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해 ‘정치의 각축장=합법적 공간’에서 ‘주체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신간회와 주체성의 전개 양상

(1) 신간회와 생존의 자기결정

1) 정기대회를 둘러싼 갈등: 생존운동이라는 제안

신간회 본부에서는 자치운동 세력에 대한 경계의식이 더 높았지만, 분열은 예상과 달리 ‘사회주의 측’에서 촉발되었다. 그 배경이 된 것이 신간회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다. 불과 1년 만에 123개의 지회와 2만 명의 회원⁴²⁶을 자랑하게 된 신간회에서는 1주년을 기념하는 정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또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대회는 당국으로부터 돌연 금지를 당하게 되는데, 이후 1929년 6월에 복대표대회(復代表大會)가 허가될 때까지 전체대회에 대한 금지조치는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부와 지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먼저 당국의 ‘금지이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①新幹會는 昨年 봄에 組織되었는바 此에 對하여 同會가 참으로 朝鮮人의 健全한 自覺을 促進하고 穩健 合法的으로 行動함이 明白함에는 구태여 甚히 干涉 取締를 加할 必要를 認定치 않으나, ②그러나 組織 以來에 觀望함에 同會는 單히 比較的 空漠한 綱領 三綱을 揚揚한 外에 組織의 目的 實施事項 등이 那邊에 在한지 此에 對한 具體的 發表를 아직 볼 수 없으며 ③兼하여 各地에 組織되어 있는 支會 中에는 恒常 着實을 缺하여 徒然히 激越한 行動에 나아가는 事例가 적지 않으므로 ④如此히 目的이 不明하고 더구나 此等 不穩當한 支會를 가진 本會를 容認하는 것 같은 것은 쓸데없이 事端을 惹起하고 社會의 秩序를 害하는 念慮가 있다고 認定함으로 治安維持 上 此의 開會를 禁止하기로 함(번호는 필자)⁴²⁷

먼저 ①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신간회의 존립의의를 밝히는 대목인데, 그것은 조선인을 하여금 ‘건전한 자각’을 촉진하여 ‘온건 합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데 있었다. 특히 ‘자각의 촉진’은 강령 제1항을 의식한 표현으로 이해되는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의 촉진’을 내걸었던 그 조항이 ‘구경적 해결’

⁴²⁶ 지회 및 회원 수에 대해서는 이균영(1993), pp. 234~260.

⁴²⁷ 『萬人矚目的 二月十五日!-新幹大會突然禁止』, 『조선일보』 1928년 2월 8일.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온건하고 합법적 운동’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정기대회가 금지된 것은 바로 그 ‘합법성’에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②와 ③에서는 그러한 의혹을 부추긴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는데, 먼저 ③에서는 ‘지회의 행동’이 지적되었다. 정기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시 조선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3차 검거가 감행되었는데, 그때 체포된 당원 중 절반 가까이가 신간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회에 대한 지적은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한 것이었는데, 이는 앞서 본 사회주의 측의 방침이 실천된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합법성의 임계점’에 저촉된 행동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②에서 ‘강령’의 문제가 다시금 거론된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공막(空漠)한 강령’을 내걸은 외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실시사항’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④에서는 신간회의 ‘불명한 목적’과 ‘불온한 지회’ 두 가지를 이유로 대회의 금지를 알렸던 것이다.

‘강령의 모호성’을 지적하여 ‘목적의 제시’를 요구했던 근본에는 ‘해방’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렇다면 당국은 신간회를 ‘합법성’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 무엇을 교섭하고 있었을까. 제1항에 제시된 ‘정치적 경제적 각성의 촉진’이 ‘건전한 자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막한 강령’에 반영하여 ‘명확한 목적’으로서 증명하라는 것이 그 요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국은 제3항에 제시된 ‘기회주의의 부인=반(反)자치주의’ 이상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선의 정치운동을 제국의 의도에 알맞게 조율하는 방향을 의미했다.

한편으로 ‘강령’에 대해서는 당국뿐만 아니라 ‘지회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정기대회를 앞두고 각 지회에서는 결의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령의 개정’이 의제로 올라온 것이다.⁴²⁸ 동경지회를 예로 보면

428 2월 2일에는 마산지회, 5일에는 김제지회에서 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검열에 의해 대부분이 글씨가 삭제되었다. 하지만 위의 동경지회 개정안과 많은 부분이 겹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마산지회의 개정안은 “1.우리는 ××××××××××期함. 2.우리는 一切××××를 排擊함”, 김제지회의 개정안은 “1.本會는 우리 朝鮮××××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의 ××을 期함. 2.本會는 全××의 單一黨完成에 努力하는 同時에 ××××××××××으로서 當面目標를 定함”이었다. 『新幹會各地消息』, 『조선일보』 1927년 2월 4일 및 2월 9일.

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
2. 우리는 전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함
3. 우리는 일체의 개량주의운동을 배척하고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함

당국의 수정 방침에서 본다면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이나 ‘개량주의’에 대한 배척을 주장한 점 등이 다소 거슬릴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문제적이었던 것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내세운 점이었을 것이다. ‘불온한 지회’에 대한 의혹이 ‘해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시화된 것을 의미했다. 이는 분명히 합법성에 대한 위반이자 제국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회의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이뿐만 아니라 ‘본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정기대회를 둘러싼 복합적인 갈등양상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당국, 본부, 지회 간의 갈등은 ‘식민지 정치성’이 갖는 ‘역설적인 아포리아’를 재현한다. 해방을 둘러싸고 한쪽(당국)에서는 의혹을 제기한다면, 다른 한쪽(지회)에서는 진실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전자의 의혹이 확정되면 정치공간은 폐쇄되지만 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간회운동은 비판과 매도로 분열될 수 있다. 하지만 본부의 입지는 그러한 갈등과는 다른 곳, 즉 ‘합법적 공간’에서 어떻게 ‘정치 세력화=주체화’를 달성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모색되었을까. 먼저 통치 측에 대해서는 대회 금지가 통보된 바로 다음날 논설을 게재했다. 거기서는 공산당 사건이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득을 표시하면서도 공산당과 신간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실을 야기할 만한 하등의 행동이 없는 것은 누구든지 족히 변증할 것”이라며 반박했다.⁴²⁹ ‘불온한 지회’에 대한 의혹의 불식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어 2월 11일의 논설에서는 ‘강령’의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1주년을 맞이한 정기대회에서는 신간회의 “목적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 발표

429 「新幹大會禁止」, 『조선일보』 1928년 2월 8일.

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개회도 되기 전에 이때까지의 발표가 충분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로 “도리어 ‘그 목적이 나변(那邊)에 있는지’를 의아하게” 만든다며 당국의 문구를 가져와 비판을 되돌린다. 결국 ‘공막한 강령’이란 “금지하기를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만약 당국의 목적이 금지에 있다면, 그것은 “신간회의 존립을 허락한 방침과 크게 모순”되는 대응으로, 신간회가 “조선인의 건전한 자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인의 이해를 대표하여 성립된 통일적 기관임은 당국으로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기 때문이다.⁴³⁰

요컨대 신간회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자각’을 촉진하는 단체라는 점, 다시 말해 ‘해방’과 연루되지 않는 ‘합법적 정치운동’이라는 점을 해명하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령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이상의 목적을 요구하는 당국에 대해 ‘결성을 허락한 시점’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합법성을 준수하면서도 당국의 조율을 무화시키려는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1928년 2월 15일 대회를 금지당한 본부는 그 대안으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그 소식을 알리는 글에서 ‘신간회운동의 형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生存運動의 長遠한 途程에 있어서 解放運動의 多難할 全途程에 있어서 一週年의 光陰이란 惝
 靄은 것이다.⁴³¹

Ⅲ장에서 보았듯이 ‘생존’이라는 개념은 ‘생의 정치담론’을 구성하는 논점 중의 하나였다. 또한 ‘생의 정치담론’의 등장과 함께 계획된 연정회는 스스로를 ‘생활운동’으로서 규정하고 있었다. 위의 구절에서는 신간회운동을 ‘생존운동’으로서 규정하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생활운동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된 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좌파의 입장에서 그것은 ‘민족주의 우파=자치운동’과 연루된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존운동’이라는 자기규정 또한 ‘독립, 혁명’과 다른 영역에서 ‘정치’를 재정의하는 노력이었던 점은 마찬가지였다. 아래 구절은 ‘생존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430 「新幹支會와 地方警察」, 『조선일보』 1928년 2월 11일.

431 「新幹會의 創立記念」, 『조선일보』 1928년 2월 15일.

우리가 이미 朝鮮의 朝鮮사람이거늘 ‘朝鮮에 머물러서’를 高調코자 하니 우습다하랴? 차라리 悲壯한 느낌이 깊다.…朝鮮의 人民들! 그의 識者 先驅者들은 모다 朝鮮人의 本據인 朝鮮土에 머물러서 調査하고 研究하고 그리하여 일하고 싸워서 累千年의 故山을 등지고 故土를 밟고서 最後까지 努力하기를 새삼스럽게 慫慂하는 바이다. 朝鮮人이여 朝鮮에 머물러라! 아니 世界로부터 朝鮮에 돌아오너라! 이 最後의 城廓에! 世界로에의 發足點인 朝鮮에 돌아오너라!⁴³²

생존운동을 논하면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조선에 머물러서’ 전개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세계로부터 조선’에 들어와 그곳을 ‘세계로에의 발족점’으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조선에 머물러서’ 싸우는 것이 생존운동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이다.⁴³³ 이 경우의 ‘조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주권이 없는 식민지조선’에 들어가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이광수의 발상과 겹쳐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생존운동’이란 무엇보다도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였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어야 할 문제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해방운동’과 ‘생존운동’의 관계일 것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월 23일의 아래 논설이다.

①朝鮮人은 그동안에 表面에 나서서 第一線에서 기 쓰고 싸우려는 것 외에 그의 뒷골목에서 차근차근하게 또 끈덕지게 힘들이는 살 길을 찾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生存運動의 뒤골목! 앞 大門에서 고함치고 내닫는 것 외에 뒤골목에서 꾸준꾸준히 힘쓰는 것이 얼마나 또 尊重한 일인 것을 責任 있는 先驅者들은 깨닫고 承認하고 또 協成하여야 한다. ②이것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技術과 産業과 其他 生活上 必要한 일에 對하여 人間的 道德的의 努力을 等閑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 運動이다.…③(이러한 운동이-필자) 어느 點으로든지 우리의 解放運動을 間接으롤지라도 껍 助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번호는 필자).⁴³⁴

먼저 ①에서 운동은 두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표면에 나서서 제일선에서 기 쓰고 싸우는 운동’, ‘대문에서 고함치고 내닫는 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그 뒷골목에서 차근하게 또 꾸준하게 살 길을 찾아 힘쓰는 운동’

432 「조선에 머물러서-朝鮮人의 生存運動」, 『조선일보』 1926년 12월 13일.

433 이는 논설의 주장은 안재홍의 ‘국제적 민족주의’와 겹치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조선=합법적 정치공간’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논의였다는 점이다. 박찬승의 분석에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 안재홍의 ‘국제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박찬승(2007).

434 「大變動이 오는 날까지-生存運動의 뒤골목」, 『조선일보』 1927년 3월 23일.

이다. 생존운동은 이 중 바로 후자의 경우를 의미했다. 그리고 ③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생존운동에 간접적으로 힘을 받는 것이 ‘해방운동’이다. 그것은 ①에서 말하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 사이에는 단순한 ‘양립’이 아니라 시간적인 ‘서열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존운동을 그동안 소홀히 했지만 우선해야 하는 운동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졌을까. 이것이 ②에서 제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꾸준히 살길을 찾아가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생활상 필요한 일’을 노력하는 운동을 의미했다. 이 점은 2월 11일의 논설과도 연계되는데, 거기서 신간회운동은 “조선인의 이해와 충돌되는 모든 점”에 관련하여 전개되는 운동으로 설명되었다.⁴³⁵ 한편 3월 27일의 논설에서는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는데, 이는 당국이 불투명한 목적과 함께 지적했던 ‘실시사항’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의미로 제시된 것이기도 했다. 거기서는 “첫째 농민교양에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둘째 경작권의 확보 및 외래이민의 방지”, “셋째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확립”이 신간회운동이 실시해야 할 당면 문제로 제시되었다. 요컨대 ‘생존운동’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다만 그것은 조선인의 ‘생활’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치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³⁶

본부의 고심스러운 대응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1929년에 예정된 정기대회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그 이유는 기왕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는데, 다만 강령에 대해서는 한층 더 그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종로경찰서의 고등주임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郎)는 작년에 이어 금지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만을 드러냈다. 신간회는 작년의 금지 이후에도 강령에 대해 “하등 수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금지 때만 해도 당국은 명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모호성과 목적의 제시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본부에서는 결성 당시의 원점을 확인하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수정’이라는 말은 당국의 의도가 원상복귀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즉 ‘그 이상의 결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435 「新幹支會와 地方警察」, 『조선일보』 1928년 2월 11일.

436 「實際運動의 當面問題-新幹會는 무엇을 할까(1)~(2)」, 『조선일보』 1928년 3월 27~28일.

것이였다.

한편 계속되는 금지 조치에 지회 측의 반발 또한 한층 거세졌는데, 본부에서는 이번에도 “자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⁴³⁷ 즉 해방운동으로 나아가는 행동은 계속해서 자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만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에 본부에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북대표대회의 개최였다.⁴³⁸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렸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두 번의 금지로 당국, 본부, 지회 간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써 6월에 열린 북대표대회를 통해 본부는 집행위원제로 개정되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 세력에 지탱된 허헌 중앙집행부가 탄생했다. 문제의 강령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허헌 집행부의 탄생은 지회의 행동을 견제해온 당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를테면 ‘공막한 강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주의 세력’이 운동을 장악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경향은 곧바로 가시화되었다.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이른바 민중대회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⁴³⁹ 12월 학생운동에 대한 진상파악을 마친 신간회는 허헌의 저택에서 회합을 열어 민중대회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했다.⁴⁴⁰ 그 세부사항으로는 연설회의 개최와 그것이 금지된 즉시 시위운동으로의 이행, 뼈라의 배포, 호외 보도, 지방지회에 대한 행동 요구 등이 지시되었는데, 그것은 3.1운동을 방불케 하는 계획이었다. 신간회운동은 이제 제국의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해방의 공간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바로 탄압이 들어왔던 것이다.

437 여기까지 『準備完成된 新幹會大會 昨日에 突然禁止』, 『조선일보』 1929년 3월 12일.

438 3월 28일 대회금지에 대한 임시간사회가 열려 지회의 의견을 수합할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4월 11일 경성지회에서 북대표대회에 대한 제안이 제기된 것이다. 정기대회는 지회마다 비례대표제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북대표대회는 여러 지회를 합쳐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것이었다. 이균영(1993), pp. 161~201.

439 10월 나주(羅州)의 한일학생 간에 붙은 시비를 계기로 일어난 시위운동은 12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공산당 당원이자 광주지회 간부였던 인물들의 지도가 있었다. 한편 운동이 알려지자 신간회에서도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후 민중대회가 계획되었다.

440 이날 참가자는 허헌, 권동진, 송진우, 안재홍, 홍명희, 조병옥, 이관용, 한용운, 주요한, 이시목(李時穆, 중외일보), 손재기(孫在基, 천도교) 등이었다. 동아일보의 송진우, 수양동우회의 주요한 등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2) 자치를 둘러싼 갈등: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민중대회사건 이후 신간회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탄압을 겪고 난 후에 재조직된 본부는 마침내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후술하지만, 이는 ‘자치운동’의 본격적인 개시와 함께 나타난 변화이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우파’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다. 민중대회 사건 이후 간부들의 체포로 와해된 본부를 이끈 김병로 체제⁴⁴¹가 우경화 경향을 결정지었던 것은 박문희 사건이었다. 간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1930년 봄에 『대중공론』에 “자치문제에 관한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동시에 지방위원들에게 “운동방침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보내어 자치운동을 권유했던 것이다.⁴⁴²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은 경성지회였다. 결정 당시의 본부와 연계되었던 경성지회는 본부가 바뀐 이후에도 민족주의 좌파 세력의 본거지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다. 박문희 사건이 알려지자 경성지회에서는 건의안을 결의하여 본부에 공식적으로 처분을 요구했는데, 이에 본부는 “내사한 결과 우리 회의 지도정신에 위반된 점”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⁴⁴³ 여기서 말하는 ‘지도정신’이란 ‘반자치주의’를 내걸었던 강령 제3항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컨대 박문희 사건을 신간회의 ‘반자치주의’ 정신에 위반된 행위로 규탄한 경성지회에 대해 본부는 사실무근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박문희 사건에 대해서는 11월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때 박문희에 대해서는 건책처분이 결정되었지만, 이후 박문희가 정식으로 선출된 김병로 집행부에서 중앙집행위원을 맡게 되는 등을 볼 때 이 처분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⁴⁴⁴ 더구나 회의에서 ‘규약수정안’이 제출되자 자치운동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수정안에는 “우

441 허헌 집행부에서 재무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사건 후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442 『治安狀況』(1931.7);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一)』, 『조선일보』 1931년 1월 19일. 『대중공론』은 『조선강단(朝鮮講壇)』의 후신으로 발간된 종합잡지로 1930년 3월부터 6월까지 간행되었다.

443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二)』,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

444 김병로는 민중사건 이후 본부를 이끌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었다. 11월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열린 것으로, 원래는 전체대회에서 결정될 문제였지만 당국의 금지로 권한을 대행했다.

리는 지도정신에 배치되는 단체라도 당면이익을 위하여 협동투쟁을 요하는 경우에는 호상연락”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치운동과의 협동’을 명문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⁴⁴⁵ 그것은 “천도교처럼 지도정신을 달리하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이와 제휴하여 합법운동”을 전개한다는 뜻으로, “신간회의 근본정신을 무시”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⁴⁴⁶

이 때문에 회의 후 경성지회에서는 본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본부의 합법운동에 대항하여 비합법운동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당한 대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 사유였는데, 요컨대 당국은 자치운동과의 협동을 모색하는 본부의 입장을 ‘합법운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경성지회의 입장을 ‘비합법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국의 금지사유를 들은 경성지회는 본부에 대해 “모종 운동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각 지회에 공표”하도록 요구했다.⁴⁴⁷ 즉 ‘합법운동’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국, 본부, 경성지회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합법운동’이라는 말이 ‘자치운동’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반자치운동’은 ‘비합법운동’으로 규정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합법적 정치운동’이란 결코 ‘자치운동’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으며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신간회’ 또한 ‘비합법적 정치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쓰임새가 지금의 인식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특정한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편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국이 여기에 이르러 자치운동을 옹호하고 입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즉 ‘합법적 정치운동’에 대한 의도를 확실히 ‘자치운동’에 맞추는 모습이 여기서 확인된다.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 당시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자치안’을 검토하게 된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에서는 신간회가 결성된 즈음부터 자치 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먼저 1927년 3월 사이토는 관방 문서과장 나카무라 도라노스케(中村寅之助)에게 정치적 권리부여 문제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때 작성된 방안을 본국에 가져가 원로인 사이온지 긴모치(西

445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二)」,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

446 『治安狀況』(1931.7)

447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三)」, 『조선일보』 1931년 1월 21일.

園寺公望)와 당시의 수상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헌정회)에게 회람시켰다.⁴⁴⁸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토의 제네바 출장과 총독사임으로 일시 정지되는데,⁴⁴⁹ 1929년 8월에 재임이 결정되자 곧바로 재개되었다.⁴⁵⁰ 사이토는 이번에는 내무국장 이쿠타 기요사부로(生田清三郎)의 주도로 방안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제국의회’와 ‘조선의회’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후자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드러내게 되었다.⁴⁵¹ 12월 사이토는 작성된 방안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 하마구치 수상을 비롯해 주요인물들과 교섭을 벌였는데, 이때도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⁴⁵² 사이토는 이듬해 2월에도 수정한 방안⁴⁵³을 가지고 동경으로 건너갔지만 본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다.⁴⁵⁴

이처럼 본국과의 교섭 자체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지만, 총독부에서 자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로, 당국에서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당국 또한 이즈음부터 강령에 대한 수정 요

448 나카무라안은 자치주의 방식과 내지연장주의 방식을 비교 검토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권리부여 방식이 검토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朝鮮在住者の國政並地方行政參與に關する意見』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1-13; 齋藤子爵記念會 編, 『子爵齋藤實伝』 第2卷(齋藤子爵記念會, 1942).

449 사이토를 제네바 군축회의로 파견하는 안건은 나카무라안의 검토와 동시기에 결정되었고, 그는 우가키 가즈나리(宇垣一成)를 대리총독으로 세워 제네바로 떠났다. 10월에 귀국했을 당시 정권은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정우회 내각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다나카는 육군대장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를 총독으로 세우는 계획을 추진시켜 사이토를 해임시켰다.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湾總督府と日本帝國』(三元社, 2008), pp. 512~513.; 李炯植(2013), p. 195.

450 1929년 7월 일본에서는 다나카 내각이 무너지고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민정당(民政黨) 내각이 들어섰다. 민정당은 헌정회와 정우본당(政友本黨)의 합당으로 이루어진 정당이었다. 이에 따라 야마나시 총독의 사임이 결정되었고 후임으로 사이토가 임명된 것이다. 岡本眞希子(2008), pp. 522~528.

451 『朝鮮に於ける參政に關する制度の方案』,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5-5.

452 이때 만난 인물은 척무대신 아쓰다 겐지(松田源治), 내무대신 아다치 긴조(安達謙藏), 농임대신 마치다 추지(町田忠治), 육군대신 우가키 가즈나리(宇垣一成), 경시총감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추밀원 서기관장 후타가미 효지(二上兵治),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등이다. 李炯植(2013), p. 239.

453 『參政權問題 朝鮮に於ける參政に關する制度の方案』,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5-7.

454 이때의 수정안은 의회설치 방식을 권장하되 그것이 내지연장주의를 벗어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후퇴한 점이 많았지만, 결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정만이 받아들여졌다. 본국에서는 여전히 “조선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근본방침”은 결국에는 “조선독립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인식이 농후했다. 李炯植(2013), p. 239.

구를 숨기지 않았는데, 더욱이 자치운동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신간회에 대한 통치 측의 의도가 결국 어디에 정착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이즈음 경성지회 측에서도 새로운 전개가 나타나게 된다. 경성지회로부터 ‘합법운동=자치운동’에 대한 의사표명을 요구받은 본부는 1930년 12월 23일 「운동정세에 관한 지시의 건」이라는 공문을 돌렸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경성지회 내부에 분규가 일어난 것이다. 공문에는 “신간운동은 수립한 강령과 기본인 정신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에 용훼(容喙)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암암리에 사죄한 것”으로 해석한 측에서는 불신임결의안의 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문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지회에 통의문을 돌렸다.

요컨대 경성지회 내부에 ‘화해파’와 ‘반대파’의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인데, 여기에는 ‘해소론’의 등장이 관련이 있었다. 화해파가 공문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이 강령과 기본정신에 대한 회귀를 약속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앞서 당국과의 교섭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족주의 좌파가 중시했던 것들을 결성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즉 ‘반자치주의’ 원칙의 준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공문을 읽으면서도 반대파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公文에는 아래와 같은 句節이 있다. “元來 新幹會의 組織自體를 보아서 民族的 各層派 各의 鬭爭 要求를 通하여 當面利益을 爲하여 鬭爭의 可能한 最大限度의 戰畧을 가질 뿐이요!” 民族的 當面利益이란 大體 무엇인가? 우리 會는 적어도 一定한 目標를 爲하여 鬭爭하는 團體요 決코 當面의 利益만을 爲하여 鬭爭하는 團體가 아니다. 可能한 最大限度의 戰畧이란 무엇인가? 우리 會는 오직 우리의 目標를 爲하여 突進하여야 할 것이요, 決코 可能 不可能을 標準치 않는다. 이러한 公文으로써 解消運動을 反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에 新幹會가 本部公文의 規定과 같다면 우리로도 解消運動의 先鋒됨을 어찌 주저하랴?⁴⁵⁵

반대파가 문제시했던 것은 ‘당면이익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도의 전략으로 투쟁한다’는 문구였다. ‘생활상 필요한 일’에 노력하여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생존운동’의 입장에서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이란 전혀 문제적인 문구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파의 입장은 이미 생존운동이 아니라 ‘해소운동’

455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三)」, 『조선일보』 1931년 1월 21일.

에 있었던 것으로, 거기서는 ‘당면이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표를 위해 돌진하는 운동’이 추구되었다. 공산당 재건운동 속에서 나타난 해소론은 1930년을 전후하여 서서히 퍼져갔는데,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혁명성의 상실’에 있었다.⁴⁵⁶ 당면이익을 부정하고 목표를 강조하는 주장 또한 그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이때의 ‘목표’란 바로 ‘혁명성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요컨대 신간회운동은 또다시 해방의 공간에 다다르고 있었던 셈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당국의 탄압이 아니라 자진 해소로 해산의 길을 걸어갔다. 이로써 ‘합법적 정치공간’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신간회의 해소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민족주의 좌파가 취했던 대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931년 5월 해소론이 최고조로 달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국은 처음으로 전체대회에 대한 허가를 내려줬다.

합법운동에 대한 본부의 전향과 각 지회의 찬반론의 대립은 점차 내부적 통제를 잃어 본 대회를 용인해도 치안상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회를 조종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본 대회를 개최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바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용인하기로 했다.⁴⁵⁷

여기서는 ‘치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합법운동에 대한 본부의 전향이 현저하기는 했지만 경성지회의 반대에 부딪혀 원상복귀로 돌아가고 있었고, 지회 또한 해소론의 등장으로 불온한 행동은 오히려 강화된 상황에 있었다. ‘내부적 통제’를 잃었다는 언급도 신간회운동이 그 결성 이래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된 적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다소 과장된 지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소론의 등장으로 회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확실히 처음 겪는 위기이기는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장이다. 즉 신간회를 ‘조종’하는 의미에서는 허가를 내리는 것이 더 유익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당국은 전체대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을까.

대회는 당초 김병로파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들은 지회에서 올라온 대표들에게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비해소파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⁴⁵⁶ 공산당재건운동과 해소론에 대해서는 이균영(1993), pp. 444~461.

⁴⁵⁷ 『治安狀況』(1931.7)

조종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자격심사에 부당성을 느낀 해소파의 반발로 계획은 엇어졌는데, 이들은 별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당초에 허가된 인원보다 더 많은 대표를 승인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투표는 해소파의 다수로 끝났다. 이를 당국에서는 “당초 비해소파의 거두 김병로는 대회를 자파에 유리하게 이끌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는데” 전략이 실패했다고 기록한다. 즉 당국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회를 허가한 이유 또한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신간회는 해소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일련의 전개 속에서 민족주의 좌파가 추구했던 생존운동이란 무엇을 함의했을까. 이상에서 보았듯이 신간회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①해방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더 온건한 목적의 결정을 요구하는 측(당국), ②그 목적을 자치에서 찾는 측(민족주의 우파, 일부 사회주의), ③어디까지나 해방운동을 요구하는 측(지회, 일부 사회주의), 각각의 입장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좌파’의 입장은 늘 결성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즉 ‘반자치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었다. 먼저 ③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계에 시간적인 서열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생존운동을 해방운동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로 위치시켰다. 일시적으로라도 해방을 불문에 부쳐야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정치 세력화=주체화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②의 입장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곤두세웠고 조짐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반대와 함께 ‘반자치주의’ 원칙을 확인시켰다.

마지막 ①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간회의 목적이 ‘해방’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강령의 수정에 대해서는 ‘반자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요컨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 속에 스스로 포섭되면서도 제국이 요구한 운동형태-자치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목적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응했던 것이다. 그것은 비(非)결정을 통해 ‘자기결정’의 영역을 고수하는 수행이었으며, 그럼으로써 ‘정치 세력화=주체화’에 대한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물론 합법성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그것은 제국의 호명에 호응하는 위태로운 운동이었지만, 자기결정의 영역은 늘 제국의 의도를 완

수시키지 않는, 그것을 미끄러뜨리는 역학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2) 자치와 반제의 공존, 그리고 생활

1) 자치운동의 개시와 사회주의와의 협동

1929년 12월 18일 『조선일보』에는 「사이토씨의 자치안」이라는 논설이 실렸다. 본국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자치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무릇 自治制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學者는 말하되 그것은 가장 進歩된 植民政策의 最低階段인 征服主義 卽 從屬主義와의 對立되는 政治形態로서 統治國만을 主體로 하는 것이 아니라 植民地를 또한 主體로 하는 者이라 한다. 또는 同化主義와도 對立되는 者임으로 分離統治主義라 일컫는 것이라 하는 바 帝國主義 政治에 最後의 支柱이라는 것을 啓示하였다. …植民政策學者는 異口同聲으로 말하되 不安한 植民地에 政治的 安定을 企圖키 爲해서는 植民地를 相對的 主體로 하는 分離統治의 實現이 오직 그 方法이라 하며 敢히 自治制의 必要를 力說하고 있는 者이니 이는 무슨 까닭일까. 요컨대 그들의 注意하는 바는 車體의 動搖를 調節키 爲하여 車體와 車輪 사이에 스프링을 裝備하는 것과 같이 統治國과 植民地 사이에 政治的 緩衝地帶를 設置코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統治國을 車體와 같이 認識하는 이상 主體 二元說은 餘地없이 그 正體를 드러내는 것이다. 故로 吾人은 齋藤씨의 自治案을 볼 때에 統治國과 植民地 사이에 政治的 緩衝地帶를 設立코자 하여 또한 不完全 不徹底한 者이라 한다.⁴⁵⁸

자치주의를 종속주의와 동화주의에 대비하고 있는 점에서 이 논설이 야나이하라의 식민정책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 주체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점인데, 자치주의에서는 식민지를 상대적 주체로 인정하는 이원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제국의 다원주의적 구성원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차륜(제국)가 와해되지 않기 위해 차륜(식민지) 사이에 스프링을 정비하여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국과 식민지는 몸과 사지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미 동등한 주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II장에서 보았듯이 야나이하라의 자주주의는 본국과 식민지 양쪽 사회군을 주체로 인정하여 그 사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논의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사회’ 또한 제국을 구성하는 ‘차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조선은 ‘사회군=차륜’으로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

⁴⁵⁸ 「齋藤씨의 자치안」, 『조선일보』 1929년 12월 18일.

라서 논설의 비판에는 다소 어긋난 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나이하라의 자치주의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정치적인 종속관계’를 도의시한 논의였음은 사실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국과 식민지는 분명히 차체와 차륜의 관계, 즉 비대칭적인 주체가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체란 논설의 주장대로 ‘제국을 위한 주체’에 불과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자치운동이란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정치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제국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신간회운동의 형태로서 ‘자치운동’을 추구했던 측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927년 6월 신간회운동이 막 확대되던 시기 최린은 구미 시찰을 위해 조선을 떠났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귀국한 조선의 상황은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⁴⁵⁹ 제네바로 갔던 사이토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고, 신간회는 대회금지문제로 당국과 교착상태에 있었다. 최린은 귀국 직후의 인터뷰에서 시찰의 성과를 “소화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는 소감을 밝힐 뿐이었는데, 실제로 그는 그해 말까지 별다른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다.⁴⁶⁰

최린이 먼저 착수한 것은 ‘천도교의 통합’이었다. 그동안 교내에서는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신파를 중심으로 본부를 합의체로부터 도령제로 개혁하는 중앙집권적인 통합을 수행했다. 한편 조선농민사에 대해서도 통합계획이 진행되었다.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신파와 사회주의 세력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1925년에 결성된 이래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⁴⁶¹ 이를 천도교청년당의 부속단체로 개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사이토의 재임이 결정되자 자치운동에 대한 계획도 가동하기 시작한다. 최린은 송진우 등과 함께 자치속진회(自治速進會)라는 단체

459 「一年予定으로 崔麟氏洋行-구미각국의 정세시찰 목적」,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崔麟氏歸國」, 『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 「多數人事歡迎裡 崔麟氏再昨歸國」, 『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 「崔麟氏歡迎-수요구락부 주최로」, 『동아일보』 1928년 4월 14일.

460 「多數人事歡迎裡 崔麟氏再昨歸國」, 『동아일보』 1928년 4월 3일.

461 관헌자료에서는 설립 배경에 동아일보 세력의 관여를 지적하는데, 천도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벽사 세력(신파, 천도교 청년당)과 결탁하여 조선농민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광수도 관여했던 것으로 언급한다. 『治安概況』(1928.5). 강달영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 이광수는 수양동맹회 사업의 일환으로 황해도 재령(載寧)지방에 농지를 구입하여 회원들과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 일환으로 조선농민사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徐大鼎(1970), p. 121.

를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경찰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자치운동은 정치운동으로서 전혀 비밀로 할 것이 아니다. 총독 및 총감 각하도 조선의 자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접형(接衡)하여 그 속진을 도모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 조선민중을 희생하여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실로 유감을 느끼는 바이다. 계제(階梯)를 밟지 않고 공(功)을 서두르려고 하는 것은 우롱이 심하다 할 것이다.⁴⁶²

그는 총독부와 본국정부 사이의 교섭상황을 알고 단체를 조직했던 것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최린이 그 추진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자치 문제의 검토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베의 입지가 달라진 점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아베는 신간회가 결성된 이후에도, 사이토의 사임과 재임이 결정되었을 때도, 그리고 민중대회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우경적 단체’의 출현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다.⁴⁶³ 그런데 사이토와 총독부의 아베에 대한 태도는 자치 문제의 검토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아베와의 관계를 전보다 소홀히 다루게 된 것이다.⁴⁶⁴ 이는 일견 모순된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비공식 브레인’으로서의 아베의 역할이 갖는 한계였다고 생각된다. 자치주의정책이 정부차원에서 교섭될 정도로 공식화된 상황에서 이제 비공식 채널은 일차적인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린의 불만은 이러한 변화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지금까지 최린과 통치자를 연결해줬던 것은 아베였다. 하지만 그러한 연결고리가 역할을 상실한 상황에서 최린 역시 자치안 진전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총독부의 추진방식이 ‘민중을 희생하고’ ‘계제(階梯)를 밟지 않고’ ‘우롱이 심하다’ 등 표현했던 것에 달라진 입지에 초조해하는 그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다.⁴⁶⁵

462 「京鐘警高秘第604号 自治運動促進會設立に關する件」(1930.1.14.)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1冊』(京城地法檢事局, 1931.9)

463 『齋藤實關係文書』書簡の部 1, No.283-143, 151, 155, 165, 166.

464 이 당시 사이토 및 총독부와 아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형식(2018.2).

465 그런 의미에서 총독부의 자치주의 정책을 ‘조선의 자치’가 아니라 ‘총독부의 자치’였다고 평가내린 오구마의 주장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小熊英二(1998), 제11장.

자치를 향한 최린의 움직임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 1930년 1월 22일 최린은 명월관에서 대규모 회합을 주최했는데, 거기에는 송진우는 물론 천도교청년당과 개벽사의 김기전, 당시 아베의 서한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던 윤치호와 한상룡, 그리고 아베도 참석했다.⁴⁶⁶ 민중대회사건으로 총독부와의 갈등이 깊어진 아베는 이 직후 조선을 아예 떠나 버렸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본격화된 자치운동은 어느 때보다 ‘자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린의 움직임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4월 4일 천도교의 천일기념일에 상경한 대표들을 저택에 부른 최린은 마침내 자치운동에 대한 뜻을 밝혔다. 신간회 본부의 우경화가 나날이 가속화되던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이를 알게 된 이종린은 경성지회 간부들과 협의하여 바로 항의 기사를 올렸는데, 자치운동은 “우리 천도교 정신에 근본적 모순”이 되는 일이라며 “이 중대 문제에 대한 태도를 구명하여 절대반대”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이다.⁴⁶⁷ 한편 천도교청년동맹에서도 “천도교의 정신에 위배됨으로 아등은 차(此)를 절대반대”하겠다고 결의를 발표했다.⁴⁶⁸

이리하여 천도교 ‘신파와 구파’ 사이의 대립은 본격적으로 ‘신간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⁴⁶⁹ 다시 말해 ‘천도교 신파’와 ‘민족주의 우파’ 그리고 ‘김병로 본부’ 사이에 자치운동을 매개로 한 ‘협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해 ‘천도교 구파’와 ‘민족주의 좌파’가 대항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그 결말은 ‘해소파’의 등장과 함께 신간회의 해산, 즉 ‘합법적 정치공간의 소멸’로 다다랐다.⁴⁷⁰

⁴⁶⁶ 이형식(2018.2), p. 182.

⁴⁶⁷ 「天道敎一派의 所謂自治運動台頭」, 『조선일보』 1930년 4월 9일.

⁴⁶⁸ 「天道敎靑盟이 自治反對決議」, 『동아일보』 1920년 4월 9일. 이러한 보도가 발단이 되어 청년당과 청년동맹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所謂自治問題로 質問 끝에 暴力亂鬪」, 『조선일보』 1930년 4월 10일; 「天道敎靑年黨과 靑盟 今朝大衝突演出」, 『동아일보』 1930년 4월 10일; 「天道敎新舊派 衝突以後波紋」, 『동아일보』 1930년 4월 11일.

⁴⁶⁹ 이 당시 천도교의 내부 동향과 정치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治安狀況』(1931.7); 「最近の天道敎と其の分裂より合同への過程」(朝鮮總督府警務局, 1930.12)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7-9.

⁴⁷⁰ 해소론이 제기되면서 최린 또한 구파와 자진 합동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해소론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된다. 예컨대 관헌자료에서는 구파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길으로 합동하면서 몰래 자치운동으로 유인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상 보았듯이 구미 시찰에서 돌아온 이후의 최린은 확실히 자치운동을 추진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율적인 형태’로 추진된 것으로, 기왕의 ‘민족주의 우파’만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연계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자치운동을 매개로 한 ‘정치 세력화=주체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을까. 이하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최린을 줄곧 따라다녔던 ‘의혹’을 실마리로 풀어보고자 한다.

1927년 3월 1일 동경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이토는 아베에게 급히 서한을 발송했다. 최린과 허헌이 “공산주의국의 건설”을 위해 밀담한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이었다.⁴⁷¹ 보고서에 따르면, 최린과 허헌은 1926년 3월초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1)각국 무정부주의자와의 악수, (2)공산혁명자와의 연락, (3)내외 조선인 각 단체와 연락하여 외면은 자치운동으로 꾸며 전선(全鮮)의 각 추요지(樞要地)에 기관을 조직하지만, 이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의의 선전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린은 4월 초에 중앙총리원에서 회합을 열었고 9월에는 지방총리원으로부터 운동자금을 모아놓았다. 둘은 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함께 출발하면 주의를 끌기 때문에 먼저 허헌을 보내고 나중에 미국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합류 이후에는 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넘어가 거기서 실행 방법을 협의한 후 중국 국민당정부를 거쳐 1927년 8월경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귀국 후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규합하여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허헌은 1926년 5월에 세계 여행을 떠났지만 최린과 합류하는 일은 없었고 귀국도 예정보다 이른 1927년 5월에 이루어졌다. 조선을 떠난 허헌은 요코하마와 호놀룰루를 거쳐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 곳

다만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정’의 영향이다. 1930년 12월 1일에 1920년 이래 두 번째 개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天道教 新舊兩派 圓滿히 合同成就』, 『조선일보』 1930년 12월 25일; 『治安狀況』(1931.7); 「最近の天道教と其の分裂より合同への過程」(No.77-9).

471 『阿部充家關係文書』 3月1日齋藤書簡 No.111-47. 공산당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거나 복대표대회 이후의 신간회와 민중대회사건을 이끌었던 허헌은 일견 최린과 관계가 희박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는 최린과 같은 메이지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변호단의 일원이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의 주주로 사장직을 대행한 적도 있었고 민립대학기성회에 최린, 김병로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에서 6개월 간 지내다가 1927년 1월 15일에 유럽을 향했는데, 유럽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등을 방문하고 러시아로 건너갔다. 그 곳에서 약 두 달 동안 지내다가 중국을 거쳐 귀국한 것이다.⁴⁷² 여행의 일정 자체는 사이토가 입수한 정보와 거의 맞아떨어졌는데, 무엇보다 충격을 줬던 것은 그가 중간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반제국주의 식민지 압박 반대 국제대회’에 조선대표로 참석한 일이었다.⁴⁷³ 대회는 1927년 2월 10일부터 사흘간 개최되었는데, 사이토가 받은 보고서의 작성일이 2월 22일인 것을 볼 때 허헌의 행적이 알려지자 급히 신변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최린은 동경에서 귀국하여 구미 시찰의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사이토의 서한은 최린의 구미 시찰까지 포함하여 진상을 아베에게 추궁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최린의 회고담에 따르면, 이즈음에 시찰 준비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는 여권의 발행허가가 나지 않았던 탓이다. “그때 조선의 총독 재등실(齋藤實)은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외무성에 가서 직접으로 교섭해보라고 하였고 외무성에서도 역시 난색을 표명하며 주저했는데, 귀족원 의원 남작 사카타니(坂谷)의 주선으로 간신히 여권을 얻게 되었다.”⁴⁷⁴ 또한 소에지마에 따르면, 이즈음 “최린씨가 수차례 찾아와 5월부터 구미만유(歐米漫遊)의 길에 오른다며 동정을 구했”고 “외무성을 통해 친절하게 해주었”다고 한다.⁴⁷⁵

이처럼 허헌의 반제 국제대회 참가를 계기로 최린에게도 ‘사회주의화’

472 『東西 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제7호, 1927년 7월; 『世界一週紀行』, 『삼천리』 제1, 2호, 1929년 6, 9월.

473 대회에서 그는 “조선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치”라는 제목으로 “(1)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2)조선에 있어 일본의 지배(행정, 사법, 교육, 경제, 정책, 식민, 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연설을 했고, “조선에서 일본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후 『조선』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배포했다. 『治安狀況』(1927.12)(1930.10). 이때의 ‘보고서’와 ‘팜플렛’은 벨기에 임시 대리 대사 야노 마코토(矢野眞)가 외무대신 시대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에게 보낸 기밀문서에 첨부되어 있는데, ‘병호(丙号)’로 첨부된 ‘RAPPORT SUR LA POLITIQUE IMPERIALISTE COLONIALE DU JAPON EN COREE’와 ‘정호(丁号)’로 첨부된 ‘THE KOREAN PROBLEM’이 이에 해당된다. 『機密第六八号 植民地壓迫反對國際大會に關する件』, 『反帝國主義及民族獨立期成同盟關係一件』

474 如庵崔麟先生文集編纂委員會 편, 『如庵文集』(朱東林, 1971), p. 209. 앞서 나왔던 사카타니 요시로(坂谷芳郎)로, 최린이 1926년 9월부터 동경에 체재하는 동안에 만났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475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 1, No.955-51, 59.

의 의혹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산주의국가 건설계획’이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정보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최린과 허헌이 계획을 협의한 날짜와, 강달영과 이종린이 최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시기가 겹치는데, 그때도 최린의 ‘사회주의적 면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강달영과 이종린을 중심으로 몇 차례 회합이 마련되었고 거기서 최린의 자치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다. 물론 그의 변질을 규탄하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제기된 반대의견에서 그의 ‘사회주의적 면모’가 지적된 것이다.

먼저 1926년 2월 26일의 회합에서 박일병은 “최린이 현재의 조선을 용인하고 내지인 기타와 음모하여 타협적인 태도로 조선의 자치운동에 노력하고 있다는 풍설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는 침착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그러한 행동에 경솔하게 나설 인물은 아니다. 그가 자치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보장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월 10일의 회합에서 박동완은 “최린은 조선의 정객으로서 얻기 힘든 인물로 결코 이종린씨의 말과 같지 않으며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조선의 독립을 염두에 두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최린의 활동에 대해 “사회주의자 방면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자치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하는 질문이나, 그의 진실은 ‘자치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있었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최린이 자치운동을 의도하고 또 실천했던 사실은 분명했다. 본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린의 활동이 ‘자치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쪽 모두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린의 활동을 놓고 한쪽에서는 ‘자치운동’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운동’으로 규정하는 엇갈린 인식은 ‘조선농민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볼 수 있다. 3월 10일의 회합에서 이종린은 최린의 자치운동을 규탄하면서 조선농민사를 그 기반으로 지적하는데, “천도교 내부에 농민사를 조직한 것도 그 뜻에” 있는 것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아 지방에 지부를 두고 모임을 소집하는 점에서도 단순한 잡지 경영기관이 아니라 장래 자치제가 시행되었을 때

의회에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미리 다수의 의원을 양성하는 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⁴⁷⁶ 즉 조선농민사는 ‘자치운동’을 위한 기반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주장이다. 한편 관헌자료에서는 같은 조선농민사를 놓고도 정반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구미 시찰을 떠난 최린은 1928년 3월 8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20일 동안을 거기서 지냈는데, 이때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농민사에 대한 자금원조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조선농민사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당국 역시 ‘자치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⁴⁷⁷ 그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사회주의’와의 관계된 단체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⁴⁷⁸

이처럼 ‘자치주의자’로 알려졌던 최린에게는 항상 ‘사회주의자’라는 의혹이 따라다녔다. 이는 그가 구미 시찰을 돌고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927년 9월 27일자 아베 서한에서는 “최린에 관하여 주미영사로부터 각종 보고가 들어와”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⁴⁷⁹ 최린이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에 한 행동이라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을 만나 “내외정세”와 “장래 민족운동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일, 또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안창호의 가족들과 홍사단을 만났던 일,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찾아가 3.1 운동 당시 미국정부와 교섭했던 이야기를 들은 일 등이 전부였다.⁴⁸⁰

이러한 활동들이 일일이 보고되어 아베에게도 수차례 추궁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베는 “조선인의 심리상태를 몰라서 하는” 의혹이라며 “소생은 결코 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의 인심을 전환하는 운동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바”는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가 최린의 마음을 변호하고 있던 바로 그때 최린은 ‘국제반제동맹 총평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국제반제동맹은 허헌이 참석했던 국제대회에서 창립이 결의된 기관으로, 당국의 의혹을 증명하듯 최린 또한 ‘반제운동’에 관여했던 것이다.⁴⁸¹ 다음 절에서는 이때의

476 여기까지 두 번의 회합에 관한 내용은 『被疑者訊問調書』, 김준엽·김창순(1980), pp. 119~121.

477 『治安概況』(1928.5).

478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479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 1, No.283-144.

480 『如庵文集』(1971), pp. 209, 223~226.

481 국제반제동맹에 대해서는 井上學, 『日本反帝同盟史研究』(不二出版, 2008). 최린이 언제부터 참석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원래는 허헌과 함께 첫 번째 국제대회에 참석할

‘반제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최린이 귀국 후에 추구한 ‘생활운동’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반제운동의 전개와 생활운동

1927년 9월 영국에 도착한 최린은 국제반제동맹 측과 총평의원회의 참석에 관한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9월 16일 자크 방타두르(Jacques de Ventadour, 국제약소민족대회 상설기관 총서기관)로부터 회의 참석을 환영하는 답신을 받은 것과 함께 루이 지바르티(Louis Gibarti, 반제동맹 중앙사무국 사무관)를 소개받았고, 9월 25일에는 지바르티로부터 국제반제동맹에 관한 설명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 파리로 옮긴 이후에는 11월 17일에 방타두르의 저택을 찾아가 지바르티를 직접 만났는데, 다음날 지바르티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나온 사실과 지난 국제대회에 제출된 조선의 결의안 등을 관련 서류를 전달해줬다. 이어 11월 26일 초청장이 도착했고, 그와 함께 자세한 회의 항목이 알려졌다. 12월 3일에는 지바르티로부터 다른 동양의 참가자들에게도 최린의 참석을 알렸다는 사실, 특히 가타야마 센(片山潛)과 쑨원(孫文)의 부인이 반가워했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고, 6일에는 다시 그로부터 최종 결정된 일시와 장소가 알려졌다. 이리하여 1927년 12월 9일 마침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⁴⁸²

회의에서 최린의 참가 자격은 처음 ‘옵저버’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정식 대표’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는 아마도 자바르티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최린은 당장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연설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데, 김경창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최린은 회의장 벽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면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일면만 대륙으로 통하는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동양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허헌과 최린의 비밀 회합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둘은 따로 출발했다가 미국에서 합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허헌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했던 점, 동경에 있던 최린이 조선으로 귀국한 직후에 미국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는 최린이 동경에서 바로 구미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회고담을 볼 때 최린도 동경으로 떠났을 때부터 구미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경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또 조선으로 귀국하게 된 배경에는 연정회 2차 계획의 실패와 신간회의 결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⁴⁸² 서신교환의 경위에 대해서는 『如庵文集』(1971), pp. 248~256; 井上學(2008), pp. 334~342.

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조선의 투쟁을 도와주기를 요청했다.⁴⁸³ 한편 일본대표가 남긴 글에 따르면, 최린은 그동안 조선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포박함과 탄압에 맞서왔던 사정에 언급하면서 민족운동의 최종 승리는 전세계의 무산계급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⁴⁸⁴ 또한 외무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에게 보내진 기밀문서에도 연설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린은 조선 문제가 일본, 중국, 소련,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조선인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분기하고 있으며 또 자신도 극심한 압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반제동맹에 갖는 기대를 말하면서 자금의 원조를 당부했다.⁴⁸⁵

뉴앙스는 약간씩 다르지만, 조선의 세계적 입지와 그 문제의 국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민족운동과 반제동맹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읽히는 맥락이다. 최린에게 ‘반제운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치운동’과 전혀 모순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반제동맹과의 교섭 와중에 이루어진 아일랜드 방문이다. 먼저 최린의 아일랜드 방문에 대해 아베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었다.

천도교의 최린이 프랑스로부터 교회 간부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에...아일랜드 수상과 회견한 일을 언급하는데, 자신들도 독립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모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립의 체면을 내세워 나가는 데 매우 곤란을 겪고 있다. 자칫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기타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독립의 체면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은 다대한 희생을 수반할 각오가 없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역시 다투기는 해도 수백 년의 역사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영국과 타협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속사정을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 역시 이런 이야기에는 굉장히 감회가 깊었을 거라 상상됩니다. 이 일 하나를 보더라도 그의 서양행은 조선인 공산당원에게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러시아 시찰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⁴⁸⁶

483 『如庵文集』(1971), p. 259.

484 井上學(2008), p. 334.

485 「反帝國主義民族獨立期成同盟總委員會會議に關する件」, 『反帝國主義及民族獨立期成同盟關係一件』. 이는 1927년 12월 22일에 재 벨기에 임시대리대사 구리하라(栗原)가 다나카에게 보낸 문서로, 별지 갑호(甲号)에 회의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연설내용은 당시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발표된 글을 참조한 것이라고 기재되고 있다.

위에서 아일랜드 수상이 이야기한 내용은 최린이 남긴 기록과도 일치하는데, 그는 이를 외교부 서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었다. 최린은 그에게 “애란자유국과 영제국과의 관계는 다만 입법부, 즉 의회의 법률안을 영국황제의 대표자인 애란총독의 재가를 요할 뿐이요, 그 외는 모든 것이 다 독립이라고 하여 외교도 캐나다와 미국과는 공사를 교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기관은 최린에게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치’를 긍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어 그는 ‘독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일 완전한 독립을 할 것 같으면 3백만의 민족과 5천 방리의 영토로는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고로, 결국은 미, 불, 독 사이에 어떤 나라하고라도 연결하지 않고는 안 될 터이니까 영제국의 연방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처럼 최린은 아베가 보고한 대로 아일랜드 정부 요인을 만나 ‘독립’보다 ‘자치’가 바람직하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시찰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아일랜드는 총선거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코쓰그래브당 즉 정부당이 61, 데벌레라당 즉 재야당이 57, 노동당이 13, 독립당이 12, 농민당이 6, 국민당이 2석”이었다.⁴⁸⁷ 최린은 이 중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신피인당의 데벌레라(Eamon De Valera)와 제2야당인 노동당의 창시자 라킨(James Larkin)도 만났었다.

그는 먼저 노동당의 라킨을 찾아갔다. 노동자 수십 명이 수시로 드나든 어수선했던 사무실에서 만난 라킨은 바로 악수를 구하고 최린에게 의자를 건네줬다. 그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신수 좋은 호장부 얼굴에 혁명기분이 농후하였고 의복은 노동자의 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최린은 조선 사정에 어둡다는 라킨에게 조선은 인구의 80%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라킨은 세계인구의 80%가 무산계급이라며 승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두 사람은 사회주의운동의 세계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린은 “노동당의 당면과제”에 대해 질문했

⁴⁸⁶ 『齋藤實關係文書』 書簡の部 1, No.283-151.

⁴⁸⁷ 『愛蘭革命家 新大統領 데발레라氏 會見記』, 『해성』 제2권 제4호, 1932년 4월; 『如庵文集』(1971), p. 243.

데, 라킨은 “불가분의 단일당을 조직하여 노동자 본위의 애란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했다.⁴⁸⁸

며칠 뒤 최린은 라킨의 소개로 아일랜드 노동조합의 총재 로토르를 만났는데, 그는 최린에게 더블린의 빈민굴, 조합이 만든 노동공원, 은행, 의회, 총독부 등을 구경시켜줬다. 그러면서 “애란사람들이 영국인에게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 스스로의 일”이라는 점, “즉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우리 애란인의 일인데 너희 영국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간섭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⁴⁸⁹

로토르와 헤어진 후 최린은 신페인당의 테벌레라를 만났다. 그는 “애란인이 750년간을 영국인과” 싸웠지만, 아직도 “완전 독립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최린이 독립운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일본사람들이 조선민족의 요구에 대하여 한 절반쯤 들을 때에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조선민족이 양파로 분열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이를 최린은 자유국파와 독립파로 분열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현실을 자백한 말로 새겨들었다.⁴⁹⁰

최린의 아일랜드 방문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아베도 최린이 노동당이나 신페인당 측의 인물들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정부여당에 더 깊은 감회를 받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베의 기대와 달리 최린의 비망록에는 노동당이나 신페인당 측에 대한 인상이 훨씬 많이 적혀 있었다. 아일랜드 방문을 끝낸 후 파리로 옮긴 최린은 자바르티와 연락을 재개하여 ‘반제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구미 시찰에서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린에게 ‘자치’와 ‘반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당국은 최린을 ‘자치운동자’로 파악하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주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최린의 행적은 단순한 의혹으로 보기에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최린의 모습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교란’이 아닐 수 없었는데, 아베에게 수시로 들어온 추궁과 변명의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반제동맹에서의 연설이 알려졌을 때에는 “왜 호랑이새끼를 가두어두지 않고 밖에 내놓아 대일본제국이 큰 망신

488 『如庵文集』(1971), pp. 238~239.

489 『如庵文集』(1971), p. 241.

490 『如庵文集』(1971), pp. 241~242.

을 당하게 하느냐”는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⁴⁹¹

이처럼 교란당하는 제국의 모습은 자치운동과 통치자의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양자는 ‘자치’라는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치했지만, 그 의도는 사뭇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국이 ‘합법적 정치운동’에 기대했던 것은 ‘체제 안정성’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었으며 ‘자치운동’은 그러한 의도에서 선택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베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 경우에 ‘사회주의운동’이란 통치 측의 의도와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자치운동’이었다. 더구나 ‘반제운동’에 이르러서는 그 공존은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한편 최린 역시 ‘자치운동’을 선택했지만, 구미 시찰의 실상이 잘 보여 주듯이 그 의도는 제국의 체제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었다. 특히 ‘반제운동’에 대한 참여는 제국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치’와 ‘반제’를 공존시키는 그의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 귀국 후에 이루어진 ‘사회주의와의 협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그렇지만 그것 또한—생존운동이 그랬듯이—제국이 설정한 ‘합법적 정치공간’ 속에서 모색된 운동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분명히 스스로 제국으로 포섭되는 역학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주어진 공간에서 ‘정치 세력화=주체화’를 모색하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공존하는 자치운동이란 무엇을 핵심적인 가치로 보았을까. 이 점을 알아보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되는 것이 장일성의 논의이다. 그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했던 인물로,⁴⁹² 신간회 시절에는 안광천의 해계모니 진취론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 운동과의 협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장된 것이 바로 ‘자치론’이었다. 요컨대 그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자치론’을 전개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⁴⁹³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논의는 ‘자치’와 ‘반제’의 공존이 추구했던 운동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491 『如庵文集』(1971), p. 259.

492 장일성은 신일용의 별명이다.

493 장일성의 자치론에 주목한 것은 이균영(1993)이 처음이었는데, 그 뒤에 연구의 진척이 없어 그 인물상이나 활동에 대한 기초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균영(1993), pp. 138~139.

장일성은 1927년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총1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당면의 제(諸)문제」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그의 논의는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정우회의 방향전환론이 ‘조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회적인 분화를 일으켜 무산계급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식민지배를 받는 조선의 경우 농촌에서 분리된 인구는 도시가 아니라 국외로 떠나간다. 따라서 조선에는 무산계급이 형성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은 ‘무산자 없는 무산계급운동’으로, 그 중심에는 무산계급 대신 ‘급진적인 지식계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특수성인데, 따라서 조선의 사상단체는 무산계급을 대표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저 지식계급들이 정치적으로 결합한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전환론에서는 과거의 운동을 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정치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⁴⁹⁴ 이것이 장일성이 보는 방향전환론의 오류인데, 그렇다면 “정치운동이란 무엇이나”, 그는 스스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政治運動’이란 무엇이나를 알려면 먼저 政治가 무엇이나를 알아야 한다. “‘政治’란 ‘力’의 支配다” “支配被支配의 關係는 ‘力’의 關係다” 그러면 力이란 무엇이나. 이것은 ‘經濟關係’의 集約된 ‘別名’이다. 다시 말하면 ‘支配力’의 源泉은 ‘經濟關係’이다. 그러므로 ‘政治運動’의 目的은 ‘力’의 獲得에 있다. ‘力’을 獲得하려는 具體的 行動이 곧 ‘政治運動’이다. 그러므로 政治運動이 要求하는 것은 實際行動을 規準할 標識과 順序를 定하는 것이다.⁴⁹⁵

정치란 힘에 의거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다. 이는 장일성뿐만 아니라 생존운동에서도 강조되었던 관점인데, 즉 “정치란 그것이 결국 지배권의 장악문제”라는 것이다.⁴⁹⁶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정치는 요컨대 세력관계”라고 했던 중심 세력 논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⁴⁹⁷ 정치란 힘인데, 장일성에 따르면 그러한 힘의 획득이야말로 정치운동의 목적이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을 규준하는 표식과 순서’가 정해진다.

494 장일성, 「當面の 諸問題(一)~(八)」, 『동아일보』 1927년 11월 7~16일.

495 장일성, 「當面の 諸問題(九)」, 『동아일보』 1927년 11월 18일.

496 「生存運動의 久遠한 途程」, 『조선일보』 1928년 3월 1일.

497 「政治와 中心勢力」, 『동아일보』 1922년 7월 6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표식과 순서를 가지고 우리의 실제행동을 규준할까?” 그는 첫째로 “사회 민족의 양개 진영이란 관념을 버리고 민족유일전선”을 형성할 것, 둘째 그러한 견지에서 “사회운동이 ‘계급적이란’ 개념을 버리고” “모든 당면 문제만으로 표식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즉 민족운동과 완전한 협동을 이루기 위해 계급의식을 버리고 당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치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이었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 선택된 것이 ‘자치운동’이었다.

自治運動에 對하여 어떠한 態度를 取할까?…自治는 XX과 正反對되는 觀念으로서 常識化하여 버려서 運動過程으로서 理解하려고 努力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妥協과 非妥協을 或은 自治와 XX을 다만 對立된 觀念으로서는 認識하였으나 現實에 있어서 이 觀念들의 相互關係 共通性 및 矛盾點을 正確히 分析하여 보지 못하였다.…지금 우리가 處한 現實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餘裕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生命을 延長할 수 있을까?” 하는 切迫한 場面에 있는 것이다. 政治運動으로서 一形態인 自治運動에서 우리는 어떠한 意識을 捕捉할까?⁴⁹⁸

그동안 조선의 운동은 ‘자치와 혁명’ 혹은 ‘타협과 비타협’을 너무나 관념적으로 ‘대립’시켜 이해된 나머지 그 사이를 흐르는 ‘상호관계=공통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삶’의 문제이다. ‘어떻게 잘 살까’도 아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장일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말해 ‘생’(生)을 매개로 ‘자치와 혁명’ 혹은 ‘타협과 비타협’의 ‘상호관계=공통성’을 찾는다. “제1의 공통성은 현실의 궁극한 생활에 처한 조선민족이란 지위”, “제2의 공통성”은 “조선민족의 당면이해에 그 안목이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좌우될 정도로 궁극한 ‘생활’에 처해 있다는 것, 따라서 ‘당면 이익’이 “문제해결”을 위한 “제일차적 목적의식”이 되어야 하며, 그 점에 있어서 양자는 ‘상호관계=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생활은 자치와 혁명을 묶어주는 매개로, 조선의 정치운동으로서 선택된 ‘자치운동’이란 그러한 의미에서 ‘생활운동’이었다. 1930년 4월 천일기념일을 앞두고 자치운동에 대한 뜻을 밝혔던 최린은 반대파의 비판에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⁴⁹⁸ 장일성, 「當面の 諸問題(十)」, 『동아일보』 1927년 11월 19일.

교리와 신앙문제를 말한 후 혼련문제를 말하자니 자연 조선사람의 생활문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로 말한 요점은 금일 조선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 사회주의 혹은 민족주의이니 자치운동 등 이론이 분분하나 실제운동에 근거가 없는 것이 많으므로 목전의 현상은 사상이 지리맹렬하고 생활이 점점 파멸해가는 만큼 이 현상구제를 목표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궁극한 현상을 타개할까 하는 것입니다.⁴⁹⁹

그는 자치운동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이번 회합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 ‘생활문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혹은 ‘자치운동이나 아니나’를 둘러싼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 즉 그 ‘구체적인 삶’에 있으며 점점 더 파멸해가는 ‘생활’을 중심에 놓고 현상을 타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조선에서 요구되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린에게도 역시 정치운동의 핵심은 ‘생활운동’에 있었던 것이다.

‘자치와 반제의 공존’, 혹은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의 협동’은 신간회라는 공간에서 추구된 하나의 운동형태였다. 또한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추구된 ‘정치운동’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치’라는 통치자의 의도와 가장 부합된 형태로 합법성 속에 포섭되는 운동이었지만, ‘반제’의 계기를 늘 그 속에 담으면서 때로는 제국을 교란하면서 ‘정치 세력화=주체화’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제국을 위한 주체’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운동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생활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타협과 비타협’의 이분법을 넘어 ‘자치와 혁명’을 결합시키는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生)’은 주권국가적 관점의 너머에서 찾아진 개념이었던 것이다.

499 「天道教一派의 所謂自治運動台頭」 『조선일보』 1930년 4월 9일.

V. 조선학과 주체성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서 조선의 주체성을 둘러싼 문제는 이 전과 사뭇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동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을 인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바로 그 중간에서 적절한 자리를 매겨주는 것, 이것이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서 주체성 문제를 규정짓고 있던 상황이었다. 식민지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만 주권국가적 의미가 탈색된 사회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논리, 다시 말해 ‘비주권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조선의 ‘민족운동’과 관련해서는 ‘합법성’이라는 틀을 지었다면, 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학술성’이라는 틀을 지었던 것이다. 즉 III, IV장에서 ‘비주권성’은 ‘합법성’으로 기능했다면, V장에서 그것은 ‘학술성’이라는 틀로 기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V장에서는 조선의 ‘역사편찬사업’을 분석대상으로, 거기서 ‘학술성’이라는 테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에 어떠한 함의를 주었는지, 나아가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역사편찬사업은 크게 ‘반도사’(1915~)와 ‘조선사’(1922~)로 나누어지는데, 양 사업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차이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동화로부터 학술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3.1운동 이전에 조직된 반도사 사업은 조선의 주체성 문제에 큰 고민 없이 ‘동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다면, 3.1운동 이후에 조직된 조선사 사업의 경우 더 이상 동화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바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II장에서 보았듯이 ‘역사’의 영역은 자치주의는 물론 내지연장주의에서조차 그 주체성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시된 것이 ‘학술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 경위를 밝힐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사와 조선사는 조선의 주체성을 다루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각자 ‘단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도출하고자 했다. ‘동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반도사 사업에서 단군은 어디까지나 ‘배제’의 대상으로 역사의 외부로 추방하는 한편 한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지목하여 일본과의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조선사의 경우 단군은 단순히 배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보다도 완전한 배제도, 완전한 주체화도 아닌 자리에 어떻게 있게 할 것인지, 즉 ‘존재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였다.

‘학술성’은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틀로서 기능했다. 그 속에서 단군은 결코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주체적 자리에 앉혀진 것도 아니었다. 학술성 속에 포섭되어 역사에 존재할 수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마련된 것은 역사의 ‘주변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본고에서는 조선사에서 수행된 ‘포섭의 편찬방식’을 ‘학술성=비주권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조선의 주체성’이 다루어진 방식으로서 조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특히 단군 논쟁에 대한 최남선의 발언에 주목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남선의 발언은 학술성 속에서 주어진 자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학술성의 핵심이었던 실증주의와 편년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포섭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한편으로 단군의 존재를 ‘신앙적 사상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던 그의 발언은 사실은 제국이 설정한 자리와 ‘별도로’ 단군을 존재시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V장에서는 이를 통해 ‘학술성=비주권성’ 속에서 전개된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최남선의 발언을 역사편찬사업이라는 좁은 의미의 학술성을 넘어 보다 큰 의미의 학술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역사와 신화’를 공존시키는 그의 인식구도를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의 ‘근대역사학’의 맥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학, 특히 ‘국학에서 조선학’에 이르는 맥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는 ‘식민사학과 민족사학’ 혹은 ‘근대역사학과 조선학’ 사이를 이루는 관계성에 대해 일정한 시사를 줄 것이다.

1. 반도사와 조선사: 동화에서 학술로

(1) 반도사와 동화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역사편찬사업으로는 1925년에 조직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연원은 데라우치 총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총독부에서는 여러 조사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 하나로 구 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이 있었다. 이것이 1915년 5월 중추원으로 이관되면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사업이 설립되었다. 1916년 1월에는 중추원 구성원 중에서 15명이 사업임원으로 선출되었고 편찬에 관한 사령(辭令)이 내려졌다. 그 석상에서 중추원 서기관장이었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는 사업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선의 역사서는 당시대의 사상에 사로잡혀 쓰여졌기 때문에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서술이 없었다. 예컨대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신라를 소외시켜 고려를 존중한 책이었다면, 『고려사(高麗史)』는 고려를 평범하게, 조선을 선미(善美)하게 묘사했다. 물론 역사서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는 현상은 조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일종의 보편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번 역사편찬의 목적은 현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냉정한 태도로 허심탐회(虛心坦懷)하게, 아부하는 일 없이, 폄하하는 일 없이, 결코 편파적인 붓을 들지 않을 것이며, 역사상의 사실을 오로지 선의로 기술함으로써 유일하고도 완전무결한 조선사를 편찬하는 데 있다.”⁵⁰⁰ 요컨대 편파적인 서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유일완전한 조선사를 편찬하는 것이 반도사 사업의 목적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평무사한 편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있었다. 여기서 고마쓰가 강조하는 ‘사실성’(史實性) 또는 ‘공정성’은 반도사의 뒤를 이은 조선사 사업에서는 핵심적인 가치로 장식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반도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만 확인하고 그 사업취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한다.

500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近澤商店印刷部, 1938), pp. 138~139.

고마쓰의 사령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1916년 7월에 공포된 『조선반도사 편정의 요지 및 순서』를 보면,⁵⁰¹ 설립 이래 반년동안에 반도사 사업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인물들을 충당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추원에서 선출된 15명 외에 교토제국대학에서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동경제국대학에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각각 촉탁으로 초빙되었다. 이 세 사람은 중추원 서기관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와 함께 편집주임을 맡아 원고작성의 실질적인 감수자가 되었다.⁵⁰²

이처럼 편찬체제를 갖추어 갔던 한편, 조선에서 역사편찬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전보다 확실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 ‘정신’의 중요성이다. 반도사는 제도나 산업과 같은 물질적인 경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지능과 덕성을 계발하여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드는 ‘민심훈육’(民心薰育)을 목적으로 한다. 즉 통치의 관심 영역을 ‘물질’에서 ‘정신’으로 넓혀감으로써 역사편찬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 정신과 연관된 문제로 강조된 것이 두 번째 ‘동화’의 중요성이었다. 혹자는 조선인에 대한 정신 교육은 충순(忠順)한 사상이 아니라 불평과 반항심을 갖게 할 뿐이라고 반대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도사 사업이란 조선의 역사를 가르쳐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반대론에 대해 반도사 사업에서는 ‘동화의 가능성/불가능성’ 논의를 가져와 반발한다.

동화의 불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구미제국과 식민지와 동일한 관계로 간주하며 조선을 식민지 취급하지만, 일본은 서구 제국과 다르며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그 논거로 ‘지리적 근접성’과 ‘인종

501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史編成の要旨及順序』(京城印刷所, 1916). 『조선사』의 간행에 맞춰 발행된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1938)나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事業概要』(朝鮮印刷株式會社, 1938)와 달리 반도사사업이 시작된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그만큼 당시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02 반도사 사업은 크게 편집주임, 조사주임, 심사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저 조사주임이 담당하는 시기의 사료를 수집하고 서기관에게 3개월마다 조사결과를 제출한다. 서기관은 이를 편집주임에게 교부하고 편집주임은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즉 성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편집주임에게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1916), pp. 8~10.

적 동일성'을 지적하는데,⁵⁰³ 서구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지세(地勢)에 두드러진 괴리가 있고 인종 또한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영구히 종(宗)과 속(屬)에 나누어져 도저히 동화융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은 식민지로부터 이익을 거두는 데 급급하고 그 행복을 도모할 틈이 없”으며 “식민지 또한 모국과 경조화복(慶弔禍福)을 함께하는 정의(情誼)가 생길 이유”가 없다.

이와 반대로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강역(疆域)을 서로 접하고 있으며 인종이 같고 그 제도 또한 서로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연(渾然)한 일대방토(一大邦土)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이해휴척(利害休戚)을 함께” 한다. 따라서 조선에 대해서는 식민지로 이를 보지 않고 동화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그 목적이 동화에 있음을 밝히는 정책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정성’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독서속문(讀書屬文)의 문명을 가졌던 조선에는 신구를 막론하고 많은 역사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서의 경우 대부분이 독립했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재와 연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독립에 대한 꿈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신서의 경우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와 같이 “진상을 궁구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펼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병합과 연락(聯絡) 없는 고사(古史)”나 “병합을 저주하는 서적”을 대신하기 위해 “공명적확한 사서”를 만드는 것이 반도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고마쓰의 지적대로 역사서에 특정 시대의 정치성이 반영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사 또한 이 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서보다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거듭 주장되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설명은 없는데, 그 대신 강조된 것이 “병합의 은혜”를 깨우치는 역사서의 정당성과, 그것으로 “조선인을 동화한다는 목적”이었다.⁵⁰⁴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사업의 세 가지 주안점이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일선인(日鮮人)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것”, 두 번째로 “상고로부터 이조에 이르는 동안 군웅(群雄)의 흥망기복과 역대

503 지리와 인종을 근거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서구와 구별하는 특수성 논법에 대해서는 Mark Peattie(1996).

504 『朝鮮半島史編成の要旨及順序』(1916), pp. 1~4;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5~6;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1938), pp. 141~143.

역성혁명으로 민중이 점차 피비(疲憊)해지고 빈약에 빠져 있었던 상황을 서술하고 그 한편으로 지금의 시대에 미친 성세(聖世)의 혜택으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완수할 수 있었던 사실을 상세히 서술할 것”, 세 번째로 “편성은 모두 신뢰할 만한 사실을 기초로 할 것”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앞서 ‘인종적 동일성’을 강조했던 점과도 중첩되는 내용으로, ‘동화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이 과거에 ‘동족’이었던 역사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두 번째 주안점은 앞서 ‘병합의 은혜’를 강조했던 점과 상통하는 주장이다. 마지막 ‘신뢰할 만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고마쓰가 강조했던 ‘사실성’과 연결되는 주장인데, 그것이 반도사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반도사는 그 역사 서술의 근거가 된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등 ‘실증적인 방법’에 의식적으로 쓰여졌다.⁵⁰⁵ 이것이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서술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반도사 사업을 주도했던 일본의 역사학자들—구로이타, 미우라, 이마니시, 오다 쇼고(小田省吾)⁵⁰⁶ 등—의 출신배경을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동경제대 사학과 출신으로, 외국인 교수 리스(Ludwig Riess)를 통해 랑케의 ‘실증사학’을 습득했던 세대였다.⁵⁰⁷

이처럼 반도사 사업에서도 ‘실증적 방법=학술성’은 강조되었지만, 그것은 동화주의 서술이 갖는 정치성을 공정성으로 호도하기 위해 채용된 방법으로, 그것 자체가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동화라는 목적을 능가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요컨대 반도사가 내세운 목적은 어디까지나 ‘동화’에 있었던 것으로, “내선인이 다른 친구 군서잡사(群書雜史)에 광혹(誑惑)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선관계의 진상을 양해시키고 그럼으로써 조선통치의 동화방침을 원만신속하게 수행성취”하는 것이 “본지 편찬의 목적”이었던 것이다.⁵⁰⁸

(2) 조선사와 학술성

505 桂島宣弘,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書編纂と近代歴史學-『朝鮮半島史』を中心に」, 『季刊日本思想史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 76号(2010).

506 반도사의 전임부서로 설치된 편찬과에서 과장을 맡은 인물이다. 1918년 중추원 내부에 조사과와 편찬과가 설치되면서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일환이었던 반도사 사업은 편찬과로 분리되었다.

507 永原慶二, 『20世紀日本の歴史學』(吉川弘文館, 2003).

508 여기까지 『순서』에 관한 인용은 『朝鮮半島史編成の要旨及順序』(1916), pp. 4~5.

반도사는 설립 이후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원고의 절반 이상이 작성되었지만,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가 새로이 조직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조선의 역사편찬사업은 조선사 사업에 계승되었다.⁵⁰⁹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조선사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반도사 사업과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그때까지 수집된 자료들이 이관된 것은 물론, 특히 인적구성 면에서의 연속성이 농후했다. 주요 멤버들로 보면, 교토제대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의 소개로 들어온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를 제외하면, 구로이타, 이마니시, 오다 쇼고 등이 반도사에 이어 조선사 사업에서도 요직에 취임했다. 또한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된 이후에 들어온 인물들도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나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등 구로이타의 문하생들이었다. 나카무라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사 사업은 정무총감 아리요시 츠이치(有吉忠一)가 구로이타에게 협력을 요청하면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었다.⁵¹⁰ 즉 구로이타는 반도사에 이어 총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인적 측면에서의 연속성은 반도사와 조선사 사업이 ‘근대역사학=실증주의’라는 성격을 갖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살폈듯이 최근 식민지 근대성에 주목한 연구들에서는 이 측면이 특히 중요시되는데, 이것이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의 관계, 다시 말해 근대역사학에 내재된 ‘식민주의적 폭력성’을 밝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반도사와 조선사는 분명히 ‘실증적인 방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속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단절성’ 또한 분명히 개재하고 있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직에서 한 달 지난 1923년 1월 제1회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총독 사이토와 정무총감 아리요시(위원장 겸임)에 의해 사업취지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때 사업의 목적으로 강조된 것은

509 조선사편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도 사업 자체는 얼마간 유지되었고 정식으로 폐지된 것은 1924년 말쯤이었다. 다만 형식적으로 남아있었을 뿐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1938), p.148.

510 둘은 대학동창이었으며, 아리요시가 미야자키(宮崎) 현지사 시절에 추진한 고분발굴조사에 구로이타가 참여하는 등 이미 친분을 쌓은 사이였다.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の事業」, 『日鮮關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1969), pp. 660~661.

‘동화’가 아니라 바로 ‘학술성’이었다.

먼저 사이토는 오래된 문화를 갖는 조선에서 그동안 수사(修史)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과거의 역사서들을 언급한다. 그런데 이들을 부정하는 근거는 이제 ‘정치적 편향성’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그 대신 주장된 것이 ‘학술성의 결여’였다. 조선에는 방방곳곳에 산재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학술적 견지에서 지극히 공평한 편찬을 달성한 것”이 없다. 이에 조선사 사업은 “학술적 견지”에 입각한 “공평한 편찬”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리요시의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조선사의 편찬은 “조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가장 공평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되었다.⁵¹¹

이제 ‘학술성’은 동화주의가 갖는 정치성을 호도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해주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것은 동화의 보조적 역할을 넘어 사업의 정체성 자체를 규정할 만큼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와 반비례하듯이 ‘동화’에 대한 주장은 조선사 사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요컨대 여기서는 ‘동화에서 학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개재했을까. 그것이 바로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였다. 나카무라는 반도사 사업의 종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동화주의’라는 조선통치의 목적을 선명히 하기 위해 ‘역사편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이로써 착수된 것이 ‘반도사 사업’이었다. 그러나 “만세사건이 일어나자 통치의 방침은 돌연히 일대 전회(轉回)를 이루게 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의 실시였다.” 이 때문에 총독으로부터 조선민족의 “문화와 구관(舊慣)을 존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역사에 대한 요망이 강력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한 아리요시는 구로이타에게 대책을 타진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사편찬위원회’였다는 것이다.⁵¹²

II장에서 보았듯이 3.1운동의 발발은 ‘동화’에 대한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한 영향력은 자치주의 담론은 물론, 본질적으로 동화주의를

511 사이토 및 아리요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9~11;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1938), pp. 150~151.

512 中村榮孝(1969), pp.654~662.

지향하는 내지연장주의 담론에까지 과급될 정도였는데, 이로써 조선의 문화나 구관, 그리고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확립되었다. 나카무라의 회상은 ‘역사편찬사업’ 또한 이러한 ‘컨텍스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준다.

반도사에서 조선사로의 이행은 사업의 목적이 ‘동화에서 학술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단절적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과 연관된 변화였기 때문이다. 즉 ‘동화’를 목적으로 한 반도사에서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학술성’을 전면에 내세운 조선사에서 다루는 방식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무엇이었을까. 이하에서는 이를 ‘단군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동화와 학술: 배제에서 포섭으로

(1) 반도사와 배제의 서술방식

1) 역사의 주체와 남북의 구분

먼저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의 체제부터 살펴보면, 그것은 「상고삼한(上古三韓)」을 시작으로 「조선최근사(朝鮮最近史)」까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¹³ 1922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당시 4편까지 원고가 나와 있었는데,⁵¹⁴ 현재 파악이 가능한 것은 1·2·3편과 5·6편의 일부내용이다.⁵¹⁵ 반도사는 집필자와 따로 편집 주임을 두고 원고를 감수하는 권한을 주었었는데, 제1편의 경우 이마니시가 편집주임이 되어 집필뿐만 아니라 감수하는 권한까지 겸비했다. 그가 담당한 제1편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513 각 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집필자를 의미한다. 第一編 上古三韓[今西龍], 第二編 三國(高句麗·新羅·百濟)[今西龍], 第三編 統一後의 新羅(唐에 服屬時代)[今西龍], 第四編 高麗[荻山秀雄], 第五編 朝鮮[瀨野馬熊], 第六編 朝鮮最近史[瀨野馬熊]. 『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1938), pp.145~147; 金性旼, 「朝鮮史編修會の組織と運用」, 『季刊日本思想史』76号(2010), p. 13.

514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 7.

515 해당 편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번역, 간행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선인, 2008)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본고에서 반도사의 기술은 이 책을 참조했으며 출처 또한 이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표2]제1편 「上古三韓」의 구성

第一編 上古三韓	第一期 原始時代	第一章 朝鮮開國의 諸傳說	第一節 箕子開國傳說
			第二節 檀君傳說
			第三節 韓民族 固有의 開國傳說
		第二章 古朝鮮	第一節 朝鮮半島의 原始住民
			第二節 朝鮮半島의 諸小國
			第三節 衛氏朝鮮
	第二期 漢領土時代	第一章 漢의 郡縣設置	第一節 四郡設置와 그 疆域
			第二節 漢나라 昭帝의 改革
			第三節 樂浪의 隆盛
			第四節 帶方郡의 新設
			第五節 樂浪·帶方의 衰滅
		第二章 朝鮮半島에서의 漢人의 文化 및 社會狀況	第一節 樂浪·帶方의 文化
			第二節 樂浪·帶方의 社會狀況
		第三章 韓種族의 諸國	第一節 馬韓
			第二節 辰韓·弁韓
			第三節 日本과 三韓의 關係
			第四節 滅
		第四章 夫餘民族의 南下	第一節 夫餘民族
			第二節 高句麗의 建國
			第三節 高句麗의 强盛 및 南進
			第四節 百濟의 由來
			第五節 新羅의 由來와 그 興起
			第六節 百濟·新羅의 興起에 대한 韓諸國의 狀況· 加羅諸國의 起源
			第七節 日本과 新羅 및 加羅諸國 間의 交通
			第八節 神功皇后의 加羅諸國 保護

출처: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p. 136~183.

제1편은 2개의 기(期), 6개의 장(章), 25개의 절(節)로 구성되어었는데, 제1기 「원시시대」는 「조선개국의 제전설」과 「고조선」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서는 기자조선과 단군조선, 그리고 신라, 가락국, 탐라로 전해지는 개국전설이 기술되어 있다. 후자에서는 고대 한반도의 민족구성과

정치권역의 분포를 논한 다음, 연(燕)나라 위만(衛滿)에 의한 조선국의 점령과 한(漢)나라 무제(武帝)에 의한 위씨조선의 멸망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어 제2기 「한영토시대」에서는 한(漢), 위(魏), 진(晉)을 거친 낙랑·대방군시대의 흥망과 함께 그와 쌍을 이루듯이 북쪽의 부여(고구려)와 남쪽의 삼한(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라·임나))의 발흥이 묘사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진구황후의 가라제국 보호」에서 신라정벌에 대해 기술하면서 제1편은 끝난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삼한과 일본의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제2편 「삼국」의 전사(前史)로서 조공관계의 형성까지를 시사하며 마무리된다.

제1편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와 같은데, 다음의 측면에서 그 인식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체’의 측면이다. 역사서술에 있어 그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반도사에서 그것은 ‘한민족(韓民族)’으로 간주되었다. 한민족은 ‘한족(漢族)’과 ‘만주족(滿洲族)’이라는 타자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주체화 작업 다음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일본과의 ‘동족성’이었다.

상대(上代, 중국 전국시대) 극동의 상황을 고찰하면 요수(遼水, 요하(遼河))·약수(弱水, 松花江) 사이에 부여·예맥이 거주하였는데 주변 민족보다 우수한 문화를 보유하였다. 부여와 같은 종족인 예맥은 압록강 상·중류 유역에서 조선반도 동부 중앙까지 거주하였으며, 조선반도 서북 대동강 북쪽은 열양(列陽)이라는 한(漢)·한(韓) 두 민족이 혼재하여 살던 땅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남쪽에 예맥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이른바 표조선(表朝鮮)의 땅에는 한민족이 거주하였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섬에는 일본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여·예맥·한(韓)·일본은 민족상 커다란 일단(一團)을 이루지만, 부여·예맥은 다시 말해 통고사족(通古斯族)으로 이른바 만주족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한(韓)·일본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으며 지금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동서의 인종학자가 인정하는 이설 없는 인종수표(人種樹表)를 만들어야 한다.⁵¹⁶

중국 동북지방을 흐르는 요하(遼河)와 송화강(松花江) 사이에 거주했던 ‘부여족’, 그보다 약간 내려온 압록강 부근에서 한반도 동부지방에 걸쳐 거주했던 ‘예맥족’, 이 두 민족은 같은 통구스계열의 ‘만주족’에 분류된다. 한편 대동강의 북쪽, 한반도의 서북지방에는 ‘열양(列陽)’이라 불리는 권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한민족’과 ‘한족(漢族)’이 잡거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열양보다 남쪽, 예맥에서 보면 서쪽에서 한반도 남부 전체에 걸친 땅은 ‘표조선’(表朝

516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46.

鮮)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이 바로 ‘한민족’의 주요 거주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각각의 생활권과 함께 ‘만주족’, ‘한족’, ‘한민족’이라는 세 가지 종족이 부각되는데, 이들 가운데 ‘한족’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주요 무대로 사는 반도의 침입자로 동족성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만주족’의 경우 한민족과 ‘민족상 커다란 일단’을 이루었다는 설명이 붙여지기는 하지만, 결국 인종적으로는 ‘분명한 단절’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즉 한족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범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대동강 북쪽에서 일부 한족과 섞여 살기도 했지만 대동강 서남쪽에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아울러 존재했던 ‘한민족’이 조선의 ‘역사적 주체’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한민족’은 남쪽 바다를 건너섬에 사는 ‘일본민족’과 인종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것이 반도사의 첫 번째 주안점이었던 ‘일선인의 동족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한민족과 일본민족은 태고에 한 민족을 이루어 같은 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대이주(大移住)의 결과, 하나는 조선반도에, 또 하나는 해도(海島)에 정주(定住)하여 그 거주를 달리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는 한민족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민족이 되어 구별을 낳았으나, 종족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두 민족이 조선-일본단(Korea-Japanese group)을 이룬다는 사실에는 동서의 학자들도 의견이 일치한다. 한·일 상대동역론(上代同域論)은 따르기 어렵지만 두 민족이 동종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설을 주장하지 않는다.⁵¹⁷

비록 지금에서야 민족적 구별을 갖게 되었지만, 한민족과 일본민족은 태고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따라서 양 민족은 지금도 조선-일본단(Korea-Japanese group)을 이루는 ‘동종’(同種)으로 간주된다. 이는 동서양 모든 학계에서 인정되는 ‘학문적인 사실’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요컨대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인종적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병합’을 ‘복고’로, ‘동화’를 ‘당위’로 만들어내는 ‘일선동조론’의 전형적인 역사서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상대동역론(上代同域論)’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학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흔적으로 이해되는데, 동역론은 동경제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호시노 히사시(星野恒)와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에 의해 주장된 학

51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45.

설이었다. 제1편을 담당했던 이마니시에게는 바로 윗세대의 학설에 해당된다.⁵¹⁸ 그렇다면 반도사는 동역론의 어떤 점을 ‘따르기 어렵다’고 보았을까.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동역론에 수반된 ‘반도도래설’(半島渡來說)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호시노는 1890년에 발표한 글에서 일본황실의 조상은 신라의 왕족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이자나기·이자나미(伊弉諾·伊弉冉) 시대에 일본의 본주(本州)가 발견되었고 스사노오(素戔鳴尊) 또한 이를 따라 일본으로 도래(渡來)했다는 것이다. 도래 후에는 거점을 이즈모(出雲)에서 야마토(大和)로 확장해나갔고, 진무천황(神武天皇) 시대에 동정(東征)을 단행하면서 본주를 정복했다. 그 와중에도 한반도와 왕래는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일역(一域)’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무천황(桓武天皇) 시대에 일본과 삼한이 동종이라는 사실이 적힌 서적들이 다 불태워져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¹⁹

이처럼 호시노는 스사노오의 반도도래설을 근거로 일본과 조선이 고대에 ‘정치적 동역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인종적 동질성’ 또한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동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열도를 향해 일어난 민족이동을 논하면서 이때 한반도 북부에 있던 숙신(肅愼)과 옥저(沃沮)가 북해도와 동북지방으로 들어와 고로봇쿠르(コロボックル)나 에조(蝦夷)로 불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편으로 기기(記紀)의 스사노오 신라강림설을 근거로 한반도 남부로부터 많은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이 결국 일본의 지배계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⁵²⁰

구메 또한 ‘정치적 동역성’과 ‘인종적 동질성’을 함께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호시노와 마찬가지로였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일, 한, 민(閩)⁵²¹으로 구성된 삼토연합(三土連合) 시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연합의 중심에는 천신족(天神族)이 지배하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계통에서 각지에 군장(君長)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천신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호시

518 미우라, 구로이타, 이마니시의 차이점에 주목한 장신은 동역론이라는 관점에서 미우라와 구로이타 및 이마니시 사이에 찬반이 갈려 있었음을 지적한다. 장신(2009), pp. 355~359.

519 星野恒, 「本邦ノ人種言語ニ付鄙考ヲ述テ世ノ眞心愛國者に質ス」, 『史學會雜誌』第11号(1890).

520 星野恒, 「上古日韓同域」, 『史學叢說』第一集(1909).

521 중국대륙 동남지역의 연안,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부근에 존재했던 나라.

노와 달리 정치적 지배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메에게도 삼토는 경계없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동역’을 의미했다.

한편 인종적 동질성에 대해서도 구메 역시 대륙에서 일본열도로의 민족이동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민족이동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동남 방향으로 이동한 ‘북종’(北種)－진(秦), 조(趙), 연(燕), 요(遼), 예맥(濊貊), 구려(句麗), 부여(夫餘), 옥저(沃沮), 숙신(肅慎)－과, 인도에서 해로를 따라 안남(安南), 여송(呂宋), 민(閩), 그리고 한반도로 진입한 ‘남종’(南種)이 있었다. 일본에는 처음에 북종과 남종 모두 들어왔지만, 후자가 전자를 정복하는 형태로 천신족의 군장의 지위로 올랐다는 것이다. 천신족은 단발문신을 공통점으로 한족(韓族), 백월족(白越族)⁵²²과 같은 종족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연합하여 정복에 성공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의 한족은 북부에 거주한 예맥, 구려, 부여, 옥저와 다른 종족으로,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다 후일 삼한으로 불리게 된 종족을 가리킨다.⁵²³

이상 보았듯이 호시노와 구메의 동역론은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정치적 동역성’과 ‘인종적 동질성’이 함께 서술되는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도사에서는 ‘인종적 동질성’만을 따르고 ‘정치적 동역성’에 대해서는 차이를 강조했던 것이다. 동역론은 분명히 한일병합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한 논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었던 배경에는 ‘반도도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동역론과 반도도래설은 기기(記紀)에 기재된 스사노오의 행적을 근거로 한 학설이었다. 해원(海原)에서 아마테라스와 불화를 일으켜 고천원(高天原)으로 추방된 스사노오는 신라의 소시모리(曾尸茂梨)에 정착한 후 이즈모(出雲)로 건너갔는데, 이때 해원과 고천원의 위치를 한반도로 추정함으로써 통치 주체의 동일성을 상정하고, 또 스사노오의 신라→이즈모 이동과 그 후의 정복 활동을 근거로 일본 지배층의 반도도래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맥상 동역론은 ‘천황가의 기원’을 건드리게 되는데, 1892년에 일어난 구메

522 중국남부의 복건(福建), 광둥(廣東)에 거주하던 민족.

523 久米邦武, 『日本古代史』(早稻田大學出版部, 1905). 일선동조론에 언급한 책들은 많지만, 그 학술적인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新曜社, 1995)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金光林, 『日鮮同祖論：その實體と歴史の展開』,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1997)이 있다.

의 필화 사건에서도 바로 이 점이 부각되어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⁵²⁴ 반도사의 집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무심했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계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반도사는 ‘한족’과 ‘만주족’을 타자로 배제하는 동시에 ‘한민족’을 조선의 ‘역사적 주체’로 설정하고 거기에 일본과의 ‘인종적 동일성’을 부과하는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일선동조론을 전형적으로 따른 것이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천황가의 기원’에 저촉하는 ‘정치적 동역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다소의 차이는 갖지만 그것이 일선동조론의 인식체계 속에서 서술되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그 중에서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인식체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측면이다.

일본민족의 계통을 진입경로에 따라 남/북으로 구분하는 인식 자체는 비단 일선동조론만의 독특한 발상은 아니었다. 그 연원은 근대초기의 서양인들의 발상과 그 영향 하에 있던 인류학자들의 일본인종론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인 의학자 벨츠(Erwin von Bälz)는 일본인을 구성하는 인종을 ‘북방 몽골로이드’와 ‘남방 몽골로이드’로 구분했다. 전자는 일본 상류층에 많은 유형으로, 얼굴이 길고 신체가 길쭉한 점이 중국과 조선의 상류층과 유사하다며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의 서남지방으로 들어온 종족으로 보았다. 후자는 하류층에 더 많은 유형으로, 얼굴이 동그랗고 팔다리가 짧은 점이 말레이인과 유사하다며 해로로 규슈 남쪽에 들어온 종족으로 보았다. 이처럼 남/북을 구분하는 발상은 당시의 인류학자에게도 확인된다. 예컨대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나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良精) 역시 일본인의 구성을 논하면서 외래 인종을 동아시아의 황인종(조선인)과 말레이인으로 나누면서 전자를 일본인의 기본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남/북 발상에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한

524 사건은 구메가 1891년에 발표했던 「신도는 제천의 고속(神道は祭天の古俗)」(『史學會雜誌』第23~25号)이라는 글이 1892년에 『사해(史海)』(제8호)에 다시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구메는 동경제대 교수를 사임하게 되었다. 이때 표적이 된 것은 신도(神道)를 동아시아에 공통된 습속의 하나로 치부한 주장이었지만, 동시에 황통(皇統)을 외국의 번족(蕃族)과 동일시한 것, 즉 ‘천황가의 기원’에 저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三ツ井崇, 「近代アカデミズム史學のなかの『日鮮同祖論』-韓國併合前後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42輯(2004), pp. 52~53.

반도 그 자체를 ‘북’으로 분류하는 관점이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나 야마지 아이잔(山路愛山)와 같은 역사학자들에게도 확인되는 발상이다. 미야케는 한반도의 민족을 ‘몽고인종’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일본으로 들어온 경위를 남쪽의 ‘말레이인’과 대비시키면서 논의했다. 한편 일선동조론의 주창자이기도 했던 야마지는 선주민인 고로봇쿠르와 아이누, 외래인종인 오월인종(吳越人種)을 넓은 의미의 일본인으로 이해했다. 오월인종은 중국대륙의 연안부에 거주했던 비한인종(非漢人種)과 만한형(滿韓型)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만한형을 좁은 의미의 일본인으로 이해하면서 핵심인종으로 보았다. 만한형은 한반도의 ‘북부’에 거주했던 종족으로, 남하(예맥→부여→고구려→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고 지배계층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²⁵

특히 야마지의 논의는 일선동조론자이면서도 호시노와 구메의 논의와 정확하게 반대되는데, 남부에 거주하다 후일 삼한을 형성했던 ‘한민족’이 아니라 북부에 거주했던 ‘만한민족’(예맥·부여)을 한반도의 ‘역사적 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도사의 인식은 물론 전자와 일치했다. 즉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다가 마한, 변한, 진한을 구성한 “삼한 종족”을 “지금의 조선민족을 형성한 주체”로 보았던 것이다.⁵²⁶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반도사의 서술은 첫째로 ‘한민족’을 조선의 ‘역사적 주체’로 지정하고, 둘째로 그 권역을 한반도의 ‘남부’, 특히 ‘삼한’으로 한정시켰던 반면, 셋째로 ‘북부’의 민족, 즉 ‘한족’과 ‘만주족’을 ‘역사적 타자’로 배제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넷째로 한민족에 ‘동족성’을 부과하여 ‘동화’시키는 목적을 수행했던 것이다.

2) 단군전설의 행방

그렇다면 이러한 서술체계 속에서 ‘단군’은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제1편에서 단군과 관련된 문제는 제1기 제1장 「조선개국의 제전설」에서 서술되었다. 1장은 「기자개국전설」, 「단군전설」, 「한민족 고유의 개국전설」로 각각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단군전설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고 원문도 자주 인용되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⁵²⁵ 일본인종론과 남북구분에 관해서는 小熊英二(1995); 金光林(1997).

⁵²⁶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2008), p. 159.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단군전설이 기타 전설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반도사에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반도사는 단군전설에 관한 사료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5개의 기사,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에서 1개의 기사를 인용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①~⑥)와 같다. ①~⑤번은 『삼국유사』에, 마지막 ⑥번은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에 기재된 내용이다.

[표3] 『반도사』에 인용된 단군 관련 기사 내용

①	『위서(魏書)』에 따르면 요(堯)나라 때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움을 정해 조선을 세웠다.
②	『고기(古記)』에 따르면 옛날 제석(帝釋) 환인(桓因)이 아들 환웅(桓雄)을 인간세계로 내보냈는데,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었다. 이때 곰과 범이 그에게 인간이 되기를 빌었는데 그는 쑥과 마늘을 주어 백 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가르쳤다. 범은 실패했고 곰은 여자가 되어 환웅의 아들 단군왕검을 낳았다. 왕검은 요(堯)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된 해에 평양에 도움을 정해 조선이라 불렀고 다시 백악산 아사달에 옮겨 천오백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즉위한 해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했기 때문에 단군은 아사달에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다.
③	「왕력편(王曆篇)」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단군의 자손(檀君之子)이라고 기재된다.
④	동명왕 출생담의 주(注)에 「단군기(檀君記)」에 따르면 단군은 서하(西河) 하백(河伯)의 딸 사이에 부루(夫妻)를 낳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해모수(解慕漱)는 하백의 딸 사이에 주몽(朱蒙)을 낳았으며, 따라서 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異母兄弟)라고 기재된다.
⑤	『고기(古記)』에 따르면, 천제(天帝)가 내려와 도움을 세웠는데 그 왕국을 북부여(北夫餘)라 불렀고 자신을 해모수(解慕漱), 아들을 부루(夫妻)라 불렀다.
⑥	「평양조(平壤條)」에, ②번을 본뜬 기사가 있는데, 다만 곰은 환웅(桓雄)의 손녀로 약을 마시고 사람이 된 것으로 기재된다. 또한 단군이 비서갑(非西岬) 하백(河伯)의 딸 사이에 부루(夫妻)를 낳았고 이를 동부여왕(東夫餘王)이라 불렀다고 한다.

출처: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p. 140~144.

위의 사료에 대한 반도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번의 『위서』와 ②번의 『고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위서』는 물론 중국 원대(元代) 이전의 사료에 실린 단군 관련 기사

는 전무하다”며, 최초의 기사에 신빙성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④번에 관해서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부루와 주몽’은 ‘이부형제’라고 해야 맞는데, 굳이 ‘이모형제’라고 기술한 이유에 대해 추정하는데, 동명왕(주몽)을 단군의 자손이라고 했던 ③번 기사와, 부루를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했던 ⑤번 기사를 바탕으로 이모형제라는 표현은 “부루의 아버지인 해모수”를 “단군의 아들이자 주몽의 아버지로 해석”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⁵²⁷ 요컨대 단군, 부루, 해모수, 주몽의 족보관계를 ‘단군→부루, 해모수→주몽’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단군→해모수→부루·주몽’이라는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단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단군왕검의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이름이다. 왕검은 후대의 위씨조선 시대 평양을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이 이름은 한나라의 군현시대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고구려가 이를 평양으로 개명하여 그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 이름에 따라 평양의 지기(地祇)에 왕검선인(王儉仙人)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서, 옛 지명인 왕험(王險)은 선인(仙人, 地祇)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에 훗날 단군의 존칭을 붙였던 것이다(선인의 이름은 험(險)이었는데 이를 검(儉)으로 고친 것이다). 왕검선인은 훨씬 예전부터 평양을 개창(開創)한 지기로서 그 지방에 전해지던 존재였을 것이다. 고구려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전설적 신인(神人)을 본체로 한 것인데 아마 북부여의 해부루(解夫婁)⁵²⁸였을 것이다. 이 원시적인 전설은 신인(神人)을 아버지로 신수(神獸)를 어머니로 하는 북방 제 민족의 시조 출생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⁵²⁹

먼저 위에서는 ‘단군’과 ‘왕검’을 구별하는데, ‘왕검’은 평양의 지기(地祇), 즉 그 땅을 다스리는 신(神)적 존재였던 ‘왕험선인’(王險仙人)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로, 이 말은 동시에 ‘평양’이라는 지명을 가리키기도 했다. 왕검이 평양으로 개명된 것은 고구려 때 일이며, 평양의 지기 왕험선인은 후일에 ‘왕검선인’(王儉仙人)으로 불렸다. 왕검선인은 고구려보다 훨씬 이전부터 평양을 개척한 전설적 신인(神人)으로 전해졌는데, 그의 이름 ‘왕검’ 앞에 존칭을 의미하는 ‘단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단군왕검’의 어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양의 지기 왕검선인은 ‘해부루’였다고 언급하는데, 해부루는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의 아들을 의미했다.

요컨대 ‘왕검’이란 평양의 ‘지명’이자 그 땅을 개척한 신적 존재에게 계

52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42.

528 해부루(解夫婁)는 북부여(北夫婁)의 왕으로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解慕漱)의 아들.

52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43.

승되었던 ‘이름’으로 ‘해부루’를 의미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조(해모수)를 부를 때 ‘단군’이라는 ‘존칭’을 붙여 ‘단군왕검’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군전설에 대해 ‘사실적인 해석’을 수행한 것이었다면 다음으로 ‘설화적 해석’이 제시되었다. 즉 단군전설은 북방민족의 시조출생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그것은 시조인 아버지를 신인(神人)으로 어머니를 신수(神獸)로 묘사하는 설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도사는 단군을 평양의 지기인 왕검선인=북부여의 왕인 해부루와 관련지으면서 그 전설 또한 부여-고구려 계통의 북방민족에게 특징적인 것으로 위치짓고 있었는데, 이처럼 단군전설을 ‘북부’로 보내는 서술방식은 앞서 분석한 내용과 함께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 ‘남부’의 한민족을 역사적 주체로 규정했던 반도사에서 ‘북부’로 배치한다는 것은 바로 역사로부터 ‘배제’시키는 일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반도사는 한민족을 주체로 세우고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는 한편, 단군을 북방민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그 존재를 역사로부터 배제시키는 서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의 개국전설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표4] 『반도사』에 인용된 기사 관련 기사 내용

①	『한서(漢書)』에 따르면 쇠퇴한 은(殷)나라를 떠난 기자는 조선에 가서 예의, 전잠(田蠶), 직작(織作)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범금팔조(犯禁八條)를 지키게 했다.
②	『위략(魏略)』에 따르면 기자의 후예들은 잠시 동안 후(候)로서 조선을 유지했지만, 연(燕)나라가 왕을 칭한 무렵부터 왕을 자칭했다. 그러다 한(漢)나라 초 준(準)이 왕위에 있을 때 연나라에서 도망 나온 위만(衛滿)에게 멸망당했다.
③	『삼국사(三國志)』에 따르면 기자가 팔조(八條)를 가르쳐서 조선에 도둑이 없어졌고 그로부터 40여년 후 준(準)이 왕을 자칭했지만 위만(衛滿)에게 조선을 뺏겼다. 이후 한(韓)의 땅으로 들어가 한왕(韓王)을 자칭했지만 절명했고 한인(韓人)들이 그의 제사를 모셔왔다.

출처: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p. 139~140.

위의 세 가지는 기자전설과 관련하여 반도사에서 제시된 사료와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한 반도사의 입장은 일관적이었다. 먼저 은(殷)나라의 현인 기자가 제후(諸侯)로서 조선에 갔다는 이야기 자체가 은나라의 후예인 춘추송(宋)나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전설로 간주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략』(②)과 『삼국지』(③)의 기사도 해석되는데, 그것은 “낙랑·대방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전기 혹은 전설을 바탕 자료”로 기술된 것이다.⁵³⁰ 이것이 위만의 정복으로부터 100여년 후에 쓰인 『사기(史記)』의 「조선전(朝鮮傳)」에는 기자 관련 내용이 없는데 위의 사료에는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낙랑·대방은 제2기 「한영토시대」의 제1장 「한의 군현설치」부터 서술에 등장하는 ‘한족’의 행정구역이다. 한족에 의한 조선지배에 대해서는 제1기 제2장 「고조선」의 제3절 「위씨조선」부터 서술이 시작하는데, 연나라의 망명자 위만에 의한 정복을 한족에 의한 지배가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낙랑·대방은 위만조선이 한나라 무제(武帝)에 정벌당한 후에 설치된 한나라의 행정구역이다. 이 점령시대는 한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북쪽의 고구려와 남쪽의 백제가 세력을 확장할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요컨대 기자조선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 한족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시 말해 조선은 ‘기자에 연원을 갖는 국가’라는 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한족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사의 입장에서 밝혀야 했던 것은 조선은 ‘위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민족의 국가였다’는 점이었다. 중간에 한족에 지배되었다고 해도 조선은 일본민족과 ‘동족’인 한민족의 국가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민족 고유의 개국전설」(제1기 제1장 제3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개국신인인 단군의 전설은 본래 한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 한민족은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던 야비한 개국전설과 전혀 다른 매우 고상한 고유의 개국전설을 가지고 있다.” 즉 한민족은 신인(神人)과 신수(神獸)를 특징으로 갖는 북방민족의 전설과는 전혀 다른 고유의 전설을 갖는다는 주장인데, 반도사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소개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삼한’의 계통을 잇는 나라들의 전설이었는데, 첫째 진한에서 나온 ‘신라’, 둘째로 변한에서 나온 가야·임나의 구성국이었던 ‘가락국’(駕洛國), 셋째로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탐라’(耽羅)에 전해지는 전설을 제시했다.

먼저 신라에 관해서는 왕실을 구성한 3성(姓)의 시조에 관한 탄생설이 소개된다. 박(朴)씨의 시조이자 신라의 초대 왕이 혁거세(赫居世)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紫卵)에서 태어났고 그 왕비 알영(閼英)은 우물가에 나타난 ‘계

⁵³⁰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40.

룡'(鷄龍)의 왼쪽 옆구리에서 탄생했다. 석(昔)씨의 시조 탈해왕(脫解王)은 왜국의 동북쪽에 있던 다파나(多婆那)의 왕후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 김(金)씨의 시조 알지는 '계림'(鷄林)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은 탈해왕이 발견한 금함 속에서 나왔다. 이처럼 모두가 '난생신화'(卵生神話)를 통해서 탄생한 점이 부각되는데, 이는 가락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에서 태어났고 왕비는 바다 건너 왕국-일본을 시사-에서 왔다고 소개되었다.

단, 탐라의 시조 탄생설만은 난생신화와 상관이 없었는데, 그 대신 가락국의 경우 시사 정도로 끝났던 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전설로 강조되었다. 한라산 기슭의 동굴에서 3명의 신인-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이 나타나 사냥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해 쪽 바닷가에 일본의 사절이 나무함을 들고 나타났다. 나무함 속에는 일본왕의 딸 3명이 들어있었는데, 3명의 신인은 이들을 각각 배필로 삼아 나라를 열었다. 즉 탐라는 일본 왕족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탐라만 예외로 나머지는 모두 '난생신화'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었는데, 반도사에서는 이를 '한민족에 고유한 특징'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한에서 나온 '백제'는 여기서 제외되었을까.

백제의 전신은 충청·전라지방을 권역으로 한 마한의 구성국 '백제국'이다. 앞서 조선을 형성했던 것도 마한의 한민족이었는데, 50여 개국으로 구성된 마한은 각각 12개국으로 구성된 진한과 변한보다 훨씬 광대한 나라였다. 한나라 낙랑군 시대에는 조알(朝謁)을 하기도 했지만, 후한(後漢) 후기에는 북쪽의 고구려와 함께 세력이 확장되어 한나라의 통제를 벗어났다. 하지만 마한은 그 과정에서 진한, 변한과는 다른 경위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북쪽 변방에서 부여중족인 자가 군장(君長)으로 나서서 백제국이 갑자기 발흥하자 형세는 크게 변하여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⁵³¹ “백제국의 왕실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부여중족인 자가 나라를 열었다.”⁵³²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溫祚)를 백제의 시조

531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p. 156~157.

532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73.

로 전하는 『삼국사(三國史)』의 기술이 소개된다. 시조 온조에 관해서는 주몽의 친아들이라는 설과 의붓아들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주몽이 부여를 나오기 전에 낳았던 아들 유류(孺留)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남쪽으로 도망 나왔다는 해석은 동일했다. 마한에서 거처를 찾은 온조는 백제를 국호로 부여를 씨로 삼았다. 이리하여 “대륙에 있던 부여민족의 한 부족”이 “마한의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운 것이 백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⁵³³

그렇다면 백제는 ‘부여-고구려 계통’, 즉 ‘북방의 만주족의 나라’로 간주되었을까. ‘남부’의 ‘삼한’을 ‘한민족의 국가’로 규정하고 일본과의 ‘동족성’을 주장했던 반도사 서술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해석이었다. 백제를 역사의 밖에서 안으로 들이기 위해 반도사는 ‘왕실’과 ‘구성 민족’을 구분하여 백제를 고구려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삼국시대의 백제를 부여종족으로 볼 때, 왕실 및 일부 귀인(貴人)이 유래한 종족을 모든 백제인의 종족으로 보는 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백제가 고구려와 크게 다른 점인데, 고구려는 부여종족인 자가 동일종족 중 별족(別族) 안에 건국한 동종(同種) 및 다른 북방민족을 점차 포용하여 대국을 이룬 것이므로, 국가를 형성한 민족으로 본다면 백제는 마한민족의 나라이고 고구려는 부여 및 이와 유사한 북방민족의 나라로 한민족의 나라가 아니다. …백제가 가진 부여종족 부분은 처음 그대로 남아 더 늘지도 않았으며 훗날 낙랑의 백성들을 통합하게 되지만 대체로 마한종족의 나라로서 대백제(大百濟)로 성장했을 때 마한종족의 요소가 더욱 증가하여 마한종족의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⁵³⁴

백제의 ‘부여종족적 요소’는 건국 당시의 ‘왕실과 일부 귀족’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비중은 이후에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마한종족적 요소’는 백제의 성장과정과 함께 더 증가했다. 따라서 백제는 부여종족의 나라라기보다는 마한종족으로 구성된 ‘한민족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는 부여종족에서 나와 건국 후 성장과정에서도 북방민족을 포함해 나갔던 ‘만주족의 나라’ 고구려와는 ‘크게 다른 점’으로 강조되었다.

이상 조선의 개국 전설에 대한 반도사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단군에 대해서는 북방민족으로 형성된 부여-고구려 계통에 포함시키면서 배제의 논리를 작동시켰다면, 둘째로 기자에 대해서는 낙랑·대방의 한족들이

533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 174.

534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2008), pp. 174~175.

만든 전설에 의거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에 의문을 던져 한민족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셋째로 한민족에 고유한 전설에 관해서는 삼한의 신라와 가락국을 예로 그 특징을 ‘난생신화’에서 찾았는데, 이는 ‘신인과 신수의 결합’을 특징으로 갖는 북방민족-단군-의 전설과 차별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런데 ‘난생신화’는 정말로 한민족에 고유한 전설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이 점을 고찰함으로써 반도사의 ‘배제’의 서술방식이 갖는 허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이 반도사에서 ‘고구려’는 단군과 동일선상에 있는 존재였다. 조선의 ‘북부’를 발생지로 성장한 ‘부여’에서 갈려져 건국된 순수 ‘만주족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반도사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한 나라의 개국전설은 ‘단군전설’과 마찬가지로 ‘신인과 신수의 결합’을 특징해야 한다. 그런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탄생설은 바로 ‘난생신화’에 근거한 것이었다. 주몽은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柳花)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그는 바로 ‘난생’을 통해 나타났던 것이다. 그 후 부여왕 금와(金蛙) 밑에서 성장했지만, 곧 남하하여 졸본에 고구려를 건국했다.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기술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같은 내용의 전설이 부여의 시조전설이나 주몽의 뒤를 이은 아들 유리왕(瑠璃王)의 탄생설에서도 나타난다. 게다가 반도사에서는 “이와 같은 시조 전설은 근대까지 만주 각 추장(酋長)의 집안에 전해지고 있어, 청(淸) 황실 역시 이러한 시조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해설까지 달고 있는데,⁵³⁵ 요컨대 ‘난생신화’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만주족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배제의 논리’는 분명히 그 정합성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2) 조선사와 포섭의 편찬방식

1) 조선사의 논의과정과 단군문제

1922년 12월 총독부는 훈령 제64호를 통해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먼저 1921년 말쯤 총독 사이트의 발안(發案)으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할 필요성이 환기되었고,⁵³⁶ 이듬해 6월 정무총감에 취임한 아리요시

⁵³⁵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2008), p. 164.

⁵³⁶ 「絶對로 公平히 編纂-內鮮史家를 委員에 任命 五個年の 豫定으로 着手 中樞院書記官長 小田幹

는 구로이타와 함께 계획에 착수했다. 이리하여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2년 반 만에 개편을 겪게 된다.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를 통해 ‘조선사편수회’로 승격된 것이다.⁵³⁷ 하지만 이때의 개편은 사업의 취지에 변경이 있었다기보다는 더 수월한 진행을 위해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즉 그것은 여전히 ‘학술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개편이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선사에서 표방된 ‘학술성’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것이 ‘조선의 주체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단군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조선사의 편찬은 수집과 편수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수집은 반도사로부터 인계받은 사료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되었다면, 편수는 1927년도부터 착수되었다. 1927년은 조선사의 편찬 방식을 결정하는 ‘강령’이 완성되었던 해이기도 했는데, 강령은 1923년의 제1회 위원회(편찬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되었지만, 수정을 거쳐 1927년의 제2회 위원회(편수회)에서 완성되었다.

1923년에 작성된 강령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회의록이 위원회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작성된 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제1회 위원회에서 구로이타는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와 『대일본고문서(大日本古文書)』를 편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⁵³⁸ 이로 볼 때 강령은 아리요시에게 제안을 받고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는 6개월 동안에 구로이타가 동경제대 사료편찬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27년의 강령에 관해서는 위원회와 함께 편수타합회(編修打合會)의 회의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타합회는 간사 이나바, 수사관 나카무라, 쓰에마쓰 등 실무자들 중심의 내부 회의였다. 거기서는 세부적 분담뿐만 아니라 강령이나 심사방법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율하기도 했는데, 큰 안건을 논의할 때에는 구로이타나 이마니시도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했다.⁵³⁹ 강령은 타합회에서 약 1년 동

治郎氏談」, 『매일신보』 1922년 12월 26일.

⁵³⁷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pp. 29~30.

⁵³⁸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p. 14. 『대일본사료』와 『대일본고문서』는 1895년에 동경제대 문과대학에 설치된 사료편찬과(史料編纂掛, 사료편찬소의 전신)에서 편찬되었는데, 이에 구로이타도 관여하고 있었다.

안의 수정기간을 거쳐 1927년 7월 12일 제2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⁵⁴⁰

이를 1923년의 강령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논의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강령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편찬방식’을 결정하는 틀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더불어 논의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의 대부분은 강령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강령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볼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5] 강령의 비교

	편찬위원회 제1회 위원회(1923.1.8~10)	편수회 제2회 위원회(1927.7.12)
편 년 체	1. 편찬의 형식은 편년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분류사(풍속, 종교, 문학, 예술, 가요 등)를 편찬한다.	2. 편수의 체는 편년으로써 한다. 그 연차는 간지(干支) 및 왕 재위에 의하며, 일본 및 중국의 기년(紀年)을 주기(註記) 참조한다.
시 대 구 분	2. 편찬의 구분 제1편 삼국이전 제2편 삼국시대 제3편 신라시대 제4편 고려시대 제5편 조선시대 전기(태조~선조) 제6편 조선시대 중기(광해군~영조) 제7편 조선시대 후기(정조~갑오개혁)	1. 시대구분에 의해, 편의상 다음 6편으로 나누어 편수한다. 제1편 신라통일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 제4편 조선시대 전기(태조~선조) 제5편 조선시대 중기(광해군~영조) 제6편 조선시대 후기(정조~갑오개혁)
연 도 불 명	3. 편찬의 체제(体裁) (3) 년·월·일이 불명한 것은 관계사항 다음에 유취(類聚)하여 강문(綱文)을 별도로 올린다.	5. 사료의 년·월·일자가 불명한 것은 관계조항 아래 유수(類收)하여 강문을 별도로 올린다.
해 제	6. 출판 (3) 주된 사료·사적(史籍)의 해제	
非 편 년 체		9. 제1편은 특별히 구래 편찬찬록(編纂撰錄)된 기록·사적(史籍) 기타 사료를 원문 그대로 유취수재(類聚收載)하여 편년체로 하지 않는다.

출처: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昭和二年七月十二日 朝鮮史編修會 第二回委員會 關係書類 朝鮮史編修綱領及ビ凡例」,

⁵³⁹ 타합회는 주로 이나바의 연구실이나 중추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상우(2011)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⁵⁴⁰ 수정업무를 맡은 것은 나카무라였다. 먼저 1926년 11월 29일에 초안을 제출했고, 이어 12월 11일에 정식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것이 큰 변경 없이 제2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먼저 강령은 양쪽 모두 ‘편년체’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이는 사료편찬과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당시 가장 ‘학술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년체를 내세운 점은 공통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약간 달라졌다. 1923년의 강령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류사’를 편찬할 방침이 명기되었지만, 1927년의 강령에서는 이것이 없어지고 ‘연차 표기법’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1923년 당시 구로이타는 ‘분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조선사는 ‘편년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연월(年月)’에 의거하지 못하는 사료’도 많다. 반도사에서는 ‘정치’만을 역사의 주요점으로 알았지만 조선사에서는 ‘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가치가 없다고 버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사의 편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⁴¹

다음으로 조선사의 구성과 관련된 ‘시대 구분’을 보면, 1923년에는 7편이었던 것이 1927년에는 6편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1·2편의 「삼국이전」과 「삼국시대」는 제1편 「신라통일이전」으로 통합되었고, 제3편 「신라시대」는 제2편 「신라통일시대」로 변경되었다. 이는 1927년의 강령 제9항과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는 제1편의 「신라통일이전」에 대해서는 ‘편년체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대구분 또한 변경된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결국 이때 제시된 비(非)편년체 방식은 막판에 번복되어 다시 편년체가 채용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시대구분과 6편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셋째로 ‘연도가 불명한 사료’에 대한 항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모두 ‘관계사항에 유취(類聚)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넷째로 출판업무와 관련해서는 1923년의 강령에서는 특정 사료나 사적에 대해 별도로 ‘해제’를 간행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지만, 1927년에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연도가 불명한 사료’와 ‘해제’에 관한 항목은 특히 ‘단군기사’의 취급방식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논의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923년 1월 8~10일에 개최된 편찬위원회 제1회 위원회를 보면, 우선 첫날에

541 구로이타의 부연설명은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p. 15.

강령의 원안이 제출되고 구로이타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둘째, 셋째 날에는 강령의 가결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단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는데, 먼저 둘째 날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정만조 위원	삼국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군조선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구로이타 고문	이는 구분의 명칭으로 삼국이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능화 위원	조선의 상대(上代)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이 있으니 삼국이전을 고대조선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발해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이나바 간사	지당한 말씀이지만 당시의 조선은 현대의 조선과 지역이 다릅니다. 현대의 조선에서 보면 한 지방에 한정된 명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이전이라는 막연한 명칭을 붙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에 관해서는 신라를 서술하는 곳에서 발해 및 이와 관련 있는 철리(鐵利) ⁵⁴² 등의 기사까지 수록할 생각입니다.
이능화 위원	건국신화에 관해서는 민족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니 꼭 수록했으면 합니다.
이나바 간사	지당한 말씀입니다. 단군기사에 관해서는 숙고할 생각인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이마니시 위원이 안 계시니 이대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가야하라 위원	단군과 기자는 건국의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망라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어윤적 위원	저는 삼국 이전을 삼국전시대, 삼국시대를 삼국후시대, 신라시대로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구로이타 박사	전시대와 후시대로 하면 오히려 오해를 더 부르겠지요. 그리고 통일은 고려에서도 이씨조선에서도 말하니 특별히 신라에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

오다 간지로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마니시 위원이 안 계시더라도 이는 단지 구분의 문제로, 그 명칭 같은 것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 구분에 이의가 없다면 이대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이능화 위원	조선에는 단군과 기자라는 두 성인이 있는데, 사가들은 기자만 중시하고 단군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군도 동일하게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나바 간사	구분의 명칭에 관해서는 이마니시 위원과 상담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구로이타 박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단군과 기자의 기사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료에 대해서는 의안 6항의 3에 든 해제를 붙일 생각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들을 아울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쓰이 의안 제3항의 구분은 어떻습니까(이능화 위원, 홍희 위원이 찬성의 뜻을
위원장 대리 포함).⁵⁴³

둘째 날에 제기된 논의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정만조의 첫마디에 상정되듯 조선인 위원들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제1편 「삼국이전」에 ‘단군기사가 수록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인 위원들은 대체로 문제를 ‘시대구분의 명칭’으로 국한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거기서 더 나아갈 경우—단군의 수록여부—는 제1편의 담당자 이마니시의 부재를 이유로 미루려고 했다. 이리하여 계속 논의가 엇갈리다 모든 결정을 이마니시와의 상담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이나바의 발언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는데, 그때 바로 구로이타의 발언이 있었다.

구로이타의 발언은 시대 구분의 명칭이 아니라 단군의 포함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단군기사는 ‘강령 제6항의 (3)해제’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회의 첫날에 했던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사료의 취급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 및 사적의 해제를 만들어 공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며 나아가 “각각의 의견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은 극히 공평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단군기사는 여러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제로 출판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이었다. 이어 회의는 제3항, 즉 ‘연도가 불명한 사료’에 대한 찬성을 확인하고 끝났다.

다음날 회의에서도 단군의 수록문제는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때 구로이타 대응은 전날과 사뭇 달라졌다.

아리요시 위원장 그러면 제1항은 원안(原案)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는듯하니 가결하겠습니다. 제2항의 1·2·3은 이마니시 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어윤적 위원 그에 대해 조금 여쭙고 싶은데 단군과 기사는 어떻게 다루실 생각입니까. 삼국 전에 수록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로이타 박사 단군과 기사의 기사는 빠짐없이 기재할 생각인데, 이는 제3항과 관계되기 때문에 편년사의 방침에 의해 저절로 결정되는 바입니다. 건국사료에서 연대가 불명한 것을 어디에 넣을지는 향후 상담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542 당나라 때에 만주에서 활약했던 통구스계 부족을 말함.

543 「第一回朝鮮史編纂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1925)

- 이능화 위원 이번엔 공평하고 완전한 조선사를 편찬한다는 소식에 우리들이 크게 만족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예로부터 역사 서적은 있어 왔는데, 신라·고구려·백제에도 이미 역사편찬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신라에는 진흥왕 시대에 국사를 편수했고, 고구려에는 이문진, 백제에는 고흥 등의 사가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에는 인종 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했고, 충렬왕 때에는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라는 야사를 저술했으며, 이씨조선에 이르러서는 『동국사략(東國史略)』, 『동사찬요(東史纂要)』, 『동사강목(東史綱目)』,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의 책들이 나왔는데, 『삼국유사』를 제외하고 모두 관선(官選)의 서적입니다. 단군기사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것이 최초입니다.
- 아리요시 위원장 이능화 위원에게 주의를 주겠는데, 단군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분만을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 구로이타 박사 편찬의 체제가 정해지면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결정됩니다.
- 오다 간지로 위원 이마니시 위원이 안 계신다고 결정을 유보하면 사무진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참에 일단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어윤적 위원 어제는 구분의 명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지만 오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이능화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아리요시 위원장 모두에게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듯하니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3항은 원안대로 의의 없으십니까. 없는 듯하니 이것도 가결하겠습니다.⁵⁴⁴

먼저 제1항(편년체)을 가결시킨 아리요시는 제2항(시대구분)에 관해서는 이마니시의 부재로 가결을 유보한다는 전날의 방침에 동의를 구하는데, 이때 어윤적이 다시 단군의 수록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리하여 논쟁이 다시 시작될 듯했는데, 그때 바로 구로이타가 답변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날과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단군의 수록여부는 ‘제3항’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년사의 방침에 따라 저절로 결정될 것’이며, ‘연도가 불명한 사료를 어디에 넣을 것인지’의 문제만 향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분명히 ‘제6항-(3)해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회의에서 이를 ‘제3항’에 관계된 문제로 다루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제3항-(3)’에서 제시된 ‘연도가 불명한 사료’로 다루겠다는 뜻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사항에 유취(類聚)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단군기사를 어디에 유취할 것인지, 즉 ‘관계사

544 『第一回朝鮮史編纂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1925)

항'을 결정하는 문제만 향후 상담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만 정해진다면, 단군문제는 '저절로 결정될 것'이었다.

전날 회의에서 '제3항'에 대한 찬성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것이 단군기사와 관계된 조항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이미 가결된 상황에서 다음날 갑자기 '제3항-(3)'에 따라 취급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당황했는지 이능화는 과거 조선에서 이루어진 편찬사업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데, 이마저도 '명칭문제'로만 심의하라는 아리요시의 주의를 받고 만다. 사업의 실질적인 권위자인 구로이타의 발언에 이어 정무총감으로부터 들어온 주의를 더 이상 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마찬가지로였다. 아리요시의 대응에 힘입은 구로이타는 편찬의 체제가 정해지면 저절로 결정될 문제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오다로부터 이마니시 없이도 가결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이에 버티다 못한 꼴로 어윤적과 이능화는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이로써 1923년의 강령은 가결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1925년 10월 8~9일에 열린 편수회 제1회 위원회에서 이마니시의 의안(議案)이 제출되면서 강령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의안 신라 문무왕 이전은 편년에 의거하지 않고 주로 과거에 편찬된 기록·사서를 그대로 유취하고자 함.

이유 편사의 체제는 제1회 위원회[편찬위원회-인용자]의 결의에 준거해야 함은 물론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럼에도 신라시대 문무왕 이전에는 삼국 각각 특종한 기록을 보유하고 서로 연락을 결여하기 때문에 편년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편찬된 기록·사서를 그대로 유취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학술적이다. 이것이 본 안을 제출하는 까닭이다.⁵⁴⁵

이마니시는 제1편 「삼국이전」에 '편년체'를 취하는 방침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신라 문무왕(文武王)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는 편년체로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사료들을 그대로 분류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로는 한·중·일의 고대사료는 각기 연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편년체로 연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마니시의 제안에 대한 심의는 회의 둘째 날에 이루어졌다. 이마니시

⁵⁴⁵ 「議案」, 『朝鮮史編修會 委員會議事錄 大正十四年以降昭和三年ニ至ル』. 이마니시의 제안은 공간된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는 “고구려는 광개토왕·장수왕(廣開土王·長壽王), 백제는 초고왕·구수왕(肖古王·仇首王), 신라는 진흥왕(眞興王)” 때부터 신뢰할만한 연도가 판명되는 점을 들어 이를 각각 중간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문무왕의 신라통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는 구분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고대사료가 갖는 논쟁성 또한 편년체를 어렵게 하는 점으로 들었다.

고대에는 여러 논의들이 많습니다. 개인출판이면 몰라도 공적 기관에서 간행되는 사서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논의들을 모두 채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역사는 ‘저술하지만 만들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더 나아가 ‘모으지만 저술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한다면 공평할 것입니다. 예컨대 단군과 같은 문제도 그와 관련된 재료를 수집, 제공하여 독자들의 사용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⁵⁴⁶

회의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듯이 이견이 들끓는 고대사를 편년체로 편찬한다는 것 자체가 의견의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라리 수집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수록하는 방법이 공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서술’이 개입하는 편년체를 포기하고 ‘수집’만 하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단군문제도 이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료의 논쟁적인 성격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이마니시의 주장은 ‘제6항-(3)해제’ 방침을 제시했을 때의 구로이타와의 의견과 상통한다. 이마니시 역시 비(非)편년체로 하는 대신 제1편에 수록될 “일본, 조선, 중국의 사료들은 해제를 붙이기로 한다면 한층 더 편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이마니시의 제안은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다. 의견을 묻는 이쿠타 기요사부로⁵⁴⁷의 말에 이능화와 권중현이 찬성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단군가사의 포함여부를 중시했던 이들에게 비편년체가 됐든 제1편에 수록되며 해제까지 붙여진다는 소식은 전보다는 만족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이다.

이 제안이 결정됨에 따라 제1편의 시기구분 또한 재구성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1927년의 강령에서는 구성이 7편에서 6편으로 바뀌면서 제1·2편의

546 「朝鮮史編修會第一回委員會會議錄」, 『朝鮮史編修會 委員會議事錄 大正十四年以降昭和三年ニ至ル』

547 아리요시의 퇴임으로 1924년 7월 시모오카 치지(下岡忠治)가 새로 임명되었는데, 편수회 제1회 위원회는 시모오카의 부재로 이쿠타가 역할을 대신했다.

「삼국이전」과 「삼국시대」가 제1편의 「신라통일이전」으로 통합되는 변경이 있었다. 이마니시의 제안도 ‘문무왕의 신라통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자는 것이었다.⁵⁴⁸

이리하여 1927년 7월 12일 제2회 위원회에서 수정강령이 가결되었는데, 그 후 1930년 12월 5일의 타합회에서 다시 변경이 이루어졌다. 사료수집을 어느 정도 마친 편수회는 1927년부터 편수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인쇄를 코앞에 두고 이마니시로부터 또다시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제안 지난 번에 결정된 제1편의 편찬 체제는 사료를 일본, 조선, 중국 3부로 나누고 각 부는 책자별로 조선 관계 사료를 채록하고 조항마다 적요(摘要)하기로 했었다. 지금 이 방침으로 진행한 결과를 보니 중복 기사가 거듭 보여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채록 사료를 3부로 나누는 것은 지난 결정대로 두되, 책자별 원칙을 폐지하고 각 부의 사료가 나타내는 연차에 따라 배열하고 각 연도의 적요를 제시하기로 한다.⁵⁴⁹

지난 결정에 따라 제1편은 편년체로 하지는 않고 사료를 책자별로 수록하기로 했으며, 또 한, 중, 일의 사료들이 연관성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나라별로 수록하기로 했었다. 이마니시의 제안은 나라별 3부 구성은 그대로 두되, 각 부에 수록될 사료는 책자별로 하지 않고 연차별로 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편년체’ 방식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복기사가 반복되어 체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고대사는 사료의 성격상 편년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책자별로 편수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여러 번 나와 그때마다 “일일이 반복해서 요령문을 붙여야” 했다. 그러다보니 “요령문이 오히려 본문보다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편년체로 다시 돌리자는 이마니시의 제안에 조선인 위원들은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고 다만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이날 회의에는 1928년 12월 20일부터 촉탁이 된 최남선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질문은 “후

⁵⁴⁸ 현존하는 회의록에서는 시기구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 다만 변경된 시기구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1926년 7월 3일의 타합회에서였는데, 이날 구로이타는 이나바와 협의하여 작성한 편수사무 분담안을 발표하면서 ‘제1편에서 제6편’으로 나누었다는 점, 제1편의 명칭이 ‘신라통일이전’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 『大正十五年七月三日 朝鮮史編修會 編修事務分擔協議會 議事錄』,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⁵⁴⁹ 「提案」, 『朝鮮史編修會 昭和五年十二月 編修打合會議事錄』

인의 설”을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편년체로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은 별편으로 수록”할 것인지 두 가지였다. 우선 전자에 대해서는 “그럴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예, 맥, 옥저 등은 모두 별도로 수록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최남선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그에게 ‘별편’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은 단군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었다.

다음으로 정만조는 낙랑시대의 한사군(漢四郡) 중 현도군에 세워진 현도성(玄菟城)의 건축 연도와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연호를 쓰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는 중국사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그래도 조선의 연호에 따른 표기법이 더 ‘조선사에 알맞은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대에는 양국의 연도를 맞추기가 힘들고 연도표기는 행위주체(한나라)에 맞추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연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권중현도 의견을 제시했다. 적어도 ‘간지’(干支)를 먼저 쓰고 다음에 중국의 연도를 ‘주기’(註記)해야 조선사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바로 동의를 얻었다. 권중현의 제안은 1927년의 강령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1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⁵⁵⁰ 마지막으로 이능화가 기자 관련 사료에 대한 취급 방침을 확인했는데, ‘기자가 조선에 관계했던 전설만 다룬다는 조건으로 수록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한편 일본인위원들의 관심은 ‘정해진 기한’에 완료할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제1편의 편수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투자된 상태였으며 바로 다음 해에 인쇄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때가 이미 12월이었으니 길어도 서너 달 안으로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1편의 수사관보 쓰에마쓰가 “예정 기한내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이마시니가 제안한 방식이 더 “학술적”이라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⁵⁵¹ 이로써 비(非)편년체 방침은 폐기되고

550 단, 제1편 제2권 일본사료의 경우, 간지→왕의 재위년 순서로 된 조선사료(제1권)와 지나 사료(제3권)와 달리, 천왕의 재위년이 먼저 표기되었다. 그리고 제2편부터는 간지→조선의 왕의 재위년의 순서로 표기하고, 일본 및 중국의 왕의 재위년을 주기하는 형식으로 표기되었다.

551 『昭和五年十二月五日 朝鮮史編修會 打合會議事錄』, 『朝鮮史編修會 昭和五年十二月 編修打合會議事錄』.

한, 중, 일로 나누어진 3부를 각각 연차순으로 편찬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2) 조선사의 편찬방식

1932년 3월 31일 마침내 『조선사』 제1편이 간행되었다. 여기서는 실제로 간행된 제1편에서 단군기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사』 제1편 제1권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조항은 ‘갑자 신라시조 혁거세거서간 원년(甲子 新羅始祖赫居世居西干元年)’부터 시작하는데, 아홉 번째 조항 ‘갑신 신라시조 혁거세거서간 21년(甲申 新羅始祖赫居世居西干二十一年)’부터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연도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원년(高句麗始祖東明聖王元年)’도 같이 병기된다. 단군기사는 이 아홉 번째 조항에 등장한다. 제1편은 연차순으로 배열된 ‘조항’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이에 ‘본문’과 ‘사료’가 달리는 형식을 취한다. 본문은 강문(綱文)이라고도 불리는데, 각 조항마다 붙여진 제목의 역할을 한다. 사료는 말 그대로 수집한 사료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원문 기사를 의미한다.

단군기사가 수록된 제9항의 본문을 보면, “이 해 신라가 금성(金城)을 쌓았다.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高朱蒙)이 나라를 세웠다”고 적혀있다.⁵⁵² 이 다음으로 사료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데,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6] 제1편 제1권 제9항의 사료구성

No.	사료명	권명
1	〔三 國 史 記〕	卷一新羅本紀一始祖赫居世居西干
2	〔三 國 史 記〕	卷十三高句麗本紀一始祖東明聖王
3	〔三 國 史 記〕	卷三十四志三地理一
4	〔三 國 遺 事〕	王曆
5	〔三 國 遺 事〕	卷一古朝鮮(王儉朝鮮)
6	〔三 國 遺 事〕	卷一北夫餘
7	〔三 國 遺 事〕	卷一東夫餘
8	〔三 國 遺 事〕	卷一高句麗
9	〔東國李相國全集〕	卷三古律詩東明王篇并序
10	〔高句麗好太王碑〕	[없음]

출처: 『朝鮮史』 第1編 第1卷(1975), pp. 8~19.

⁵⁵² “是歲，新羅，金城ヲ築ク。高句麗，始祖高朱蒙立ツ。”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 第1編 第1卷(東京大學出版會, 1975), p. 8.

첫 번째 『삼국사기』의 기사는 신라 금성의 건축과 고구려의 건국을 알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어 두 번째로 동명성왕 주몽의 출생담과 고구려 건국까지의 경위를 보여주는 기사가 나오고, 세 번째로 다시 신라의 혁거세가 도읍에 금성을 세웠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네 번째부터는 『삼국유사』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왕력」의 기사에는 다시 신라 금성의 건축과 고구려의 건국이라는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에 처음으로 단군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왕력」은 앞서 반도사에서 단군 전설을 살펴볼 때 제시했던 ③번과 동일한 기사인데, 고구려의 초대 왕인 동명왕은 ‘단군의 자손(檀君之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기사를 필두로 단군과 부여계통(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혈연관계를 시사하는 기사들이 뒤를 이어가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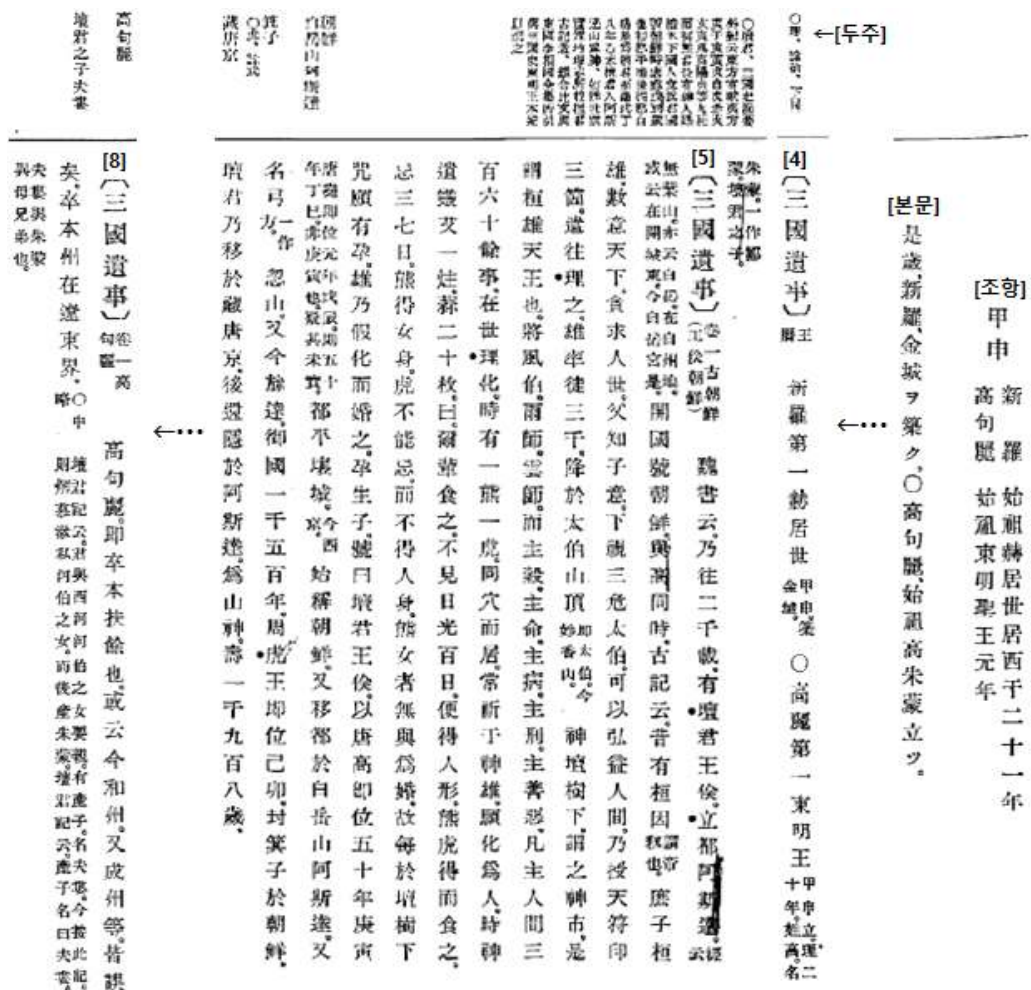
다섯 번째 「권일 고조선(왕검조선)」은 반도사 ①,②번과 동일한 기사로, 먼저 『위서』에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음이 전해진다는 내용(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에 환웅의 강림과 곰의 여인화(熊女), 단군왕검의 탄생과 그가 평양에 조선을, 백악산에 아사달을 만들었다는 내용(②)이 나온다. 여섯 번째 「권일 북부여」는 반도사 ⑤번과 동일한 기사로, 『고기』에 전해지는바 천제(天帝)가 내려와 세운 나라를 북부여라 하였고 자신을 해모수(解慕漱) 아들을 부루(夫婁)라 불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곱 번째 「권일 동부여」는 반도사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기사로, 북부여 왕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가 아들 금와(金蛙)를 얻어 동부여로 옮겨갔던 경위가 설명되어 있다. 여덟 번째 「권일 고구려」는 반도사 ④번과 동일한 기사로, 고구려와 졸본부여(卒本夫餘)의 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에 이어 단군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단군기』에 따르면 단군이 하백의 딸 사이에 아들 부루를 낳았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 사이에 아들 주몽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삼국유사』에서 발췌된 기사는 여기까지로, 나머지 『동국이상국전집』과 『고구려호태왕비』에서 발췌된 기사는 동명왕을 마지막으로 제9항은 끝난다.⁵⁵³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삼국

⁵⁵³ 위에서 언급된 반도사 수록 기사는 모두 본고 234쪽에 인용된 것임.

유사』에서 발췌된 기사 중 일곱 번째 「권일 동부여」를 제외하면 반도사에서 인용된 기사들이 모두 조선사에도 실렸다는 점, 그리고 이들 기사 중에서 단군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왕력」(4번), 「권일 고조선(왕검조선)」(5번), 「권일 고구려」(8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사의 수록방식을 통해 단군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조선사 제1편 제1권 제9항에 단군 관련 기사가 수록된 모습이다. 이를 통해 편집자들이 최종으로 결정한 조선사의 ‘편찬방식’을 알 수 있다.

[그림3] 『조선사』 제1편 제1권 제9항 단군 관련 기사



출처: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 第1編 第1卷(東京大学出版会, 1975)

가장 먼저 나오는 ‘조항’은 강령에서 제시된 ‘연도표기’ 방침대로 처리되어 있다. 먼저 간지(干支)를 나타내는 ‘갑신’(甲申)이 맨 위에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밑에 신라와 고구려의 연호가 병기되어 있다.⁵⁵⁴ 조항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본문’이다. 연도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던 조항이 조선사의 틀이었다고 한다면, 사료들의 요약으로 만들어진 본문은 조선사의 내용을 구성한다. 제9항도 그렇듯이 제1편의 본문은 짝막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았는데, 제2편부터는 갈수록 길어지고 한 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장황하게 쓰여진 경우도 적지 않다.

본문이 길어지는 변화와 함께 제2편부터는 ‘사료’가 빠지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편은 ‘조항-본문-사료’ 체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제2편부터는 ‘조항-본문’ 체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1930년 8월 22일의 제4회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구로이타는 제1편과 제2편의 체제와 관련하여 후자는 “본문만을 인쇄하고 원문사료는 인쇄하지” 않기로 했음을 알렸다. 사료는 본문 말미에 “출처만을 명시”하고 “본문과 사료 둘 다 갖추 복본(複本)”은 대학과 도서관에만 소장하기로 한 것이다. 제2편 이후에도 “사료를 인쇄하면 분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⁵⁵⁵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언급이 있었다. 1926년 12월 20일 타합회에 참석한 구로이타는 조선사의 목적이 ‘사료편찬’이 아니라 ‘역사편수’에 있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었는데, ‘본문과 사료’의 관계 역시 그러한 인식 속에서 파악되는 문제였다.

조선사를 편년체로 만든다는 것은 단지 사료를 수집해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요령을 잃지 않게 노력함으로써 그것만으로 하나의 조선사를 만드는 것으로, 본문을 내세워 그 내용을 가리키는 사료를 참조시키는 것입니다. 사료를 편찬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편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조선사편수회이며 조선사료편찬회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출판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만을 모아서 사료는 인용서목을 적어놓기만 해도 훌륭한 조선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사업은 조선사의 본문을 편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료를 수집하는

⁵⁵⁴ 제2편부터는 간지에 바로 이어 같은 글자 크기로 조선의 연호가 표기되었고, 그 밑에 일본의 연호와 중국의 연호가 작은 글씨로 병기되었다.

⁵⁵⁵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pp. 44~45.

것은 이 편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⁵⁵⁶

구로이타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배경에는 12월 11일의 타합회에 제출된 이마니시의 의견서가 있었다. 이날은 나카무라가 작성한 수정강령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안건이 컸던 만큼 이마니시에게서도 의견서를 받아냈었다. 의견서에서 이마니시는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특히 제1편에 비(非)편년체 방식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앞서 보았듯이 비편년체는 이마니시의 제안으로 결정된 것이었는데, 그는 “편년사를 완전히 새롭게 작성하는 일은 고생에 비해 성과가 적”기 때문에 “제1편의 방법”처럼 “사료를 그대로 간행본 및 교본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되새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우려’를 지적하는데, “나카무라안에 의해 작성되는 형식은 조선 사료의 편년적 편수이지 조선편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총독이 시인할 것인지 여부”가 걱정된다는 것이다.⁵⁵⁷ 다시 말해 제1편을 비편년체 방식으로 할 경우 ‘역사’가 아니라 ‘사료’를 편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총독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구로이타의 발언은 이마니시의 지적을 의식하여 이를 정무총감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에게 변명하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본문과 사료’, ‘역사편수와 사료편찬’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은 조선사 사업에 대한 통치 측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구로이타는 ‘편년체 방식’이 조선사 사업의 근본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편년체 방식의 의의는 단순히 ‘사료를 수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문’의 내용만으로 하나의 ‘조선사를 만드는 것’으로, ‘사료를 편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편년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선사의 체제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본문’만을 모으고 ‘사료’는 출처를 적어놓기만 해도 훌륭한 조선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본문’이 ‘역사편수’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다시 말해 그것이 ‘조선사 만들기’의 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556 「大正15年12月20日 編修打合會議事錄」,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557 今西龍, 「中村氏案朝鮮史編修綱領及び凡例に就ての意見」,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목적이 ‘역사서술’이 아니라 ‘사료수집’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조선사』가 ‘역사서’라기보다는 ‘사료집’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술’ 위주의 반도사와 비교하여 이루어진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⁵⁵⁸ 그러나 구로이타의 발언은 이 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조선사 자체로만 본다면,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료’가 아니라 ‘본문’에, 즉 ‘수집’이 아니라 ‘편수’에 있었다고 해석될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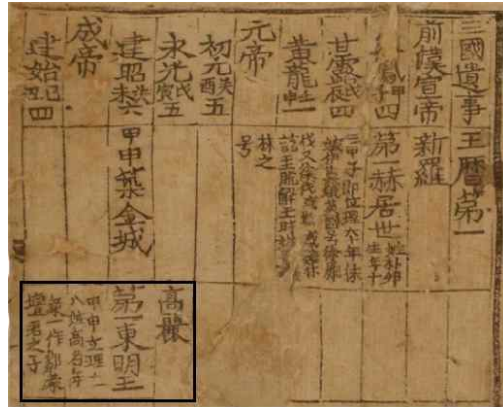
조선사가 표방한 ‘학술성’의 핵심은 ‘편년체’로 표현된다. 역사적 사실을 연차순으로 제시하는 그 방식은 확실히 사실성(史實性)을 담보해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본문’을 통해 ‘역사편수’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문’은 ‘조선사 만들기’의 핵심적인 자리였던 것이다.

다시 제1편 제9항의 그림에 돌아가 단군기사가 ‘위치한 자리’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자. 앞서 정리했듯이 단군이 직접 언급된 기사는 4번, 5번, 8번이었다. 먼저 4번은 「왕력」에서 인용된 기사로 ‘高麗第一東明王’에 대한 설명으로서 붙여진 ‘할주’(割註)에 그가 ‘檀君之子’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할주’ 처리는 원본을 따른 것이었다.⁵⁵⁹

⁵⁵⁸ 예를 들어 김성민은 서술방식을 취한 반도사와 달리 편년체 방식을 취한 조선사는 사료집적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상우의 경우도 조선사는 ‘역사서술’이 아니라 ‘사료수집’에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金性旼(2010); 정상우(2011).

⁵⁵⁹ 범례에 따르면 『삼국유사』는 교토제대에 소장되어 있던 ‘정덕경주참본’(正德慶州槧本)의 영인본을 원본으로 했다. 이는 중종(中宗) 7년(1512)에 경주의 부윤(府尹) 이계복(李繼福)이 간행한 것으로, 소위 정덕본(正德本)이라 불린다. 그 책은 19세기까지 경주부에 보관되었지만 분실되었고, 판본은 지금도 몇 가지가 현존한다. 그 중 안정복(安鼎福)이 소장했던 판본이 1916년에 이마니시로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교토제대 소장 영인본이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에서는 황의돈(黃義敦)이 소장했던 판본이 존재하는데, 이 또한 정덕본이다. 위의 그림은 황의돈의 정덕본을 복사한 것이다.

[그림4] 『三國遺事』 「王曆」 원본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다음으로 5번은 「권일 고조선(왕검조선)」에서 인용된 기사로, 단군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줄에 보인다. 즉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라는 문장에서 단군왕검이 요임금 시대에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음이 언급되는데, 그 뒤를 『고기』에서 전해진 단군출생 신화가 이어간다. 즉 환웅과 혼인한 웅녀(熊女)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단군왕검(孕生子 號曰壇君王儉)이라는 언급이다.

이어 천제 해모수와 아들 부루에 관하여 전하는 북부여편과, 북부여왕 해부루와 아들 금와에 관하여 전하는 동부여편을 끼고 마지막 8번 「권일 고구려」가 나온다. 이 기사에서 단군은 다시 ‘할주’에서 다루어지는데, 이 또한 원본을 따른 것이었지만, 할주 직전의 ‘중략’ 표시는 편집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리였다. 원래 ‘高句麗卽卒本扶餘也…卒本州在遼東界’라는 문장과 할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장이 삽입되어 있었다. 부루의 아들 금와는 태백산에서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났다. 그녀가 말하기를 어느 날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자칭하는 남자에게 압록강 부근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⁵⁶⁰ 이것이 중략된 뒤에 할주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단군이 언급되었다. 즉 『단군기』에 따르면 단군이 하백의 딸 사이에 부루를 낳았다

560 “國史高麗本記云 始祖東明聖帝 姓高氏 諱朱蒙 先是 北扶餘王解夫婁 既避地于東扶餘 及夫婁金蛙嗣位 于時 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 問之 云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渚邊室中知之 而往不返。” 「紀異卷第一 高句麗」, 『三國遺事』(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고 하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 사이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고, 또 『단군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부루라고 하는데 부루와 주몽은 이모 형제라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제9항에 수록된 단군 관련 기사이다. 그런데 조선사에는 이외에도 한 군데 더 단군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것이 [그림3]에서 ‘두주’(頭註)로 표시된 부분이다. 단군에 대한 첫 언급인 「왕력」의 ‘단군지자(檀君之子)’라는 말 위에 ‘단군’이라는 항목의 두주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편집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리였다.

먼저 두주에서는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외기(外紀)」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요임금 시대에 신인(神人)이 내려와 조선국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에 언급된 『단군고기(檀君古記)』 관련 부분을 달고 있는데, 이는 『삼국사절요』 「외기」의 내용과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에 언급된 『구삼국사(舊三國史)』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의 내용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다시 말해 『세종장헌대왕실록』 「전국지리지」에서는 『단군고기』(檀君古記)가 언급되지만, 그것은 『삼국사절요』와 『동국이상국전집』을 본떠서 재구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의 요점은 『단군고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현물은 존재하지 않는 전설적인 책이며, 『세종장헌대왕실록』 역시 실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의 언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아홉 번째 사료로 수록된 『동국이상국전집』과 달리 『삼국사절요』와 『세종장헌대왕실록』이 두주에서 다루어진 이유는 ‘사료는 취급하되 사설(史說)은 제외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두 책은 단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라기보다는 ‘후세에 전해진 사실’로 간주된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사의 편찬방식에서 단군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로이타의 발언과 함께 조선사에서 이루어진 ‘처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단군기사들이 위치한 곳은 크게는 ‘사료’와 ‘주’ 두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4, 5, 8번은 ‘사료’로, 나머지는 ‘두주’로 처리가 되었는데, 사료의 경우도 4, 8번은 ‘할주’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순전히 사료에 등장한 것은 5번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군의 위치를 확인할 때 앞서 본 구로이타의 발언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는 조선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역사편수’에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때 역사를 만드는 장으로서 역할이 부여된 것이 ‘본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사의 편찬방식을 볼 때 그곳은 단군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단군은 ‘역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점에 조선사의 편찬방식이 갖는 교묘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만약 제1편에도 제2편과 같은 형식이 적용되었더라면 단군기사는 조선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지만 제2편 이후의 체제는 ‘조항-본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편에 관해서는 ‘조항-본문-사료’ 체제가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단군기사는 ‘조선사 안에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디까지나 ‘본문’이 아닌, ‘역사의 주변적인 위치’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때 단군기사를 ‘본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편년체라는 ‘학술적’ 편찬방식이었다. ‘연도가 불명한 자료’가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들어오기에는 ‘실증성’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관계사항’에 ‘부속’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학술성’ 안에서 처리된 단군은 ‘동화’에 의해 배제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단군은 역사의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역사 밖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학술성은 비록 그것이 ‘주변적’이라 할지라도 단군에게 ‘존재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군은 ‘학술성’에 포섭됨으로써 ‘주체화’되고 있었다. 이것이 ‘반도사’에서 ‘조선사’로, 다시 말해 ‘동화’에서 ‘학술’로의 전환이 가져온 핵심적인 함의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치의 콘텍스트 속에서 정당성을 잃은 ‘동화’를 대신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고, ‘학술성’은 그것을 구현할 가치로 선정되었다. ‘배제’에서 ‘포섭’으로의 전환은 그러한 콘텍스트가 역사편찬사업으로 들어온 결과였다.

조선사의 ‘학술성’은 단군을 ‘배제’하는 대신 그 속에 ‘포섭’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것은 단군을 결코 ‘역사를 만드는 시발점’에 두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술성’은 단군이 결코 ‘국사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그곳은 애초부터 ‘비주권성’으로 규정된 공간이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단군을 무조건적으로 말살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주체화’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참여는 이중적인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이다. 국사의 시조 자리에 대한 요구는 제국이 설정한 ‘학술성’의 테두리를 깨는 대응을 의미했다면, 식민지상황에서 그것은 사실상 존재할 공간의 소멸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제국이 마련한 ‘주변적 자리’에 마냥 있기만 했던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최남선의 발언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조선사와 주체성의 전개 양상

(1) 사상으로서의 단군

최남선은 1928년 10월 8일자로 조선사편수회에 촉탁으로 위촉되었고 12월 20일부터 편수회 위원이 되었다. 단군 문제를 둘러싸고는 이미 1923년 1월의 제1회 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었는데, 이때에는 ‘정만조·어윤적·이능화’가 ‘구로이타·아리요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구도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아리요시의 경고로 봉쇄된 이후로는 단군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일은 없었는데, 최남선의 편수회 참여는 이러한 상황에 확실히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었다.

최남선이 참여한 1928년 하반기는 전년부터 착수된 편수작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던 시기였다. 1927년 7월의 위원회에서 수정강령이 결의된 것도 “올해부터 편수를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으며,⁵⁶¹ 1928년 7월의 고문·위원간담회에서는 “원고가 완성되었을 뿐 각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⁵⁶² 최남선의 참여는 편수작업이 원고 작성에서 심의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위원들에게 수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지만,⁵⁶³ 조선의 역사가로 명

⁵⁶¹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 35.

⁵⁶²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 39.

⁵⁶³ 편수회에서 심의에 대한 권한은 ‘심의부’에 위탁되었으며, 심의부는 이나바, 나카무라, 이마니시, 홍의(洪熹)로 구성되었다. 원고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맡겼을 경우 매월 개최해야 하는 등 부담

성이 높았던 최남선의 참여는 사업의 정당성에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한편 최남선 측에서도 편수회에 참여할 만한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22년에 ‘조선학’의 수립을 제창⁵⁶⁴했던 최남선은 그 일환으로 독자적인 ‘단군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때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의한 단군론이었으며, 조선사 사업을 이끌었던 이마니시, 미우라, 오다 쇼고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었다.⁵⁶⁵ 그러한 맥락에서 1926년 3월에 발표한 「단군론」에서 조선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었다.

己未年 三一運動 이후로 그네의 眼翳가 조금 벗겨져서 온갖 것이 다 좀 變通이 되는 통에, 조선의 歷史 及 言語에 대한 태도도 얼마만큼 다른 법주로써 顧慮하게 된 듯한 形迹도 없지 않고, 새로 낸 朝鮮史 編修機關은 曾往보다 좀 學的 正當에 接近하려는 一發見으로 볼 것 있는지도 모르고, 또 모처럼 하는 노력이 필경 ‘日本人의 朝鮮史’가 되고 말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希願도 하거니와, 다만 朝鮮 國祖요, 朝鮮心の 源頭요, 朝鮮學의 上柱인 檀君論에 대한 그네의 見解와 態度가 어느 정도 만큼의 改訂을 보게 될지는 이것이 그네의 가장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一物인 만큼 좀 의심스럽다고도 할 것이다.⁵⁶⁶

반도사는 “조선심”을 “진멸”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착수된 조선사 사업은 조선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데, 그것은 ‘학술적 정당성’에 적합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최남선은 ‘학술성’이라는 관점

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심의부가 설치되었다. 이미 원고 자체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강령을 따랐기 때문에 심의부의 설치는 지당한 조치라고 설명되었다.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49~51.

⁵⁶⁴ 일반적으로 ‘조선학의 제창’은 1922년에 잡지 『동명』에 게재된 「朝鮮歷史通俗講話(4)古墳」(1922년 10월 8일)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류시현에 따르면 최남선에세 ‘조선학’이라는 개념은 이미 1916년의 단계에서 나타나 있었다. 다만 이때의 의미는 과거에 서적을 통해 일본으로 영향을 미쳤던 조선의 사상과 문화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제17호(2007).

⁵⁶⁵ 최남선이 비판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編 4~10号, 1894. 3~1896. 10; 白鳥庫吉, 「朝鮮의古伝說考」, 『史學雜誌』 5編 12号, 1894. 12; 今西龍, 「檀君의說話に就て」, 『歴史地理』 1910年 11月号; 三浦周行, 「朝鮮の建國伝說」, 『歴史地理』 第1卷 第5号;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會史研究』(大鐙閣, 1922); 高橋亨, 「檀君伝說に就きて」, 『同源』 1号, 1920年; 小田省吾, 「謂ゆる檀君伝說に就て」, 『文教の朝鮮』, 1926年 2月号.

⁵⁶⁶ 최남선, 「檀君論」, 『동아일보』 1926년 3월 3일~7월 25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전집2 한국사Ⅱ-단군·고조선 기타』(현암사, 1973), p. 90에서 재인용, 이하 『최남선전집』으로 통일]

에서 조선사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일본인의 조선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선사 편수회가 조직된 당시 사설을 통해 소감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때도 일본인에 의해 역사편찬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최후의 정신적 파산”을 예감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⁵⁶⁷ 조선학을 제창했을 당시 “정신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했던 그에게 “학술”은 무엇보다도 그 방법으로서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⁵⁶⁸ ‘단군연구’ 또한 정신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택된 연구 영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서도 ‘조선의 국조’이자 ‘조선심의 원두(源頭)’이며 ‘조선학의 상주(上柱)’인 단군에 대한 견해를 그들이 어떻게 고칠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던 최남선에게도 조선사 사업의 ‘학술성’은 쉽사리 비판하기 힘든 가치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편수회에 대한 참여는 이처럼 이중적인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최남선이 편수회에 처음 나타난 것은 위원이 된 뒤로 첫 번째로 열린 제3회 위원회(1929년 12월 23일)였다. 하지만 이날은 소개만 되었을 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⁵⁶⁹ 이어 제4회 위원회(1930년 8월 22일)에 참석했는데, 이때 첫 발언이 바로 논쟁으로 번졌다. 이날 최남선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는 ‘제1편’에 관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6편 이후’에 관한 질문이었다.⁵⁷⁰ 조선사는 마지막 제6편의 종착점을 ‘갑오개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최남선은 “그 이후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침을 질문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제1편에 관한 질문은 ‘신라통일이전’이 대상으로 하는 ‘민족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한반도에는 그동안 역사에서 제외되었지만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는 민족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반도 안에 거주했던 민족들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들은 어느 정도 수록할 것”인지 확인했던 것이다. 제4회 위원회 당시 제1편의 편찬은 “지금까지 작성한 원고를 약간 손보면 인쇄가 가능한”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마니시의 번복 제안이 제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책자별’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남선의 질

567 「我史人修의 哀」,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22일.

568 「朝鮮歷史通俗講話(4)古墳」, 『동명』 1922년 10월 8일.

569 「第三回委員會 昭和4年12月23日」, 『朝鮮史編修會 昭和4年以降 委員會議事錄』

570 이하 제4회 위원회의 내용은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44~47.

문의 의도는 민족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수록될 책자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답변은 제1편의 담당자 이마니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역사편수의 기준에는 ‘민족’ 혹은 ‘토지’의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제1편은 ‘민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고구려처럼 활동지역이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주위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주된 민족(한민족-인용자)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한” 수록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최남선은 ‘주위의 민족들’에 더 파고 들어가는데, 숙신과 발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은 ‘조선사의 기원’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관련 사료의 수록 여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이마니시는 “숙신은 연대상 역사에서 다루기보다도 인류학과 민족학의 연구범위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며, “발해 또한 조선사에 관계없는 한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즉 숙신은 ‘역사학’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류학’이나 ‘민족학’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 발해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된 민족’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최남선은 ‘민족’(한민족)을 기준으로 삼는 조선사의 방침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고대사는 ‘민족’을 본위로 할 수도, ‘지리’를 본위로 할 수도, 또한 ‘문화’를 본위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준을 종합하는 데 있으므로, 그와 관계되는 사료는 빠짐없이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숙신과 발해뿐만 아니라 동방민족과 관계된 모든 사료의 수록을 요구했는데, 그만큼 ‘민족의 기원’을 조선사의 핵심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朝鮮歷史의 實際的 問題는 朝鮮民族의 淵源이 무엇임으로부터 비롯된다. 朝鮮人이 어떠한 種族인지,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遷動하였는지, 어느 때 成立되었는지, 어떻게 하여 現今의 圖土를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여 現今의 社會情態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여 現今의 民族性이 養性되었는지, 歷史的 又 地理的의 種族關係는 어떠한지 등은 다 民族問題에 關한 要目이다.⁵⁷¹

그의 역사관은 편수회와 매우 대비되는 것이었다. ‘한민족’을 조선사의 ‘주체’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학술적인 편찬을 강조하는 편수회에 대해, 최남선은 ‘주위의 민족들’에서 조선사의 ‘기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571 『朝鮮歷史通俗講話(1)開題』, 『동명』 1922년 9월 17일.

최남선의 주장에 이마니시가 제시한 것이 ‘사료는 취급하되 사설(史說)은 제외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마니시는 최남선의 의견이 “사료와 사설을 구별하는 것”을 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료는 가능한 모으지만 사설을 모으면 밀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를 수록하지” 않다는 것이 조선사의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한민족을 조선사의 주체로 한다는 원칙은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이었다. 그 연원을 따지면 반도사에서 확인했던 배제적 역사서술과 일선동조론적 동화의 논리가 숨어 있는데, 이에 최남선이 ‘주위의 민족들’의 입장에서 항의를 제기하자 사료와 사설, 즉 ‘학술성’이라는 원칙을 달리 내세우게 된 것이다. 최남선이 주장하는 사료들은 학술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사설’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류학이나 민족학에서 다룰 문제로, ‘역사학’의 범위 바깥으로 내보내도 된다. 최남선이 일으킨 첫 논쟁은 비록 ‘단군 문제’는 아니었으나 조선사 사업이 표방하는 ‘학술성’의 기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최남선이 단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제6회 위원회(1932년 7월 21일)에서였다.⁵⁷² 이날은 조선사의 간행이 시작된 후에 열린 회의로, 이미 출간된 제1편 제1, 2권(조선, 일본)과 제2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⁵⁷³ 이때의 발언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중 세 번째 문제가 단군과 관련된 것이었다.⁵⁷⁴ 구체적으로는 『삼국유사』의 「권일 고조선(왕검조선)」에 기재된 글자의 오기 문제였다. 제1편에는 “古記云 昔有桓因”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때의 ‘환인(桓因)’은 ‘환국(桓國)’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사는 안정복의 정덕본을 『삼국유사』의 원본으로 삼았는데, 최남선은

572 이하 제6회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57~60.

573 『조선사』는 제1편 제1, 2권(조선, 일본)과 제2편이 1931년부터 인쇄에 들어갔고 제6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3월에 출간되었다.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 48.

574 첫 번째는 일차(日次)와 간지(干支)의 대비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사는 일본의 내무성 지리국에서 간행한 『삼정총람(三正綜覽)』(1880)에 의거하고 있는데, 신라의 인덕력(麟德曆)도 그렇듯이 조선은 대체로 중국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다. 『삼정총람』은 그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벌써 날짜에 오류가 많고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최남선의 지적이었다. 이에 이나바가 알지만 부득이 채용했다고 짧게 대답하자 최남선은 진원(陳垣)의 『이십사삭운표(二十史朔閏表)』를 권장했다. 이날 이나바가 답변하고 있는 이유는 회의 전에 이마니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본 및 중국의 역대 왕이나 연호가 바뀔 때는 그 월차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그것이 원서에 있던 “국(國)자를 덧칠해서 인(因)자로 썼음”이 확실하다며 같은 정덕본이라도 해도 다른 판본—예컨대 황의돈의 소장본—의 경우 ‘국(國)’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남선은 『삼국유사』에서 언급된 “『단군고기』란 상당히 정리된 옛 기록을 극히 간략하게 축약한 것으로, 그 편언척자(片言隻字)에도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나바는 고본(稿本)에는 안문(案文)을 붙여 정정하겠다고 답변했다.⁵⁷⁵

‘인(因)’이나 ‘국(國)’이라는 문제, 더 말하면 ‘환(桓)’이라는 글자에 대한 문제는 그의 「단군론」에서도 제기했던 쟁점이었다. 그것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단군론에 대한 반박이 담긴 문제였는데, 최남선이 가장 문제시했던 나카미치요(那珂通世) 이래의 ‘승도 망담설’(僧徒妄談說)이었다. 『삼국유사』가 고려시대 승려 일연(一然)에 의해 쓰여진 점을 근거로 “이 전설은 불법(佛法)이 동류(東流)한 후 승도의 날조로 나온 망탄(妄誕)”⁵⁷⁶이라고 했던 나카의 주장이 일본 학계에서 통설이 되어 있었다.⁵⁷⁷ ‘환인(桓因)’이라는 말의 문제성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되는데, “그 용어가 불전(佛典)에 통”하는 근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남선은 ‘환국(桓國)’이 올바른 글자였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조선의 고어(古語)에서 “천(天)”을 의미했던 점을 밝힘으로써 불교적인 언어로 해석할 여지를 없앴던 것이다.⁵⁷⁸ 편수회에서 최남선이 한 지적도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겠다는 이나바의 발언은 사실상 최남선의 단군연구의 ‘학술적’인 승리를 의미했다.

이어 단군 문제에 관한 발언은 제8회 위원회(1934년 7월 30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날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으며 또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최남선이 ‘학술성’ 속에서 수행한 ‘주체화’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구로이타로부터 잡무(雜務)에 관한 설명이 있었

⁵⁷⁵ 고본(稿本)이란 조항과 본문뿐만 아니라 사료까지 수록된 버전을 말한다.

⁵⁷⁶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第5篇第4号, 1894年4月, p. 41.

⁵⁷⁷ 최남선, 「檀君 否認의 妄」 『동아일보』 1926년 2월 11~12일. 『최남선전집』(1973), p. 77.

⁵⁷⁸ 최남선, 「단군론」, 『최남선전집』(1973), p. 97.

는데, 거기서 ‘사료충간’(史料叢刊)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제6회 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제2편부터 사료를 삭제한 것에 대한 보충작업으로 중요한 사료에 관해서는 조선사료충간을 간행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⁵⁷⁹ 제8회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승정원일기』, 『일성록』, 『종가문서(宗家文書)』, 『삼봉집(三峰集)』, 『보한재집(保閑齋集)』, 『모재집(慕齋集)』 등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렸다. 아래 최남선의 발언은 이러한 구로이타의 설명을 듣고 나온 것으로, 이어지는 논쟁 역시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조금 길지만 전체를 인용하도록 한다.

- 최남선 위원 저는 구로이타 고문의 의견대로 실행했으면 합니다.…다음으로 단군기자(檀君箕子)는 조선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조선사는 이를 수록해야 할 제1편에 해주나 두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무를 정리하는 경우에 정편(正篇)이나 또는 보편(補編)으로서 단군기자에 관한 사실을 편찬하고 싶습니다.
- 이나바 간사 단군이나 기자는 제1회 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었고 우리들도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지만 본 회의 편집방침으로 채용한 편년체 형식 하에서는 이를 수록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느 왕의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를 세울 것인지, 판연(判然)한 연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심고난을 느껴 수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본편(本編)에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를 채용할까요? 별편으로 할지, 보편으로 할지 교시를 바랍니다.
- 최남선 위원 저는 제1회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잘 모릅니다. 단군기자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더니 매우 기쁜 말씀입니다. 이를 수록할 장소에 관해서는 결국은 기교적 문제인데요. 단군기자는 그 사실(史實)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한 것을 묶어서 별편(別編)으로 편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구로이타 고문 단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로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 신앙 방면에서 별도로 연구해야 할 것이지 편년사 안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사상 신앙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수반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만약 이를 별편으로 편찬한다면 동일한 기세로 사상 신앙 방면에서 중요한 전개를 보이는 유교와 불교 또한 별도로 편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없이도 본 회의 사업은 자꾸 지연되니 이 점에서 최 위원의 양해를 구합니다.
- 최남선 위원 애초에 단군기자는 역사적 인물인지 신화적 인물인지는 연구과제이지만, 적어도 조선인 사이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회의 조선사에 이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조선인으로서 매우 유

579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54~56.

감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본 회의 조선사는 조선인 사이에서 철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바 간사 단군기자와 관련하여 우리 편찬자 측에서 편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편의 조선사료에 단군기사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기본 사료로 결정, 채용한 『삼국사기』에 해당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이미 중국 사료 안에 충분히 수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군과 관련해서는 고려 공민왕을 전후한 인물인 백문보(白文寶)가 단군의 연대에 대해 상소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조 세종 때 이에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문보나 세종이 나오는 곳에 이를 수록하면 어떨까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단군에 관해서 가능한 수록하려고 하지만, 편년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별편은 더 상담했으면 합니다.

오다 쇼고 위원 단군 문제는 편찬 간사께서 수록하려고 고심한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의 조선사에서는 외사(外史)로서 별도 취급한 예도 있으니 별편으로 편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능화 위원 단군기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가 불명하기 때문에 이미 본편에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별편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지만, 그에 관한 사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별편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국유사』, 『동국통감』 및 기타 중국인의 여러 설을 모아서 이나바 간사가 말씀하신 고려 백문보나 이조 세종이 나오는 곳에 수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이다 회장 단군기자에 대해서는 각위의 주장을 고려하고 더 타당한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한 완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본 회의 사업은 대체로 예정 기한에 혼란 없이 1935년도로 완성시키고 싶은데, 혹시 기한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은 잡무로서 정리하는 방침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사상 신앙 및 그 문화 방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에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각위께서는 향후 한층 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⁵⁸⁰

위의 논의에서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하면 단군기사가 수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제1편에는 단군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위에서는 이 점이 다소 혼란스럽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이 논쟁을 근거로 조선사에서 단군기사가 배제된 것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위에서 수록에 관한 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남선은 먼저 단군기사가 ‘할주나 두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충하는 의미로 ‘정편이나 보편으로 간행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남선이 이러한 제안을 꺼낸

580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p. 66~70.

까닭은 중요한 사료는 ‘충간’으로 간행한다는 구로이타의 설명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기서 수록에 관한 문제는 단군기사가 ‘주에서만 취급되고 조항이나 본문에서 배제된 점’을 가리켜 제기되었던 것으로, 뒤이어 전개된 논의 또한 ‘조항과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와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먼저 수록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실증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나바가 말했듯이 조선사는 ‘편년체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단군기사처럼 ‘연도가 불명한 것’은 수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남선의 제안은 실증성 논쟁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구로이타의 설명을 빗대고 정편이나 보편으로 간행할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군기사의 수록문제에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논점이 부과되었다.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최남선의 제안대로 ‘별편을 만드는 방법’, 다른 하나는 ‘백문보나 세종 부분에 수록하는 방법’이 거론되었다. 이에 최남선은 전자의 방법을 계속 주장했지만, 이나바와 이능화는 후자의 방법을 지지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제9회 위원회(1935년 7월 5일)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후자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공민왕 24년 폐왕 원년의 조항에 마땅한 기사(백문보 줄거)를 검출해서 단군에 관한 옛 문헌을 채록”하기로 한 것이다.⁵⁸¹ 실제로는 제3편 제6권의 마지막 조항 ‘갑인 고려공민왕 24년(폐왕 원년)(甲寅 高麗恭愍王廿四年(廢王元年))’이 이에 해당한다. 거기서는 백문보의 사망에 관한 언급 다음에 그의 공적이 기술되는데, 그 중 공민왕에게 아뢰는 내용으로서 다음 구절이 삽입되었다.

천수(天數)는 순환하기에 돌아서 다시 시작한다. 7백년을 하나의 소원(小元)으로 3천6백년을 쌓아 일대 주원(周元)으로 한다. 이것이 황제와 왕패(王覇)가 리(理)하고 난(亂)하고 흥(興)하고 폐(廢)하는 주기이다. 우리 동방은 단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3천6백년, 즉 주원의 회차이다.⁵⁸²

전술했듯이 조선사는 제2편부터 사료를 제외한 ‘조항-본문’ 체제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제3편에 수록된 위의 구절은 ‘본문’에 배치된 것이다.⁵⁸³ 즉

581 『朝鮮史編修事業概要』(1938), p. 71.

582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第3編 第6卷(東京大學出版會, 1975), p. 478.

583 이 단락 말미에는 할주 형식으로 ‘三國遺事王曆東明王 紀異卷一古朝鮮’이라는 출처가 표기되었

단군기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본문=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주변적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조선사의 ‘기원적 의미’가 완전히 탈색된 ‘주기적 시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제안한 ‘별편’이라는 방법은 어떠한 함의를 가졌을까. 다시 논쟁에 돌아가 보면, 먼저 이나바는 편년체 방식에서는 연도가 불명한 단군기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에 최남선은 자리의 유무는 결국 기교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사실’(史實)에만 집착하는 접근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별편’을 제안했던 것인데, 그것은 단군에 대해 ‘실증적’ 관점이 아니라 ‘사상적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단군을 ‘사실’이 아니라 ‘사상·신앙’으로서 다룬다는 것이 그의 제안에 담긴 함의였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뒤이어 나오는 구로이타의 발언이다. 구로이타는 단군이란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신화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년사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며 ‘신화적 존재로서의 단군’을 ‘학술성’의 테두리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러한 구로이타의 발언은 분명히 단군을 역사의 ‘주체적 위치’에서 ‘배제’시키는 동시에 ‘주변적 위치’로 ‘포섭’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조선사 사업이 설정한 ‘학술성’ 안에서 조선의 ‘주체성’을 어루만지는 ‘포섭의 편찬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여기서 더 유의해야 할 점은 구로이타의 발언 자체는 단군을 ‘사상적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최남선의 인식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헛갈리게 하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최남선의 발언인데, 그는 단군을 신화적 존재로 다루는 구로이타의 발언에 반론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보면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조선인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으로, 더 나아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기사를 ‘제대로’ 수록하지 않은 조선사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엔 어려운 실정을 경고했던 말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별편’이라도 간행해야만, 다시 말해 단군을 ‘사상적 신앙적’ 존재로 ‘독립’시켜야만 조선인의 마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던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이는 제1편 제9항에서 4·5번의 기사를 가리킨다.

그 진위는 어쨌든 간에 최남선이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 다루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방도를 통해 단군을 학술성 안에 존립시킬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별편’에 대한 최남선의 제안은 ‘학술성’ 안에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슬쩍 집어넣어 ‘독립’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로이타는 단군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을 기본적으로 추인하고 있었다. 즉 그 역시 단군을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서 다루는 인식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별편’이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만약 별편을 낸다고 한다면, 단군뿐만 아니라 유교나 불교 등 다른 사상도 함께 내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양해를 바란다는 말로 최남선의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구로이타의 이러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학술성 안에 설정된 주변적 자리에 단군을 있게 하는 포섭의 편찬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단군을 ‘본문=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삽입하되 ‘주체적 의미’가 탈색된 존재로 변색시키는 추가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상 보았듯이 최남선의 제안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국이 마련한 자리와 다른 곳에 단군을 존재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조선사에서 채용한 편년체 방식은 학술성의 핵심으로 단군을 주변적 자리에 포섭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분명히 조선의 주체성을 배제시키는 것이었지만, 결코 단순한 배제만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의 주체성을 ‘제국이 의도한 위치에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 조선사 사업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성’이라는 테두리는 조선을 제국의 의도에 알맞은 존재로 ‘주체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대비해 볼 때 최남선의 제안은 결코 그 테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학술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편년체 방식에 따라 주어진 주변적 위치에 본격적인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학술성 안에 끌어들여, 비록 별편이지만 단독 책자로 간행시키려고 했다. 그런 그의 제안은 제국의 의도

와는 다른 방식으로 단군의 존재를 ‘독립’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독립’은 결코 ‘주권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다. ‘학술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국이 의도한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국에 의한 주체화를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한편으로 제국이 의도하지 않는 주체화를 시도한다. ‘학술성’ 속에서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존립시키고자 한 최남선의 시도는 이처럼 ‘협력’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2) 역사와 신화의 인식구도

그렇다면 ‘학술성’과 ‘사상으로서의 단군’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양자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묻는 작업으로 들어가자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체성’의 문제는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에 대한 오랜 질문, 혹은 달리 표현하면 ‘근대 역사학과 조선학’에 대한 문제와 연계되는데, ‘학술성’과 ‘사상으로서의 단군’ 양자의 관계를 묻는 작업은 이 문제에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편수회에서의 ‘최남선의 발언’을 근대 역사학과 조선학 사이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와 신화’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檀君傳을 傳하는 그대로 볼 양이면 아무리 두둔하여 말하여도 그것이 一神話요, 傳說이요, 歷史的 信文이 아님이 무론이다. 그 神怪한 話意를 가져다가 그대로 史實로 觀하고 史蹟으로 化함은 아무라도 생각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봄으로는 그 神怪하여 實際스럽지 못한 點이야말로 實學의 興味가 끌리는 바요, 兼하여 그 自體의 年代的 支柱를 지어서 적어도 그 古傳 古意로 的 生命을 保持하게 되는 金剛座니, 時方 사람으로 보아서 믿지 못 하겠다 할 것이기 때문에 古人의 民된 것임이 도리어 밝아도 지고, 古人의 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느 種類의 歷史的 遺跡, 그렇지 못하여도 人類學的 民族學的 新光이 期待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것이 아니하고 確실한 事實의 背景을 가져서 얼마만큼이라도 歷史的 暗黑을 쓸어 헤치고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은 도리어 望外의 所得이라고도 할 것이다.⁵⁸⁴

단군에 관하여 전하는 글들은 하나의 ‘신화’이자 ‘전설’로, 이를 갖다가 그대로 ‘사실’(史實)로 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바로 그

584 최남선, 「단군론」, 『최남선전집』(1973), p. 83.

렇기 때문에 학문적 흥미를 끄는 것이기도 하다. 즉 최남선은 단군을 ‘역사’로서가 아니라 ‘신화’로서 보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단군 관련 기사는 오랜 세월을 거쳐 고의(古意)가 담긴 보금자리와 같은 글이다.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인류학적 혹은 민족학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작업이 된다. 단군을 ‘신화’로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접근을 가능케 해주는 관점을 의미했다.

일본 역사학자들의 단군론에 대한 비판 역시 ‘역사와 신화’에 대한 이상의 인식에 뒷받침된 것이었다.

그네의 檀君論에는 거의 民族學的 又 民俗學的 觀察이 빠졌음을 指摘할 지니...世界的 어떠한 未開部族 單純社會에라도 다 있는...神話·傳說 내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原始宗教·原始法制가 일찍부터 開明도 하고 오래고 깊은 社會的 過去 生命을 가진 朝鮮 及 朝鮮人에게만 홀로 이것이 缺如하였다고 보아 버리는 奇現象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몇 천 년 전의 國祖說話, 극히 幼稚하다고도 하고 素樸하다고도 할 建國神話가 몇 천 년 뒤 다 밝은 세상에 홀연히 特殊한 作者의 손에 現出하여 금시에 일반 민중의 示唆의 盲從을 사게 되었다는 奇說이 성립되는 줄로 알게 됨이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이다.⁵⁸⁵

그들의 단군론은 ‘민족학적 또는 민속학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지 실증주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부정한다. 따라서 단군 이야기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신화·전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갑자기 나타난 인간(일연)이 지어낸, 그런데도 민중이 맹신하게 된 ‘망설’로 간주된다. 최남선은 이를 유독 조선에만 신화·전설을 인정하지 않는 ‘기이한 학설’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단군 이야기를 ‘신화’로 간주하고 ‘민족학적 인류학적’ 접근을 허용하게끔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최남선은 단군을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서 접근하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주장이 ‘역사적 접근’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1922년에 발표된 「조선역사통속강화」는 ‘조선학’을 제창한 글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글로서도 평가된다. 거기서 최남선은 ‘설화’(說話)가 갖는 세 가지 형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첫째로 ‘고담’(古談, Fairy tale, Märchen)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의미했다면, 둘째로 ‘전설’(傳說, Legends)은 ‘언제 누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 이야기를 의미했다. 그리고 셋

⁵⁸⁵ 최남선, 「단군론」, 『최남선전집』(1973), p. 93

째로 ‘신화’(神話, Myth)는 ‘어떠한 신이 어찌 어찌 했다’는 이야기를 의미했다. 요컨대 최남선에게 ‘고담, 전설, 신화’는 ‘설화’라는 하나의 큰 범주 안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설화는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을까.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구절이다.

①文字로써 記錄이 생기기 前에는 聲音으로써 하는 說話가 思想傳達·事實傳承의 가장 主要한 方法이었다.…說話란 것은 口口傳承하는 동안에 變化되기 쉬운 것이다.…그런즉 說話로 내려오는 것은 眞正한 歷史—確實한 事實로 보기 甚히 危險한 것이다. 傳說을 歷史로 보려 함은 小說을 實社會로 보는 以上의 어렵없는 일이다. ②그러나 어떠한 民族 어떠한 社會든지 그 上古史에 關하여 確實한 記錄을 가진 이는 없다. 記錄의 術이 더디 생긴 곳일 수록 說話로 傳하는 歷史의 期間이 長遠할 밖에 없다. 多少의 疑懼를 가지고라도 說話 가운데서 歷史의 片影을 붙들려 함은 이 長久한 동안에 歷史의 生命을 주기에 다른 妙方이 없는 바에야 또한 필요한 道理가 아니랄 수 없다. 小說에 씩어 있는 人物·事件 등이 반드시 그대로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개는 그 時代의 風俗習尙과 人情物態를 그려 놓은 것임과 한가지로, 古傳說에 나오는 바를 그대로 實在의 人物 又 事件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또한 可히 어느 時代, 어느 社會의 光景을 거기 있는 名物·事象으로써 짐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傳說의 價値는 어느 人物이나 事件을 傳하는 點에 있는 것 아니라, 도리어 그 人物, 그 事件을 붙인 時代 及 社會를 알려줌에 있는 것이다. ③또 그 傳說이 表示하는 어느 邐遠한 年代의 일을 傳하는 點에 있는 것 아니라, 도리어 그 傳說이 生成한 어느 時代의 知識·觀念 등을 보여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古傳說을 상고하여 보면, 意外의 貴重한 材料와 神奇한 暗示를 그 가운데서 發見할 수 있다. 어떻게 記錄 以前의 古史를 研究하는 데 價値 있는 材料임을 알 수 있다(번호는 인용자).⁵⁸⁶

인용문의 분석에 앞서 이 논설이 쓰인 당시 일본의 역사학계를 구성했던 계통과 각각의 신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로 ‘신화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신도(神道)나 국학의 계통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한학고증학이나 근대 역사학의 계통이 포함된다. 반도사에서 언급했던 구메와 호시노의 입장이 여기에 속하는데,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재된 이른바 기기신화를 그대로 사실로 받들어 신전화(神典化)했던 신도·국학 계통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사료비판을 통해 신화의 ‘비판적인 사실화’(史實化)를 모색했던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셋째로 신화를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거기서 ‘사상’을 도출하는 입장인데, 이는 두 번째 입장에 대한

586 최남선, 「朝鮮歷史通俗講話(7)神話」, 『동명』 1922년 10월 29일.

비판의식에서 나타난 계통으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이 여기에 속한다.⁵⁸⁷

이러한 일본의 역사학계의 지형을 기반으로 위의 인용문을 놓고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논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인용문 ①에서 최남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설화’를 ‘진정한 역사’나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소설을 실제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화 역시 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최남선이 비판하는 대상은 설화를 ‘있는 그대로 역사’로 보는 시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괴(神怪)한 화의(話意)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실(史實)로” 보는 관점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①의 내용은 신도·국학 계통에 대한 비판과 상통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②의 구절에서 최남선은 ‘설화’를 통해 ‘역사적 편영’(片影)을 찾는 것을 ‘필요한 도리’로 주장했던 것이다. 소설이 실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회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설화’ 자체를 역사로 볼 수는 없어도 그 속에도 일정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남선은 이를 파악하는 접근을 단군연구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단군연구를 구성하는 논설 중 하나인 「단군신전(檀君神典)에 들어 있는 역사소(歷史素)」(1928)에서 시도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⁸ 이처럼 ①과 ②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남선이 ‘신도·국학 계통’에 비판적인 관점 및 ‘한학고증학·근대 역사학 계통’과 상통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다.⁵⁸⁹

하지만 ③의 내용은 최남선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거기서 그는 전설의 의의는 먼 옛날에 있었던 일(사실)을 전달하는 데

587 일본의 역사학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永原慶二(2003); 大久保利謙, 『日本近代史學史』(白揚社, 1940); 岩井忠熊, 「日本近代史學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22 別卷[1]』(岩波書店, 1963); 北山茂夫, 「日本近代史學の發展」, 『岩波講座 日本歴史 22 別卷[1]』(岩波書店, 1963); 桂島宣弘, 「近代國史學の成立-「考証史學」, 『思想史の十九世紀-「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ベリかん社, 1999).

588 최남선, 「檀君神典에 들어 있는 歷史素」(1928), 『최남선전집』(1973), pp.229~241.

589 최남선이 이러한 입장을 수용했던 것은 그의 경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일본유학 시절에 와세다대학 역사지리학과에서 수학했는데, 필화사건 이후 구메가 교편을 잡았던 것도 바로 와세다였다. 당시 와세다대학 역사지리학과와 학풍에 관해서는 최근에 나온 심희찬의 연구에서 잘 정리되고 있다. 심희찬, 「일본 비틀기-최남선과 일본의 역사학」, 『사이間SAI』 24권(2018. 5월).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지식이나 관념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전설’을 통해 지식과 관념, 달리 말하면 ‘사상’을 추출하는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보았던 쓰다의 입장과 상통하는 관점으로 이해되는데,⁵⁹⁰ 이러한 입장이 적용된 단군연구로 『민속학상(民俗學上)으로 보는 단군왕검(檀君王儉)』(1928)을 들 수 있다.⁵⁹¹ 이는 앞서 언급한 『단군신전에 들어 있는 역사소』와 같은 해에 발표된 논설로, 그런 점에서도 ‘역사’와 ‘신화’가 공존했던 그의 인식체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연도에 발표된 『단군 급 기연구(檀君 及 基研究)』는 그의 단군연구를 집대성한 논설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역사적 고찰’과 ‘신화적 고찰’은 각각 절을 구성하여 병행되고 있었다.⁵⁹²

이상 보았듯이 최남선의 인식체계에서 ‘역사’와 ‘신화’는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되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양립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단군연구 또한 그러한 인식 구도가 반영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절에서는 그것을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지형’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최남선의 단군연구는 ‘근대 역사학’과 ‘사상사’ 사이에서 양자를 아우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편수회에서 수행한 발언에도 나타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최남선은 확실히 ‘학술성’이 설정한 것 이상의 존재로 단군을 다루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상으로서의 단군’이라는 제안은 결코 학술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테두리의 외부로 나아갈 비판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수행했던 것은 ‘학술성’과 ‘사상으로서의 단군’의 양립, ‘역사’와 ‘신화’의 양립이며 ‘근대 역사학’과 ‘사상사’의 양립이었다. 최남선의 발언의 입지는 ‘그 사이에서’, 다시 말해 양자의 ‘상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⁵⁹⁰ 쓰다에 관해서는 편수회에서 수사관보(修史官補, 1925~1927)로 일했던 이병도와 사제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실증사학자로서 부각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쓰다의 학문이 근대역사학의 토양에서 성장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의 독자성은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전시켜 독특한 ‘사상사’ 연구를 확립시킨 데 있다. 쓰다의 사상사연구에 대해서는 家永三郎, 『津田左右吉の思想史的研究』(岩波書店, 1972). 이 점은 요네타이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米谷匡史, 「津田左右吉・和辻哲郎の天皇論-象徴天皇制論」, 『岩波講座 天皇と王權を考える』(岩波書店, 2002).

⁵⁹¹ 최남선, 『民俗學上으로 보는 檀君王儉』(1928), 『최남선전집』(1973), pp. 331~342.

⁵⁹² 최남선, 『檀君 及 基研究』, 『별건곤』 1928년 5월호, p. 243.

(3) 근대역사학과 조선학 사이에서

앞 절에서는 최남선의 단군연구를 뒷받침했던 인식체계에서 ‘역사와 신화’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편수회에서 제기된 ‘학술성’과 ‘사상으로서의 단군’의 관계를 조명했으며, 그것을 일본 역사학계의 지형과 함께 이해함으로써 최남선의 발언의 입지를 확인했다. 이 절에서는 그것을 ‘조선의 지형’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한다.

최남선의 입지는 조선의 지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애매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성을 안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단군 연구는 그가 제창한 조선학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조선학’ 자체도 한말 이래의 지적 맥락인 ‘국학’, 더 정확히는 ‘민족주의 사학’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지, 또한 1930년대에 나타난 ‘조선학운동’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일정한 견해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최남선이 1930년대 후반에 갈수록 ‘친일행각’을 노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혼선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학문이 갖는 포괄성과 독자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최남선의 조선학에 대해서는 일종의 애매성을 남긴 채 그동안 다양한 각도와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⁵⁹³ 하지만 국학과 최남선 혹은 조선학운동과 최남선의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학에서 조선학운동까지를, 다시 말해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를 통틀어 그의 입지를 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⁵⁹⁴

593 정경숙, 「〈稽古籥存〉을 통해 본 崔南善의 古代史論」, 『奎章閣』 第6輯(1982.12); 池明觀, 「申采浩 史學と崔南善史學」,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 48卷(1987); 전성곤, 『근대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제이앤씨, 2008); 류시현, 『최남선 연구-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역사비평사, 2009); 육당연구학회, 『최남선 다시 읽기』(현실문화, 2009); 김인식,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조선학’ 개념의 형성 과정」, 『숭실사학』 33집(2014.11).

594 예컨대 정경숙이나 한영우의 경우가 최남선을 국학 혹은 민족주의사학의 맥락에서 논한 경우라면, 김인식은 조선학운동과 최남선을 함께 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부류라 하더라도 정경숙은 최남선의 조선학을 친일행각으로부터 분리하여 박은식이나 신채호와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식민사관에 대한 대결자세를 평가하는 반면, 한영우는 최남선을 타협적 민족사학으로 분류하고 박은식, 신채호, 안재홍이 들어가는 민중적 민족사학 계통과 구분했다. 어쨌든 1920년대에 제창되어 단군연구로 표출된 최남선의 조선학을 1910년대의 국학과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 사이에서 어떠한 맥을 이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제제기적인 차원이거나 국학의 형성과정과 조선학운동을 공히 시야에 두면서 최남선의 조선학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예컨대 한영우-에 비판을 시도한 쓰루조노의 연구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그렇다면 국학과 최남선의 관계는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었으며 그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국학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유교사관에 대한 비판, 근대적인 시기구분의 채용,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민중의 설정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언급되지만, 그 중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정신사관’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많은데, 국학=민족주의 사학의 시조적 인물로 언급되는 신채호와 박은식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특징은 분명했다.

신채호는 이미 한말부터 정신사관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국가를 ‘형식’과 ‘정신’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며 전자의 ‘형식상의 국가’(토지, 인민, 주권으로 구성)를 성립시키는 것이 후자의 ‘정신상의 국가’라고 이해했다. 정신상의 국가란 바로 민족의 ‘독립할 정신’을 의미했기 때문이다(「정신상의 국가」). 『독사신론』(1908)에서 “국가는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규정한 것도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식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신채호에게 ‘역사’ 또한 정신상의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 중시되었던 것이다.⁵⁹⁵ 이러한 역사관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특히 망명지에서 대중교의 영향을 받았던 신채호는 1910년대에는 ‘화랑정신’을 역사를 흐르는 민족정신으로 강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사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꿈하늘」(1916.3)).⁵⁹⁶ 그는 『조선상고사』(1931)에서도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역사관을 제시했는데, 이때도 ‘역사’는 정확히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정신사’를 의미했다. 그는 줄곧 ‘정신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했던 것이다.⁵⁹⁷

한편 박은식의 역사관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도 ‘국혼론’, 달리 말하면 ‘정신사관’이었다. 박은식 역시 한말부터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했는데, 역사를 국가의 정신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국사를 중시하는가 하면, 식민화 이

있다. 또한 이영화의 연구도 1910년대의 국학과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 사이에서 공백기로 남아있는 1920년대에 최남선의 조선학을 위치지음으로써 조명하고자 한 경우로, 국학과 조선학 운동을 연속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드문 연구라 할 수 있다. 정경숙(1982); 한영우(1994); 鶴園裕(1997); 이영화, 「1920년대 문화주의와 최남선의 조선학운동」, 『한국학연구』 12(2004.12); 김인식(2014).

⁵⁹⁵ 한영우, 「한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론」,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p. 58.

⁵⁹⁶ 한영우, 「1910년대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p. 162.

⁵⁹⁷ 박찬승, 「신채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작과비평사, 1994), p. 91.

후에는 영웅들을 민족정신의 구현자로 중시하는 역사관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사관적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한국통사』(1915)에서 전개된 국혼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박은식은 혼백론(魂魄論)을 바탕으로 국가의 구성요소를 ‘국혼’과 ‘국백’으로 나누었는데, 물질적인 후자는 정신적인 전자에 뒷받침된 것으로 ‘정신적인 국혼’을 국가의 근본요소로 보았다. 그러한 그에게 ‘역사’는 국혼이 담긴 과정이었고, 이를 밝히는 수단으로서 역사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다시 말해 그의 역사연구 또한 국혼, 즉 민족정신을 밝히는 정신사관에 입각했던 것이다.⁵⁹⁸

이처럼 ‘국학=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은 ‘정신사관’이었다. 이 점은 최남선의 ‘조선학’에도 계승되고 있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그가 조선학을 제창했을 당시에 그것은 조선의 ‘정신적인 독립’을 위한 것으로, 역사연구 또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중시되었다. 그의 역사연구의 핵심은 ‘단군’이었는데, 이 역시 조선의 ‘정신’을 추출하는 소재로 중시되었던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최남선에게 ‘전설’은 그것이 “생성(生成)한 어느 시대의 지식·관념 등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중요성을 가졌는데, ‘단군전설’ 또한 그 예외는 아니었다.⁵⁹⁹ 요컨대 조선학의 핵심인 단군연구는 조선의 ‘정신’, 달리 말하면 지식과 관념, 그리고 ‘사상’ 등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강조했던 그의 언설은 한편으로 일본 역사학계의 한 주류이자 쓰다로 대표되는 ‘사상사’의 계통과 통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국학=민족주의 사학’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 ‘정신사관적’ 특징과 상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학과 조선학의 관계, 특히 그 공통적인 측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양자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연원했을까. 지금까지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애매하게 처리되었던 것 또한 이 측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친일행각에 대한 사실이 양자의 차이를 기정 사실적으로 보장하거나, 혹은 좀 더 사상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도 문화 보편주의적 측면이 갈림길로 지적될 뿐이었

⁵⁹⁸ 김기승, 「박은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작과비평사, 1994), pp. 99~101; 한영우, 「1910년대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pp. 86~87. 위에 제시한 이외로 역사연구 분야에서의 국학=민족주의사학의 정신사관적 특징을 지적한 연구로 최기영(2003), pp.50~52.

⁵⁹⁹ 최남선, 「朝鮮歷史通俗講話(7)神話」 『동명』 1922년 10월 29일.

다. 예컨대 최남선의 문화 보편주의적 접근은 단군을 불함문화권의 보편적 존재로 정립시키는 동시에 일본과의 문화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특수성을 잃게 되는, 다시 말해 동원(同源)론적 역사 인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⁶⁰⁰

하지만 그동안 최남선의 ‘방법론’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접근이 단순히 민족의 특수성을 잃어버린 보편주의자로 치부할 수 없는 다양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해명되었다. 이러한 연구진척을 바탕으로 볼 때 ‘국학’과 ‘조선학’을 가르는 차이점은 ‘방법론적 독자성’에 있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는 국학과 조선학뿐만 아니라 1930년대 조선학운동과 국학을 잇는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학의 독특한 입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최남선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그것이 ‘근대적 학문’을 지향했다는 점을 언급한 글은 많지만, ‘근대적 학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통일된 견해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⁶⁰¹ 그런 가운데 최남선의 방법론 자체를 주제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영화와 김현주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⁶⁰²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로 최남선이 서구 ‘근대학문’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둘째로 그가 수용한 근대학문은 지금의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을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었다는 점, 셋째로 그는 역사연구에서 무엇보다 ‘문화’를 중시했는데, 이를 위해 수용한 자신의 연구방법을 ‘문화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이러한 연구방법=근대학문이 최남선의 역사연구에서 ‘과학성’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⁶⁰⁰ 이러한 관점은 최남선 관련 연구에서 간간히 보이는 관점인데, 그의 방법론에 주목한 연구에서도 반복될 정도로 일반화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화, 「최남선의 문화사관과 역사연구방법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5(2003.6).

⁶⁰¹ 최남선의 동아시아문화권(불함문화권)을 일본의 비교언어학(白鳥庫吉)와 인류학(鳥居龍藏)과의 관계에서 해석한 것이 전성곤의 연구라면, 류시현의 연구에서 최남선의 ‘근대적 학문’은 신화학, 언어학, 역사지리학 등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김영남의 연구에서 최남선의 단군연구는 신화학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동원한 예로 평가된다. 전성곤(2008); 류시현(2009); 김영남, 「한국 신화학의 ‘자기 식민지화’ 과정-공동환상의 창출과 일원적 고대상의 형성」, 『최남선 다시 읽기』(2009).

⁶⁰² 이영화(2003); 김현주, 「문화, 문화과학,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최남선의 단군학을 중심으로」, 『대동아문화연구』 47(2004.9).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것은 「조선역사통속강화」(1922)에서의 한 구절로, 그가 고대사 연구에 고고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인종학, 토속학, 종교학, 언어학, 금석학, 고천학(古泉學), 문장학(紋章學), 지질학, 지리학, 해부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학술”의 “보조”를 받을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다.⁶⁰³ 물론 문제의식 자체는 이만큼의 너비를 가졌겠지만, 이 영화는 이 중에서도 ‘민속학, 인류학, 신화학, 고고학’을 최남선의 역사연구방법론의 중심으로, 김현주는 비교라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민속학’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이 당시, 최남선의 역사연구에서는 학문적인 문화가 지금만큼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민속학과 인류학도 당시에는 분리되기 힘든 개념이었으며,⁶⁰⁴ 민속학과 신화학도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분야였다.⁶⁰⁵ 즉 ‘인류학, 민속학, 신화학’은 각각 연관성을 지닌 학문분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모습이 최남선의 역사연구에서 중심적 ‘방법론’이자 그의 ‘과학성’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방법론=과학성’이 일본 역사학자들의 문헌고증학적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항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남선의 조선학 제창은 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역사편찬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는 총독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근대적인 연구방법’(학술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인 주체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여 ‘조선학’을 제창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조선학은 무엇보다도 ‘과학성’을 가진 ‘학문’이어야 했으며 이 점이 기존의 역사연구, 예컨대 박은식이나 신채호 등 민족주의사학=국학과 구분되는 차이점이기도 했다.

603 최남선, 「朝鮮歷史通俗講話(2)先史時代」, 『동명』 1922년 9월 24일.

604 이영화(2003), pp. 438~440.

605 김현주(2004), pp. 235~236. 특히 김현주는 민속학과 신화학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신화학연구를 예로 지적하는데, 최남선은 이들 일본의 신화학연구자들, 예컨대 『일본의 신화전설연구』(1925)의 저자인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나 『일본 신화와 민족문화』(1925)의 저자인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의 연구를 참조했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 당시 일본의 신화연구에서 주요 관심사 또한 민속학이었다.

朝鮮人인 兄弟여! 우리들이 우리 自身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무엇임을-어떠함을-어찌 하여야 할 것을 얼마나 아는가. 非歷史的 民族이란 말이 野蠻의 同義語어늘 無歷史의 相去가 不甚相違한 줄을 생각할 때에 아아 몸에서 소름이 끼치지 아니하는가. 科學的 研究의 合理的 解明을 배운 一時期 一事件도 없이 입으로만 남과 같은 歷史的 自負를 唱言함이 어떻게 良心에 미안한 일인가.⁶⁰⁶

최남선에게 조선학은, 그 중심인 역사연구, 나아가 단군연구는 분명히 일본에 ‘대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위해 누구보다도 연구의 ‘과학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앞서의 분석에서 밝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의 단군연구는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제시하는 ‘학술성’의 중심가치, 즉 ‘실증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계명구락부를 통해 간행한 「삼국유사해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단군신화에 ‘승도망담설적’ 입장을 취하는 일본학자들의 단군론을 비판하는 의도로 ‘문헌고증적’인 검토를 실행했다.⁶⁰⁷ 흔히 지적되듯이 최남선은 “일본인의 단군론”에 대해 “문헌 편중의 폐(弊)에 빠졌다 할 것”이며 “민족학적 우(又) 민속학적 관찰이 빠졌음을 지적”했지만,⁶⁰⁸ 이것이 문헌고증학(실증사학) 자체를 부정하는 뜻은 아니었다. 그에게 ‘역사’와 ‘신화’는 어디까지나 양립적인 가치로, 그러한 의미에서 최남선의 역사연구방법, 곧 그의 ‘과학성’ 속에 포함되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편수회에서 최남선의 발언 또한 이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제국이 설정한 ‘학술성’ 안에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존립시키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자신의 역사연구 방법론이 가졌던 ‘과학성’이 그대로 반영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신화’를 아우르는 ‘과학성’을 제국이 설정한 ‘학술성’ 안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언설적 수행에 담긴 의도였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국의 학술성은 오로지 ‘역사’만을, 그러니까 ‘실증사학’만을 단군을 다루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사상으로서의 단군’, 다시 말해 최남선의 과학성을 이루는 한쪽인 ‘신화’(신화학, 민속학, 인류학)는 그 테두리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것은 동시에 신화를 통해 추출되는 ‘정신’, 다시 말해 ‘국학=민

⁶⁰⁶ 최남선, 「朝鮮歷史通俗講話(1)開題」, 『동명』 1922년 9월 17일.

⁶⁰⁷ 이영화(2003), pp. 453~456.

⁶⁰⁸ 최남선, 「단군론」, 『최남선전집』(1973), p. 93.

족주의사학'의 맥락을 배제하는 것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남선의 '조선학'은 '정신사관'이라는 특징을 통해 '국학=민족주의사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다만 달랐던 것은 조선의 정신—그 고유한 지식, 관념, 사상—을 추출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근대 학문의 수용을 통해 실천했던 점이다.⁶⁰⁹ '사상으로서의 단군'에 대한 거절은 최남선이 근대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면서 계승했던 '정신사'의 맥락에 대한 거절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편수회에서 최남선의 발언은 근대역사학(실증사학)과 조선학이 접촉하는 그 순간을, 반드시 대립적이지만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최남선의 입지는 '근대역사학과 조선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계라는 오랜 질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과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30년대에 일어난 '조선학운동'은 확실히 '국학과 조선학'의 관계, 그리고 '근대역사학과 조선학'의 관계가 새로운 구도로 재편성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준이 분석해냈듯이 조선학운동이 전개되는 밑바닥에는 '역사의 과학화'를 둘러싼 논쟁이 깔려 있었는데,⁶¹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던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 '최남선'이었다.⁶¹¹

백남운은 일본의 근대역사학, 곧 식민사학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식민사학 못지않게 표적이 된 것이 신채호에서 최남선으로 이어지는 '특수사관'의 맥락이었다. 그는 조선의 역사학계에서는 자신의 역사를 “관념적으로 조선문화사의 독자적인 소우주(mikrokosmos)로서 특수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데,⁶¹² 그 구체적

⁶⁰⁹ 물론 국학의 경우도 근대적인 방법론의 수용이 아예 지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신채호는 역사학의 독립성, 역사인식의 체계성이나 사실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역사학을 근대적인 역사과학으로 성립시키는 이론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된다(박찬승(1994), p.91). 또한 비교언어학이나 고증적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자세를 견지했던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한영우(1994), 『한국민족주의역사학』, pp. 173~175; 최기영(2003), pp. 52~53. 하지만 그것도 최남선의 눈에는 부족했는데, 그는 「독사신문」(1908)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과학적 정확에는 기다(幾多)의 미비가 있”다고 보았다. 최남선, 「전재(轉載)하면서」, 『소년』 3년 8권, 1910년 8월[류시현, 「최남선의 국학, 조선학, 그리고 한국학 연구」, 『최남선 다시 읽기』(2009), pp.75~76.에서 재인용].

⁶¹⁰ 김종준(2013), 「일제시기 '역사의 과학화' 논쟁과 역사학계 '관학 아카데미즘'의 문제」.

⁶¹¹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

사례로 도마에 올린 것이 ‘단군신화’에 관한 연구였다. 여기서 그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단군론과 함께 “신채호, 최남선 양씨”로 대표되는 경향을 비판하는데, 그것은 “설화적 관념표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단군신화를 조선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신성화시킴으로써 동방문화에 군림”하는 데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궁극적으로는 “특수문화사관”에 그치는 입장으로 비판했던 것이다.⁶¹³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백남운의 최남선 비판은 ‘국학=민족주의사학’으로부터 계승했던 ‘정신사관’을 표적으로 했던 것이다. ‘유물사관’에 입각하는 백남운의 입장에서 그것은 ‘특수사관, 관념사관’으로 배척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백남운에 의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1930년대 조선의 역사학계는 본격적으로 ‘과학성’ 논쟁에 휩쓸리게 된다. 백남운의 비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최남선, 나아가 민족주의사학 계통을 ‘비과학적’ 역사학으로 인상 지었던 점에 있다. 이어 백남운을 추종하는 이들—예컨대 이청원, 신남철, 김태준 등—의 언설에서도 비판의 요점은 ‘비과학성’, 더 정확히는 ‘과학적 방법론’의 부재에 모아졌다.⁶¹⁴ 이 경우의 ‘과학성’이란 물론 맑스주의에 기반한 ‘유물사관’으로 담보되는 것이었다. 특히 1935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했던 정인보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표적이 ‘정신사관’에 있었던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⁶¹⁵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국학=민족주의사학 계통의 역사연구는 결코 과학성을 도외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근대학문에 뒷받침된 방법론에

⁶¹² 白南雲(1933), pp. 6~7.

⁶¹³ 白南雲(1933), pp. 13~15.

⁶¹⁴ 비판론의 전개에 관해서는 김종준(2013), pp. 25~36. 또한 신남철의 비평활동과 그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이태훈, 「일제하 신남철의 보편주의적 역사인식과 지식인 사회 비판」,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선인, 2015). 또한 비판은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논설은 다음과 같다. 백남운, 「조선경제사의 방법론」, 『신동아』 3-2, 1933년 12월[하일식 편, 『백남운전집 회편』(이론과실천, 1991)]; 신남철, 「조선연구의 방법론」, 『청년조선』 제1권 제1호, 1934년 10월; T 기자(신남철), 「『조선학』은 어떻게 규정할가-백남운씨와의 일문일답」, 『동아일보』 1934년 9월 11일.

⁶¹⁵ 정인보는 1935년 1월 1일부터 1936년 8월 28일까지 『동아일보』에 「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했는데, 이 부분을 묶어 해방 후에 간행한 것이 「조선사연구(상/하)」, 『정인보전집』(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이다. 또한 정인보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는 김태준, 「정인보론」,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15일; 이청원, 「『조선학』의 현대적 고찰」, 『비판』 1937년 5월.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최남선의 경우 그것은 일종의 사명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다만 유물사관과 ‘다른 과학성’에 의거했을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밑바닥을 형성했던 과학성 논쟁이란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이 각각 무엇을 ‘과학’의 잣대로 삼았는지에 따라 형성된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백남운을 비롯한 맑스주의 역사가들이 ‘유물사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신진 연구자들—대부분이 경성제대 출신자—이 의거했던 것은 ‘실증주의사학’이었다.

한편 정인보와 함께 민족주의사학 계통으로 지목되는 안재홍의 경우 최남선 못지않게 독특한 과학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역시 최남선과 마찬가지로 신채호의 역사학에 대해 일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신채호가 “민족사상적 선구로서 그 계몽적 내지 혁신적인 사조를 다분(多分)으로 고취선양한 공적은 비록 그 과정적 형태임에 불계(不計)하고” “역사적으로 확실히 위대한 한몫”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학가로서의 신단재(申丹齊)는 현대역사과학의 주력체계인 사회경제사적 인식의 방법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했다. 백남운 등이 주장하는 유물사관적 역사서술을 ‘과학’으로 인정하여 이것이 신채호 사학에서 ‘누락’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재홍은 유물사관적 과학관을 완전히 수용했는가. 이 점이 그의 독특한 입장과 방법을 드러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재홍은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의 저본으로 삼았던 이론 중 루이스 모건(Lewis Morgan)의 고대사회 이론만을 수용하여 ‘과학성’을 확보하는 변법(變法)을 썼다. 모건의 이론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과하는 역사적 발전단계를 설정했던 것이 특징인데, 그것이 엥겔스의 국가론에 채택된 이래 유물사관과 결합하여 맑스주의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모건의 『고대사회』는 사회주의자 다카바타케 모토유키(高畠素之)에 의해 번역되어 있었고,⁶¹⁶ 조선의 지식계에서도 백남운을 비롯해 민족주의사학 비판에 앞장섰던 신남철이나 김태준에게도 수용되고 있었다.⁶¹⁷

⁶¹⁶ Lewis Morgan 著, 高畠素之·村尾昇一翻譯, 『古代社會』(而立社, 1924).

⁶¹⁷ 모건의 이론과 맑스주의의 관계, 그리고 안재홍의 수용에 관해서는 채관식, 「안재홍의 인류학 이론 수용과 조선 상고사 연구」,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선인, 2015).

이처럼 안재홍은 맑스주의와 결합된 모건의 이론을 조선사 연구에 적용했지만, 그렇다고 유물사관 자체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모건과 엥겔스의 결합을 떼어내는 형태로 당시 맑스주의자들에게 유통되었던 모건의 이론을 수용하여 ‘과학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족주의사학 계통의 전통인 ‘정신사관’을 계승하여 단군 이래의 조선의 민족성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운동’의 차원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을 추구했던 그가 ‘학술’의 차원에서 과학성(보편성)과 특수성(민족성)을 양립을 모색했던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과학성을 둘러싸고 각 주체들 간의 입장이 뒤섞이는 가운데 최남선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실증주의’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병도로 대표되는 진단학회 계통, 그리고 그 지적 배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일본 근대역사학(식민사학)과 연관성을 지녔지만, 앞서 보았듯이 최남선의 역사방법론과 그 과학성은 실증주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국학=민족주의사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 정통적 계승자로 지목되는 정인보나 안재홍과 마찬가지로 최남선 역시 그 ‘정신사관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최남선이 위치했던 독특한 입지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은 식민지시기 조선의 민족담론의 전개 양상을 ‘비주권적 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식민지연구, 특히 정치사상사 영역에서 ‘주체성’의 문제는 제국에 대한 비판성이나 독립에 대한 지향성을 심판하는 ‘주권국가적 관점’의 잣대로서만 이해되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관점’이 연구사적 및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점을 밝히고, 주체성의 문제를 ‘비주권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했다.

이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연구시각에 대한 비판은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진전된 연구동향, 즉 ‘제국사연구’와 ‘식민지 근대론’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의의를 갖는 접근이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에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그 결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주된 대상이 된 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점유되었던 연구영역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놓쳐왔던 영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의의는 부정할 수 없으나, 본고에서 지향한 것은 기존의 관점에 점유된 영역 자체에 파고들어 그것을 내부로부터 재구성하는 일이었다. 민족담론을 비주권적 맥락에서 분석한다는 연구과제는 그러한 의도를 담아낸 시도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사회담론’의 등장과 그 발전과정을 조선과 일본 양쪽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조선에서 ‘사회’는 식민지시기에 들어 상실된 ‘국가’와의 관계성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동시에 새로 들어온 국가, 즉 ‘제국’에 대항적인 맥락에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의의를 확보해 나갔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사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 발견되었는데, 이른바 ‘사회의 발견’은 주권국가 비판과 다원주의적 국가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식민통치와 연계되어 나타난 것이 자치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해서 제국과 협동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3.1운동의 발발은 식민통치담론에 변용을 야기했는데, 그 결과로 구성된 ‘문화정치의 콘텍스트’에서 ‘식민지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자치주의 담론은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내지연장주의의 경우도 3.1운동 이후에 분출된 ‘동화주의 비판’을 받아들여 비(非)법제도적 차원—정신, 문화, 역사—에서는 조선의 주체성에 관용의 방침을 제시했다. 자율성의 극단적인 요구—3.1운동—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변화였지만, 그 경우에 인정/관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주권적’인 의미의 ‘주체성’이었다.

그렇다면 ‘비주권성’으로 틀지어진 주체성은 실제 어떠한 전개 양상을 보였을까. III, IV, V장은 이 문제에 대한 분석에 할애했다. 먼저 III장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 통치 측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제국의 기반이탈과 독립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동’, 즉 ‘독립=주권국가적 주체성’으로부터 떼어내 ‘비주권적’ 성격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합법성’은 바로 ‘비주권성’에 대응되는 개념이었다. 조선의 주체성을 ‘탄압’하는 방식은 이미 3.1운동으로 실패가 증명되었으며, 이제 제국의 틀 속에서 뛰어나가지 않도록 ‘교섭’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합법성=비주권성’이라는 임계점만 준수한다면, 조선민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운동을 키우는 것이 제국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통치 측의 이러한 인식을 아베의 ‘인심수람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운동을 추구하는 측에서도 민족운동을 ‘합법적 운동’으로서 추구하는 논의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섰던 것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인데, 그것은 ‘비정치적=문화적’ 차원에서 ‘합법적 운동’을 도모하는 논의였다. 합법적 문화운동은 1920년대 중반 정치화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정회 계획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를 ‘생의 정치담론’으로서 분석했다. 그것은 ‘정치’를 ‘생’의 개념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독립·혁명’으로부터 탈각시키는 담론이었는데, 이로써 식민지상황에서 정치운동을 추구할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 속에 포섭되는 논의였지만, 그 속에서 정치적 ‘세력화=주체화’를 도모한 논의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생의 정치담론은 ‘비주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주체화의 복합성’을 보여줬다.

IV장에서는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합법적=비주권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민족주의자들의 논의로서 제출된 합법적

정치운동에는 이후 통치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까지 뜻을 두게 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치화 과정을 1925년 11월에 이루어진 아베-최린 대담의 경위와 1926년 11월에 발표된 정우회선언의 함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형성된 신간회를 정치운동을 향한 각각의 의도가 얹힌 ‘각축장’으로서 이해함으로써 그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섭과 주체화의 양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신간회운동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루어진 협동만을 중시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상은 두 가지 유형의 협동이 서로 경합하면서 당국과의 교섭을 헤쳐 나간 측면이 강하다. 한편에서는 해방운동을 뒤로 미룬 ‘생존운동’이 추구되었으며 당국과의 교섭에서 ‘자기결정’의 영역을 고수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운동’을 지칭하는 협동이 모색되었는데, ‘자치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당국의 의도를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반제운동’과 연계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양쪽 모두 신간회를 실천의 장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합법적=비주권적’ 공간에서 ‘정치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제국의 틀 속에 포섭되는 운동이었지만, 각각 제국의 의도와 상반된 주체화 전략을 그 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이를 통해 주체화의 ‘복합적’ 전개 양상을 드러냈다.

마지막 V장에서는 학술의 차원에서 주체성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술성’은 앞서 본 ‘합법성’과 마찬가지로 ‘비주권성’의 기능을 담당했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의 역사편찬 사업, 특히 3.1운동 이후에 조직된 조선사 사업이었다. 3.1운동 이전 조선의 역사편찬은 반도사 사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본과의 ‘동일성=동화’를 주장하기 위해 조선의 ‘주체성=단군’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사 사업에서는 바로 이 점이 개선되는데,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관용’하는 맥락이 실제 정책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비주권적’ 영역에 묶어둘 것인가에 있었다. 이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학술성’이라는 테두리였다. 조선사를 편찬하는 데 학술성의 핵심은 근대역사학이 신봉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이해되었는데, 그 상징으로 채택된 편년체 방식에서 단군의 존재는 역사의 ‘주변적인 자리’에 배치되었다. 이것이 학술성 속에서 제국이 수행한 ‘포섭’의 방식이었다면, V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주체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단군논쟁에서 나타난 최남선의 발언에 주목했는데, 그는 제국이 마련한 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단군을 사상적 측면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학술성’ 속에서 ‘사상으로서의 단군’을 존립시키는 의도를 포함한 발언으로, 이를 통해 ‘비주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주체화’ 양상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최남선의 시도를 ‘근대역사학과 조선학’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조선에서 주체성의 전개 양상은 결코 주권국가적 ‘가치’로 수렴될 수 없다는 점이다. III, IV, V장에서 살핀 주체화의 양상은 각각의 ‘상황’에 고유한 전개를 보여줬다. 예컨대 III장에서 살피본 ‘생의 정치담론’은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위해 ‘정치’ 개념을 ‘재구성’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식민지조선에서 ‘정치운동’을 모색한다면 무엇보다도 ‘독립·혁명’과 연루된 종래의 의미로부터 해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IV장에서 살피본 정치운동은 생의 정치담론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이어받은 것이었지만, 그 운동에 고유한 전개를 보여줬다.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에 모여든 액터들은 각각의 의도를 가지고 ‘교섭’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 나타난 협동에서 주체화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V장에서도 경우는 마찬가지다.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조선의 주체성을 다루는 틀로 작용한 것이 ‘합법성’이었다면, ‘학술성’은 조선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체성을 규정하는 틀로 기능했다. 거기서는 조선의 역사적 주체성을 상징하는 단군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일이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맡은 역사편찬의 장에서 주체화의 양상이 이루어졌다. 요컨대 주체성의 문제는 각각 차원에 고유한 상황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결코 ‘독립’과 같은 하나의 가치로 수렴될 수 없는 다양한 전개를 보여줬다. 이처럼 특정한 가치보다 상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주체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본래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상황적인 이해를 수행하면서도 본고에서는 주체화의 공통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이 본고에서 ‘복합적인 양상’이라고 표현했던 측면이다. ‘복합적인 주체화’의 양상은 바로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적

이해를 지양하는 측면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서술로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 관점의 극복은 구체적인 역사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술을 재구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장에서 보았듯이 주체화의 양상은 늘 협력적인 측면과 저항적인 측면이 얹힌 복잡성을 드러냈다. 생의 정치담론,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조선사 편찬사업, 어디서나 ‘포섭’과 ‘주체화’는 함께 일어났으며, ‘협력’과 ‘저항’은 늘 얹혀있었다. 이러한 복잡성을 다양한 분석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밝혀낸 것이 ‘이분법’의 문제에 본고가 제시한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고의 분석은 ‘식민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일정한 답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식민지의 정치를 재해석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민족주의적 이해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민족주의적 연구영역 자체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주권국가적 가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 III, IV장의 분석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을 매개로 재구성된 정치는 종래의 관점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담론이었으며, 신간회를 합법적 공간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협동을 상호 복합적인 역학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 또한 정치운동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어선다. 한편 역사편찬사업에서 ‘학술성’이 담당했던 기능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가졌던 ‘정치성’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했다. ‘포섭의 편찬방식’은 조선사사업을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억압했던 식민사학의 온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치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근대역사학의 식민주의적 폭력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조차 간과된 측면이었다는 점에서도 본고의 의의는 재확인될 것이다. 조선의 역사편찬사업, 특히 그 ‘학술성’에 배태된 ‘정치성=식민주의적 폭력성’이란 ‘포섭’의 맥락에서도 파악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은 ‘저항’에 대한 해석에도 긍정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왔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극복을 제창하는 연구에서조차 살아 숨 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주체화의 복잡성을 드러낸 본고의 분석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

어야 할 문제는 이분법에서 간신히 풀어난 ‘저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오랫동안 민족주의적 관점의 점유물이었던 저항을 구출하는 관점이란 당연히 그것을 종래의 의미와 다른 맥락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노력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만 더 이상 주권 국가적 관점에 회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지평은 이미 식민지의 ‘일상’을 중시하는 관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열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체성을 비주권적 맥락에서 분석한 본고에서도 정치를 ‘생’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포착된 사실은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셔널한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生)을 통해 저항의 의미를 생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VII. 참고문헌

1. 1차자료

(1) 한국자료

- 『만세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소년한반도』 『신생활』 『별건곤』 『혜성』 『동명』
『개벽』 『학지광』 『비판』 『대중공론』 『청년조선』
『三國遺事』(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전집2 한국사Ⅱ-단군·고조선 기타』(현암사, 1973)
仁村紀念會 編, 『仁村 金性洙傳』(仁村紀念會, 1976)
如庵崔麟先生文集編纂委員會 編, 『如庵文集』(朱東林, 1971)
장인성·김태진·이경미 편,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편,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선인, 2008)
하일식 편, 『백남운전집 휘편』(이론과실천, 1991)
『이광수전집』 7·10권(三中堂, 1976)
『정인보전집』(연세대출판부, 1983)

(2) 외국자료

- 『読売新聞』 『萬朝報』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大阪朝日新聞』 『大阪毎日新聞』 『大阪時事新報』 『大阪新報』
『京都日出新聞』 『神戸又新日報』 『時事新報』 『京城日報』
『新人』 『中央公論』 『我等』 『太陽』 『外交時報』
『法学協會雜誌』 『史学会雜誌』 『史学雜誌』 『歴史地理』
『朝鮮』 『朝鮮地方行政』 『朝鮮公論』 『文教の朝鮮』
『黎明会講演集』 第1卷 第3·6輯(1919)
『京鍾警高秘第九八三八号 共產黨檢舉ノ件 被疑者訊問調書(姜達永)』,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2(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京鐘警高秘第604号 自治運動促進会設立に関する件」『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1冊』(京城地法檢事局, 1931.9)

「朝鮮人概況 第7章 朝鮮自治制施行運動員の入京」『朝鮮人에 대한 施政關係雜件一般의 部2』

『治安狀況』(1922)(1923)(1927.12)(1928.5)(1929.5)
(1930.10)(1929.10)(1930.10)(1931.7)

『高等警察要史』(1929.10)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反帝國主義及民族獨立期成同盟關係一件』

『齋藤実關係文書』

『阿部充家關係文書』

『齋藤実日記』

齋藤子爵記念会 編,『子爵齋藤実伝』第2卷(齋藤子爵記念会, 1942)

原奎一郎 編,『原敬日記』第5卷(福村出版, 2000)

近藤鈞一 編,『万歳騒擾事件』(友邦協會, 1964)

『朝鮮史編修會 昭和4年以降 委員會議事録』

『朝鮮史編修會 委員會議事録 大正十四年以降昭和三年ニ至ル』

『朝鮮史編修會 昭和五年十二月 編修打合會議事録』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朝鮮史編修會事務報告書』(1925)

朝鮮史編修會 編,『朝鮮史』第1編 第1卷, 第3編 第6卷(東京大学出版会, 1975)

朝鮮總督府中樞院 編,『朝鮮旧慣制度調査事業概要』(近澤商店印刷部, 1938)

朝鮮總督府,『朝鮮半島史編成の要旨及順序』(京城印刷所, 1916)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朝鮮史編修事業概要』(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姜徳相 編,『現代史資料』26・27卷 朝鮮2・3(みすず書房, 2004)

朴慶植 編,『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卷(三一書房, 1975)

大村益夫・布袋敏博 編,『近代朝鮮文学作品集』(1939~1945) 評論・隨筆篇 3(綠蔭書房, 2002)

沢柳政太郎 編,『太平洋の諸問題』(太平洋問題調査会, 1926)

『新渡戸稻造全集』第4卷(教文館, 1969)

矢内原忠雄,『植民及植民政策』(有斐閣, 1926)

『山川均全集』4卷(勁草書房, 1982)

『福本和夫初期著作集』3卷(こぶし書房, 1972)

福田徳三,『續經濟學研究』(同文館, 1913)

福田徳三,『經濟学全集 第5集 社会政策研究』(同文館, 1927)

白南雲, 『朝鮮社会經濟史』(改造社, 1933)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会史研究』(大鐙閣, 1922)
 久米邦武, 『日本古代史』(早稻田大学出版部, 1905)
 東郷實, 『植民政策と民族心理』(岩波書店, 1925)
 塚原政次, 『心理学書解説 ルボン氏民族心理学』(育成会, 1900)
 Lewis Morgan 著, 高島素之・村尾昇一翻譯, 『古代社會』(而立社, 1924)
 Gustave Le Bon 著, 『民族發展の心理』(大日本文明協會, 1910)
 Gustave Le Bon, *Les 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Paris: Félix Alcan, 1895)

2. 2차자료

(1) 한국자료

강만길,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신간회운동」,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
 강명숙,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치에 관한 인식」, 『역사와현실』 41호 (2001.9).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현실』 제6호(1991).
 김기승, 「1920년대 안광천의 방향전환론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현실』 제6권 (1991).
 -----, 「박은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작과비평사, 1994).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이론」, 『한국일본학회』 제43권(1999.12).
 -----,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경인문화사, 2006).
 김명구, 「코민테른의 대한정책과 신간회」, 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 (1983).
 -----, 「1910년대 독일유학생의 사회사상」, 『사학연구』 제64호(2001.12).
 김석근, 「후쿠모토이즘과 식민지하 한국사회주의운동」, 『아세아연구』 통권94호(1995).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989).
 김영남, 「한국 신화학의 ‘자기 식민지화’ 과정-공동환상의 창출과 일원적 고대상의 형성」, 『최남선 다시 읽기』(현실문화, 200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솔출판사, 1999).
 김인수,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 김인식,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조선학’ 개념의 형성 과정」, 『송실사학』 33집 (2014.11).
- 김재용, 『협력과 저항-일제 말 사회와 문학』(소명출판, 2004).
-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소명출판, 2013).
-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3권(고려대학교출판부, 1970~1973).
-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 김태진,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전통적 개념 속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상상」, 『개념과 소통』 제19호(2017.6).
- 김현주, 「문화, 문화과학,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최남선의 단군학을 중심으로」, 『대동아문화연구』 47(2004.9).
- , 『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소명출판, 2013).
- 노상균,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역사와 현실』 97집(2015.9).
- 류시현,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제17호 (2007).
- , 「최남선의 국학, 조선학, 그리고 한국학 연구」, 『최남선 다시 읽기』(현실문화, 2009).
- , 『최남선 연구-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역사비평사, 2009).
- 박명규,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 역사』 제59집(2001).
- , 「근대 사회과학 개념구성의 역사성 한말 국가-사회-개인의 상호연관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호(2003.6).
- 박종린,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박사논문, 2006.
- ,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일월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0(2007).
- 박지향, 『제국주의』(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역사비평사, 1992).
- , 「신채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창작과비평사, 1994).
- , 「1890년대 후반 도일(渡日) 유학생의 현실인식-유학생친목회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1집(1999.3).
- ,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한일공동연구총서』(2003.3).
- ,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2007.5).
- ,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경인문화사, 2007).
- 박찬흥, 「『조선사』(조선사편수회 편)의 편찬 체제와 성격」, 『사학연구』 99(2010).
-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朝鮮學學術場의 재구성과 관련한 시론적 탐색」, 『역사문

- 제연구』 26호(2011).
- , 「'조선학운동'에 관한 연구동향과 새로운 시론적 탐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집(2011.6).
-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생애 기초 연구」, 『한국학연구』 25집(2001).
- , 「경성일보·매일신보 시대의 아베 미츠이에」, 『아베 미츠이에와 조선』(소명출판, 2017).
-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역사상」, 『한국사학사학보』 28(2013.12).
- ,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 발전과 '조선'의 위상-실증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그 그림자」, 『동서인문학』 52(2016.12).
- , 「일본 비틀기-최남선과 일본의 역사학」, 『사이間SAI』 24권(2018.5).
- 엘리 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세계적 흐름으로서의 개조론’의 문맥에서의 구스타브 르봉의 위상과 관련하여」, 『문학사상』(2008.1).
- 육당연구학회, 『최남선 다시 읽기』(현실문화, 2009).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역락, 2006).
-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호(2010.10).
- ,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 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한국동립운동사연구』 37호(2010.12).
-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 27집(1992).
- ,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당대비평』 13호(2000.12).
- ,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6).
- ,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
-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 이영화, 「최남선의 문화사관과 역사연구방법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5(2003.6).
- , 「1920년대 문화주의와 최남선의 조선학운동」, 『한국학연구』 12(2004.12).
- 이재선, 「「민족개조론」의 읽기와 반복, 다시 읽기-러셀, 르봉과 관련하여 다시 보기」, 『이광수 문학의 지적 편력』 제9장(서강대출판부, 2010).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2007).
- 이태훈, 「일제하 신남철의 보편주의적 역사인식과 지식인 사회 비판」,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선인, 2015).
- 이형식, 「메이지·다이쇼 초기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궤적」, 『일본역사연구』 42호(2015.12).
- ,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8-1918.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 『사총』 87권(2016).
- ,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4).
- , 「1920년대 중후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 『민족 문화연구』 제78호(2018.2).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창작과비평사, 2000).
-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2009.3).
-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서울파 사회주의그룹의 노선과 활』(선인, 2006).
- 전성곤, 『근대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제이앤씨, 2008).
- 전윤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운동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민족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정경숙, 「<稽古筭存>을 통해 본 崔南善의 古代史論」, 『奎章閣』 第6輯(1982.12).
-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운재, 『다사리국가론-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백산서당, 1999).
- , 『민족에서 세계로-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봉명, 2002).
- , 『민세 안재홍 심층연구』(황금알, 2005).
- 조지훈,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1964), 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동녘, 1983).
-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권운동 연구 - 國民協會 · 同民會 · 時中會 계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채관식, 「안재홍의 인류학 이론 수용과 조선 상고사 연구」,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선인, 2015).
- 최기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한울, 2003).
-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연구』(국학자료원, 1997).
- 최주한, 「민족개조론과 相愛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2011.4).
-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사이토 문서와 이광수의 「건의서」」, 『근대서지』 8호 (2013.12).
- 한영우,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사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994).
- , 「1910년대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 , 「한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론」,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 , 「민족주의사학의 성립과 전개」,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2) 외국자료

- 加藤圭木, 「被支配者の主体性」,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
- 家永三郎, 『津田左右吉の思想史的研究』(岩波書店, 1972).
- 姜徳相, 『呂運亨評伝 1 朝鮮三・一独立運動』(新幹社, 2002).
- 姜東鎮,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学出版会, 1978).
- , 『日本言論界と朝鮮』(法政大学出版会, 1984).
- 岡本真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湾総督府と日本帝国』(三元社, 2008).
- , 「植民地期の政治史を描く視角について」, 『思想』 1029号(2010.1).
- 桂島宣弘, 『思想史の十九世紀-「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ぺりかん社, 1999).
- ,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書編纂と近代歴史学-『朝鮮半島史』を中心に」, 『季刊日本思想史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 76号(2010).
- 桂島宣弘 編, 「特集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 「併合100年」からの照射」, 『季刊日本思想史』 76号(2010).
- 高木眞助, 「山本美越乃博士年譜・著書論文目録」, 『経済論叢』 第38巻 第1号(1934.1).
- 駒込武,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店, 1996).
- , 「「帝国史」研究の射程」, 『日本史研究』 452(2000).
- , 「植民地主義」,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岩波書店, 2018).
- 宮島英昭, 「近代日本における社会政策的自由主義の展開-福田徳三の『生存権論』の史的分析」, 『史学雑誌』 92編 12号(1983).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来社, 1985)[이영낙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일조각, 1997)]
- 金光林, 「日鮮同祖論: その実体と歴史的展開」, 東京大学博士學位論文(1997).
- 金東明, 「支配と抵抗の狭間-1920年代朝鮮における日本帝国主義と朝鮮人の政治運動」,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論文(1997).
- 金森襄作, 「論争を通じて見た新幹会-新幹会をめぐる民族主義と階級主義の対立」, 『朝鮮学報』 93集(1979).
- 金性旼, 「朝鮮史編修会の組織と運用」, 『季刊日本思想史』 76号(2010).
- 金子文夫, 「日本の植民政策学の成立と展開」, 『(季刊)三千里』 41号(1985.2).
- 金持一郎, 「我國に於ける植民政策學の發達」, 『経済論叢』 38巻 1号(1934).
- 大久保利謙, 『日本近代史学史』(白揚社, 1940).
- 藤岡健太郎, 「戦間期日本知識人の東アジア国際秩序認識の構造-蠟山政道と末広重雄の場合」, 『九州史学』 125(2000.5).
- 鈴木貞美, 『「生命」で読む日本近代-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日本放送出版協会, 1995).
- , 『生命観の探究』(作品社, 2007).
- 李成市,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学」, 『植民地主義と歴史学-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

- もの』(刀水書房, 2004).
- 李炯植, 「戦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会の軌跡」, 『朝鮮学報』 204集(2007.7).
- , 『朝鮮総督府官僚の統治構想』(吉川弘文館, 2013).
- 木村幹, 『韓国における「権威主義的」体制の成立-李承晩政権の崩壊まで』(ミネルヴァ書房, 2003).
- 米谷匡史, 「津田左右吉・和辻哲郎の天皇論-象徴天皇制論」, 『岩波講座 天皇と王権を考える』(岩波書店, 2002).
- , 「矢内原忠雄の<植民・社会政策>論-植民地帝国日本における「社会」統治の問題」, 『思想』 945号(2003.1).
- , 「戦間期知識人の帝国改造論」, 『日本史講座 9 近代の転換』(東京大学出版会, 2005).
- , 『アジア/日本』(岩波書店, 2006)[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그린비, 2010)].
- 梶村秀樹, 「朝鮮の社会状況と民族解放闘争」, 『岩波講座 世界歴史27 世界恐慌期』(岩波書店, 1971).
- , 「新幹会研究のためのノート」, 『労働運動史研究』 49号(1968)[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 朴慶植, 「朝鮮民族解放運動と民族統一戦線」, 『ファシズム期の国家と社会 8巻 運動と抵抗(下)』(東京大学出版会, 1980)[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 飯田泰三, 「吉野作造-ナショナル・デモクラットと「社会の発見」」, 『日本の国家思想(下)』(青木書店, 1980).
- 並木真人, 「植民地期民族運動の近代観」, 『朝鮮史研究会論文集』 제26집(1989.3).
- , 「植民地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解放後史との関連にお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1(1993).
- , 「植民地期朝鮮政治・社会史研究に関する試論」, 『朝鮮文化研究』 제6호(1999).
- ,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性」・「植民地公共性」・対日協力-植民地政治史・社会史研究のための予備的考察」, 『国際交流研究』 5号(2003).
- ,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 『東アジアの公論形成』(東京大学出版会, 2004).
- 北岡伸一, 「新渡戸稲造における帝国主義と国際主義」,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第4巻(岩波書店, 1993).
- 北山茂夫, 「日本近代史学の発展」, 『岩波講座 日本歴史 22 別巻[1]』(岩波書店, 1963).
-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岩波書店, 2001).

- 三谷太一郎,『大正デモクラシー論』(東京大学出版会, 1995).
- 三ツ井崇,「近代アカデミズム史学のなかの「日鮮同祖論」-韓国併合前後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42集(2004).
- ,「朝鮮」,『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アテネ社, 2008).
- 森山茂徳,「現地新聞と総督政治-『京城日報』について」,『近代日本と植民地』 제7권 (岩波書店, 1993).
- 箱石大,「近代日本史料学と朝鮮総督府の朝鮮史編纂事業」,『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2007).
- 上野成利,「群体としての社会-丘浅次郎における「社会」の発見をめぐる」,『変異するダーウィニズム: 進化論と社会』(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3).
- 徐大肅,『朝鮮共產主義運動史, 1918~1948』(ユリア評論社, 1970).
- 石田雄,『日本の社会科学』(東京大学出版会, 1984).
- ,『日本の政治と言葉 下』(東京大学出版会, 1989).
- 小野一郎,「第一次大戦後の植民政策論」,『両大戦間期のアジアと日本』(大月書店, 1979).
- 小熊英二,『単一民族神話の起源』(新曜社, 1995).
- ,『日本人の境界』(新曜社, 1998).
- 松本武祝,「「植民地の近代」をめぐる近年の朝鮮史研究-論点の整理と再構成の試み」,『植民地近代の視座』(岩波書店, 2004).
- 松尾尊兌,『大正デモクラシー』(岩波書店, 1974).
- ,「吉野作造と朝鮮-再考」,『朝鮮史研究会論文集』35輯(1997).
- ,『民本主義と帝国主義』(みすず書房, 1998).
- 松本三之介,「陸羯南における「国家」と「社会」」,『明治思想における伝統と近代』(東京大学出版会, 1996).
- 松田利彦,「植民地朝鮮における参政権要求運動団体-「国民協会」について」,『植民地帝国日本の法的構造』(信山社出版, 2004).
-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校倉書房, 2009).
- 水谷智,「<比較する主体>としての植民地帝国: 越境する英領インド教育政策批判と東郷實」,『社会科学』(同志社大学) 85号(2009).
- 水野直樹,「新幹会運動に関する若干の問題」,『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14集(1977)[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 ,「新幹会東京支会の活動について」,『朝鮮史叢』1号(1979)[스칼라피노, 이정식 외, 『신간회연구』(1983)].
- ,「新幹会の創立をめぐる」,『近代朝鮮の社会と思想』(未来社, 1981).
- 市野川容孝,『社会 the social』(岩波書店, 2006).

- 岩井忠熊, 「日本近代史学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22 別巻[1]』(岩波書店, 1963).
- 永原慶二, 『20世紀日本の歴史学』(吉川弘文館, 2003).
- 外村大, 「太平洋問題調査会朝鮮支会に関する一考察」, 『戦間期のアジア太平洋地域』(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96).
- 有馬学, 『「国際化」の中の帝国日本』(中央公論新社, 1999).
- 伊藤信哉, 「1920年代『外交時報』にみる日本知識人の対外認識-半沢玉城と末広重雄を中心に」, 『大正・昭和期の日本政治と国際秩序』(思文閣出版, 2014).
- 猪原透, 「社会の発見」再考-福田徳三と左右田喜一郎」,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96号(2011.3).
- 田畑忍, 「中島重博士の国家論」, 『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8巻(1964).
- 田中裕介, 「社会の発見は文壇に何をもたらしたか-1920年の「文芸の社会化」論議と人格主義的パラダイムの行末」, 『日本近代文学』87号(2012.11).
- 田澤晴子, 「「デモクラシー」と「生存権」-吉野作造と福田徳三の思想的交錯」, 『政治思想研究』第11号(2011).
- 井上勝生, 「札幌農学校と植民学の誕生-佐藤昌介を中心に」, 『岩波講座 「帝国」日本の学知』第1巻(岩波書店, 2006).
- 井上学, 『日本反帝同盟史研究』(不二出版, 2008).
- 趙景達, 「十五年戦争下の朝鮮民衆-植民地近代論批判試論」, 『学術論文集』25(2005).
- , 「日本 (近現代) 九. 植民地」, 『史学雑誌』第116編 5号(2007.5).
- 趙寛子, 『植民地朝鮮/帝国日本の文化連環-ナショナリズムと反復する植民地主義』(有志社, 2007).
- 趙聖九, 『朝鮮民族運動と副島道正』(研文出版, 1998).
- 酒井直樹, 「日本人であること-多民族国家における国民的主体の構築の問題と田辺元の「種の論理」」, 『思想』882号(1997.12).
- 酒井哲哉, 「帝国日本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23巻 アジアとヨーロッパ』(岩波書店, 1999).
- , 「国際関係論と「忘れられた社会主義」-大正期日本における社会概念の析出状況とその遺産」, 『思想』945号(2003.1).
- , 「「植民政策学」から「国際関係論」へ-戦間期日本の国際秩序論をめぐる一考察」, 『植民地帝国日本の法的展開』(信山社出版, 2004).
- , 「戦間期における帝国再編と国際主義」, 『国際問題』546(2005).
- , 「「帝国秩序」と「国際秩序」-植民政策学における媒介の論理」, 『「帝国」日本の学知 第1巻 帝国編成の系譜』(岩波書店, 2006).
- , 『近代日本の国際秩序論』(岩波書店,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연암서가, 2010)].

- 中村栄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 朝鮮総督府朝鮮史編修会の事業」, 『日鮮関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1969).
- 中塚明, 『近代日本の朝鮮認識』(研文出版, 1993).
- 池明観, 「申采浩史学と崔南善史学」, 『東京女子大学比較文化研究所紀要』48巻(1987).
- 織田健志, 「共同性の探求-長谷川如是閑における「社会」概念の析出」, 『同志社法学』59巻2号(2007).
- 川島章平, 「福田徳三における「社会の発見」と個人の生」, 『相関社会科学』15号(2005).
- 浅田喬二, 「山本美越乃の植民論(上/下)-矢内原忠雄の植民論との対比において」, 『経済学論集』18巻 1・2・3号(1986.11).
- , 『日本植民地研究史論』(未来社, 1990).
- 川村湊, 『「大東亜民俗学」の虚実』(講談社, 1996).
- 清野幾久子, 「福田徳三における『生存権論』の受容とその展開」, 『明治大学大学院紀要法学篇』21集(1984).
- 村上勝彦, 「矢内原忠雄における植民地と植民政策」,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第4巻(岩波書店, 1993).
- 春山明哲・若林正丈, 『日本植民地主義の政治的展開 一八九五—一九三四』(アジア政経学会, 1980).
- 波田野節子, 『李光洙・『無情』の研究』(白帝社, 2008).
- , 「李光洙とギュスターヴ・ル・ボン」, 『韓国近代文学研究』第4章(白帝社, 2013).
- , 「李光洙が出会った四人の日本人」,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50号(2017.10).
- 板垣竜太, 「〈植民地近代〉をめぐって」, 『歴史評論』(2004.10).
- 片桐庸夫, 「太平洋問題調査会(IPR)と朝鮮代表権問題 - 朝鮮グループの脱退, 1925-1931」, 『法学研究』59巻 4号(1986).
- 平野敬和, 「帝国改造の政治思想-世界戦争期の吉野作造」, 『待兼山論叢』34(2000).
- , 「吉野作造のアジア-第一次世界戦争から国民革命の終結まで」, 『吉野作造記念館研究紀要』1号(2004).
- 河かおる, 「植民地朝鮮における同友会-植民地下ナショナリズム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36輯(1998).
- 鶴園裕, 「近代朝鮮における国学の形成-「朝鮮学」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35輯(1997).
- 戸邊秀明,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帝国史研究」,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アテネ社, 2008)[서정완 외 편,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소하, 2011)].
- Mark Peattie 著, 浅野豊美 譯, 『植民地-帝国50年の興亡』(読売新聞社, 1996).

- Eckert, Carter J., *Offspring of Empi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 Brown, Wendy., *Regulating aversion :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이승철 옮김,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길무리, 2010)].

Abstract

The Discourse on Nation in Colonial Korea within the Japanese Empire

Aspects of Non-sovereign Subjectivity

Lee Kyungmi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understand the discourse on nation in colonial Korea beyond the paradigm of sovereignty. To that end, I argue that the discourse on n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Japanese empire, in an effort to critique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metropole and colony which tends to be fixated on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invasion and resistance. In that respect, this dissertation concerns how to “overcome” nationalism. Although a number of critiques of nationalism have been presented, nationalistic approaches to colonial Korea still cast a long shadow over the field of studies of colonial Korea. In order to go beyond such a nationalistic or nation-state centered paradigm, this dissertation conceptualizes the discourse on nation in colonial Korea as the discourse on “non-sovereign subjectivity” and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discourse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this dissertation, I employ the term “non-sovereign subjectivity” as a critical method to examine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discourse of “nation/subjectivity,” and as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is study. The perspective of

society mediates these two aspects. That is, the context of “non-sovereignty” is embedded in the perspective of society, which appeared in various discourses in the colonial period. In Chapter 2 I examine how the discourse on society unfolded both in Japan and Korea, and elucidate the autonomy of the social discourse from the state. Whereas the discourse on society in colonial Korea took shape as an effort to secure an autonomous sphere under the colonial condition, the discourse on society in Japan gave birth to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autonomy of the colony. The former took the form of a social movement, namely the March First Movement, while the latter was reflected 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Policy. The focus of Chapter 2 is the implications of discourses on Korean subjectivity, particular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Korean subjectivity became detached from the nation-state centered paradigm. The discussion in this chapter is important as it lays the groundwork for the discussion in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s 3, 4, and 5 explore the unfolding of “non-sovereign subjectivity.” In the course of the national movement in colonial Korea, “non-sovereignty” functioned as “legitimacy.” Thus, I look at aspects of “subjectification” within the legal limit, at the levels of discourse(Chapter 3) and social movement(Chapter 4). In Chapter 3, the primary subject of analysis is discussions on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with an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ing and nation. While the Japanese rulers have been viewed as intending a policy of divide and rule, this dissertation takes a critical stance on that view in that it represents a certain perspective held by the left-wing nationalists. Paying attention to Abe Mitsue, an adviser to the Governor-General Saitō Makoto, I examine his “win-the-people’s-heart” theory (*jinshin shūran ron*) as an avenue for understanding the rulers’ perception. In addition, I examine Yi Kwangsu’s theory of “national reconstruction” vis-a-vis Abe’s theory. If Abe and Yi shared common ground in that their discussions placed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n the “legal/non-sovereign” realm, how was “subjectification” sought in the process? As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n the 1920s sought politicization, the discourse of the “politics of life,” which was dissociated from the previously stressed concept of independence,

emerged. While on the one hand such a discourse was subsumed into the discourse of “legitimacy/non-sovereignty” circumscribed by the empire, on the other hand it was a discourse that “subjectified”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as a political power. As such, through the lens of the “politics of life,” Chapter 3 illuminates the aspects of “complex subjectification” that intersects cooperation and resistance.

Chapter 4 examines how the colonial rulers of Korea and socialists got involved in turning Shin’ganhoe into an “arena of competition” as part of the process that the discourse of “politics of life” became actualized as a social movement, as described in Chapter 3. Whereas the prevailing view of Shin’ganhoe in the previous literature is that Shin’ganhoe was a united front, this dissertation contends that such a view has been held by the left-wing nationalists and some socialists. By employing the concept of Shin’ganhoe as an “arena of competition,” I stress that Shin’ganhoe’s activities were a complex movement in which various actors including the colonial rulers, nationalists, and socialists aimed to pursue their intentions. And they were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legitimacy/non-sovereignty.” Then how did the subjectification unfold? Chapter 4 provides a window into this process by looking at two types of cooperation. The first type was between the left-wing nationalists and socialists, who advocated a “movement for survival” and “self-determination.” The second type was between the right-wing nationalists and socialists, who defined themselves as carrying out a “movement for life” and aimed at the coexistence of self-rule and anti-imperialism. While both types of cooperation, on the one hand, were movements that became subsumed into the categories of “legitimacy/non-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they distorted the intention of the empire in that they pursued self-determination and anti-imperialism.

Chapter 5 looks at the academic dimension of “non-sovereign subjectivity.” If “non-sovereignty” functioned as “legitimacy” in the discussions in Chapters 3 and 4, in Chapter 5 I show that academicity functioned as a concept corresponding to “non-sovereignty.” A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Policy, the “subjectivity of Korea” was transformed into an object to be recognized or tolerated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as well. Against this backdrop, academicity played a role in defining

subjectivity as “non-sovereign.” Chapter 5 analyzes the history compilation projects in colonial Korea.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history compilation projects shifted its focus from putting forward the Japanese government’s assimilative purpose as expressed in the compilation of Pandosa to placing an emphasis on academicity, the claimed purpose of launching the compilation of Chosŏnsa, namely a turn from assimilation to academicity. By focusing on the debate on “Tangun,” this chapt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Korean subjectivity was discussed in the two projects. While the former concentrated on excluding the narrative of Tangun from history, the latter centered around how to situate Tangun in history. Yet, Tangun, who symbolized Korean subjectivity, occupied only a marginal place within the boundary of “academicity.” In capturing aspects of the subjectification process, this chapter pays special attention to Ch’oe Namsŏn’s remarks. By examining Ch’oe’s remarks during the debate on the issue of Tangun, I demonstrate that his remarks played a performative role in securing the place of Tangun in academic discourses on Korea history, albeit accepting the marginal place for Tangun within academicity. In that regard, Ch’oe’s remarks implied the process of “complex subjectification” which both cooperation and resistance were interweaved.

To explore discourses on nation in the colony entails the difficulty of capturing the ironic coexistence of desire for nation-state based subjectivity and its non-sovereign context. Considering that the nation-state centered perspective often fails to fully address this issue, this dissertation looks at the complex aspects of subjectification in which the limits set by the Japanese empire and various discourses on nation interplay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come up with a critical analysis of nationalist view of nation. By doing so, this study aims at reconstructing the discourse on nation, as well as calling for a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esistance.”

keywords : Discourse on nation, subjectivity/subjectification,
non-sovereignty, politics of life, Yi Kwangsu, Abe Mitsuie,
Shin’ganhoe, Chosŏnsa, Ch’oe Namsŏn

Student Number : 2007-30668